

R1.1.8

인권하루소식

합본8호
(97년 상반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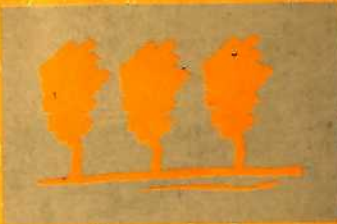


인권운동사랑방

합본8호 (97년 상반기)

R1.1.8

인권운동사랑방



일본전범 입국금지, 우리도 하자 일본군 '위안부' 국제세미나 열려

「강제연행당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는 27일 홍사단 대강당에서 '정신대운동 어 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특히 일본 전범을 입국 금지하자는 주장이 다양한 논거를 통해 제시됐다.

미국 워싱턴 정신대대책협의회 이두우 대표는 "정신대 문제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인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며 "미국내에서 정신대 문제를 연구하는 학교와 논문주제로 선택하는 학생수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에서는 93년 워싱턴 일본대사관 앞 시위, 정신대 문제를 지적하는 미국 국회의원 27명의 공개서한, 국제심포지움 개최 등으로 정신대 문제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워싱턴포스트> <LA타임즈> 등 주요 언론들이 정신대 문제를 대서특필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희생자들이 죽고 나면 운동의 의미를 잃고 말 것"이라며 "생존해 있는 동안 서둘러 정신대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특히 미국 법무성은 지난해 12월 3일 특별발표를 통해 생체실험과 정신대 범죄에 관련·가담한 일본인 16명의 입국을 거절한다고 밝혀 커다란 파문을 던진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

서도 일본전범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하자는 주장이 참석자들 간에 활발히 개진됐다.

이미경(민주당) 국회의원은 "더 이상 '유엔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라'는 구호만으로 일본정부를 단죄할 수는 없다"며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을 통한 일본전범의 출입국 금지와 피해국 간의 연대를 강화해 단호한 심판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변호사는 "미국 법무성의 조치는 정신대 문제가 아직 살아있는 문제이며, 법률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한국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전쟁범죄와 비인도적범죄의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시효부적용 조약 가입 △일본 전범에 대한 파악과 증거 수집활동 △범인 인도 요구와 재판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을 통한 전범의 출입국 제한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일본인으로서 정신대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는 도츠카 변호사는 "외국인의 입국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권한에 속한다"며 "다른 나라의 인권침해를 비판하는 것은 국제법상 적법하며 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1면에서 이어짐

FBI의 정치사찰에 문제를 제기해 승소한 경험을 가진 「억압입법반대국민위원회」 킷 게이지(워싱턴 대표)씨는 "언론을 개방적으로 만드는 것은 이 문제에 있어 핵심사안"이라고 보았다. 그녀는 안기부의 개혁 문제에 있어 원칙적인 접근보다는 김형찬씨 사건과 같이 구체적 사례로 접근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충고했다. 또한 "비판은 평화로운 나라를 만든다"며 의사·표현의 자유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안기부를 개혁한다는 것은 장기적 싸움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광노원 교수는 안기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①안기부의 과거 불법비행에 대한 진상규명과 문책 및 기타 과거청산작업을 수행하는 일 ②이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민주적 법제개혁을 이뤄내는 일 ③이른바 '북풍한파'가 몰아치지 않도록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평화구조를 정착시키는 일 등 세 가지를 꼽았다. 또한 이번 심포지움을 계기로 공안정보기구 개혁을 위한 본격적이고 종합적인 이론적 연구와 실천적 운동을 벌여나가자고 제안했다.

행사와 동정

- 대만 핵폐기물 북한 반입 저지를 위한 전국 동시 규탄 대회(서울지역)
 - 때: 2월28일(금) 오후 12시 30분
 - 곳: 대만대표부앞
 - 주최: 대만 핵폐기물 북한반입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735-7000)
- 농촌지역 사회 교육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두밀학교 살리기 운동을 중심으로
 - 때: 2월28일(금) 오후 2시-5시
 - 곳: 종로천주교회 3층 강당
 - 주최: 두밀학교 살리기 연대모임(745-8313)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토론회 -노동자 총파업투쟁과 97년 노동운동의 과제
 - 때: 2월28일(금) 오후 6시-9시
 - 곳: 연세대학교 신경영학관
- 정신대 할머니 돕기 모금 공연 「대지의 눈물」
 - 때: 3월1일(토) 오후 4시-7시
 - 곳: 독립공원
 - 주최: 한겨레신문사 · 입장료: 무료
- 3·1절 기념 한일공동심포지움
 - 때: 3월1일(토) 오후 1시-5시
 - 곳: 일본 동경 문경구민 센터 2층
 - 주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지원대책위 회의
 - 때: 3월3일(월) 오후 6시 30분
 - 곳: 민주노총 5층 회의실(744-7437)
- 진관스님 석방을 위한 후원의 밤
 - 때: 3월4일(화) 오후 6시-9시
 - 곳: 동국대학교내 동국문화관 그릴(266-3950)
 - 주관: 불교인권위(734-6401)
- '민주화운동과 열사·희생자·의문사 명예회복' 학술 세미나
 - 때: 3월6일(목) 낮 3시
 - 곳: 성공회 대성당 대회의실
 - 주최: 추모단체 연대회의(742-3180)

3월1일자는 휴일 관계로 쉽니다

구독료 납부하셨습니까?
지로번호 7618848
전국 어디서나 납부가능합니다

인권하루소식

97년 3월

(제834호 - 제853호)

진관스님 석방을 위한 후원의 밤
때, 곳: 4일 오후6-9시
동국대내 동국문화관 그릴
주최: 불교인권위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잠수함 사건' 의혹제기 또 구속 범민련 서상권씨 국보법 7조 위반혐의

범민련 부산경남연합 의장 서상권(72) 씨가 2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3일 현재 부산시경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서씨는 지난해 10월 범민련 소식지 제4호에 실린 「조국은 지금 전쟁중」이라는 글을 통해 '북한 잠수함 사건'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잠수함 사건에 의혹을 제기했다가 구속된 것은 지난해 10월 컴퓨터통

신에 글을 띄웠던 윤석진(1심 재판중) 씨 사건 이후 두번째다. 문제가 된 「...전쟁중」이라는 글은 잠수함 사건에 대해 "정부 당국의 발표대로 받아들이기엔 무장공비로서 허술한 점이 너무 많다"며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이 부분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 씨가 제기하는 의혹은 ① 무장이 너무 허술하다는 점 ② 고도의 군사훈련을

받은 무장공비라고 하기엔 전혀 프로답지 못하다는 점 ③ 왜소한 체격과 3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연령 구성 ④ 요원암살이나 공작원 남파작전을 수행하기엔 너무 큰 잠수함 ⑤ 임무를 수행하기엔 숫자가 너무 많다는 점 ⑥ 잠수함에 타고 있던 북한군이 노동당 사회문화부 또는 작전부 소속이 아니라 인민무력부 경찰국 소속이라는 점등이다. 이 글은 또 9월 26일 일본 NHK 방송보도를 인용해 "미군 제7함대의 추적을 피하다가 좌초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군사훈련 도중 기관고장으로 표류되어 떠

내려 온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상의 의혹을 제기하며서 써는 "이들을 무장공비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한 증거보다도 단순한 상황적 분석으로만 확대왜곡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동시에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경쟁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특별검사제 촉구 시민·사회단체 집회

민주노총·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민교협·민변 등 13개 시민·사회·종교단체 연석회의 소속 회원 50여명은 3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특별검사제의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주요 공판 안내

- 3월4일 (화)
 - 유덕상(전한국통신 노조위원장), 업무방해등, 3단독, 오후 2시, 317호, 속행
 - 3월5일 (수)
 - 양정희 외6, 국보법(찬양·고무 등), 합의22부, 오후2시, 319호, 속행
 - 서형준(나라사랑청년회 회장), 국보법 등, 4단독, 오후4시, 524호, 속행
 - 윤석진(컴퓨터통신 글 게재), 국보법 등, 4단독, 오후4시, 524호, 속행
 - 3월6일 (목)
 - 강성모 외2, 국보법(찬양·고무 등), 합의23부, 오전10시, 319호, 속행
 - 박충렬, 국보법, 합의4부(항소심), 오전10시, 418호, 속행
 - 이명박(국회의원) 외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합의23부, 오후2시, 319호, 속행
 - 3월7일 (금)
 - 진관(불교인권위 의장), 국보법(간첩 등), 합의23부, 오후2시, 311호, 속행
 - 현준희(효산콘도특혜 고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9단독, 오후2시, 317호, 속행
 - 신길용, 국보법(찬양·고무 등), 합의22부, 오전10시, 319호, 속행
- 이상 서울형사지법

<인권하루소식> 발전을 위한 토론회

발제:

- 인권운동에 있어 <인권하루소식>의 역할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 취재력 보장방안과 편집방침에 있어서 일반신문과의 차별성 [백병규, <미디어 오늘> 편집장]
- PC통신시대의 <인권하루소식> [김형준, 바른통신 대표]
- <인권하루소식> 마케팅전략 [김거성, 기독교컴퓨터센터 소장]
- 포맷 혁신과 주간지화, 월간지화의 가능성 [김경환, 말자 기자] -각 15분씩

때· 곳: 5일(수) 오후4:00-7:00

시청앞 성가수녀원

※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기다립니다.

‘빛나는 전망’ 3명 연행 국보법 위반

95년 부산지역내 맑스주의 활동가 조직으로 발표된 「빛나는 전망」 사건의 관련자 3명이 최근 잇따라 연행되었다.

지난달 25일 강소영(부산대 심리 졸) 씨가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연행·구속된 데 이어, 김 강(부산대 법대 92), 윤경미(부산여대 교육 중퇴) 씨도 각각 지난 2일 긴급체포영장에 의해 부산시경으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강 씨와 윤 씨는 「빛나는 전망」의 전 회원으로서 지명수배중이었으며, 김 강 씨는 95년 「빛나는 전망」의 기관지 <맥박>에 글을 실은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빛나는 전망」은 93년 9월 결성된 학생활동가 조직으로 95년 3월 해체되었으나, 그해 5월 부산시경과 기무사에 의해 15명이 연행되어 10명이 구속되었다. 당시 구속자들은 모두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안기부 기밀유출규탄 안기부법 제논의 촉구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3일 최근 김기섭 안기부 운영차장 구속과 관

련해 안기부의 불법적인 기밀유출과 정치사찰, 국정개입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김기섭 운영차장의 기밀누설과 인사개입 사건은 안기부가 초법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드러내 주는 사건”이라며 진상의 철저한 조사 및 공개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각종 비리사건과의 연관성을 명백히 해명하고, 불법적인 기밀거래와 정치사찰, 정치개입 행위에 대해 엄격히 수사해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연합은 “안기부가 본연의 정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기부의 권한을 축소, 현실화하는 안기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대위 자료집 판매

지난 2월2일 종교공원에서 열린 <대통령 아저씨, 날치기였다> 한마디만 하세요>(제작: 공동영상제작단) 비디오와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폐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자료집이 나왔다. 문화공연 비디오 데이는 1만5천원, 자료집은 1만원.

범국민대책위 자료집에는 주요사업보고, 범국민대책위 관련자료, 민주노총·한국노총 관련자료, 부문별 자료등 범대위 활동과 관련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문의: 777-4014/5

‘민주화운동과 열사·희생자·의문사 명예회복’ 학술세미나

- 1부: 한국근현대사에서의 이념대립 과정과 민주화운동
- 2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열사·희생자 의미조명

때, 곳: 3월 6일(목) 낮 3시/성공회 대성당 대회의실
주최: 전국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742-3180)

주간/인권/호/름

(97년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24일>(월)

국민회의·자민련, 노동법 단일안 발표/보건복지부 발표, 95년말 현재 모자가정 4만6천7백93가구(13만6천7백94명) 중 49.7% 날품팔이로 연명/한국여성단체연합, 96년 여성권의 걸림돌로 웰치그룹, 이재오(신한국당) 의원등 선정/전교조, 교원의 노동권 보장문제를 유보한데 반발해 야3당 무기한 농성행의 운동 확대/대법원, 법관 신규임용에서 안병용씨 85년 ‘깃발’ 사건으로 구속, 5년형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관 임용거부/한국인권단체협의회가 한길리 서치에 의뢰해 전국 7백3명 대상으로 전화조사결과, 수사권을 안기부에 넘겨줘야 한다는 주장에 52.8% 반대

<25일>(화)

김대통령 취임 4돌 대국민담화 통해 임시국회에서 노동법 제논의 시사/연세대 수화와 점자타자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양과목 신설/「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폐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시민 51만7천여명이 서명한 안기부법 무효화 및 노동법 개정 촉구청원서 국회계출/서울지법 민사합의 16부(재판장 심재돈 부장판사), 82년 반국가특별법 위반죄로 재산몰수형을 선고받은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망찾기 소송 승소판결

<26일>(수)

전교조 대전지부와 충남지부 교사 30여명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요구하며 이를째 밤샘생성/대전 대덕 연구단지 주부 3천7백62명 ‘날치기 노동·안기부법 무효화를 위한 주부선언문’ 발표/참여연대·민주노총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종교단체 연석회의, 특별검사제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 전개/터키, 정치부패에 항의한 ‘동불끄기 운동’ 2월부터 시작돼 주요도시로 확산/프랑스 하원, 반이민법 수정안 통과

<27일>(목)

안기부가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 안기부관련 정보들이 새나가고 있다며 소속 의원들을 광범위하게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범국민대책위,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의 주제로 국제심포지움 열어/민주노총 4단계 총파업 승리결의대회/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위원회, 전염병 예방접종·초음파검사, 한방물리요법등에 의보적용해야 한다고 지적/전교조, 조합원 1천명 명단 2차공개/「강제연행 당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연대」, 홍사간 강당에서 ‘정신대운동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 개최/민주노총 수도권지역 노조대의원 이상 간부 3천여명 총파업결의대회/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기구 실무그룹, 다이옥신에 관한 연구자료 검토결과 발암물질 1위로 규정/서경원 전의원 방북사건과 관련 7년형 선고받아 복역, 만기출소한 방양군 씨에 대해 일정한 직업이 없다는 이유등으로 6개월째 여권 발급안돼

<3월 1일>(토)

위안부할머니 위한 모금공연 <대지의 눈물> 열어/경기 광주군 나눔의 집서 ‘정신대 전시관’ 기공식/전국연합과 일본의 공동심포지움 실행위, ‘3·1조선통일운동 78주년 기념 한-일 공동심포지움’ 일본 도쿄서 개최

<3월 2일>(일)

안기부 고위관계자, 2월28일 전격면직된 김기섭 안기부운영차장이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에게 정기적으로 정보제공해왔다고 밝혀

<인권시평>

“아직도 인권타령이냐?”

김동한(법과 인권연구소장, 광주여대 교수)

인권시평은 대주 화요일에 실리게 되며, 김동한 교수, 광노현(방송대 법대) 교수, 서준식 대표가 6개월간 여러분을 찾아드립니다. [편집자주]

이러바 문민정부 들어서고부터 나타난 안타까운 현상 가운데 하나가 “아직도 인권타령이냐?”는 반문이다. 인권문제를 이야기하면 시대착오적인 사람으로 여기는 그야말로 시대오도적인 사람들이 우리 주위엔 너무 많다. 직업군인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민주정부라고 할 수는 없다. 군주시대나 걸맞은 문민이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 김영삼정권은 문민과 민주를 자신들이 이룩한 훌륭한 작품으로 도용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절차의 정당성을 중시하여야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라는 위험천만한 발상이 이 사회를 병들게 한다. 3당야합을 통해 대통령이 된 사건을 문민정부, 민주정부로 미화해서 안된다. 김영삼정권의 탄생은 결과지상주의로 이 사회를 병들게 한 대표적 인권침해사건이다.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
요즘 ‘대통령을 잘못 뽑았습니다’라는 후회성 의견광고는 너무 늦었다. 잘못 뽑은 것을 이제야 알았다면 순진하다기보다는 바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미 92년 12월 대선결과가 나왔을 때 결과지상주의의 표본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민주화대장정의 고통을 다 참았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는 군 출신보다는 나를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인권침해현상을 외면해 왔다. 인권침해 사례가 민주주의의 수준을 예측한다면 김영삼정권의 민주화 수준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다. 노동관계법, 안기부법 개악을 보고서야 김영삼정권에 대하여 실망했다고 푸념한다면 그 동안 정쟁과니로 살았다는 것밖에 안된다. 시위와 진압경찰, 끊임없는 시국사건 그리고 구속사태,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간첩사건, 각종 부정부패 등 어느 것 한 가지라도 5, 6공과 달리진 것이 없다. 인권침해, 인권유린, 인권 무시 현상은

오히려 더 빈번하다. 언론보도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존재하는 나라, 대통령의 아들이 특별한 인물로 행세하는 나라, 대통령이 여당총재를 겸하다 보니 국회의원들이 제목소리를 못내는 나라, 큰 도둑은 상반고 좀도둑은 벌받는 나라, 또 다른 우리인 북한을 정권유지에 야비하게 이용하는 나라, 환경을 걱정하기보다는 사상누각적 경제성장에 급급하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과연 인권이 제대로 존중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아야 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졌다고 헌법을 비롯한

올바른 인권의식

각종 법률에 그럴듯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인간들은 그러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서로 인권침해는 더이상 없다는 정부당국자들의 거짓주장에 짓눌려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해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일 전개되고 있다. 시위, 농성현장 곳곳에서 온몸으로 저항하는 자들의 주검이 어제도 오늘도 발생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고 또한 관심도 없다. 이웃이 죽어 가는데도 무관심이 습관화되어 버렸다. 사람이 많다보니 사람값이 떨어진 모양이다. 서로가 무관심하니 인권이 존중될 리가 없다. 함께 힘을 모아 공권력의

폭력에 대응해도 부족할 판에 서로가 무관심과 불신에 사로잡혀 있으나 인권유린을 차초하는 꼴이다.

당신이 지켜야할 자존심
아직도 인권타령이냐고 고개를 내젓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지켜야할 자존심은 어떤 것이냐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이다. 혼자만 잘살겠다는 발상은 죽음을 재촉하는 것이다. 그러한 생각은 스스로 인권을 포기하고 짐승처럼 살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실 인권문제는 영원한 숙제이다.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는 미국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언제나 제기될 수 있는 문제가 인권문제이다. 따라서 인간의 역사는 인권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렇다고해서 인권문제에 무관심해도 모든 문제가 때가 되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이다. 인권을 이야기 하는 자에게만 인권이 있는 것이다. 구하지 않는데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사회가 어지러울 때 불평, 불만은 진부하다. 인권의식은 항상심이어야 한다. 인권은 생활화되어야 한다. 부정, 비리사건 보도에 잠시 분노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부정부패가 나의 소중한 인권을 여지없이 유린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사회의 모든 현상은 인권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3월11일자부터 달라집니다”

- 앞으로 <인권하루소식>은
- 지형이 달라집니다. 활자가 커지고, 편집이 새로워집니다.
- 내용이 풍부해 집니다. 국내 최고의 필진으로 인권시평을 열어갑니다. 인권시평을 통해 인권의 눈으로 세상보게 됩니다.
- ‘인권전문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새로운 기획으로 여러분께 다가 가겠습니다.

**‘민주화운동과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에 대한 1차
학술세미나**
때·곳: 6일(목) 오후 3시
성공회대성당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교사 탄압 본격수순 돌입

교육청, 전교조 가입 경위 조사...학교마다 자술서 요구

교육부장관이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대량징계를 공인한 가운데, 교육청은 각 학교장에게 지침을 내려 4월 교사들의 전교조 가입 경위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학교장들은 교사들에게 전교조 가입 경위서 또는 자술서 작

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달 28일 교육부장관 담화와 15개 시·도 교육감 결의에 이은 조치로서, 앞으로 전교조 탈퇴각서 요구 등의 수순을 거쳐 본격적인 징계가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안병영 교육부장관은 “관련자를 예의없이 처벌하겠다”고 밝혔으며, 같은날 시·도 교육감들도 △전교조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복직할 뒤 이를 위반한 교사 △전교조 등 불법단체를 결성 또는 가담한 교사 △학교 내에서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한 교사 △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공동수업을 한 교사 △개야 및 노동계와 연계한 불법단체행동에 참여한 교사 등을 징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교조는 일체의 자술서나 경위서 작성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 아무개(신구중학교) 교사가 장학사로부터 직접 전교조 가입여부를 추궁받았으며, 서울 그초등학교 학교장은 출산후 임원중인 교사에게 까지 자술서 작성을 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폭력 반대의 날 15개국 40여 단체 참가

캐나다의 민간단체인 COBP(경찰폭력에 반대하는 시민들)가 제안한 ‘경찰폭력에 반대하는 국제 기념일’ 행사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 행사에는 2월말까지 세계 15

개국 40여 개 단체가 참가의 뜻을 알려왔다고 COBP는 밝혔다. COBP는 참가국 및 단체의 숫자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가국사를 밝힌 단체들의 주요 국적은 캐나다, 미국, 스위스 등 서구 선진국과 베네주엘라, 콜롬비아 등 남미국가들이다. COBP는 “일부 참가단체는 정부로부터 심한 탄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에서는 방글라데시의 5개 단체가 행사참가를 결정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등의 시민단체도 행사 참여 의사를 밝혔다. 국내 일부 단체들도 행사 참가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세스코리아 선발대회 주부 1천명 강력 항의

오는 29일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주최로 ‘제1회 미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열리는 것이 알려지면서 여성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3일 주부 1천인의 이름으로 ‘97 미세스코리아 선발대회 개최 및 TV중계에 항의하고 나섰다. 특히 참가자들에게 의상비와 쇼참가비라는 명목으로 3백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경제불황을 외면한 처사’라고 항의했다.

이들 주부들은 미세스코리아 선발대회 개최 철회와 함께 부산 MBC측에 특별 후원 및 중계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인권하루소식> 97년 2월분 총목차(816-833호)

호	월일	면	기사 제목
816	2/1	1	날치기에 묻힌 안기부 불법수사-인권협, 김형찬 씨 진상조사결과 공개촉구/위안부 문제 시민연대, “국제연대로 전범처벌” 주장
		2	세계의 인권⑩ 초대받지 않은 손님, 이주노동자
817	2/4	1	문민말기 인권상황 여전히 낙제점, 미국무부 96 남북한 인권보고서 발표
		2	노조탄압 시비 가려낸다, 국민회의 진상조사단 울산 파견/ 노동법 집회 30명 부상, 민주노총 “부산경찰청장 파면” 요구/ 주간인권호름(97년 1월27일-2월2일)
818	2/5	1	억울한 형벌 ‘보호감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실상보도/ <현장스케치> 강덕경 할머니 장례식- 아픈상처를 딛고 참된 용기를 보여준 할머니...
		2	“뒤로 넘어지더니 이마 함몰됐다”, 신갈 노점상 뇌사사건 의혹투성/ 고 강덕경 할머니가 걸어난 길(김혜원 정대협 사료관 준비위원장)
819	2/6	1	재일동포 장기수 출국금지 무한 연장, ‘재범우려’ ‘비인도적 처사’ 논란/재계, 4단계 총파업 부채질- 대안 외면, ‘노조죽이기’ 총력
		2	“교원단결권 기필코 쟁취한다”, 전교조 16개 시도 추진본부 결성/ 한총련 의경치사사건 선고/ 김정권 34명 사형집행, 미집행 사형수 52명/ 인권간행물
820	2/11	1	집시법, ‘보호법’인가 ‘탄압법’인가- 시위용품 시비에서 참가자격 시비까지
		2	<성명서> 북한의 핵폐기물 수입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규탄한다(진보정치연합)/ 주간인권호름(97년 2월3일-9일)
821	2/12	1	잇따른 뇌사, 파출소 가기 무섭다- 노점상 민병일·이종호 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용인대 동아리연합회 회장 분신, 분신사유는 ‘학원자주화·사회민주화’
		2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822	2/13	1	사용자 총공세에 단위노조 무력화- 부천 사문화장품, ‘노조죽이기’도 버거워
		2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823	2/14	1	날치기법 무효화투쟁 기지개, 민주노총·법대위 투쟁일정 재가동/ <인터뷰>노동법 공동수업 진행한 정진화 교사-“파업, 자신의 문제이며 권리라는 것 알려주고 싶다”
		2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③/ <성명서> 정부는 도시민민에 대한 살인적 폭력만행과 생존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노동법 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824	2/15	1	‘망명’ 대서특필, 북 주민 생존권 외면- 세계식량기구 “북한 기근, 이디오피아보다 참혹”/ 용인대 한상근 씨 숨져, 대책위 “학교측 공식사과” 요구/ 진관스님 1차공판 열려/ 노점상 이종호 씨 사망, ‘뇌출혈’ 추가 발견
		2	고문피해자 김중경 씨 교통스런 삶 마감- 화성사건 용의자로 지목, 불법수사 받아/ 용인대생 한상근 씨가 남긴 글귀 중 하/ 인권간행물
825	2/18	1	교사단결권, 전세계 합의사항- 국제진상조사단 3차 방한, 심포지엄 개최/ 전노협 백서 발간, 민주노조 10년 기록
		2	종묘서 공권력의 폭력만행 규탄대회, 이종호·한상근 씨 장례 치러/ 교회협 홈페이지 개설/ 주간인권호름(97년 2월10일-16일)

<인권하루소식> 97년 2월분 총목차(816-833호)

호	월일	면	기사제목
826	2/19	1	경찰폭행치사 경찰이 밝혀낸다?- 노점상 이종호 씨 사건 불공정수사 우려/ 경찰폭행당한 노점상마비 장애인, 1년 지나도록 병상에/ 전국연합, "정치사찰 저의 우려"
		2	영장실질심사제 1개월 평가- 피해자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827	2/20	1	민병일 씨 사건, "경찰폭행치사"- 진상조사위원회, '앞이마에 강한 충격' 확인/ <인론비평>이한영 씨 피격사건- 정부, 성급한 수사발표 이어 정치사찰 서둘러
		2	"앞으로 열흘이 노동법 승패 가름한다" 민주노총, 가두집회 재개/ <자료> 전교조 조합원 명단공개 기자회견문- "정부와 국회는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828	2/21	1	안기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27일 공안정보기구 개혁 위한 국제심포지움 개최
		2	시국선언 전국 파도타기- 전국시국선언자대회, 노동법 재개정 촉구/ 영등포교도소, '안보' 이유로 면회 불허/ 전국연합, "대북 민간지원 인정" 촉구/ <서평> 세계적인 담론으로서의 인권 <사상> 겨울호 '특집' 동아시아의 성장과 인권
829	2/22	1	민주노총 입장 변화없다, '정리하고 수용' 보도 사실과 달라/ 안기부법 무효화 불투명, 24일 노동법안 심의/ 류세홍 씨 가족 "자식 타국 보내고 집까지 팔아야할 형편", 연대보증인에 3천만원 과태료 부과/ 성폭력상담소 최영애 소장 제임
		2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북한편 ①
830	2/25	1	"안기부 개혁 필요" 74.2%- 인권협·한길리서치 7백여 명 설문조사/ "날치기 원천무효" 범대위 총력투쟁
		2	참교육·교원노동권 깃발 펴려- 전교조 1천5백명 여의도 집회/ 주간인권호름(97년 2월17일-23일)
831	2/26	1	김 대통령 '말로만' 반성, 안기부법 무효화 등 구체적 언급 없어/ "3월15일 '경찰폭력 반대의 날' 갖자" 캐나다 민간단체, 국제적 행사로 제안/ 51만여 명 서명 참여, '날치기 무효' 국회청원
		2	<자료요약> '구국전위' 이광철 씨 항소심 무죄 판결문- "공지사실, 국가기밀누설 적용 안돼"
832	2/27	1	고질적 경찰폭력, 피해자 무신경도 문제- 경기대 난입...개폐뚝 패놓고 무협의 석방/ 민주노총, 단위노조 간부 파업/ 전국연합 6개 대의원 대회 "민족민주운동의 총단결로 정권교체" 결의
		2	<공안기구 심포지움 기조발제문 요약>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사회구조-마르틴 뚝차 교수(독일)
833	2/28	1	수사권과 정보수집권 분리해야, 안기부 개혁방안 국제심포지움 열려/ 시국사범 여행자유 침해 시비 여전, 방양균 씨 출국제한...여권법 위헌 소지
		2	일본전범 입국금지, 우리도 하자- 일본군 '위안부' 국제세미나 열려

<인권하루소식> 발전을 위한 토론회

발제:

- 인권운동에 있어 <인권하루소식>의 역할
- 취재력 보장방안과 편집방침에 있어서 일반신문과의 차별성

· PC통신시대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마케팅전략

· 포맷 혁신과 주간지화, 월간지와의 가능성

· PC통신시대의 <인권하루소식> -김형준, 바른통신 대표

· <인권하루소식> 마케팅전략 -김거성, 기독교컴퓨터센터 소장

· 포맷 혁신과 주간지화, 월간지와의 가능성 -김경환, 말지 기자

때: 5일(수) 오후 4:00-7:00

곳: 시청앞 성가수녀원

노동법 토론회

때: 6일(목) 오후 2시~6시
 곳: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경찰 학원 난입, 방치할 것인가? 학생은 무대응, 학교는 수수방관

지난 3일 새벽 1시, 수원 대교정에는 경광등을 설치한 승용차 3대를 포함하여 차량 10여 대가 출현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준비해 늦게까지 남아 있던 학생들은 갑자기 나타난 피차량에 두려움을 느끼고 자리를 피했다.

다음날인 4일 밤 9시 10분경, 춘천에 위치한 한림대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복경찰 50여 명과 백골단 2-3백명이 학생회관에 들이닥친 것이다.

이들 경찰은 수배중인 정

현호(사회복지 89학번, 96년 졸) 씨를 검거한다는 명분으로 대학 교내에 들어갔으며, 그 과정에서 쇠파이프와 절단기 등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대, 한림대 경찰 난입

이 두 사건은 지난해 연세대 사태 이후 대학내 공권력의 투입이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반면, 공권력 난입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피해 당사자인 학생들의 반응은 '뭣뭣'하기만 하다.

지난 달 25일 교내에서 영장도 없이 불법 연행되었다 풀려난 경기대생들의 반응도 예외가 아니다.

적법절차를 무시한 연행이 있고, 그 과정에서 심한 폭행까지 당했지만 학생들은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한양대 부총학생회장 신신호 씨는 "경찰력 투입과 인권유린행위에 대해 학생회와 한총련(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 차원의 법적 대응은 전혀 없다. 법적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

다"고 말한다.

연행에 대해 학생들 무반응

한편, 학교당국도 학내 공권력 투입을 방관하거나 묵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학 관계자들은 "범법자가 있다면 공권력 투입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냐"며 공권력의 학내 투입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대의 윤상식 학생과장은 "불법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느냐"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공권력 투입을 양해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때로는 공권력 투입에 앞서 학교 당국의 양해를 얻는 관례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경찰력 투입에 대해 한림대 학생처장은 "경찰측이 사전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어느덧 '대학이 성역'이란 말은 사라진지 오래다. 자신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조차 지켜내지 못하는 지금의 대학에겐 '경찰의 붕'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시절이 되어버렸다.

민족화해 차원의 송환 당부

장기수 김인서씨 딸 서신

불교인권위·인권운동사랑방 앞으로 비전향 출소장기수 김인서 씨의 북한에 있는 딸의 편지가 일본을 통해 보내졌다.

제일한국인권협회 운동환 씨가 지난 12월에 이어 김인서 씨의 딸 편지를 보내왔다. 2월 5일자 김인서 씨의 딸 화심·정심·봉선의 편지에는 뇌출혈로 쓰러져 후유증을 앓고 있는 김인서 씨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다.

편지에서 김화심 씨 등은 "재발위험을 안고 있는 뇌출혈 증세에 독감까지 겹치고 눈에 태까지 끼여 앞도

볼보지 못하는 70세 고령의 병약한 노인이 문밖출입도 못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니 정말 가슴아파 견딜 수 없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살아생전 서로 만나 한지붕아래서 오붓이 살고 싶은 것은 아버지와 우리 가족 모두의 간절한 마음"이라며 민족화해의 측면에서라도 송환 이뤄지길 염원했다.

끝으로 복송추진을 위해 일하는 '김인서·합세환·김영태 송환추진위원회' 등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민주화운동과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에 대한 1차 학술세미나

"이 시대는 아직도 열사를 요구하는가"

일시: 3월6일(목) 오후3시
 장소: 시청 앞 성공회 대성당 대회의실(730-6611)
 내용: 1주제 "한국 근현대사의 이념대립 과정과 민주화운동" (김봉우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2주제 "민주화운동 과정의 열사·희생자 의미조명" (김삼웅 친일문제연구회 회장)

토론자: 황인성·장기표·정병호·박래군·손석준·김지형
 주최: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 연대회의(742-3180)

세계의 인권 <1> - 기아

굶주린 어머니와 배고픈 아이

목은 곡식은 다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 배를 곯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시기를 보릿고개라 한다. 어른들이 한숨쉬며 들려주는 보릿고개 얘기가 연속극에서조차 식상하게 느껴지는 우리 삶과 북한의 기아를 전해주는 뉴스 속의 세계는 아주 다른 세상이다.

96년 10월 '세계식량의 날'을 기해 기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하면서 유엔 사무총장은 "이처럼 풍요로운 세상에서, 기아와 굶주림의 망령을 겪는 이가 단 한사람이라도 있어서는 안된다. 오늘날, 8억에 달하는 인류가 만성적인 영양부족 상태에 있다는 것은 결코 단순히 받아들이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고 하였다. 그의 말에서처럼 세계인권선언에서 '보통사람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된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은 현실 속에선 조롱받고 있다.

1분마다 24명이 굶어 죽어

세계식량프로그램(World Food Programme)의 95년 통계를 보면, 저소득과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국가수는 92개국에 달하며, WFP의 주요 원조수혜국 중 1인당 국민총생산액이 500달러에 못 미치는 나라가 44개국에 이른다. 빈곤과 기아, 내전 속에서 전 세계 인류의 1/4이상이 살아가는데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기본적인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거의 10억에 달하는 인구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는 1분마다 24명이 죽는 꼴이고, 이들 사망자중 18명이 5살이하의 어린이이다. 10억 이상 인구가 안전할 물을 마실 수 없고, 그로 인한 기아와 질병은 3일마다 5세 이하 아동 14만명 정도를 쓰러뜨리고 있다.

북한, 이디오피아 대기근보다 더해

먼곳을 보기전에 아주 가까운 북녘 동포의 상황을 살펴보자. 95년과 96년, 연이은 대규모 홍수로 인해 북한의 경작지 중 1/5이 파괴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거의 2백만톤에 달한 곡물의 손실은 전통적으로 식량 부족국에 속하는 북한에게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WFP는 북한사회의 최소 곡물 필요량을 5백4십만 톤으로 추정하는데, 97년에는 2백3십6만톤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있다. 대략 필요량의 50%가 부족한 이 현실은 그 비율에서 85년 이디오피아를 휩쓴 대기근과 굶주림보다도 더하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구호기관의 책임자들과 여타 방문자들은 기아의 전조가 뚜렷하다고 보고하면서, 즉각적인 식량원조를 호소하였다. 그 호소가 지구의 절반을 돌아 메아리 치는 동안 지속된 우리들간의 줄다리기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태국등, 모성사망률 1만명당 40명

96년 로마에서 열린 WFP 세미나는 모성이 겪는 기아가 미래의 절망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한 바 있다. 기아의 희생자 중 어머니와 어린이가 겪는 고난은 뗄줄로 연결되어 있다. 어머니가 임신 중에 굶주린다면 어머니에게나 태어날 아기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끼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예를 들어, 빈혈이 있는 임신 여성에겐 조산과, 난산, 태아가 비정상일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산모가 사망하는 경우 다섯중 하나는 심각한 빈혈이 그 원인이다. 성공적으로 유아사망률을 줄여온 인도네시아나 태일랜드 같은 나라에서도 여전히 모성사망률은 1만명당 40명꼴로 높기만 하다.

또한, 모성의 영양결핍은 저체중아 출산의 주요원인이다. 어머니 자신이 저체중아로 태어나 배고픈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보냈다면 심중팔구 다음 세대의 미숙이나 저체중아의 증가로 이어진다.

모성의 영양결핍 유아에게 치명적

출산후에도 문제는 지속된다. 유아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수유기 동안에 높은 영양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저체중아는 철분 보유분이 낮고 빨리 고갈되는데, 빈혈상태인 어머니의 젖을 통해서도 쉽게 보충될 수가 없다. 모체가 영양결핍으로 힘겨운 상태를 유지하면, 일찍 젖이 마르게 된다. 출생후 몇달이 지난 뒤에야 유아 자신의 면역체계가 기능하기 때문에 유아는 어머니의 젖에서 여러 질병과 싸울 수 있는 면역성분을 공급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젖을 떼는 것은 유아에게 심각한 위험을 끼친다. 오염되고 불안정한 보충식을 일찍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설사는 높은 유아사망률과 영양실조로 귀결된다.

기아 해결위한 공동대처 필요

실령, 유아기를 제대로 먹고 통과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굶주리는 아동이 될 원인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많은 가정에서 식량확보의 안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아 속에서는 부모가 아동에게나 충분한 투자를 할 수 없다. 그 결과, 질병과 열악한 위생시설, 영양의 부조화, 과도한 노동 요구(성인에게나 아동에게나), 아동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는 현실을 남겨두고 이 모든 것이 기아와 영양실조를 부르게 된다.

그래서, 기아에 대한 공동의 대처는 '오늘'의 배고픔을 충족시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식량을 위한 방패가 되어야 한다. 오늘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 뿐만 아니라, 교육과 보건, 생산적인 투자와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활동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도덕적, 인도적 요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가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대한 투자가 미래의 식량을 위한 열쇠이기에 '풍요한' 사회 속에서 '기아'를 허용하는 것은 인간의 성장과 발전을 망치는 일이다. 아동이 교육받을 수 없고, 질병이 생산성을 제약하고, 굶주린 어머니가 굶주리는 다음 세대를 출산하는 속에서는, 배고픈 개인과 가족만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사회가 고통받기 때문이다.

<자료요약> 안기부법 개혁 철폐와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국제성포지음: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미국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

그레고리 노짐(미국시민권연합 입법전문 변호사)

미국정보기관들에 의한 권력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는 △미국연방헌법 △사생활보호법(Privacy Act),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과 같은 보장법제 △헌법과 관련법규를 구체화하는 법원의 조치 △법무부의 연방수사국 수사지침 △경찰의 지역경찰 정보수사지침 △정보기관에 대한 의회의 감독 등이다.

시민의 자유에 또한하나의 보장책은 연방수사국과 중앙정보부(CIA)의 법적 분리다. 법에 따라 중앙정보부는 국내수사권과 법집행권 보유가 금지된다. 중앙정보부의 대외정보활동은 대체로 헌법적 보장영역에서 벗어나 있다.

주요판결

미국에서는 어떠한 헌법 조항이나 어떠한 실정법규라 할지라도 법원에 의해 강제되지 않고는 수사상의 권력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다.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한 것이다. 주요판결들에 의해 확립된 원칙들을 보자.

첫째 정치단체의 회원명단에 대한 사생활권은 헌법 수정 제1조(종교·언론·출판·집회의 자유보장)에 의해 보장된다. 둘째, 대중적이지 않은 조직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권리와 특권을 박탈당하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셋째, 선동적이고 반정부적인 연설이라 할지라도 수정 제1조에 의해 보장된다. 개인은 자신의 폭력에 대한 옹호가 △직접적으로 불법행동을 야기하거나 △불법행동의 야기가 임박해 하거나 △그러한 불법이 야기될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만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 넷째, 표현의 자유를 실제로 규제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규율하는 정부의 조치 또한 수정 제1조에 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수정 제1조의 실현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정치활동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보체계의 단순한 존재자체로서 정부에 대한 헌법적 권리주장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단체의 구성원 일부가 보장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가담했다 할지라도 그 단체 구성원의 전부 또는 그 단체 자체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 지침

1960-1974년동안 연방수사국은 50만건의 "반정부" 사건을 수사했으나, 이중 유죄판결에 이른 경우는 드물었고 다만 수정 제1조상의 권리에 대한 큰 침해가 결과되었을 뿐이었다. 이러한 권력남용의 결과로 연방수사국에 의한 불법적인 정치사찰을 제한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여러단체들이 연방수사국을 통제하기 위해, 즉 그 수사활동을 법적 통제하에 두는 방안을 모색했다. 제안된 입법안에 따르면 연방수사국은 "정보"활동이 아닌 범죄수사에만 활동이 제한된다.

지역경찰 정보활동 통제 헌법에 구속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주법집행기관들은 연방수사국보다도 내부통제없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도시에서는 (특히 시애틀) 경찰정보활동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입법을 하고 있으며,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시는 경찰당국

의 활동을 법원지침의 통제하에 두는데 합의하고 있다. 이는 수정 제1조에 보장된 행동에 대한 수사에 저항하기 위해 미국민권연맹 등에 의해 제기된 소송의 결과다.

의회의 감독

미국의회는 예산권과 의회조사위원회조사권, 두가지 방식으로 연방수사국의 정보활동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한다. 의회는 예산권으로 특정활동에 대한 재정을 보류할 수 있다. 사실 의회는 기관체제를 폐지할 수도 있지만, 그런 권한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의회

FBI의 부당한 정치사찰 및

CIA의 부당한 해외개입중지를 위한 투쟁
키트 게이지(역압입법반대국민위원회, 워싱턴 대표)

알려지지 않고 붙잡혀지 않은 몇 명의 활동가들이 FBI의 활동을 언론에 공개하고, 71년 펜실베니아에서 수백 개의 공공 파일이 발견됨으로써 FBI에 대한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도청, 가택침입, 잠입 등 편집증적 환상으로 간주되었던 것들이 단지 빙산의 일각임이 드러났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시작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통제받지 않는 연방경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처로와 파이크(Churoh and Pike)위원회에 대한 의회청문회는 연방의 스파이활동과 무력화 정책의 전반적인 성격,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국가의 최고기관에 의한 통제의 필요성을 여론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소송과 법무장관의 지침 등을 이용해 국가정보기구의 해체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 시점에서 포괄적으로 FBI를 통제하는 FBI의 헌장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FBI를 통제하는 어떤 포괄적인 법도 국가 차원에서 통과된 바가 없다. 통제의 대부분은 행정 각부의 결정이나 단편적인 법률들, 그리고 소송의 결과 부여된 요구들이었다.

시카고, 시애틀,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경찰의 스파이활동의 피해자인 단체나 개인들이 연합하여 소위 "적군" 소송을 종종 제기했다. 그들은 FBI를 보조하기 위하여 세워진 시의 경찰부대를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그들은 소송의 해결책의 하나로써 장래의 활동을 제한하고 감시하는 다양한 법적 체계를 수립했다. 이것이 가장 확대된 경우에는 지방경찰, 주경찰, 그리고 FBI의 장래 활동이 제한되었다.

날치기 개악철회와
헌법재판소 위헌판결
촉구집회
3월 7일 낮 12시
헌법재판소 100m 앞
가회동 사무소 앞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한국타이어, 노동기본권 실종 '노조위원장 직선제 요구' 단식농성

한국타이어(대표이사 홍건회) 대전공장에서 노사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5일부터 대전지부 노조사무실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한 한국타이어 노조민주화 공동투쟁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범 등, 노민투) 소속 노동자들은 '어용노조해체, 노조위원장 직선제 쟁취'를 요구하는 동시에, 회사측의 조합원 탄압과 근로조건 악화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최근 후 회사 정문 앞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인사팀장은 "작업시간이 아니라도 회사를 비방하는 '불법 시위'에 참여한 자는 단체협약에 의해 징계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노동강도 강화
노민투는 또한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악화시켰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노민투는 "인원보강도 없이 3조 3교대이던 작업

방식을 4조 3교대로 바꿈으로써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임금이 깎였으며, 산재발생의 위험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사팀장은 "5일 근무에 이틀씩 쉬기 때문에 노동강도는 오히려 약화되며, 1일치 임금이 떨어지지만, 잔업 등을 통해 보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임금 착복' 주장
한편, 지난 3일 길영섭(제2부)씨 등 3명은 "회사가

매년 평균 50만원의 임금을 착복했다"며 대전지검과 대전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에 의하면, 회사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에 대해 통상임금(기본급+수당)의 1백50%를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기본급의 1백50%만 지급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원 6천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회사의 갈취액은 40억여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인사팀장은 "근속·가족수당·식대·안전수당을 통상임금분에서 계산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노동부 예규에 나와 있는 것으로 불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독 정보기구> 너무도 흡사한 '폐해' 이야기

45년을 넘긴 헌법보호청의 역사는 헌법위반과 인권침해의 역사다. 70년대와 80년대에 공무원의 신규채용시 헌법보호청의 이른바 신원조사가 수백만 건에 이르렀고, 정보기관의 제보에 따라 약 1만건 정도의 직업금지소송과 1천건이 훨씬 넘는 직업금지결정이 이루어졌다.

헌법보호청의 폐해 중 하나인 보안성심사에서 안보관련분야와 사업을 취급하는 수천의 종사자들은 그의 사회적인 배경(가족, 친구)을 비롯하여 생활의 은밀한 부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예를 들어, "담배를 많이 피운다" "원칙적이지만 때때로 사심이 있다" "체질적으로 쉽게 우울해진다. 어린 딸은 사생아다. 대체로 웃을 너무 어렵게 입는다. 봄에는 두통때문에 고생한다" 등등. 이러한 개인파일은 성격적 특성, 성격상의 약점에 대한 상세한 사항과 취미, 채무, 질병, 자녀교육, 사생활에 대한 정보, 연인관계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심지어 성행위에 대한 묘사들을 포함한다. 이런 정보로부터 해당인이 이른바 안보위험인물인지 여부가 판정된다.

헌법보호청은 잠재적으로 "헌법의 적"이라는 혐의를 받는 수천의 인물들의 아주 다양하고, 내밀한 개인특징들을 헌법보호청의 전자기록에 보관하고 있다. 예를 들어 H10은 "단정한", H11은 "단정하지 않은", H24는 "거만한", H35는 "위트있는"을 각각 표시한다. H70 이하 항목은 성에 관련된 습관과 기질을 알려준다. "충동적인"(H70), "호모"(H71), "양성"(H72), "레스비언"(H73) 등등.

헌법보호청의 심각한 악역의 예는 많다. 헌법보호청의 끄나풀에 대한 살인은 정보기관이 관여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정보기관의 목전에서 저질러졌다(쉬워커 살인 사건). 테러리스트집단에 침투한 헌법보호청의 비밀 끄나풀이 교도소에 대한 폭탄테러공격에 참여했다는 증거들이 최근 나타났다.(끄나풀 슈타인메츠, 바이더슈타트 형무소). <관련기사 2면>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엄: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헌법보호청" 독일국내정보기관의 폐해와 통제의 문제점

돌프 괴스너 박사(변호사, 브레멘)

사회적 민주화의 진척 속에서도 그리고 법치국가적으로 조직된 민주주의 하에서도 또한 정보기관은 무시할 수 없는 기관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좌시할 수 없는 위험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민주주의와 정보기관은 양립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정보기관의 음모적 구조, 비밀스런 정보수단과 방법 그리고 제사회집단의 심정을 색출하고 침투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또한 선전된 적의 초상, 여론에 대하여 관화화된 차폐 장치 그리고 정보기관원의 뿌리깊은 단체정신에 있다. 정보기관은 그들의 업무상-개별적인 경우에 무엇이 달성되었든지 간에- 국가, 민주주의 또는 헌법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보기관은 그들 나름대로 민주적 투명성과 공격 통제의 원칙을 반대한다 그러나 공격적인 통제는 따라서 가능하다 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질 뿐이다.

이들의 유동적 관계 나치체제에서 정보활동과 집행적인 활동을 전면적으로 수행했던 게슈타포에 대한 비참한 체험으로 인하여 새로운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경찰과 정보기관, 즉 경찰업무와 정보기관업무간의 명확한 분계선이 그려져야 했다. 이런 분계선은 비민주적인 권력독점을 저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하여 특히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라는 문제영역에서는 경찰과 헌법보호청 간의 광범위한 권한중복이 나타났다.

헌법보호청은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인 기구 헌법보호청은 간첩을 방지하지도 못하며, 이른바 테러리즘을 방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테러리즘을 예견하지도, 평가하지도 못한다. 헌법보호청은 또한 우익극단주의와 상송일로의 헌법적대적인 폭력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이다. 헌법보호청은 결코 "효율적인 조직경보체계"가 될 수 없었다. 한편으로 헌법보호청은 다른 서방정보기구, 예를 들어 CIA와 마찬가지로 80년대의 동유럽과 구동독이 흥분상태를 지나 우선적인 감원조치를 거친 후에 정보기관은 강력하게 재건되었다.

정당성위기와 정비 냉전의 종말은 서독의 정보기관 - "헌법보호청", "연방정보부", "군보안부대"-을 심각한 정당화위기에 몰아넣었다. 그러나 동구권의 몰락과 동독 그리고 동독안기부(Stasi)의 소멸은 서독정보기관들의 존재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초기의 책임통감과정, 흥분상태를 지나 우선적인 감원조치를 거친 후에 정보기관은 강력하게 재건되었다.

"헌법보호"는 가명 "헌법보호"라는 듣기 좋은 표현 뒤에는 공히 "추악하

고", 모든 정보기관에서 전형적인 음모가적 구조와 정보수단과 방법들을 갖춘 매우 "일상적인" 정보기관이 팽배하고 있다. 독일내에서 활동하는 헌법보호청의 전임요원 및 비전임요원의 숫자에 대한 믿음만한 통계는 없다. 전임요원의 숫자는 대략 5천명 정도로 추산되며,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요원의 숫자는 연방독일 전체로 치면 수천명에 이를 것이며, 그 추정치도 5천명을 웃돈다.

"헌법보호청"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연방적 구조에 따라 연방적으로 편제되어 있다. 각주는 고유한 헌법보호청을 설치하고 있다. 이렇듯 주헌법보호청은 부분적으로 차별적인 법률적 근거, 인력강도와 구조를 지니고 있다.

헌법보호청은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인 기구 헌법보호청은 간첩을 방지하지도 못하며, 이른바 테러리즘을 방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테러리즘을 예견하지도, 평가하지도 못한다. 헌법보호청은 또한 우익극단주의와 상송일로의 헌법적대적인 폭력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이다. 헌법보호청은 결코 "효율적인 조직경보체계"가 될 수 없었다. 한편으로 헌법보호청은 다른 서방정보기구, 예를 들어 CIA와 마찬가지로 80년대의 동유럽과 구동독이 흥분상태를 지나 우선적인 감원조치를 거친 후에 정보기관은 강력하게 재건되었다.

헌법보호청과 경찰 사

있다. 위원회의 토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들은 기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통제방식이 이와 같이 매우 제약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은 여타 업무로 인하여 정보기관사건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수 없다.

저장자료에 대한 조회 국가의 모든 시민들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서도 헌법보호청이 그 자신에 관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에 관한 조회권을 보유한다. 헌법보호청은 개별 사례에서 상응하는 이유-예컨대 소위 국의 또는 정보제공자의 위험 때문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관련인은 저장기록물에 대하여 그 적법여부를 연방과 주의 정보보호담당관으로 하여금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서열람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통제활동과 조회관행상의 그러한 제약들은 헌법보호청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방해하며, 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보고를 거부할 수도 선시켰다.

행사와 동정

- 민가협 제12차 정기총회
 - 때: 3월 7일(금) 오후 2시
 - 곳: 기독교회관 강당
- "21세기 여성을 위한 음악회- 봄·봄"
 - 때: 3월 7일(금) 오후 7시30분
 - 곳: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 주최: (사)한국여성단체연합(273-9535)
- 제13회 한국여성대회
 - "가자! 21세기, 여성의 시대!"
 - 때: 3월 9일(일) 오후 2시
 - 곳: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콘서트 홀
 - 주최: (사)한국여성단체연합(273-9535)
- 지학순 주교 4주기 추모미사 및 제1회 정의평화상 시상식
 - 때: 3월 10일(월) 오후 6시30분
 - 곳: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 문의: 풀빛회(구 지학순주교 기념사업회, 265-7940)

노동법 재개약
· 개약 안기부법
규탄과 부패정권 퇴진
법국민결의대회
3월 8일 오후 2시
종묘공원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매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날치기 위헌, 애들도 알아요” 사회각계, 헌법재판소 위헌 평결 촉구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공식 사과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통과된 안기부법과 노동법이 버젓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안기부법은 실종된 채 노동법에 대해서만 재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더구나 날치기의 위헌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려줄 헌법재판소마저 평결을 미루고 있어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7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날치기 개약 철회와 현재의 조속한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노동법·안기부법 개약 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가 주최한 이날 집회에는 대학생과 노동자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늘어지는 위헌 판결, 늘어나는 노동법 공백, 기세 등등 안기부’ ‘아빠! 날치기가 위헌이 아니면 나도 맨날 날치기할래’ 등의 피켓구호가 섰다.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헌재의 조속한 위헌 판결만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영희(전 한총련 의장) 씨는 “인친, 수원 보결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었음을 상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석운 범대위 집행위원장도 “모든 국민이 무

효라고 생각하는 두 법안에 대해 판결을 유보하는 것은 날치기를 방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집회에 이어 김상곤(민교협 공동의장) 교수 등 범국민대책위 대표단은 헌법재판소를 방문, 시민·사회단

체의 의견서와 국민 50여만 명의 서명결과 등을 헌법재판소에 접수시켰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국민회의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민주노총 조합원의 헌법소원, 창원지법과 대전지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4건이 접수되어 있다.

한편, 범국민대책위는 오는 11일 현재의 공개변론에 맞춰 재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인간띠 잇기 행사도 벌일 계획이다.

“민주열사 추모-역사적 사업의 기념비적 첫 삽질”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 위한 첫 학술회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분신, 투신, 고문 등으로 산화해간 민족민주열사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첫번째 학술회의가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상임의장 이창복, 추모단체연대회의) 주관으로 6일 성공회성당에서 열렸다.

기조연설을 맡은 임재경 씨는 “민주열사를 추모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삼웅(친일문제연구회장) 씨는 의열사의 전통이 조선시대, 일제시대를 거쳐 현대 군사독재시대에 부활했다면서 “해방 후의 의열투쟁은 분신, 투신, 자결, 단식 등 자기희생적인 항쟁”이었다고 정의했다. 그는 민주열사의 명예회복 방안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국가 차원의 합동위령제 △민주열사 묘역 성역화 △국회 내에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설치 △피해자와 가해자, 국민대표로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 6개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삼웅 씨의 발제 내용에 대해서 토론자들은 상반된 의견을 각자 표명했다. 장기표(신문명정채연구원장) 씨는 김 씨의 발제 내용보다 한발 더 나아가 민관합동으로 ‘과거청산과 미래창조를 위한 국민화합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주장하면서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위해 투쟁하다 처벌받은 이들을 사면, 석방, 복권할 것 △군사독재 주도자와 군사독재 추종자도 모두 사면, 석방, 복권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황인성(전국연합 상임집행위원장) 씨는 “열사, 희생자의 명예회복 방안 역시 우리 국민의 철저한 과거청산 노력과 떼어 놓을 수 없는 문제”라면서 △민관합동 조사기관에 의한 독재정권의 범죄적 사실 규명 조치 선행 △56공 군사독재 수구세력의 인적청산 △군사독재에 희생당한 피해자의 원상회복과 명예회복, 배상, 각종 법적, 제도적 청산작업을 제시했다. 박래군(과거청산국민위원회 사무국장)씨는 “과거청산 작업은 미래를 희망을 창조하기 위한 중대한 과업”이라면서 진실을 규명을 위한 조사기관에 가해자가 참여하는 것에 반대했다. 그는 오히려 “가해자에게는 처벌만이 있을 뿐”이라면서 철저한 과거청산만이 올바른 명예회복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 원칙으로 진실규명, 가해자 처벌, 명예회복과 배상이라는 국제적 원칙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학술회의는 2백명이 넘는 청중이 몰려 근래 보기 드물게 열기 높은 행사로 치러졌다.

YS 임기말기...노정권과 흡사 민가협 정기총회, 날치기법 철회결의

96년 한해동안 구속된 양심수는 총 1천2백63명으로 이는 95년 전체구속자 6백23명에 비해 무려 2배가 증가했으며, 하루평균 3.45명 꼴로 구속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아래 표 참조>

민주화가죽운동협의회(민가협, 상임의장 임기란)가 7일 발표한 총회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구속자의 급격한 증가는 노태우 정권말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양심수의 대량구속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노태우정권의 집권 4년차에 해당하는 91년 구속자 1천3백56명(하루평균 3.7명), 92년 구속자 1천1백45명(하루평균 3명)등과 비교할 때 구속자 수에 있어 군사독재정권과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를 통해 민가협은 “양심수 집계 결과에서 알수 있듯이 김영삼정권의 인권치수는 96년 들어 급격히 낮아졌다”고 평했다.

민원성 시위도 처벌 96년 구속된 양심수 가운데 집시법 위반 구속자는 7백56명으로 전체 구속자의 59.8%를 차지했다. 급증 원인은 한총련 연세대 사태와 관련해 학생 4백70명이 구

속된 것이 1차적 원인이지만, 작년 한해동안 정부당국이 사실상 평화시위 및 합법집회시위도 진압해 구속자를 양산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짚었다.

또한 정치적 이슈를 내세운 시위가 아닌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조차 엄단했으며,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고 시위자들을 연행·구속하였다. 심지어 부산 해운대구 송당마을 철거, 영광 원전 추가건설 반대시위등 주민들의 민원성 시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이뤄졌다.

공권력 남용 여전 민가협은 국보법, 집시법,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등에 대한 1심 재판실형 선고율이 94년 이후 크게 낮아지고 있다고 보았다. 구속영장 기각률 역시 95년 이후 크게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공안사건의 1심 실형선고율은 91년 39.4%, 92년 30.7%, 93년 39.9%에서 94년 18.5%, 95년 21% 96년 1-8월 16.8%로 낮아졌다. 공안사건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 역시 96년 1-8월 5.9%, 95년 6.2%로 92년 0.8%, 93년 1.21%, 94

김영삼정권 출범 이후 구속된 양심수 현황

	(단위: 명)				
	93년	94년	95년	96년	총계
총구속자	195	775	623	1263	2,856
국보법	105	389	285	491	1,270

96년 양심수 구속현황 (적용법규별 분류)

*한사람에게 2개이상 적용된 법규 모두 포함

국보법	노동법	집시법	특공	폭력	총계
491 (38.8%)	89(7%)	756 (59.8%)	57 (4.5%)	606 (47.9%)	1,263

년 1.3%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이에 대해 민가협은 “무죄선고나 영장기각, 보석결정이 늘고 있는 것은 증거도 없이 인신구속을 남발하는 등 공안당국의 공권력 남용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가협은 이날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12차 정기총회를 갖고 공동의장단에 박용길, 임기란, 권오현, 윤혜경 씨를 인준했다. 이날 결의문을 통해 97년사업으로 △안기부법, 노동법 개약철회 △국가보안법등 반민주악법철폐 △조작간첩장기수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피해배상등 과거청산운동 등을 힘차게 벌여 나갈 것을 결의했다.

세계여성의 날 성명 AI 한국지부

8일 제89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국제엠네스티(AI) 한국지부는 “여성인권의 존중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AI 한국지부는 세계 모든 정부는 여성에 관한 국제인권조약에 조속히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여성에 대한 강간, 고문, 가

혹행위 등을 근절할 것 △여성의 권리 향상을 위한 국내외적 민간단체운동에 대해 정부가 지지할 것 △전쟁이나 내전 과정의 국가에서 특히 여성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할 것 등을 촉구했다.

“민병일 씨 사건 수사 지지부진” 노점상 종묘집회

지난달 2일 파출소에서 의문사한 민병일(노점상) 씨 사건이 발생 한달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지난 15일 민 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으나, 현재까지 부검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한편 「민병일 폭력살인 책임자 처벌과 민중생존권 쟁취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민중생존권 압살·부패정권, 김영삼정권타도와 악법철폐 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엔 노점상, 대학생 등 7백여 명이 참석했다.

기사제보를 받습니다
715-9185

“3월11일자부터 달라집니다”

앞으로 <인권하루소식>은
■ 지형이 달라집니다.
활자가 커지고, 편집이 새로워집니다.
■ 내용이 풍부해 집니다.
국내 최고의 필진으로 인권시평을 열어갑니다. 인권시평을 통해 인권의 눈으로 세상 보게 됩니다.
■ ‘인권전문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새로운 기획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15-9185 · 팩스) 02-715-9186 · 통신 ID: rights(천,하) · E-mail: rights@interpia.net · http://interpia.net/~rights

1997년 3월 11일(화)

제 83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새 노동법, 노동조합 발목기 성공

교원·공무원 단결권 유보, 파업권 현저히 제한

10일 여야합의로 통과된 노동법 개정안은 단결권, 파업권 등 노동기본권을 대폭 후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여야단일안은 그 동안 노동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날치기 이전보다도 노동조합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새 노동법에 따르면, 노동조합활동이 처한 상황은 거의 무장해제에 가깝다. 비록 선언조항에 그쳤다고는 하나 무노동무임금을 조문에 삽입했으며, 대체근로를 금지했던 구법을 180도 바꿈으로써 파업의 실질적 무력화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장내 주요시설 접근 금지 조항은 쟁의행위 자체를 불법화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를 안고 있다. 특히 5년 뒤부터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를 명문화한 것도 조합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급변 노동법 개정의 최대 쟁점사항이면서 국제적 관심사였던 교원 및 공무원의 단결권을 또다시 유보시킨 것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국내 관련단체들의 저항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병원, 철도, 방송 등의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존치시켰고,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대법원 확정판결이 아닌 중노위 판정시점으로 축소시킴으로써 해고의 효력을 높였다.

한편, 노동쟁의의 정의를 이익분쟁으로 한정하는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지난 1월 총파업과 같이 노동자의 권익과 관계된 쟁의행위를 불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고려대 직원, 프락치 의혹

수위실에 학생회 관련자료 보관

고려대 서창캠퍼스에서 학생과 직원의 학원사찰 의혹이 제기되면서 학생들이 절거농성에 돌입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10일 학생회관 수위실에서 한총련 사업계획서, 대의원대회 자료집 등을 모아둔 박스가 발견되었으며, 이 박스는 학생과 장 주임이 수집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 주임은 "오다가다 주는 자료들을 모아둔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회측은 "자료집들은 일반 학생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내부자료이며, 장 씨가 프락치임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실은 10일 밤 11시경 학생회관 수위 조성희 씨가 학생회실 서랍을 뒤지는 장면이 학생들에게 발견되면서 드러나게 되었다. 조 씨는 "난로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회실에 들어갔으며, 담배를 찾으려고 서랍을 뒤졌다"고 해명했으나, 이후 서랍을 뒤진 사실 등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이번 사건을 상부의 지시에 의한 학원 사찰로 규정하고 즉각 학생과 사무실에서 농성에 돌입했으며, 학교당국의 진상규명과 공개사과를 촉구 하고 있다.

	날치기 개정 이전	여야 단일안	국제기준
해고자 조합원 자격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중앙노동위 재심판정까지	해고 사실은 노조 내의 지위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ILO결사의 자유위원회, 96년 6월)
교원·공무원 단결권	금지	유보	군대와 경찰 제외한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ILO조약 87호)
대체근로	쟁의기간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사업장내 대체근로 허용	대체노동을 허용하는 입법례 없음
직권중재 사업장	1. 공중운수사업 2. 수도·전기·가스 및 정유사업 3.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4. 은행사업 5. 방송·통신사업	철도·방송·병원 등 포함하고 한국은행 제외한 은행과 시내버스는 2001년부터 제외	공익사업의 범위는 필수서비스에 한정되도록 해야하며, 조폐·은행·농업·광업·항구·정유·담배·출판·교육·방송·정부간행물·주류·운송·항공기 수리 등은 제외(94년 6월 ILO 권고)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노조 운영비 지원행위 부당노동행위 규정	5년 유예후 금지	

경찰폭행으로 사망한 이종호 씨 유족, 손해배상소송 제기

지난달 2일 인천 산곡파출소에서 경찰에게 폭행 당한 뒤 사망한 이종호 씨의 유족들은 6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대리인은 송영길 변호사.

통신법 개정운동 벌여 정보통신 검열철폐 시민연대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대표 김영식)는 8일 정보연대 식에서 총회를 갖고 97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사업방향으로는 △전기통신법 53조, 54조등 통신관련법 개정운동 △한달 평균 1만여건의 글의 삭제와 수십명의 ID가 온라인업체의 자의적 규정에 의해 중지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온라인 업체 약관 개정운동 △IP(정보제공)업체와 사전심의 거부운동 조직 △검열에 대한 이론연구팀 구성 △97 검열백서 발간 등이다.

주요 공판 안내

- 3월11일(화)
 - 김선미(국보법) 오전10시, 2단독, 524호, 신건
 - 이수영(국보법 간첩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 박중대(국보법 간첩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 서미연(국보법) 오후2시, 3단독, 317호, 속행
 - 이기문(국회의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오후 2시, 합의10부 403호, 선고
 - 3월12일(목)
 - 신승우(국보법), 오후2시, 5단독, 519호, 속행
 - 양규현(제3자개입금지), 오후10시, 4단독, 524호, 속행
 - 3월14일(금)
 - 이승구(국보법),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 최인희(국보법) 오전11시, 단독7부, 423호, 속행
 - 함운경(국보법), 오후4시, 10단독, 525호, 속행
 - 이교관의 1(시사저널 기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후4시, 10단독, 525호, 속행
- 이상 서울형사지법
* 3월14일, 홍성담(화가, 출국의 자유에 관한 소송), 오전 10시, 562호, 서울고법(민사)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개악 철폐와 헌법재판소 위헌평결 제2차 촉구대회

▶ 일시: 3월 11일 (화) 오전 9시반
▶ 장소: 헌법재판소 100m 앞 가회동사무소 앞 인도상

주/간/인/권/호/를 (97년 3월3일부터 9일까지)

<3일>(월)
강원 정선군 사북·고한과 광원등 3천여명 생존권 보장촉구 결의대회/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 한라중공업 노조 사무장으로 일하던 최병석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노조전임자에게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파업기간에도 임금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판결내린 원심 확정/〈워싱턴 포스트〉 보도, 미 중앙정보국 지난 2년동안 현지 정보원 중 1/3인 1천여명 해고, 이중 1백여명은 범죄나 인권유린과 관련돼/일본내야 정부, 반정부 시위를 반란으로 규정하고 비상사태 발령

<4일>(화)
노동부 발표, 96년 12월 현재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는 20만명, 이중 불법체류자 12만9천여명(60%) 이상으로 밝혀/서울지검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 민변이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를 통해 북한에 쌀을 보내 협의로 내사벌었으나 무혐의 처분/오다 하루키 도쿄대 교수, 중학교 교과서에서 위안부문제를 다루는데 반대하는 일본내 움직임에 반박글 발표

<5일>(수)
부산 금정경찰서, 연세대 한총련 시위에서 학내의 시위주도 혐의로 부산대 동아리연합회 회장 윤창근 씨 구속영장 신청/내무부, 민변이 지난 2월에 낸 '주민등록 공동활용계획' 관련 정보공개 청구 받아들여/민주노총 노동자 1백여명 여의도서 '노동법 전면개정 촉구 결의대회'/보건복지부, 가정간호사법사업 4월부터 전국 44개 병원으로 확대 실시/독일 핵폐기물 수송자전 시위대와 경찰간의 충돌로 많은 부상자 내고 일주일만에 완료

<6일>(목)
법무연수원 최근 퍼낸 <96 범죄백서>에서 소년법 95년 12만4천여명명으로 급증 발표/내무부, 주민등록법 및 인감증명법 개정안 입법예고/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화운동과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문사 명예회복에 대한 제1차 학술회의 개최/서울경찰청 보안부 전국학생연대 핵심 간부 15명 붙잡아 이중 한기범 씨 등 10명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

<7일>(금)
세종대, 덕성여대등에서 최근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을 앞두고 재단의 전횡등에 비판적인 교수재임용서 탈락하는 사례 잇따라 발생/법대위, 헌법재판소앞에서 안기부법과 노동법의 위헌 평결을 촉구집회 개최

<8일>(토)
유엔 보고서, 전세계 빈곤층 인구 13억중 여성 70% 차지
<9일>(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세계여성의 날 기념식/서울시내 22개 지역의보조합 의료보험료 62%-24.6 올리기로 결정

이렇게 맛있는 안기부

인권
시평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나치의 '게슈타포'와 구 동독의 '슈타지'는 독일 사람들에게 아주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 국가 내·외의 안전보장을 동시에 담당하며, 정보기관의 권한은 물론 수사권까지도 갖고 있는 기구는 민주주의를 압살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베를린에서 날아 온 마르틴 구차 교수는 자신의 발표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었다. 지난 2월 27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린 공안정보기구 개혁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이 분야의 전문가인 네사람의 외국인과 14명의 한국측 발제·토론자들은 여러 나라의 '안기부문제'를 철저히 까발려 나갔다. 토론마다 통과했고 변호사회관 강당은 쾌적했다.

"미국에서 CIA는 물론 수사권과 국내 정보 수집권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것을 가진 FBI도 의회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감독됩니다." (음, 그래야지...)

"독일의 '안기부'인 헌법보호청은..." (고것 참, 음...)

"아빠아, 여기예요!"
깔끔하지만 별로 보잘것없는 건물 현관에서 딸이 손을 흔들고 있다. 20대 1이라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 직장에 들어 온 지 벌써 2년이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부러워하는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이 된 것이 딸은 늘 자랑스럽다.

"아빠, 저희 안기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접수카운터 주위는 견학은 초등학교 꼬마들로 북적거리다.

복도 양쪽은 모두 100% 유리 되어 있어 안기부 직원들이 바쁘게 일하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민원실예요. 저 민원인들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혹시 있으면 보여달라고 찾아 온 시민들예요." "그런 걸 다 보여주냐?" "그럼요.

프라이버시의 권리와 알 권리가 헌법에 보장돼 있었어요. 저도 안기부에서 철저히 인권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흠..."

유리창 너머로 복잡한 기계가 작동하고 있다. "여기는 주 전산실. 저 대형 컴퓨터는 국내에서 두대 밖에 없는 고성능예요. 정치, 군사, 경제, 산업, 첨단과학기술, 국제범죄조직 등등 복잡한 세계의 온갖 정보를 '슬쩍'해 왔다가 처리해야 하니까 저런 대용량 컴퓨터가 동원될 만도 하죠. 저쪽 복도 맞은편 정보분석국은 안기부 최고 두뇌들의 집합체죠." 어느새 주위에 대형 컴퓨터를 구

**"아빠, 저희 안기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안기부에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안경 쓴 분이 부장님이에요. 재작년 안기부 선거에 당선되었어요."**

경하려는 초등학교 꼬마들이 불러 왈카지걸 정신없다.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걸음을 재촉한다.

"아빠, 이 구역은 동아시아국예요. 이쪽에서 순서 대로 중국과, 일본과, 베트남과, 아 참 저쪽에 북한과가 있네요. 북한 정보기관과 우리 안기부 관계는 한마디로 공조관계죠. 우리나라 분단을 자기나라 국가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모든 강대국들의 의도를 분쇄하기 위한..."

"아빠, 아빠, 이쪽으로 오세요. 제1회 의실에서 간부들이 회의중예요. 보세요. 저 뚱뚱하고 검은 빨레 안경 쓴 분이 부장님예요. 재작년 안기부장 선거에 당선되었어요." "안기부장 선거라...?" "네, 과거처럼 정치권과 유착하는 일이 없도록 직접선거로 뽑히죠. 아빠도 다음에 출마해보세요." "애가 원!" "아네요, 아빠 인권운동 경력이 10년 이상이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나 같

은 '전과자'가 무슨... 근데, 뭐냐 거시기, '취조실'도 구경할 수 있느냐?" "네에? 취조실요? 왜 안기부에 취조실이 있어야 하죠? 모든 범죄수사는 검찰과 경찰이 하는 건데?" "아 참, 그랬지 그러니까 수사권이..." "네에, 없어진 자가 옛날예요. 선배들 얘긴데 1997년에 완벽한 수사권을 가지려는 안기부 기득권층과 수사권을 일부라도 제한하려는 국민들의 치열한 싸움이 있었대요." "오냐, 그랬다." "그 때 국민들이 정신차리고 열심히 싸워 준 덕분에 안기부의 민주화가 계속 진행되어 오늘날의 영광스러운 안기부가 있게 되었다는군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안기부의 대명사는 '밀실수사' '고문' '용공조작' 따위였겠지요?" "그래 그래." "아빠는 최근의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어떻게?" "안기부는 국민을 위해 헌신한다고 72.8%, '안기부 더 개혁해야 한다'가 14.6%, '더 이상 개혁이 필요 없다'가 7.2%예요. '친근한 느낌이 든다'는 61%, '무서운 느낌이 든다'가 3.3%구요." (*) "허허 그으래?", 박수 쳐주마 이렇게. 짹짹. 허허, 좋구나. 우리 딸 자랑스럽..."

짜짜짜... 박수 소리에 놀라 단잠을 깨어보니 꾀노현교수의 발제가 끝나고 있었다. 초등학교 1학년 짜리 딸 얼굴이 떠올랐다.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안기부법의 재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안기부와 신한국당 입장은 재개정 절대불가라고 한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안기부를 후손에게 넘겨 줄 수 있을 것인가?

(*) 이 여론조사 수치는 최근에 한길리서치에서 한 여론조사 수치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15-9185 · 팩스) 02-715-9186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interpia.net/~rights

1997년 3월 12일(수)

제 84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날치기 정당했다”

헌재 공개변론서, 신한국당 의원들 강변

11일 오전 헌법재판소 법정에 날치기 주역들이 자리했다. 신한국당의 이사철, 김학원, 목요상 의원, 김찬진 변호사 등은 이날 헌법재판 공개변론의 피청구인측 대리인으로 나와 "날치기 법안은 정당했다"고 강변했다.

신한국당 의원들은 우선,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선 직접성·현재성·자기관련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직접적이지 않고, 현재의 일이 아니며, 자기관련성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들은 "실령 법안의 의결절차가 헌법과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번 법안이 국회가 의결한 것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포된 이상 헌법재판소가 유·무효를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한국당 의원들은 또, 이미 폐기된 노동법과 개정안기부법에 대해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대리인 김찬진 변호사는 "안기부법은 오랫동안 안기부가 담당해 온 국보법 위반 행위의 수사권을 회복시킨 것에 불과하다"며 "일반 국민들이 안기부가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체제를 갖추어 반국가사범을 색출해 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개정 법률은 지극히 타당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찬진 변호사는 이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개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며 폐기된 노동법마저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그는 또 "법률을 통해 기본권에 대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한편, 날치기 통과 절차에 대해서도 대리인들은 반성이나 유감보다는 정당성을 강변하는데만 전력을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이사철 의원은 "회의실을 점거하고 의장을 감금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으며, 특히 "야당의원들에게 사전 통보했을 뿐 아니라 누구도 본회의장 입장이 불허된 바 없으며, 보도진의 출입과 취재도 허용되었으므로 본회의는 공개된 것"이라는 억지주장을 펴기도 했다. 동시에 이들은 "국회법 운영의 과거 관행에 비추어 크게 잘못되었다고 비난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의 공개변론은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겪은 뒤에도 달라지지 않은 날치기 주역들의 인식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준 것이었다.

“헌재 판단 유보, 제2의 날치기 방조행위”

법학교수, 헌재 판단 촉구

민주주의법학연구회(상임대표 김민배, 인하대 교수) 소속 21명의 법학교수들은 11일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해 "헌법질서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날치기 통과와 위헌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학교수들은 의견서를 통해 "날치기 통과는 국회법이 정하는 입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의회주의와 대외제 민주주의, 나아가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기부법은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며, 노동관계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존립기반을 허무는 것으로 명백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날치기 통과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피해간다면, 언제 있을지 모를 또다른 날치기 통과는 방조하는 것"이라며, 그 경우 헌법재판소의 존립 자체도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회 정의평화상

민주노총 수상

들빛회(공동회장단 김승훈 등)는 제1회 정의평화상 수상자로 민주노총을 선정, 시상식을 10일 가톨릭센터에서 가졌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1천만원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구중서(들빛회 이사, 수원대 국문과) 교수는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을 일깨우고 사회개혁투쟁을 선도함으로써 우리사회가 직면한 여러 사회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더욱이 "날치기 통과된 개정노동법과 안기부법의 무효화투쟁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서 이 나라의 민주화와 정의평화를 이끌었다"고 지적했다.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은 "날치기법이 여야 합의안으로 합법화되는 시점에서 이 상을 받게 되어 착잡한 심정이나, 매우 뜻깊은 상이라고 생각하며 1천2백만 노동자와 함께 나누겠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들빛회는 96년 지학순주교 기념사업회가 제출한 단체이다.

평택 예비다 농아원생 성폭행한 미군 엄중 처벌 촉구대회
▶일시: 3월 12일(수) 오후 1시
▶장소: 수원지방법원 마당

자료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요약 "국가 속의 국가" 구 동독의 슈타지체제: 해체와 규명

롤프 괴스너(변호사, 브레멘)

구동독의 첩보기관 남용의 구조와 기
제 및 이 첩보기관에 대한 투쟁에 대
해 보고하고 이러한 과거를 청산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통일
독일의 노력에 대해 보고한다.

구동독의 MfS는 Ministerium für
Staatsicherheit의 약자로 국가안전부를
말하고, Stasi는 Staatssicherheit의 약자
로 비밀경찰을 말하는데 이는 MfS의 후
신으로 업무가 확장된 것이다. 1950년 2
월 8일자 법률에 의해 MfS에게, 동독의
내·외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첩보수
단과 방법을 가진 통일적인 정보수집기
관 및 방어진관으로서의 임무가 주어졌
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슈타지에게 첩

보권한 말고도 경찰-집행권
한 역시 주어졌다. 슈타지는
소위 동독의 인민경찰이 가
진 모든 권한을 갖게 되었
다. 슈타지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경찰과 검찰이 가지는
조사권을 행사하고, 수사,
체포구금, 신문을 하였다.

슈타지의 전임부역자들의 수효는
70-80년대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 72년
부터 89년까지 그 수효는 거의 곱으로
늘어 거의 10만명에 육박하였다(주민은
약 1천6백만명). 결국 슈타지와 그 부역
자들에 의한 희생자들 말고도, 자신의
가족조차도 감시의 눈초리로부터 안전
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엄청난 숫자였
다. 1천6백만명 중 5백만명이 슈타지 중
앙컴퓨터에 입력되었다.

■ "슈타지"와 "헌법보호청" 차이점

슈타지는, 89-90년 해체되고 90년 독일
이 통일된 이후, 모든 악을 그 속에 담
고있는 악마의 화신으로 전락했으나,
그에 반해 서독의 첩보기관들은, 슈타
지와 아무런 혈연관계도 없고 법치국가
적으로 조직된 자선단체인 것처럼, 대
조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었다. 동독
의 슈타지와 서독의 첩보기관 특히 국
내첩보기관인 "헌법보호청"을 동일한 차

원에 놓을 수는 없다. 그것들은 상이하
게 조직·형성되었다. 서로 상이한 국
가형태, 권력자, 사회체계를 보호하고
자 한 것이었다.

슈타지는 하나의 정당첩보기관 즉 통
일사회당(SED)의 "방패이자 칼"이었다.
서독의 정부첩보기관은 그때 그때의 다
수당정부에 복무하는 기관인 것이다
슈타지는 대내적 첩보기관의 기능을 주
민감시, 스파이방어로 통일시켰고, 대
외적 첩보기능은 외국에 대한 정보탐지
및 스파이행위로 통일시켰다. 슈타지는
첩보기관이자 동시에 비밀경찰이었다.
서독 시절과 통일 이후의 지금에

**슈타지가 해체된 상황에서 개개인의 책임과
속죄 및 무자비한 정치적 숙청보다, 중요한 것
은 동독의 권위적 국가보호와 억압시스템의 구
조와 작업방식을 밝혀내는 것이다.**

있어서는 첩보기능과 경찰기능의 분리
원칙이 있다.

동독과 서독의 첩보기관의 대내적 핵심
기능은 동일하다: 각각의 국가와 사회경
제적 현상태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그것이다. 슈타지는 하나의 뚜렷한 경향
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국가 속의 국
가'이고자 하는 것이다. 슈타지는 실제
거의 통제 받지 않았다. 그 이유는 슈타
지가 통일사회당의 당 첩보기관으로서,
실제 통일사회당과 슈타지가 서로 얽혀
있었고 통일사회당의 지시에 따라 슈타
지가 집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 슈타지의 해체(1989/90)

89년 가을, 지속적인 대중시위로 인해
동독에서 정치적 변화가 생겼다. 저항
가들은 MfS와 슈타지의 해체를 요구하
며 압박을 가했다. 이 압제적인 기관에
대한 수년에 걸친 분노가, 제도해체,
슈타지부역자들을 쫓아내는 일자리(생

산직)에 배치시킬 것, 책임자처벌 등의
요구로 이어졌다. 새로운 동독정부는
이러한 압력에 굴복하여, 그때까지의
MfS를 소위 "국가안정청"으로 바꾸려고
했다. 이에 주민들은 새로운 저항으로
나섰다. MfS의 대부분의 군본실
(Kreisdienststelle)은 시위자들에 의해 점
거되었고, 금고문이 파괴되었고, 그 서
류들은 소위 "슈타지해체를 위한 시민위
원회"에 의해 보관되었다. 그리하여 새
로운 "국가안정청"은 뒷걸음질치고 총국
간부들은 해고되었다. 89년 12월에 그것
역시 해체되었다. 국가, 정당, 교회, 시
민운동의 대표자들로 새롭게 구성된 원
탁회의가 안보작업팀을 구성하여 그것
의 해체를 통제하고 계속 추
진하였다. 그 후 슈타지자료
들에 대한 정사 및 평가작업
이 시작되었다. 시민위원회
는 국가가 구성한 1백80명의
해체위원회로 대체되었다.

■ 슈타지 과거사 규명

슈타지의 희생자들은 행위자의 석명요
구, 슈타지를 진압하는 과정 조사, 손해
배상에 밀접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 이
를 위해 동독인들은 격렬히 투쟁하였
다. 동독이 서독에 편입된 후, 비록 전
부는 아니지만 일부 성취했다.

국제적이고 여러 학제들로 채워진 기
소그룹들은 동독체제의 역사, 성과, 잘
못된 전개에 대해 다양한 수단으로 차
별화하고 개인적 책임에 따라 규명하려
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
의 책임과 속죄 및 무자비한 정치적 숙
청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동
독의 권위적인 국가보호시스템과 억압
시스템의 구조와 작업방식을 밝혀내는
것이다. 특히 지배적 국가이데올로기와
안전개념에 대한 통일사회당의 정치적
책임을 고려하여, 동독사회의 사회경제
적 조건과 정신 사회적 메카니즘을 탐
구해야 한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15-9185 ·팩스) 02-715-9186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interpia.net/~rights

1997년 3월 13일(목)

제 84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간첩잡는데 무슨 인권?”

광기와 이성의 대결, 안기부법 국회 공청회

“간첩 잡다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걸
가지고 왜 그래?” 빨갱이 잡던 검사 출신의
노변호사가 고성을 지르면서 탁자
를 내려쳤다. 자유총연맹 회원 등 객석
의 지지세력들은 “울소”라고 환호하며
술렁대기 시작했다. 당장 빨갱이 잡는
전선으로 뛰쳐나갈 듯한 기세로...

12일 국회의원 6인 협의회(신한국당
김도연 의원 등)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에서 열린 「국가안전기획법 관련 대
공수사권에 관한 공청회」는 이러한 광
기와 이성간의 치열한 대결장이었다.

오제도(검사 출신 변호사), 박 홍(전
서강대 총장), 양동안(한국정신문화연
구원 교수).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이
인물들이 신한국당이 내세운 안기부법
찬성론자들이었다. 면면에서 예상되듯
이들은 안기부 수사권 확대에 대한 합
리적 논거를 제시하기보다는, 백색선동
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었다.

“국가안보를 위한 안기부 업무수행과정
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일일뿐이다” “공산당 잡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데, 직권남용죄라니?
수사관들의 발목을 묶어 버리면 간첩은
어떻게 잡으란 말인가”. 오 변호사의 흥
분은 최고조로 치달았다.

“관공서, 종교계 등 곳곳에 간첩이 박
혀있는데, 반공진영은 도대체 무얼 하

고 있는가?” 박 홍 교수도 예의 ‘좌경세
력 박멸론’을 되풀이하며, “불은사상을
조장하는 자유를 보장해서는 안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양동안 교수는 “찬양·고무 행위야말로
간첩을 포착하는 유력한 징후”라며, 이
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해야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간첩을 잡을 수 있다”고 주
장했다. 그나마 찬성론자들 가운데 나
은 유일한 논리적 설명이다. 그러나,
양 교수 역시 “찬양·고무 행위가 단서
가 되었던 간첩사건의 예를 들어보라”는
객석의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다.

간첩수사 금지하자는 것 아니다

성난 황소마냥 흥분해 있는 선동가들
반대편에서는 안기부법 반대론자들이 차
분히 의견을 진술해 나갔다. 진술인으로
나온 사람은 박연철(대한변협 인권위원)
변호사, 권노현(방송대 법학과) 교수,
이재훈 변호사(자민련 추천) 등이다.

“안기부법을 반대하는 것은 간첩수사를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보장하
자는 것이다” “안기부의 인권유린과 정
치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
가 없다” “안기부는 범죄수집정보에 전
념하고 수사는 검경이 맞는 것이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길이다”.

반대론자들은 다양한 통계를 제시해
가며, 찬성론자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91년부터 96년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검경의 수사가 안기부보다 비효율적이
라고 볼 수 없다”(권노현 교수) “93년
이후 3백97명의 수사관이 직권남용 혐
의로 고소·고발되었지만 처벌된 사람
은 아무도 없다”(천정배 의원)
반대론자들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

리해 나갔다. “찬양·고무, 불고지외에
대한 수사권은 결국 공안정국을 조성하
고 국민을 잡지는 목표가 있을 뿐이며,
그렇게 될 것이다.” “과거 안기부의 잘
못에 대한 청산과 민주개혁만이 안기부
의 미래를 밝게 해 줄 수 있다”

지난해 여름, 안기부법의 개정이 공론
화된 이후, 개정 찬성론자들이 공개석
상에서 의견을 개진한 것은 이날이 최
초였다. 많은 국민들이 합리적 찬반토
론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럽게
나타났다. 흥분한 우익의 대마고기가
비판적 이성의 목소리를 압도해 버렸기
때문이다.

위안부등 전쟁시 성폭력문제 다뤄 북아일랜드 “여성과 전쟁” 세미나

12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
협)는 지난 6-9일 북아일랜드에서 “남
성, 여성과 전쟁”의 주제로 열린 세미나
결과, 일본정부에 아시아평화국민기금
철회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전했다. 또한 “전쟁시 자행된 여성에 대
한 제도적, 조직적 성폭력은 여성에 대
한 명예와 존엄에 대한 폭력으로 중대
한 인권침해며, 중일전쟁, 제2차 세계
대전, 보스니아와 헤르체코비아 분쟁,
크로아티아, 르완다와 그 외 분쟁에서
여성들이 성노예로 고통을 당했다”고 지
적했다. 일본군 위안부문제외에도 전쟁
시 자행된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
책임당국은 공식사회와 법적 보상(혹은
배상)과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주장했
다.

이 세미나는 학자들과 국제재판소 여
성폭력, 인권 등의 전문운동가 40여명
이 참석했으며, 국내에서는 윤정옥(정
대협 공동대표), 김윤심(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오재식(시민연대 상임대표) 등 5
명이 참석했다.

안기부피해자 공동기자회견 및 개정 안기부법의 문제와 간담토론회

- ▶ 일시: 3월 13일(목) 오후 2시
- ▶ 장소: 세종문화회관 4층 소회의실
- ▶ 주최: 법국민대책위·연노련 등

인권 현장을 뛰는 사람들⑥ - 세진인쇄소 사장 강은식 씨

믿음으로 짚어낸 역사

철칙철칙 철칙철칙.....

3평 낱집 되는 방에는 온기 보단 냄새로 한뫼 하는 난로 한 대와 시키렇게 뭉개진 인쇄폐지가 가득하고, 마스터기 1대가 폭주족보다 요란하게 돌아간다. 이윽고, 기계가 멈추고 손에 묻은 기름 때를 씻으며 "영세업자에겐 시간이 돈인데..." 하며 하루일을 마감하는 강은식(47)씨! 세진인쇄소 사장님이자 인쇄기술자인 그의 첫머리가 '영세업자'이듯이 울지로 3가 깊숙한 골목에 위치한 그의 작업장은 1년 열두달 그늘진 곳이다.

그는 77년 규제대를 하고 형님과 함께 인쇄업을 시작했다. 형님의 고향 죽마고우인 이해학(성남 주린교회) 목사와의 인연으로 재야운동판 인쇄물을 떠맡게 된 '첫발'이었다. 아마도 재야출신치고 세진을 모르면 '간첩'이라고 봐도 될 듯하다.

"내가 인쇄업에 들어온 것이 77년이니까 꼭 20년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단가가 똑같아. 이렇게 된 데에는 운동권의 잘못이 커. 한때 인쇄업에 대거 뛰어들었는데, 싸게 해주다면서 가격을 내렸지. 가격을 낮추니까 인쇄 흐름은 짜그라들고, 그러고도 계속 인쇄업을 하면 모르지만 자기네들은 빠지고, 그러니 인쇄업을 계속하는 사람들만 죽을 맛이지. 그것만 생각하면 짜증나."

친형과 나란히 서빙고로

지금은 운동권만 생각해도 이를 박박 간다는데, 그가 이런 말을 스스로없이 하는 사연은 깊다.

80년 이아말로 세진의 전성기였다. 위험한 유인물을 인쇄해 줄 곳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꾸역꾸역 세진을 찾아왔다. 인쇄 단가는 지금과 같지만 일이 많으니까 돈도 많이 벌었다.

80년 김대중 씨의 시국강연회를 이곳에서 뭉뚱 인쇄했으니 강연회가 있을 때마다 트럭 한 대 분량의 인쇄물을 찍

어냈다. 당장 돈을 못받아도 민주화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일했다. 아마 지금껏 그만큼 일했으면 빌딩은 샀을 꺼리는데, 그 댓가는 컸다.

"형님과 함께 서빙고 보안사 분실로 끌려갔는데, 난 그곳에서 15일간 조사를 받고 다시 시경 합수부에서 5일간, 중부경찰서에서 2일 조사를 받고 풀려났지. 그러나 형님은 '김재규 항소이유서'와 관련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고 1년6개월 가량 복역했어..."

김재규 항소이유서를 처음 찍은 곳도 세진이었고, 80년 광주항쟁의 처참함을 알리는 칼라 사진도 목숨걸고 찍은 곳도

"같이 살고, 같이 움직였잖아. 그럼 같이 살아야지. 저그들은 국회의원, 나는 인쇄 밀바닥"

세진이었다. 동아투위, 조선투위 당시에는 여관방에서 관련자들과 같이 자며, 필름을 빼야겨 가며 유인물을 찍었다.

목숨걸고 광주항쟁 사진 찍어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당시의 일이다. 퇴근해 집에 들어가 있는데 다음날 오후 2시까지 찍어야 한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세진 아저씨는 왼편 중지 손가락을 내밀며 "이 손가락이 속살이 보일 정도로 잘렸는데, 일은 당장해야겠고, 병원에 갔더니 마취안하고 생살을 꿰매면 금방 아픈다길래 아픈 것도 참고 꿰맸지. '휴식을 취하라'고 의사가 말했지만 그 길로 인쇄소로 와서 기계를 돌렸지. 운동권유인물은 시간이 생명이잖아."

세진 아저씨는 "같이 살고, 같이 움직였잖아. 그럼 같이 살아야지. 저그들은 국회의원, 나는 인쇄 밀바닥. 조그만 양심이라고 있으면..." 말을 잊지 못한 그는 그저 "한이 굉장하 많디"는 말로

다음 말을 대신했다(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마스터 기계 1대로 손수 기계를 돌린다. 매달 종이값, 임대료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대략 2백50만원이 남는다).

당시 "삼촌"하고 아는 체하던 이들은 국회의원이 되었고, "좋은 세상이 되면 보자"던 아무개는 지금은 0시 시장이 되었지만 코빼길 보이지 않는다. 아직까지 그와 끝까지 않은 인연은 안기부라고나 할까. 경력 덕분에 무슨 시간이 터지면 "이 유인물 여기서 찍지 않았냐고 들고 온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도 '국제사회주의자들' 유인물 일로 다녀왔다고 한다. 어딜 다녀왔냐고 묻자 "우리

한텐 대공분실 밖에 없어. 유인물을 맡긴 사람 이름이나, 유인물 내용은 모르지, 모르는 게 좋고." 맨 처음 잡혀갔을 때는 오금이 떨렸는데 이젠 이력이 났는지, 지금은 가면 고개를 뺏뺏이 든다고 한다.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계속 일을 하는 것은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세진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자리에 있다. 세월이 지났어도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믿을 자체가 없으면 허황된 거래밖에 없고, 믿음이 없으면 떨어져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 거래선이라는 것이 그의 직업 신조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기전 "언제까지 필요하냐고 묻는 것이 다일 뿐 밤을 새서라도 일을 마치는 것이 그이다.

그래서인지 그에게는 10년 이상된 고객들이 많다. 부스리기선교회, 참여연대 등 빈민·시민단체들은 일을 맡기고 그는 거기에 매달 회비를 내는 회원이다.

"기계가 돌아갈 때가 가장 즐겁다"는 그에게 "일한 만큼 보장받는 사회,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의 인쇄를 부탁해보자.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15-9185 · 팩스) 02-715-9186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interpia.net/~rights

1997년 3월 14일(금)

제 84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안기부 수사권 박탈하자”

안기부법 토론회 및 안기부 피해자 기자회견

안기부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2일 국회 안기부법 소위가 공청회를 가진데 이어, 13일에는 언론노련,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협회 주최로 안기부법 관련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또 12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안기부의 수사권 박탈'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도 13일 날치기 안기부법의 무효화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주장은 '날치기 법안을 무효화하자' 데서 한발 나아가 '안기부를 개혁하자'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13일 언론 3단체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장주영 변호사는 안기부 개혁방안과 관련, "안기부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안기부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안기부의 권한남용과 불법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국회정보위를 통한 통제·형사처벌에 의한 통제·언론에 의한 통제·헌법재판소나 법원에 의한 통제방법이 있지만, 이같은 방법으로도 안기부의 권한남용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기엔 미흡하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정보수집기능만을 가진 헌법보호청(서독)이 경찰기능까지 행사

한 슈타지(동독)에게 승리하며 통일을 이룬 것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라고 소개했다.

“이웃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문민시대 안기부 인권유린의 대표적 사례들

▷ 93년 9월 김삼석·김은주 남매 간첩 사건

안기부는 두 남매가 제일북한대남공작 조직과 연계되어 금품을 수수하고,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등 간첩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 94년 배인오(본명 백홍용) 씨는 "안기부 프락치로 활동하면서 안기부 측의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조작사건"이라고 양심선언을 했으며, 권영해 안기부장도 이를 시인했다. 김은주 씨는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으나, 김삼석 씨는 실형 4년을 선고받고 아직 복역중이다.

김은주 씨는 "첫날부터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잡혀왔는지도 모른 채 17일간 수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 94년 2월 구국전위 사건

안기부는 경희대 감사 안재규 씨 등 23명이 반국가단체를 결성해 활동했다고 발표했으나, 16명은 이 사건과 다른 혐의로 기소되었고, 나머지 7명 가운데 김삼식 씨만 반국가단체 가입 예비 혐의로 기소됐다.

▷ 95년 11월 간첩 혐의로 김태년·박충렬 씨 구속

박충렬 씨: 부여에서 체포된 무장간첩 김동식의 진술(무전기를 건네주었다는)만 가지고 간첩 혐의로 연행. 변호인 접견이 금지된 채 경기도 마석과 관악산 등으로 끌려 다니며 무수한 구타와 협박을 당하며 간첩 혐의를 시인할 것을 강요당했다. 결국 간첩 혐의가 발견되지 않자 이적표현물 소지(국보법 7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김태년 씨: "가혹행위에 따른 육체적 고통 뿐 아니라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간첩 혐의에 따른 공포와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결국 아무 증거도 없었고,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고향에 내려가면 이웃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 다만 안기부의 발표를 믿지 않는 이웃들이 다소 위안이 되었다."

▷ 96년 12월 안기부원의 가혹행위로 본인 기도한 김형찬 씨

안기부 직원 4명이 이재규(외국어대 총학생회장) 씨의 영장을 제시하며 연행한 뒤, 신당6동 파출소에서 집중 구타하며 이재규임을 시인하라고 강요. 신원조회 결과 신분이 확인됐으나, "운동권에 아는 사람 한사람만 불러"며 협박한 뒤, 재차 경기도경 대공분실로 연행. 공포감 속에 석유난로를 뒤집어쓰고 분신을 기도해 현재 하반신 3도 화상을 입고 치료중이다.

바로잡습니다

13일자 2면 인권현장을 달리는 사람들의 주인공 '강은식' 씨의 이름이 강인식 씨로 인쇄되어 나갔습니다. 1면 톱기사 두 번째 단 하단부의 '찬성론자...'는 '반대론자...'로 바로잡습니다. 강은식 씨와 독자여러분께 사과 드립니다.

<기획> 인권영화 ① 돌로레스 클레이본 "여성이 갖는 두 가지 빛깔 분노"

감독: 패럴러 핵포드(95년 작) 주연: 캐시 베이츠, 제니퍼 제이슨 리

돌로레스 클레이본을 보고 있노라면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에 빠지게 된다. 두 사람의 죽음을 풀어 가는 것이 이 영화의 중심 열개이긴 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방법은 교차 병렬되어 있고 그 해석의 바탕에는 신화가 깔려 있다. 사방이 물로 고립되어 있는 작은 섬마을에서 당시의 정황상 살인이라고 오인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난다.

층계층에서 죽어 넘어져 있는 여인은 집주인인 베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그 집의 하녀인 돌로레스 클레이본, 자청하여 사건을 맡은 형사는 이 사건을 위해 일부러 물에서 섬으로 건너온 노련한 형사 조 베시,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십년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돌로레스의 딸 셀리나와 십년 전에 죽은 셀리나의 아버지. 이들이 두 죽음에 얽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 영화는 살인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 것이나 범인은 누구인가에 초점을 모으진 않는다. 문제는 십년 세월을 사이에 두고 일어난 두 사건이 어떤 관계가 있으며, 그것을 추적해 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십년 전에 일어난 한 남자의 실족사는 누구든 일상에 한 번밖에 볼 수 없거나 한 번도 볼 수 없는 시간에 발생했다. 해가 없는 어두운 밤에만 자기 존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달이 해를 완벽하게 먹어 버리는 일식(日蝕), 시간은 6분 30초, 그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신화적인 해석에 의하면 해는 남성을 달은 여성을 의미한다. 거기에 일식이라는 한자의 뜻을 그대로 대입하면.....

이 영화를 보는 여성들은 두 가지 빛깔 분노를 느끼게 될 것이다. 여성을 지배하려는 남성의 원초적이고 동물적인 폭력에 대한 분노(돌로레스의 남편), 그리고 여성을 남성의 부속물에 포함시켜 계산하려는 남성 우월주의 사회의 제도적 폭력에 대한 폭력(은행의 규약).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동물적인 폭력은 혐오와 경멸을 낳는

다. 여기서 아예 상종 못할 부류로 밀쳐 버림과 동시에 어쩔 수 없는 인간에 대한 비애를 느끼게도 된다. 그러나 여성을 가진 인간이 이기심과 영악함을 발판으로 누군가를 철저히 지배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적인 폭력을 마주하면 도발적인 분노를 일으키게 된다.

돌로레스의 딸 셀리나는 자기 생존의 방편으로 머릿속에서 억지로 지웠던 기억을 어머니와의 만남을 통해 되찾는다. 영화는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준다. 돌로레스처럼.

이 영화는 여성의 인권을 첨예하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버린 베라를 포함해서 앞의 두 가지 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여성들에게 그리고 여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성들에게 권하고 싶다.

<김경실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영화반>

<인권하루소식> 개편과 함께 새 기획으로 인권영화평을 심습니다. 앞으로는 격주 수요일 인권영화(또는 비디오)평이 소개됩니다. 이 고정란은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영화반 회원들께서 맡아주십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 바랍니다. <편집자주>

개정형사소송법 등 인권강의 전국연합 순회인권교육

전국연합 인권위(위원장 이기욱, 변호사)는 오는 15일부터 경기남부연합동 6개 지역연합을 대상으로 인권순회교육에 들어간다.

인권순회교육은 93년부터 시작되었는데, 95, 96년은 주요사안들에 밀려 진행하지 못했다. 올해 상반기 주요사업으로 인권교육을 마련한 취지에 대해 고상만

(인권위 간사) 씨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는 유독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탄압이 있었고, 올해는 특히 인기부법 개악으로 위기감이 더하다며 "자신의 권리와 법을 제대로 알아야만 위기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의 내용은 개정형사소송법과 인권일반으로 전국연합 인권소속 변호사들이 형소법을, 인권운동사랑방이 인권교육 일반을 맡았다. 개정형사소송법 내용은 △영장실질심사제 △긴급체포제 △구속 절차 △압수수색시 대처방안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인권위에서는 계속해서 인권순회교육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신청대상은 전국연합 소속 부문·지역단체로 한정한다. 수강인원은 20명 이상으로 하되, 모든 교육비용은 인권위에서 책임진다.

문의: 921-4090

◆ 행사와 동정 ◆

- ◇ 날치기 안기부법 철폐 촉구집회
 - 때: 3월 14일(금) 오전 11시
 - 곳: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
- ◇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가두캠페인
 - 때: 3월 14일(금) 낮 12시-5시
 - 곳: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
- ◇ "6월민주항쟁 주인공 찾기 캠페인 선포식"
 - 때: 3월 17일(월) 낮 12시
 - 곳: 명동성당 앞
 - 주최: 6월민주항쟁 10주년사업법국민추진위(7320-610)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발전방안을 위한 포럼
 - 때: 3월 19일(수) 오후 2-5시
 - 곳: 국회의원 회관 1층 소회의실
 - 주최: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521-5364)
- ◇ 윌레강좌 "학부모, 학교참여 어떻게 해야 할까?"
 - 때: 3월 19일(수) 오전 10:30-12:30
 - 곳: 광주 YMCA 4층 강의실
 - 주최: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062-955-6992)
- ◇ 노동과 건강연구회 10차 총회 및 회원의 밤
 - 때: 3월 29일(토) 오후 5시부터
 - 곳: 피어라 들꽃(707-1986)
- ◇ 금속연맹 집들이
 - 금속연맹이 부산서 서울로 사무실을 옮겼다. 집들이는 19일(수) 오후 5시
 - 주소: 서초구 양재동 82-1 성보빌딩 401호
 - 전화: 579-4977 / 전송: 579-9212

<기고> 주한미군에 의한 평택 에바다 농아원생 성폭행 사건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정유진 간사

나이 어린 농아 학생들이 배가 고파 동네 가게의 빵을 훔쳐먹고 개밥그릇에 담긴 라면을 주워 먹는 곳. 재빨이라는 명분 아래 강제노역을 시키고 그 임금마저 횡령하는 학교.

이 이야기가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살고 있는 바로 이 땅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경기도 평택 에바다 농아원. 이곳은 농아원생들의 피맺힌 한들이 머물러 얼룩진 곳이다.

에바다 농아원 최성창 이사장과 그 일가는 에바다 특수학교와 농아원, 복지관의 각종직책을 모두 친인척의 이름으로 올려 공금을 횡령했다. 졸업한 학생이나 사망한 학생을 정리하지 않고 농아원생들의 주민등록증을 이중으로 만들어 일년에 13억이 넘는 지원금을 빼돌렸다. 농아자 70여명을 강제로 해외 입양시켜 대가를 착복하였다.

96년 11월 27일 강제노동과 학대에 견디다 못한 농아원 학생들은 최성창 이사장의 퇴진과 시설 비리 척결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하였다. 12월 원생들이 집회를 주도하던 어느 날 농아원 직원이 학생들의 집회참석을 가로막으며 한 학생에게 '넌 에이즈검사부터 해야 한다. 미군 때문에 병원 다녀온 주제에 어딜 다녀나'라고 말하면서 미군의 농아원생 성폭행사건은 세상에 알려졌다.

개밥그릇의 라면을 주워 먹는 곳

지난해 6월 미성년자인 이수철(가명, 당시 15세)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윌리엄스 약 에스 일병(33세, 미제7공군 소속)을 따라 송탄에 있는 미군부대로 들어갔다. 이 군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농아자였다. 그는 평소 햄버거를 사주며 부대 구경시켜 주었던 윌리엄스를 따라나섰다. 윌리엄스는 수화를 할 줄 아는데다 미술쇼를 보여주기도 하여 원생들에게 인기있는 미군이었다. 그 날 이 군은 부대내 윌리엄스의 숙소에서 자게 되었다. 이 군이 침대에 눕자 잠

시 후 윌리엄스는 이 군의 숙옷을 벗기고 그의 아랫도리를 만지기 시작했다. 이 군은 싫다고 저항했으나 덩치가 큰 윌리엄스의 힘을 뿌리치기는 역부족이었다. 이어 윌리엄스는 이 군을 강제추행하였다. 20여분 남짓한 시간은 농아자인 이 군에게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주었다.

이 군의 끔찍한 모욕은 다른 원생에게도 이어졌다. 햄버거를 사주며 자신을 가장한 윌리엄스의 추악함은 지난해 9월 28일 또다시 나타났다. 김민호 군(가명, 당시 12세)과 오철식 군(가명, 당시 12세)을 같은 방법으로 꺾어내어 자기 숙소로 데려갔다. 윌리엄스는 어린 농아 학생들에게 목욕을 하라고 시켰다. 윌리엄스는 목욕을 하고 있던 아이들에게

루스벨트 국제장애인상을 받았던 부끄러운 손은 어디 있는가

다가가 김 군에게 바다에 엎드리라고 시키고 나서 성폭행하였다. 이어 윌리엄스는 오 군을 똑같은 방법으로 짓밟았다. 10월 27일 김 군을 다시 불러내어 또다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

자신을 가장한 추악함

지난 3월 12일 2시 수원지방법원 208호에서 준강제추행 및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윌리엄스 일병의 1차 재판이 열렸다. 윌리엄스는 변호인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김 군이 나에게 함께 샤워할 것을 제의했으나 거절했다. 그러자 김 군이 오 군과 함께 샤워를 시작했다. 나는 내가 손님을 소홀히 대접하는 것 같아 그들과 함께 샤워를 했다. 그러자 김 군이 계간을 하자고 하였다. 나는 어린 아이들의 말(수화)에 충격을 받았으나 김 군의 제의를 허락했다. 그러나 김 군이 나의 향문에 성기를 삽입한 것이 지 내가 그들의 향문에 성기를 삽입한 것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원생들을 검진했던 송탄

의 병원 의사는 "당시 경찰이 원생2명을 데려와 그들의 향문을 치료해 달라고 하였다. 경찰이 말하기를 이들 원생들이 미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미군의 농아원생 성폭행 사건이 가져 올 사회적 파장과 농아원의 관리 소홀 문책에 대한 부담이 한통속이 되어 사건은 은폐되었다. 경찰은 초기부터 사건이 기사화되는 것에 심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 때문이었을까? 이 땅의 안보를 위해 주둔하는 미군이 농아학생들을 성폭행한 엄청난 사건은 거의 신문에 게재되지 않는 조직적인 침묵(?)을 보이고 있다.

경찰과 언론도 한통속이었다

사실 에바다재단 비리와 시설관리 소홀은 오래전부터의 일이었다. 정부가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만 제대로 했어도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장애인 수용시설은 보육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이들을 보모로 두고 밤 10시면 외부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에바다측은 이를 무시했고 심지어 정식보육사를 채용하지 않고 농아자를 원생들의 보모로 채용하기도 했다. 기숙사 생활은 전혀 통제되지 않고 한밤중에도 바깥출입이 가능했다.

원생들의 농성이 벌써 백일하고도 열흘이 되어간다. 다음은 원생들이 대통령에게 쓴 편지의 일부이다. "대통령 할 아버지 꼭 우리의 눈을 흐르는 호소를 들어주셔서 혹시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 장애인을 도와주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세요."

미군에게 한국여성이 목이 잘려 숨져도 항의 한마디 못하는 대통령, 국가경쟁력 10% 높인다고 정부 총예산의 3%밖에 안되는 복지비를 10% 줄이라고 호통치는 대통령! 그는 과연 농아원생들의 피맺힌 절규를 아는가? 루스벨트 국제장애인상을 받았던 그 부끄러운 손은 어디에 있는가!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15-9185 ·팩스) 02-715-9186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interpia.net/~rights

1997년 3월 15일(토)

제 84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끝나지 않은 고통, 원진레이온 직업병 피해자 4백여 명 대규모 농성

산업재해의 대명사 '원진레이온' 직업병 피해자들이 '원진전문병원의 설립'을 촉구하며, 14일부터 농성과 집회투쟁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구기일 원진노동자직업병위원회(원노위) 위원장을 비롯한 원노위 간부 20여 명은 14일 저녁부터 명동성당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오후 1시경 원진 피해자 4백여 명은 전세버스 7대에 나눠 타고 한국산업은행 본점 앞에 집결했으나, 전경과 백과단에 의해 집회를 봉쇄 당했다.

93년 장기간의 명동성당 농성으로 '산재'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낸 원진피해자들이 또 다시 강력한 투쟁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정부가 '원진전문병원의 설립'이라는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원진레이온 공장부지를 매각함으로써 1천6백여 원의 이익금을 남긴 한국산업은행측이 '전문병원 설립'을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자, 피해자들의 투쟁이 촉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원노위측은 "산업은행이 이익금의 일부를 다른 곳에 배정하면서도 유독 전문병원 설립은 지원하지 않으려 한다"며 "이는 도의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14일 원노위 대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산업은행측은 "재경원과의 협의를 거쳐 4월 10일경 답변을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한다.

한 원진피해자는 "환자들의 상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게다가 새로운 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현실에서 원진 직업병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치료할 전문병원의 설립은 시급한 일이다"고 말했다.

93년까지 3백18명이던 원진 직업병 환자는 지금도 해마다 늘고 있는데, 그 숫자는 97년에 새로 발견된 29명의 환자

를 포함해 현재까지 6백6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황화탄소(CS2) 중독에 의한 '원진직업병'은 정신착란, 사지마비, 기억력·시력 감퇴 등의 증상을 가져오며, 현재까지 사망자가 23명, 식물인간에 5명 발생하는 등 치유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날치기법 소신 밝혀라"

전국연합 이 대표에 공개서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은 14일 이회창 신임 신한국당 대표 앞으로 "날치기 안기부법에 대한

소신을 밝히라"며 공개서한을 보냈다. 또 이 대표에게 "이번 회기 내에 날치기 안기부법을 반드시 원천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427개 동신동호회 "안기부법 반대"

안기부법·노동법 날치기에 반대하며 통신공간에서 진행된 블랙리본달기운동에 총 4백27개의 동호회가 참가한 것으로 최종집계됐다. 또 12일 최종집계에 따르면, 통신인을 상대로 한 날치기법 무효화 서명운동에는 총 7천81명이 참가했으며, 그 가운데 1/3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파업 통신지원단에서 활동한 이혁(24·정보연대 씨) 씨는 "4백여 개의 동신동호회가 단일한 의견을 모아냈다는 것 자체만으로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한권의 책>> 「국제인권법」 (제1호, 창간호)

"인권의 국제화와 국제인권법의 체계적 발전은 우리들의 국내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정부는 50년 제노사이드 조약을 비롯한 이래로 78년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조약과 인종차별철폐조약, 84년 여성차별철폐조약, 90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및 선택의정서, 91년 아동권리조약, 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 및 선택의정서를 비준했다.

그러나 국제인권법이 실효성을 가지면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제인권법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의미에서 배 재식 회장은 "인권"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국제인권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특히 국제인권규약은 현실로 국내법과 재판규약으로 적용 내지 원용되고 있는지, 개인의 인권침해의 경우 UN인권위원회에 어느 정도 제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인권법」에는 논문으로 집단살해방지조약(서철원, 숭실대 법학 전임강사)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장복희, 연세대 법학 강사)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조약(정인섭, 서울대 법학 조교수) 인종차별철폐조약(박홍규, 영남대 법학과 교수) 여성차별철폐조약(김엘림, 한국여성개발원) 고문방지조약(최태현, 한양대 법학 조교수) 아동방지조약(김태천, 경북대학교 법학 조교수)에 관한 글이 실려 있다. 각 논문은 공통적으로 협약의 설립배경, 주요내용, 국내법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국제인권법학회, 1996, 비매출)

국제심포지움: 공인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자료
요약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박연철 변호사

안기부의 활동에 대한 통제규정

(1) 안기부의 활동에 대한 통제규정이 필요한 이유

① 안기부 권력의 비대화

② 안기부의 정보보안업무 조정감독 권한

가) 국외정보 수집업무는 안기부를 독보적인 존재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칭하는 국내정보를 수집하는 권한도 주어진다. 국내정보의 수집은 국외정보의 수집과는 달리 법령의 규제를 초월하는 권한이 부여되고, 시설과 장비의 자유자재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 및 공사기관, 단체를 통제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집적할 수 있게 된다.

나) 정보 및 보안업무 조정감독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고, 조정·감독의 대상기관과 범위를 규정하였지만 조정, 감독대상이 되는 기관의 제한은 없는 셈이다.

다) 안기부에서 조정감독하는 업무는

- 1) 외무부 소관 중 국제정세 조사·연구, 국외정보의 수집과 외전(外電) 및 해외방송 청취, 재외국민의 실태조사 및 연구, 출입국자의 보안, 통신보안
- 2) 내무부 소관 중 국내보안정보와 외사경찰정보 및 해양경찰정보의 수집·작성, 정보사범등의 내사 및 수사정보와 시찰업무, 신원조사업무, 통신정보·보안 업무
- 3) 법무부의 소관 중 국내보안정보의 수집·작성, 정보사범등에 대한 검찰정보의 처리 및 보강과 교도, 공소보류된 자의 신병처리, 적성입수금품의 처리, 출입국자의 보안, 통신보안
- 4) 국방부 소관 중 국외·국내보안 정보업무 및 통신보안업무, 정보사범에 대한 국방부·군 정보의 처리, 공소보류된 자의 신병처리, 적성입수금품의 처리, 정보사범의 보도 및 교도, 군인·

군무원의 신원조사업무, 정보사범의 내사와 수사정보와 시찰업무

5) 정보통신부의 소관 중 우편검열 및 정보자료의 수집, 전파감시, 기타 통신정보·통신보안 업무

6) 공보부의 소관 중 정기간행물과 대중전달 매개체의 활동동향 조사·분석·평가, 공연물 및 영화의 검열, 국제정세의 조사·분석·평가, 대공심리전, 대공민간활동

7) 과학기술처의 소관 중 북한 및 공산국가의 과학기술관계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와 활용

8) 통일원의 소관 중 통일관련 국내외 정세의 조사·분석·평가, 남북대화, 이북 5도의 실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 통일교육 등

안기부장은 대상기관의 장에 대하여 언제든지 국외과학기술정보, 국제정세의 조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 국제사범, 무역 및 외국의 상업, 이민사무, 사회단체등록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2) 안기부의 활동에 대한 법제도적 통제

① 안기부법 자체상의 통제규정

가) 예산회계상의 통제

1994년 1월 5일 개정에 의해 국회정보위에 안기부의 모든 예산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토록 하였다. 다만 안기부의 예산심의는 비공개로 하며, 정보위 소속 국회의원은 예산내역을 공개·누설해서는 안된다.

나) 국회에 의한 통제

현행법에서는 부장이 분명한 이유없이 출석 및 답변을 거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출석·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에 한'하고,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기밀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하되, 그 사유를 소명하게 하였다. 국회에 출석, 답변하는 경우에도 내용에 대한 비밀을 요청할 수 있다. 법개정 이후에는 국회 정보위에도 보고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는 것이 국회가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 형사처벌에 의한 통제

안기부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기부법에 정치권여 죄와 직권남용죄를 신설, 이를 위반하는 안기부 직원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항은 정보정치와 공작 정치의 폐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안기부의 부장, 차장 및 기타 직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직권을 남용하여 법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람을 체포·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②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통제

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94년 1월 7일 제정되어 있으나, 안기부는 이 법 상의 공공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이 법에 준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제한
안기부의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수사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추어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노동법·안기부법 개악규탄과
민생탄압저지·부패정권 퇴진
범국민결의대회

때: 3월 15일(토) 오후 2시
곳: 중요공원
주최: 범국민대책위

자료 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안기부 권력남용의 현황과 그에 대한 민주적 투쟁의 경과와 전망

곽노현 (방송대 법학) 교수

■ 안기부의 민주적 개혁을 위한 과제: 과거청산, 조직개편과 권한 분산, 통제 강화

안기부에 대한 개혁과제는 크게 볼 때, 현재 안기부가 비밀의 장막 안에서 마음놓고 벌이는 음모적이고 자의적인 권한행사, 곧 권력남용의 기회를 관련 법령의 명확성을 기하고 조직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권한행사에 관한 각종 통제장치를 강화하여 적어도 제도적 차원에서 최소화하는 것과 현재의 안기부를 해체하여 순수한 해외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 당면과제:

찬양고무관련 정보수집권 및 일부 직원범죄 수사권의 검찰 이관

안기부의 권한중 가장 일상적으로 남용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권한은 국보법 제7조 관련 정보수집권일 것이다. 안기부의 각종 기관 사찰은 아마 이 권한에 의해 합리화되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 검찰이 찬양고무죄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찬양고무관련 정보수집권 역시 안기부가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검찰에 넘겨 일원화하는 것이 수사의 효율을 위해서나 예산절감을 위해서나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안기부 직원들의 직권남용죄 및 정치권역죄 수사권도 안기부가 갖는 대신 검찰에 줘야 한다.

나. 철저한 과거청산:

폭압공포기제의 전모와 억울한 피해사건의 진상 규명등

모든 구조와 기제의 전모는 물론 낱낱의 억울한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그에 따라 가해자, 범법자에 대해서는 마땅한 문책이 가해지고 피해자와 희생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입법, 교육, 기념, 기타 재발방지책이 수립강

구되어야 한다.

다. 집중된 권한의 대폭 분산: 대내외 정보수집권의 분리와 수사권의 분리

1) 대내외 정보수집권의 조직적 분리 비밀정보기관은 속성상 권력남용의 여지가 크다. 따라서 기능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이상 되도록 서로 다른 기관에 분산시켜 한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정보수집권과 수사권의 조직적 분리

정보수집권과 수사권의 조직적 분리 역시 권력집중을 방지하고 첩보기관의 공포기화방지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요구된다. 또한 정보수집과 범죄수사는 상이한 지배원리가 적용되는 독자적 영역이라는 점도 한 이유다. 정보수집은 잠재적 위험요소가 있는 이상 허용해야 한다는 기회의 원칙이 지배하지만 범죄수사는 엄격한 적법절차의 원칙이 지배한다는 것이다.

라. 민주적 통제 강화: 정보수집권 행사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을 중심으로

1) 정보수집관련 정보수집과 관련해서는 정보수집의 목적, 대상, 그리고 방법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수집 대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비밀사찰의 눈길은 모든 영향력 있는 개인이나 단체들에 대해 무분별하게 뻗치게 된다. 정보수집의 방법에 대해서도 세밀한 통제가 필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권리를 신속하게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기구관련 ombudsman이나 통제위원회, 혹은 국민인권기구등 준사법적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2) 수사관련

수사권 행사와 관련하여 궁극적으로

수사권의 분리가 과제이나 중단기적으로는 수사권의 적정행사를 위해 변호인 접견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수사시 변호인열석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안기부 개혁의 달성 전략

- 무엇을 할 것인가?

1) 공안정보기구의 과거청산 및 민주개혁을 위한 위원회 설치 촉구

안기부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고 관련 통제법제를 보강정비하여 안기부등 공안정보기구의 활동과 통제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대적인 조사연구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공안정보기구의 과거청산 및 민주개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과거청산을 수행하고 민주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임무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위원회를 다음 정권으로 하여금 설치,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대선후보들의 공약사항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민주진영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공안정보기구개혁연구회를 조직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충분한 연구검토할 것이 요구된다.

2) 안기부 해체보다 통제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3) 투쟁의 당면목표는 찬양·고무 정보수집권의 검찰 이관에 놓아야 한다.

4) 사법부의 적극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시도해야 한다.

안기부 관련 소송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사찰금지청구, 사찰기록공개청구, 사찰기록폐기청구등 다양한 소송형태를 개발, 시도해야 한다.

5) 정권교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6) 지속적으로 남북관계 긴장완화 및 교류협력 정책을 촉구해야 한다.

- 국제심포지움 자료 요약물 여기서 마칩니다. 편집자주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15-9185 · 팩스) 02-715-9186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interpia.net/~rights

1997년 3월 18일(화)

제 844 호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국제 심판대에 오르는 날치기법

53차 유엔인권위 10일부터 4월18일까지

제53차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10일 제네바에서 개막됐다. 이번 회의는 53개 위원국을 포함한 약 1백여개 국의 정부대표와 비정부 민간단체(NGO) 등 약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53차 유엔 인권위에서는 지난달 사임한 라소 인권고등판무관의 후임자 선정 및 유엔 인권센터의 구조 개혁과 운영 등 최근 유엔의 전반적인 개혁과 맞물린 여러 과제들이 비중있게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나라별 결의안의 경우, 올해에도 중국 인권결의안이 미국을 대표로 하는 서방 국가와 중국간의 외교전 및 '힘겨루기'로 인권위 초반부터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최근의 노동법과 안기부법 개정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하의 인권침해 문제, 자의적 구금 및 고문 등이 특별히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신대 문제 또한 주요하게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엔인권위 주요 의제

- 5.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실현의 문제 : (a) 적절한 삶의 수준을 누리는 권리와 관련된 문제 (b) 현재의 불공정한 국제경제질서가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실현하는데 끼치는 장애
- 6. 발전권의 실현/ 7. 민족자결권과 식민지, 외국의 지배와 점령하에 있는 민족들에 대한 민족자결권의 적용
- 8. 구속, 구금 관련 인권문제: (a) 고문 (b) 고문방지조약 비준상황 (c) 강제실종 (d) 고문방지조약 선택의정서 초안
- 9. 인권위의 프로그램과 사업방식을 포함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 유엔기구 활용, 국민인권기구, 유엔인권센터의 조정역할, 대량탈주와 이주민
- 10. 나라별 인권상황: (a) 키프로스 (b) 1503 제도에 따른 인권침해 고발심의
- 11. 이주노동자의 인권/ 12. 인권과 과학기술의 발전
- 13. 인종주의와 인종차별과의 투쟁: 제3세대 행동프로그램 실현
- 15. 유엔 국제인권조약에 의해 설립된 조약감시기구의 효과적 운영
- 16. 제48차 인권소위원회회의의 보고서 심의
- 17. 민족, 종족, 종교 그리고 언어에 따른 소수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권리
- 18. 인권 자문서비스(Advisory Service)
- 19. 종교나 신조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불관용의 종식에 대한 선언의 실현/ 20. 인권활동가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선언문 초안 심의
- 21. 아동의 권리: (a) 아동권리조약 비준상황 (b) 아동인신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 (c) 아동노동철폐 (d) 아동권리조약 선택의정서
- 22.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후속사업
- 23.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권문제
- 24. 원주민 인권문제
- 25. 54차 유엔인권위원회 임시 의제 초안 심의

로 한국의 경우, 유엔의 공식보고서에 따른 한국의 인권상황은 별로 진전된 바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제네바= 이성훈·지은경】

원진 피해자 93명 연행

“원진 전문병원 설립” 촉구 시위

원진레이온 직업병 피해자들이 17일 한국산업은행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93명이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되어 각 경찰서로 분산, 조사를 받고 있다. 연행된 이들은 구기일 위원장을 포함해 이주머니 23명 및 원진직업병환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원진 피해자들은 ‘원진 전문병원 설립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지난 14일부터 나흘째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여 왔고, 경찰은 명동성당 주변에 병력을 배치해 관련자들의 출입을 통제해 왔다.

..... 주요 공판 안내

- 3월18일(화)
 - 이남연(국보법) 오전10시, 7단독, 523호 신건
 - 이수영, 박종대(국보법 간첩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 권영길(제3차개입금지등) 오후2시, 3단독, 318호, 속행
- 3월19일(수)
 - 이홍재외 8(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오전10시, 11단독, 526호, 속행
 - 이훈(특수공무집행방해등), 오후2시 11단독 526호 속행
 - 양한웅(폭력행위~위반) 오후2시, 11단독 526호 속행
 - 정진희(국보법) 오전10시, 6단독, 522호, 신건
 - 원미정(국보법) 오전10시, 1단독, 519호, 신건
 - 신길용(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 양정희 외6(국보법 찬양·고무등)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제네바 소식 ①

<편집자주>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3차 유엔인권위 소식을 지은경(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간사) 씨와 이성훈(팍스로 마나 사무국장) 씨의 현지 취재로 매주 1회 전합니다.

합의와 표결을 둘러싼 공방전

인권위의 운영방식과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뜨거운 이례적인 논란이 인권위 첫투에 벌어졌다.

먼저 스리랑카 대표는 "결의안 채택과 의사결정이 합의에 의해 이뤄지고, 표결은 예외적인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작년의 결의안(E/CN.4/1996/L.2)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올해에도 이 결의안이 다시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다수의 서방국가들은 "표결이 유엔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원칙"이라며 "인권이 합의를 명분으로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한편 대다수의 작고 가난한 남측의 국가들은 심정적, 논리적으로는 같은 남측 국가의 입장에 동조하면서도 실제 표결에서는 그와 반대로 투표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는 서방국가를 비판하는 결의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성표결을 할 경우, 서방국가와 재정원조 삭감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여전히 이스라엘 두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점령 30주년을 맞아 올해 인권 위에서는 이스라엘이 저지른 팔레스타인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있었다. 국제인권단체연합(FIDH)은 "96년 9월 이스라엘 무장군대와 팔레스타인의 유혈충돌로 64명의 팔레스타인과 15명의 이스라엘 군인이 죽고 약 1천6백명의 팔레스타인이 부상당한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평화협상에 불구하고 이스라엘 당국과 군대에 의한 인권침해가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두둔하면서 "인권위의 입장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당국간의 협상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국정부는 팔레스타인에 관한 발언에서 "평화협상의 결과를 기다린다는 명분으로 인권을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지지하였다.

한편 민족자결권과 관련하여, 9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동티모르의 조세 라모스 호르타 씨와 카를로스 벨로 주교가 다음주 제네바를 방문할 예정인데, 인도네시아 정부의 반대로 인권위에서 정식으로 연설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인권고등판무관 '도중하차'

호세 아알라 라소 인권고등판무관이 14일 공식적으로 판무관직을 사직했다. 라소 판무관의 사임이유는 에바도르 정부의 외무부장관 임명에 따른 것인데, 일부에서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준비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이로써 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와 주요 쟁점이자 성과로 언급되었던 인권고등판무관 제도는 큰 결실을 보지 못한 채 다시 후임자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고등판무관과 함께 제네바의 유엔 인권센터를 이끌어오던 아브라이마 팔 인권 사무차장보 또한 이번 달에 뉴욕의 유엔 본부로 발령이나, 현재 제네바 유엔 인권센터는 한동안 지도력 공백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주간/인/권/호/름

(97년 3월10일부터 16일까지)

<10일>(월)

새 노동법 국회 통과, 여야 안기부법 재처리문제 이번 회기내 처리키로 합의/한국수자원공사·한국해양연구소 내년 5월까지 시화호 방류 영향조사 착수/무각출 노령연금법 제정촉구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7백여명 탑골공원에서 전국노인대회 열고, 노령연금법 제정 촉구/민주노총, '돌빛희'의 제1회 정의평화상 수상/서울대 총학생회 안기부 서울대 취업설명회 앞두고 학교측에 반대공문 전달/대학생들 노동법·안기부법 여야 야합에 항의하며 여야당사 5곳 기습시위/참여연대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집회/한국노총, 야당 당사 항의방문해 노동법 단일안 즉각철회와 전면 재개정 촉구/서울지검, 80년 언론통폐합과 언론인 강제해직 주도 혐의로 96년 2월 해직 언론인 94명에게 고소당한 권정달(당시 보안사 정보처장) 등 6명 기소유예·무혐의 처리

<11일>(화)

국회헌재공위 주최로 영화진흥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전국민주공용노동조합연맹 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날치기 두 개 법안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민주법연 소속 15개 대학 법학과 교수 21명 날치기 안기부법에 대한 위헌판결 촉구의견서 현재 제출/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 연대투쟁위원회등 연세대서 "동성애자들이 노동법 투쟁에 간 까닭은" 토론회/독일 광산노동자 1만5천여명 정부의 석탄보조금 삭감계획에 반발해 본의 주요간선도로 봉쇄, 2일간 격렬시위/유럽회의, 인간복제를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의정서 마련방침

<12일>(수)

국회 안기부법 검토소위, 안기부법 공청회 개최

<13일>(목)

노동관계법 발효/명예퇴직을 당한 뒤 퇴직금을 증권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은 장아무개(49)씨 자살/한국교육개발원 '96년도 한국 교육지표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 취학을 96년 61.8%로 사상 처음 60% 선 넘어/한국노동연구원 '임금동향 분석 자료'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배율 95년 1.56으로 낮아져, 생산직 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 임금비율도 95년 1.24로 격차 좁아들고, 여성과 남성의 임금비율도 95년 1.64로 줄어들어/금속연맹 거제 대우조선 목재가공부에 근무하는 김도범(55)씨가 석면노출에 의한 악성 종피종 암으로 확인돼 산재요양신청/법국민대책위, 안기부 수사 피해자 6명 기자회견/알바니아, 유럽연합에 군사개입 요구 난민탈출 본격화

<14일>(금)

인천시와 한전, 영흥도 발전소 건설관련 첫 환경협약 체결/전국연합 회원 30여명 신한국당사 앞에서 안기부법 원천무효화 촉구집회

<16일>(일)

조선대 98학년도 입시부터 5·18 민주항쟁 피해자 자녀 특례입학 허용/대구지방노동청,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여성지원자의 원서접수거부 혐의로 대구지하철공사 사장 신태수(61)씨 입건

인권 시평

김구선생의 염원과 한국사회의 오늘

박 노 현 (방송대 법학) 교수

며칠전 친구의 후원회 모임에 가기 위해 처음으로 지하철 5호선을 타보게 되었다. 지하철 5호선은 90년대의 경제력을 반영하듯 다른 지하철 노선보다는 훨씬 번듯하고 쾌적했다. 여의도역을 빠져나와 길 양측에 늘어난 고층빌딩군을 지나면서 그날따라 자꾸만 김구선생의 말씀이 기억났다. 군사력은 국토를 방위할 만하면 되고 경제력은 먹고 살 만하면 되지만 문화만은 세계일등이 되었으면 한다는 취지의 말씀 말이다. 저마다 특색을 뽐내는 고층빌딩들이 숲을 이룬 것을 보면서 나라의 부가 저만큼 쌓였으니 이제 무턱대고 성장에만 힘 쓸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균형과 조화를 꾀하는 일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일에 필요한 정치도덕성과 문화능력을 기르기만 하면 지속적이고 인간중심적인 경제성장이 도 절로 될 것만 같았다.

집중된 권력, 허술한 감시·통제장치

국회를 보면 평균 재산신고액이 33억 원에 달하는 부자 국회의원들로 짜여져 있다. 평균재산액으로 치면 국내에서 재벌단체인 전경련 다음으로 부자클럽 일 것이고 세계에서도 최고로 부유한 국회의원 것이다. 이러한 부자 국회의 법을 만드니 법은 자연히 부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반면 근로서민대중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동조합의 힘은 미약하기 짝이 없다. 우선 공무원, 교사들은 노조결성권이 없다. 그나마 노조결성권이 있는 일반

을 넘는 경우 향후 종합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은행이자소득이 연간 4천만원에 달하는 수준이면 총재산이 최소한 30억원 이상은 된다. 보도에 따르면 종합과세 대상은 약 4만명 정도라고 한다.

이들은 아마 금융실명제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을 것이다. 이들은 최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종합과세기준을 올리고 금융실명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4천만명의 다른 국민은 모두 조세정의 확립과 부정부패방지 차원에서 종합과세의 확대 및 금융실명제의 유지를 바라고 있는데도 4만명에 지나지 않는 이들이 움직여 법과 정책의 방향을 백팔십도로 바꾸고 마는 비민주적 현상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개정 노동법 노사정 간의 불균형 여전

이제 더 쌓기 위해서라도 나누는 도덕성이 필요하다

인간중심의 경제성장 요원

문제는 한보사태나 김현철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한참 결여되었다는 데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사회의 경우 정치력, 경제력을 막론하고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반면 그에 대한 감시와 통제장치는 지극히 미흡하다는 데서 연유한다.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대통령은 그야말로 제왕적 권력을 누린다.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감사원장과 안기부장을 임명하며 총리와 장관, 기타 고위 공무원을 임명한다. 여당인 국회의장 및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실질적으로는 임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밖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각종 위원회와 국영기업체 임원도 부지각수다. 대통령은 이러한 임명권을 행사하면서 인사청문회 한 번 거치지 않는다.

근로자들중 15%만이 간신히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을 뿐이다. 그것도 강력한 산업별 노동조합에 속해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갈기리 찢겨져 있다. 더욱이 이들중 30% 가까이 공익사업장에 속해있어 단체행동을 할 수 없는 반쪽 노조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공직후보 지원이나 정치자금 제공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다. 이렇듯 각종 악법으로 얽어매고도 안심이 안돼 정부는 뒷돈을 대주며 한국노총을 어용화하고 조강지처로 삼아왔다. 이런 기본적 구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은 지난하다.

단체행동 할 수 없는 반쪽 노조

한 예로 지금 거론되는 종합과세논쟁을 보자. 은행이자소득이 연간 4천만원

30여년만에 찾아온 작년의 노동법 개정국면은 이른바 3급으로 대표되는 노동악법체제를 철폐함으로써 이러한 비민주성을 극복해나가는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그러나 이번 노동법 개정의 실제내용을 살펴볼 때 노사정 간의 세력불균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공무원, 교사의 단결권은 여전히 부정되었으며,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금지 역시 여전히 상존한다. 오히려 대체근로 허용등 노조의 교섭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조항들이 대거 삽입되었다. 그렇기에 김구선생의 인간적이기 그지없는 염원이 달성되기에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하지만 어쩌랴. 이만큼 쌓았으면 이제 더 쌓기 위해서라도 나누는 도덕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으니! 같갈이 멀어도 계속 믿음과 소망 안에서 꾸준히 걸어갈 뿐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15-9185 · 팩스) 02-715-9186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interpia.net/~

1997년 3월 19일(수)

제 84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페스카마호 사형수에게 선처를”

AI, 사형집행 중단 및 사형제 공개 논의 촉구

국제앰네스티(AI)는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13일자 서한을 통해 “페스카마호 살인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조선족 선원 6명의 형량을 감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AI는 “이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며,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이해한다”면서 “사형제도가 본질적으로 부당한 형벌인만큼 이들에게 내려진 사형선고를 감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동시에 “조선족 선원들은 배 위에서 심한 폭행과 협박을 당했는데, 이러한 상황이 참작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재천(38) 씨 등 조선족 선원 6명은 지난해 8월 페스카마호 선원 11명을 집단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전원 사형을 선고받았다. 96년 12월 24일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선장으로부터 구타와 모멸을 당하는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범행수법의 잔혹성과 피해규모 등을 감안해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는 26일 부산지법에서는 이들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리게 된다.

한편, AI는 페스카마호 사건 외에도 95년 강주영 양 살해 사건, 최근 파키스탄인 사건 등을 지적하면서,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인간의 근원적 권리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사형제도를 폐지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AI는 “사형은 실수가 발생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사형선고를 줄이거나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면서까지 한국정부가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할 불가피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AI는 “한국에서 사형이 주기적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사형수와 그 가족들은 언제 사형집행이 이뤄지는지 알지 못한다”며 “그러한 방식이 지속되는 합당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AI는 이어 한국정부에 △사형집행의 중단 △이미 사형을 선고받은 자들에 대한 감형 △사형제도에 관한 공개적 논의 등을 촉구했다.

사민청 회원 9명 연행

94년에도 ‘이적단체’ 혐의 처벌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의장 조창목, 사민청) 소속 간부 및 회원 9명이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다. 또 경찰은 이날 사민청 사무실에서 컴퓨터 2대 등 집기 99점을 압수해 갔다.

사민청에 따르면 18일 오전 최인기(32·95년 의장) 씨가 부천 자택에서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되었으며, 방진욱(28) 씨가 같은 시각 충북 음성에서 연행되었다. 또 의장 조창목 씨, 강승현(2·충무국장) 위훈환(24) 이미정(27) 박수정(사무처장) 변성민(노동사업위원장) 김은아 씨등도 연행되었다.

최인기 씨의 부인 이명순 씨에 따르면 오전 9시 30분경 7명의 수사관들이 체

포영장을 갖고 들이닥쳤으며, 책 45종, 유인물 21종, 컴퓨터 등을 압수해 갔다. 최 씨는 94년에도 사민청 사건(반국가단체구성등)으로 구속돼 그해 12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바 있다.

이들 9명 외에도 전경희(교육사업위원장) 김치영(대중사업위원장) 박종석, 김중호, 김현일(이상 평화원) 씨 등의 행방이 집과 회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사민청은 밝혔다.

사민청 회원은 모두 29명으로, 최근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다룬 정치학교 개설, 노동법 개악반대 집회참가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장기수 권양섭씨 운명

20일 오전 8시 발인

장기수 권양섭(80) 씨가 지병인 직장암으로 18일 오전 7시 20분 운명했다. 고 권양섭 씨는 71년 통혁당 재건사건으로 구속, 22년형을 복역하고 93년 3월 출감했으며, 95년 11월부터 직장암을 앓아 왔다. 고인은 장기수 권낙기 씨의 부친이기도 하다.

발인은 20일 오전 8시 쌍문동 한일병원(996-5852), 장지는 용마리 시립묘지.

..... 주요 공판 안내

- 3월20일(목)
 - 강성모 외 2(국보법 찬양·교무) 오후 2시 합의23부 속행
 - 최창규(국보법 찬양·교무) 오후2시 합의23부 319호 신진
 - 정수일(간수교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속행
- 3월21일(금)
 - 진관스님(국보법 간첩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속행
 - 배태연의 4(폭력행위~위반등) 오전11시 10단독 525호 속행
 - 황윤미(국보법), 오전11시, 6단독, 519호, 속행

유엔인권센터 홈페이지 개설

유엔인권센터는 96년 12월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하여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제53차 인권위에 제출된 보고서 대부분을 이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www.unhchr.ch>

<3회 연재> 페스카마호 살인범 전재천 씨가 밝히는 선상폭력의 실상①

“사형은 너무 가혹합니다”

지난해 여름 남태평양의 참치잡이 어선에서 충격적인 선상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페스카마호 15호에 타고 있던 조선족 선원 6명이 한국인 선장 등 11명을 살해한 뒤, 수장해 버린 사건이 그것이다. 이들은 살해수법의 잔인함 등을 이유로 전원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자신들의 행위가 심한 인권유린에서 비롯된 것임을 호소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당시 선상살인 사건의 주모자로 알려진 전재천(38) 씨가 1심 재판부에 제출했던 탄원서의 내용을 3회에 걸쳐 요약·소개하기로 한다. 가급적 원문대로 옮겼으며, 맞춤법은 바로잡았다<편집자주>.

죽음밖에 없는 절망 속에

“...이 시각도 떨리는 가슴을 견잡고 면목없는 필을 듭니다. 양해와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 앞에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범했습니다. 나로 인하여 피해 입은 유가족에게 죄송합니다. 나는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두 무릎을 꿇어 엎드려 나의 죄를 사죄하고 반성하며 용서를 빌니다. 불행으로 쌓인 원한을 어떻게 하면 풀어줄 수 있겠는지요.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나는 고인과 유가족분들에게 매일 몇 번이고 기도합니다. 나는 나의 죄를 철저히 해명하고 사죄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나는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한마디 더 하거나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로서 나의 용서를 바랍니다.”

“...나는 오직 어머니님과 가족의 생활을 위하여 자식의 학자금용을 위하여 빈곤속에서 뛰어나오려는 열원 속에 배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절대 계획적이고 음모적, 고의적인 강도 범행이 아닙니다. 당시 가슴에 쌓인 압박과 집에 돌아가지 못할 긴박한 상태, 가족이 모두 길가에 나앉아야 될 사연, 오직 죽는 한

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절망중 술에 곤죽이 되어 너 죽고 나 죽자 하며 단순간에 일어난 사연입니다.”

나는 개였고, 아내는 암개였다

희롱: “한국인은 우리보고 개라 부르고, 마누라 보고는 암개라 부릅니다. 어떤 때는 ‘야 이 개XX야. 너희 새끼들은 니 암개 어디서 나왔냐, 흥문으로 나왔지’ 하며 웃어댁니다.”

폭행: “매일 목과 몽둥이, 쇠파이프 등으로 맞아 진저리나며, 선원의 인권과 건강을 해쳤습니다.

음식을 배불리 먹지 못하고 눈치밥을 먹으며, 하루에 작업 21시간, 흐리멍덩한 정신상태로 있습니다.”

“중국인이 선장을 살해하려

했다”고 쓰지만 았았더라면 선장을

살해할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하선하면 사모아 구류소에 가두겠다”

“...중국인은 희롱, 폭행, 구타 행위에 더는 견딜 수 없어 선장을 찾아 하선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선장은 ‘요, 개XX들 수월하게 집에 보내줄지 아냐’며 하선증명을 때 주지 않았습니. 심지어 경제 담보신에 ‘중국인 6명은 승선 후 갑판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작업을 거부하며, 칼 등 흉기를 들고 선장을 살해할 동기가 있으므로 강제 하선을 결정한다’고 쓰며, 미국령 사모아 경찰국에 구류(구금을 의미하는 뜻-편집자)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왕복 항공비와 선박의 일체비용(작업 지점에서 사모아까지의 연료 등)과 사모아 구류소 3개월 구속간의 일체비용(개인 부담)을 부담해야 하며, 중국 가족이 사모아로 돈을 부쳐와야 구류소에서 집에 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선증명을 때 주지 않으면, 몇 달의 봉급과 중국회사에 보증금으로 올려놓은 집 두 채와 돈 5만원이 허공에 달아나게 됩니다. 이 일체 손실비가 중국 돈으로 20만원(한국 돈 2천만원)에 달합니다. 자지손손 10대를 갚아도 영원이 못 갚을 빚입니다.”

피땀 흘려 고생한 결과는 빚더미

“...우리는 중국에서 빚을 내어 돈을 벌러 배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2개월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매와 목을 먹어가며 피땀을 흘리며 개고생하고 돈 일전 못 벌고, 도리어 등에 20만원을 걸머지게 되었으며, 집에도 안 보내고 경찰소에 구속까지 당할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족까지 집없이 해매게 만들어 놓고 앞길을 끊습니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양 싶고 앞이 막막했습니다.”

슬픔이 눈물이 되고, 눈물이 악으로...

“...집을 두고 가지 못하는 신세, 희망이러곤 보이지 않았습니. 우리는 술로 아픈 가슴을 달래려 했습니다. 술이 취하니 슬픔이 눈물로 되고, 눈물이 악으로 되었습니다. 선장이 경제결의서에 ‘중국인이 선장을 살해하려한다’고 쓰지 았았더라면 선장을 살해할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절망 중 우리는 모두 죽으려 했습니다. 당시 죽으려 마음을 먹으니, 우선 우리를 죽을 길로 만든 선장과 함께 죽겠다고 했습니다. 선장과 갑판장을 살해한 후 모두 당황했으며,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현재 죄를 뉘우치고 사죄합니다.”.....

▶ 내일자에 계속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15-9185 · 팩스) 02-715-9186 · 통신 ID:rights(전.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interpia.net/~

1997년 3월 20일 (목)

제 84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민병일 씨 가족, 민·형사 소송 제기

부검소견 “강한 외력에 의한 손상일 듯”

과출소에서 변사한 민병일(39) 씨 사건에 대해 민·형사 소송이 제기된다. 민 씨의 가족들은 국가 및 가해자들을 상대로 1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고 20일 수원지법에 소장을 제출한다. 또한 가족들은 민 씨를 사망케 한 책임으로 신갈과출소에 근무하는 백용운 경장과 채규근 상경에 대한 고소장을 이날 수원지방검찰청에 접수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병일 씨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온 「민병일대책위」 측은 “민 씨가 경찰에 구타당한 뒤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측은 “민 씨가 뒤로 넘어진 뒤, 정신을 잃었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편, 지난달 18일 민 씨를 부검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11일 부검결과를 발표, 민 씨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권일훈(국과수 법의학부) 감정인은 부검감정서를 통해 “사인은 두부(머리)외상이나 그것이 가격에 의한 손상인지를 감별할 만한 뚜렷한 판단근거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검에 입회했던 임종환(평화의원 원장) 의사는

“단순히 뒤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두부손상이라기 보다는, 강한 외력에 의해 발생한 두부 손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안기부 바로세우기 힘쓸 것”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공동대표 박승원, 문규현, 장용주)은 19일 성명을 통해 “폐회된 임시국회가 안기부법 문제를 간과해 버린 처사에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사제단은 “안기부법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재처리되어야 했다”며 “인권보호와 정치공작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안기부 바로세우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논산 시민 1천1백96명은 19일 오전 시국선언을 발표해 안기부법·노동법의 전면무효화 및 한보·김현철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노동계 3백54명, 농민 2백38명, 시민 3백71명, 종교계 76명 등이 참가했다.

방희선 판사 탈락 부당

참여연대 성명

19일자 일간신문 보도를 통해 수원지법 방희선 판사의 재임용탈락 소식이 전해지자,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사법부의 해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방 판사의 행동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형사절차의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로운 행동이었다”며 “방 판사의 연임 거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연행자 추가확인 : 김치영(25·대중사업위원장) 전경희(28·여, 교육사업위원장) 김현일(30) 박종석(27) 김정환(3·이상 회원)

3년만에 같은 혐의로 재구속

사민청 14명 연행·구속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사민청)이 94년 8월26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 및 이적표현물 제작·배포혐의로 회원 10여명이 구속된 데 이어 3년만에 같은 혐의로 14명이 연행·구속되었다.

18일 사민청 조창묵(30) 의장등 9명이 연행된 뒤, 19일 전경희 씨등 5명의 연행 사실이 확인되었다. 연행자들은 모두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사민청측은 밝혔다.

한편 사민청 비대위(대표 김중상)는 19일 낮 12시 홍제동 대공분실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으며, 이어 가족들은

면회를 했다.

김중상 씨는 “이번 구속은 최근 안기부법 날치기등 정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94년 국가보안법 구속사건 이후 사민청은 교육사업과 영상사업, 산악회 모임 등의 활동을 해왔다. 현재활동을 문제삼을 수 없자, 사민청의 존재 자체를 문제삼아 이적단체 혐의를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민청 비대위는 매일 홍제동 대공분실로 가족면회를 가는 것 외에도 22일 오후 3시 탑골공원에서 규탄집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구독료 납부를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지로번호 7618848

<3회 연재> 페스카마호 살인범 전재천 씨가 밝히는 선상폭력의 실상②

도끼와 칼이 난무하는 선상

전재천 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아내와 세 자식을 부양해온 평범한 가정의 가정이었다.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10여 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하기도 했던 전 씨가 ‘더럽고 힘들고 위협하다’는 원앙어선에 오르게 된 것은 가증되는 생활고 탓이었다.

그가 처음으로 한국 원앙어선을 타게 된 것은 93년 11월. 막내아들의 교통사고 치료비를 감당하느라 재산이 거덜났기 때문이었다. 14개월간의 원앙선 생활 끝에 그는 중국 돈으로 5만원이라는 거금을 쥐었지만, 곧 자식들의 학자금과 어머니 병환의 치료비로 지출이 늘면서 생활은 퍼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한번만 더’라는 자신과의 약속과 함께 두 번째 승선을 결심했지만, 그것이 가족과 영원한 이별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96년 6월 12일 전재천 씨는 큰딸이 정성스럽게 적어 준 ‘인(忍)’이라는 글자를 가슴에 간직한 채 마침내 운명의 페스카마호에 승선했다.

‘인(忍)’을 가슴에 새기고 승선

“6월 16일 저녁 출항했습니다. 일부 선원은 배멀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똥물까지 위로 나오는 것 같았으며, 먹은 것마다 다 토해버립니다. 갑판장은 몽둥이를 끼고 다니며 토하는 선원들의 엉덩이를 발길로 차 댔습니다. ‘이 XX새끼들아 똥을 쳐먹냐며 갑판장은 몽둥이로 엉덩이를 한 대씩 내려쳤습니다. 선원들은 배멀미에 없는 기운을 참아가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매일 저녁 10시까지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18일 갑판장은 중국선원을 희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춘승에게 ‘야 암개 있냐 새끼 있냐고 물었지만, 이춘승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야 아끼 있냐 애는 어디로 나왔냐 너 암개의 흥분에서 빠져나온 것 아니냐고 말하면서, 그의 머리를 돌려가며 밀어 넣어 뜨렸습니다. 동물처럼 장난을 쳤습니

다. 이때부터 선원들은 한국인의 심심 풀이가 되었고, 희롱·폭행·구타 등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21일 오전 당직을 서고 있는데 갑판장이 나를 불렀습니다. 갑판장은 나를 보고 ‘야 이 X새끼야, 빨리 안 기어나오고 왜 이제 나오는 거냐며 말할새도 없이 귀퉁일 후려쳤습니다. 코와 입에서 선지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갑판장에게 빌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하며 빌고나서야 갑판장은 손을 땀습니다. 지금도 갑판장이 무엇 때문에 때렸는지 모릅니다.”

“24일 심하게 맞은 최일규, 로사디는 한참 동안 정신을 잃었고, 너슨은 입김에 맞아 앞니가 부러졌습니다. 매일 이렇게 폭행을 하는가 하면, 선원들보고

씨의 코와 입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선장은 정신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선장은 루노만의 등을 쇠파이프로 때리며 ‘이 검둥이 X새끼들 너희들도 다 같아라고 소리쳤습니다. 어깨를 맞은 루노만은 그 자리에 앉아 울었습니다. 투승작업관은 흥기가 난무하는 전장판과 같았으며, 모두 부상을 입고 구석만 찾았다였습니다.”

조리사, 칼과 도끼를 들고 찍어 “7월 15일 점심때 레인과 요크가 밥을 먹으며 밥알을 흘리고 국을 쏟았습니다. 조리사가 욕을 했고, 요크가 인도 말로 무어라 하자, 조리사는 칼을 들고 와 요크를 찔렀습니다. 요크의 허리띠에 찔려 칼자루가 부러졌습니다. 요크와 레인이 달아나니 조리사는 선미 위까지 따라와 도끼를 들고 달아나는 레인의 팔을 찍었습니다. 다행히 날이 아니라 도끼등이었습니다.

‘고기 한마리 값보다 못한 새끼들, 바다에 처넣어 버리면 그만이야’

‘고기 한 마리 값보다 못한 새끼들, 말안 들으면 바다에 처넣어 버리면 그만이야’하며 밥도 못 먹게 했습니다.”

“바다에 처넣으면 그만이야”

“26일 중국선원 6명은 갑판장의 핏박을 더 참을 수 없어, 선장님 앞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갑판장의 잔혹한 행위에 더 견딜 수가 없으니 선장님께서 갑판장을 교육하여 공작 방침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금후에 폭행만 시정해 주신다면 작업을 참담게 할 것입니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27일 갑판장은 백춘범에게 ‘이 XX새끼 빨리 꺼지 못해?’하며 얼은 입감을 머리에 던졌습니다. 선장도 고기뿔로 머리와 팔 등을 후려쳤으며, 발로 차기까지 했습니다. 백 씨는 당황하고 긴장하여 입감을 더욱 헛갈리게 끼었습니다. 선장은 더욱 날뛰며 백 씨의 머리카락을 잡고 바다에 넣어뜨렸습니다. 선장은 그를 발로 밟고 입을 비벼주었으며 백

레인은 이때부터 작업을 못했습니다.” “26일 레인은 투승작업에서 미쳐 스나뿌를 치지 못했습니다. 갑판장은 레인의 머리칼을 잡아당기며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레인의 두 귀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레인은 더 참지 못하고 조타실에 올라가 선장을 찾았지만, 선장은 레인을 욕하고 꾸짖었습니다. 레인은 할 수 없이 하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8일 선장은 내게 레인을 다른 배에 데려다 주라고 했습니다. 선장은 다른 배 선장에게 ‘이 깡패 같은 인도인은 칼을 들고 갑판장에게 달려들어 강제하선시키니 절반 죽여놓아’라고 말했습니다. 레인이 그 배에 오르자 선장은 레인을 ‘이 X새끼’ 하며 마구 때렸습니다. 인도인 레인은 그렇게 비참한 처지로 하선 당했습니다.”

“선상반란의 결정적 동기가 되는 ‘선장의 하선 결정’ 부분부터 살인에 이르는 과정이 22일자에 이어집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15-9185 · 팩스) 02-715-9186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interpia.net/~rights

1997년 3월 21일 (금)

제 84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통합' 위한 출발

이동약자 편의증진법 98년 4월 시행

지난 17일 제정되어 1년뒤 시행에 들어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시설증진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이동약자의 자유로운 이동과 접근을 보장하는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편의시설증진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밝혔듯이, 사회적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며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일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의장 김성재)는 국회의원과 관 소회의실에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발전 방안을 위한 포럼을 갖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시책 마련을 위한

토론을 벌였다.

근본정신 '반차별'

이 자리에서 이성재(국민회의) 의원은 "이 법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이점에서 법률의 근본정신은 반차별에 있다"고 제정의미를 평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미국 장애인 기본법인 ADA를 보면 편의시설 부분에 있어 "창문, 고정의자, 식탁, 자동음성 장치, 각종 경고문, 경보기; 의상실, 사위기구등에 이르기까지 규정하고 있다며, 시행령을 탁상공론이 아닌 실제 장애인 입장에서 제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설재훈(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편의시설 설치 및 이용뿐 아니라 버스·지하철등 교통수단 이용의 편의

증진, 생활관련 각종 정보접근의 편의 증진 등 장애인의 이동과 관련한 종합적인 내용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정보 접근권 인정

접근권은 장애인등 사회적 이동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반 시설과 설비를 비롯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헌법 제4조). 편의시설증진에 관한 법률은 우선 장애인등의 시설·설비 및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주요골자를 보면 국가 등은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을 위해 금융·기술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조세감면을 취한다. 또 편의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설치하며, 재원은 정부출연금, 이행강제금 등으로 한다. 편의시설 미설치 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과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이행강제금은 매년 1회 위반사정이 시정될 때까지 반복부과한다.

114 유료화 뭐가 좋아졌다 참여연대, 행정심판 청구

114 전화안내가 유료화된 후에도 시민들의 불편이 여전한 가운데, 20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작은 권리 찾기 운동본부'는 114 유료화에 대한 행정심판을 정보통신부에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전화번호 안내 오류와 장시간 통화대기 등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주화용 전화가 40원인데 반해 카드전화기는 80원으로 불공평의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선대생 시위도중 사망 !!

병원측, "아직 드러난 외상없어"

20일 오후 2시경 시위에 참가했던 조선대생 류재울(20·행정) 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시위도중 학생이 숨진 것은 지난해 3월 30일 노수석 씨 사망에 이어 1년만 이다.

류씨는 이날 남측연 개강투쟁 선포식에 앞서 교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갑자기 쓰러져 조선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3시경 숨졌다. 목격자들은 "전경이 최루탄을 발사해 교내로 후퇴하던 중이었으며, 그 때 류 씨는 걸어들어가 쓰러졌다"고 밝혔다. 류 씨 사망 직후 조선대병원측은 "현재까지 드러난 외상은 없다"고 밝혔으며, "사망자의 입에서 최루탄 냄새가 나지는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한다.

한편, 조선대에 모여있는 남측연 학생들은 류 씨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오후 늦게까지 교문에서 시위를 벌인 뒤 오후 7시30분경 추모집회를 갖고, 조선대병원으로 집결했다.

【국제 인권뉴스】

파테말라 거리 아동의 외침!

7년전 3월 14일, 거리아동이었던 당시 13살의 나하만 카르모나 로페즈 군이 파테말라 경찰의 폭행으로 죽었다. 나하만의 죽음을 둘러싼 재판은 파테말라의 가난한 거리 아동들 모두의 재판이 되었고, 오늘 그들은 자신들의 재판을 위해 법원 앞에서 행진할 것이다.

오랫동안 거리 아동이 처한 비참한 상태는 무시되어왔다. 많은 아동이 35년간의 내전과 폭력으로 고아가 되거나 무능력하고 자식을 부양할 의지가 없는 부모에게 방치되고 스스로 가출하였다. 파테말라의 거리 아동에 대한 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는 동안, 매년 수백 명이 살해되는 브라질과 콜롬비아와 같은 국가에서도 상황은 훨씬 악화되었다.

나하만의 죽음 그리고 소송

나하만의 죽음을 둘러싼 소송은 최근 몇 년 동안 전세계적인 관심을 끌어 왔다.

90년 3월 1일 새벽, 나하만과 다른 9명의 아동이 본드를 흡입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들을 둘러쌌고, 나하만을 땅에 내던지고 잔인하게 발로 걷어차다. 그로 인해 나하만은 10일 후 병원에서 사망했다. 나하만이 경찰의 손에 당한 첫 번째 희생자는 아니지만, 그의 사건은 당국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최초의 사건이었다.

당시 가사 알리안자가 나하만의 죽음을 조사하려고 했을 때, 경찰과 법원은 갖은 힘을 다해 조사를 방해했다. 카사알리안자의 라틴아메리카 부국장인 영국인 해리스에게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고 파테말라를 떠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고, 거리의 아동들을 구타하고 살해한 경찰과 관계자들에 대항하는 국제 캠페인을 시작했다.

거리아동 고문살해 혐의 소송 3백건 달해

캐나다 정부와 유럽연합의 기금으로, 카사 알리안자는 92년에 법률구조소를 세울 수 있었다. 그때부터 거리 아동을 고문하고 살해한 혐의로 1백40명의 경찰관과 40명의 군인에 대한 3백건 이상의 형사 소송을 냈다.

92년 4월, 결국 4명의 경찰관에게 나하만 살인죄가 확정되었다. 그들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나하만 가족에 대한 약 1천6백50 달러의 민사 배상금 지급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그 배상금은 아직껏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 점이 나하만 가족을 대신해서 카사 알리안자가 현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이유이다. 이 소송은 모든 거리의 아이들과 그 가족의 미래를 위하여 종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해리스는 말한다. 그는 "우리는 제도가 올바르게 작용하도록 압박을 가하고자 하며 살인으로 문제가 사라질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우리는 벌어지고 있는 폭력을 단지 지켜만 볼 뿐 아무일도 하지 않는 태도에서 벗어나 폭력을 기록하고 가해자를 기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들을 거리로 밀어내는 사회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결코 사라

지지 않을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의 기본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정책이 필요하다고 해리스는 말한다. 18세 미만이 중미 인구의 54%로 추정되며, 전체 남자의 평균연령이 거의 40세인 미국과 비교해서 17.6세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카사 알리안스의 노력의 결과로 변한 것이 하나 있다면, 아동에 대한 경찰 폭력을 다루는 보도가 아예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보도는 되고 있지 않지만, 지난 해 17명의 아동이 살해되었다는 것은 참담한 일이다. 아울러,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카사 알리안스의 법률구조소의 조사에 의하면, 최근 수년간 파테말라 수도에서 범죄가 급속히 증가하자 사설보안회사 설립이 확산되었고, 여기에 고용된 다수가 경찰과 군대의 하위직 출신이라는 것이다. 민간인 복장을 입은 이들이 거리 아동에 대한 신종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 정부는 이에 대해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5주 동안에 5명의 소년이 시체로 발견되었으며 모두가 목구멍이 예리하게 잘려 있었다.

나하만의 묘비에는 이렇게 씌여있다.

"제가 원하는 건 어린이가 되는 거였지만, 그들이 못하게 했어요."

- 데이비드 애담스, 피터스버그 타임즈, 3월 14일자
번역=한국국제문제연구소(IPECK) -

행사와 동정

- 인도네시아 노동운동 현황과 한국기업의 노동조건
 - 때: 3월 21일(금) 오후 7시
 - 곳: 참여연대 사무실(참가비 1천원)
 -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회의(APWSL) 인도네시아위원회
 - 주최: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해외진출기업감시위원회
- 철거민 민병대원사 폭력살인 김형삼상경관 타도와 민중생존권 쟁취 투쟁결의대회
 - 때: 3월 22일(토) 오후 2시
 - 곳: 수원역
- 국가보안법 철폐와 사민청 구속자석방을 위한 규탄집회
 - 때: 3월 22일(토) 오후 3시
 - 곳: 탑골공원
 - 주최: 사민청 비상대책위
- 원진문제 해결을 위한 설명회
 - 때: 3월 22일(토) 오후 4시
 - 곳: 향린교회 범국민대책위 상황실(777-4014/5)
 - 주최: 원진노동자 직업병위원회 · 한국노동보건직업병연구소
- 안기부법 무효화 문화제
 - 때: 3월 23일(일) 오후5시
 - 곳: 경희대 노천극장
 - 출연: 희망새, 조국과 청춘, 최도는 씨등
 - 주최: 김형찬대책위(775-3866)
- 동티모르 교육모임- 구수환 PD(KBS1 <세계는 지금> 담당)의 '동티모르 잠입 취재기'
 - 때: 3월 25일(화) 저녁 7시
 - 곳: 시청앞 성공회대성당 106호
 - 주최: 동티모르연대모임(522-7284)
- 범국민대책위 상황실 22일 전국연합으로 이전(921-4090)
- 자동차 연맹 주소이전
 - 주소: 용산구 한강로 2가 329 양우빌딩 3층
 - 전화: 790-2292/ 전송: 790-2293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15-9185 ·팩스) 02-715-9186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interpia.net/~rights

경기여상 12일째 수업 거부 학생·교사, 재단비리 척결 요구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설립자 김일윤 신한국당 의원) 학생 2천4백명이 12일째 수업 및 등교를 거부하고 있지만 사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1일 경기여상에는 1백여 명의 학부모들이 모여 대책위원회의 구성 등을 논의했으나, 몇몇 학부모에 대한 '어용' 시비와 흥분한 학부모의 실신 사태 등으로 성과없이 해산했다.

이번 사태는 재단 비리 및 신입 교감과 보직교사 임명에 반발하던 학생들이 지난 7일 난방시설 미비에 불만을 터뜨리면서 촉발되었다. 경기여상 학생회(회장 윤미옥)는 21일 "신입 신철균 교감 선생님과 새로 임명된 주임 선생님들이 사퇴하지 않으면, 계속 수업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신 교감은 지난 95년 입학금 착복사건 때 교무주임으로 재직하면서 비리의 중심인물로 지목받아 왔다. 새로 임명된 보직교사들도 재단의 입장에 편들어온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학교 65명의 교사 중 양철원 교사 등 39명도 신 교감의 사퇴와 재단 비리 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 교사 등은 지난 3일 김학만 재단이사장과 길종성 서무과장을 비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교육부와 청와대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들 교사들은 지난 12일부터 일과 시간후 철야농성 및 침묵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양 교사 등은 "지난해 교육청에서 내려보낸 환경개선자금 6억5천만원 가운데 재단이 수천만원을 유용한 의혹이 짙다"고 지적하며 "비리 척결과 교육환경개선을 더 이상 현 재단에 맡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 재단의 사퇴와 관선이사의 파견이 필요하다고 강

조했다. 한편 김정남 교장은 "과행이 계속되면, 재단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공권력투입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교장은 "학생들은 수업에 무조건 복귀해야 하며, 문제 해결은 재단과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사태해결이 지연되면서 일부 학부모들은 19일 교육청을, 학생들은 20일 국민회의 당사를 찾아가 해결을 호소하기도 했다. 김상희 교사는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해야 된다는 것엔 이론이 없다. 그러나, 재단측에서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태의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또 "법적하자가 없어도 도덕적으로 문제있는 사람이 교감직에 오른다는 것을 학생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

시민대책위, 내무부에 의견서 발송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는 21일 내무부에 보내는 의견서를 통해 "주민등록법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의견서를 통해 "이한영 씨 살해 사건에서 보듯이 지금도 국가 전산망에 수록된 개인정보가 마구잡이로 유출되고 있다"며 "개인정보의 오용·남용·유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프라이버시권 보호장치 등을 마련하는 별도의 통합입법이 먼저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11일부터 경기여상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으며, 24일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여상은 95년에도 입학금 착복 등의 비리사실이 드러나면서 학교장 김성호 씨 등 7명이 사법처리된 바 있으나 2년만에 또다시 커다란 내홍을 겪게 됐다. 동창회장 송민계(21·1회 졸업생) 씨는 "95년에도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며 재단 비리 척결과 교육환경 개선 등을 촉구했다. 당시 실권을 가진 김일윤 설립자가 학부모들 앞에서 요구사항의 해결을 약속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했지만, 2년간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류 씨, 시커먼 물체에 맞았다"

광주지역, 류재을 씨 대책위 결성

광주지역의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조선대생 류재을 씨의 시위중 사망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가칭) [애국학생 고 류재을 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류재을 학생의 사망이 단순 돌연사가 아님을 확신하며, 이를 무마하고 희석하려는 행위를 경계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당시 경찰의 시위진압 방식이 공격적 시위진압이었다는 점에서 경찰당국은 류 씨의 사망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다"며 이에 대한 규탄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선대 김 아무개(정치외교 1년)는 "류 씨가 시커먼 물체를 맞고 주춤거리며 몇 발짝 물러서다가 쓰러졌다"고 진술했다. 송 아무개(정치외교 1년)는 "직격탄이 여러발 날아왔으며 투석전이 전개되고 있을 때, 갑작스런 폭음이 울린 후 재을이 형이 뒤로 넘어졌다"고 밝혔다.

<3회 연재> 페스카마호 살인범 전재천 씨가 밝히는 선상폭력의 실상③ 선장의 하선 결정과 살인극

폭행 등에 견디다 못한 조선족 선원들은 마침내 선장에게 하선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줄이야...

개고생만 하고도 도리어 빛만 걸머지게 되었습니다

'백춘범 등 조선족 5명은 몸이 아파서 못하겠다며 하선을 제기했습니다. 선장은 '소원대로 해주께'하며 하선 경제 보증을 쓰게 하였습니다. 보증서가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에게 손도장을 찍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뒷면 내용은 앞면과 달랐습니다. 이때에야 깜짝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뒷면에는 '중국인 6명이 승선 후 선장과 갑판장의 지시를 듣지 않고 제 마음대로 작업을 거부하고 심지어 흥기를 들고 선장을 살해하려 달려들었으며, 계속 작업거부와 폭력적인 행위가 있으므로 강제하선 시킬 것을 결정한다'고 써여졌습니다. 선장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쌍, 거러지 같은 놈 새끼들 그렇게 수월하게 보내줄지 아냐, 너희들은 사모아 구류소에 3개월 갇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사모아까지 가는 배의 일체비용(연료 등)도 중국인 6명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길이 막막하고 눈 앞이 캄캄했습니다."

선장은 폭동을 말린 나에게 흥기를 들고 폭행에 참가하였다고 덮어씌웠습니다. 경제 손실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왕복 항공비, 사모아까지 항해 비용, 사모아 구류소 석달 경비, 중국에 올때 송출회사에 보증금으로 돌려놓은 친구의 집 등 중국 돈으로 20만원이 됩니다. 나 때문에 부모, 자식들이 길가에 누워 있게 할 수는 없다 생각했습니다."

선장에게 속아 하선증명서 작성 31일 중국에서 가져온 고급약(안궁환) 1알(1알에 중국 돈 180원)을 가지고 장을 찾아갔습니다. 약을 내놓으면서 전하려는 시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사 아파서가 아니라 갑판장이 우리를 살게 하여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때때 갑판장의 그 꼴을 안 보면 되겠다

하여 짧은 생각끝에 하선을 요청한 것입니다. 천번 만번 잘못했습니다. 우리 어머님과 자식을 보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선장님이 시키는 대로 따르고, 기러면 기겠습니다'며 빌었고 용서를 바랐습니다. 선장은 '나중에 얘기해 하였습니다."

"8월1일 침실에 들어서니 모두 고개를 떨구고 수심에 잠겨 있습니다. 서로 말없이 담배만 피울 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모아에서 달아날 계획을 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에 가도 집에 못가고 평생 객지에 있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제일 걱정은 사모아 구류소에 얼마나 갇혀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러면 기겠습니다" 애원도 했지만... "사실 나는 중국인들과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우리는 배에 오른 후 상하관계(전재천 씨는 2등항해사였다-편 집자)로 서로 얘기할 사이가 못됩니다. 오늘은 다같은 처지가 되어 처음으로 이들의 하소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승선하여 50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못자고 매일 욕과 매를 맞으며,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개고생만 하고 돈일뿐 벌지 못하고 도리어 빛만 등에 걸머지고 가야 했습니다. 심지어 승선반란자로 몰려 사모아 구류소에 갇히

게까지 되었으니, 어찌 가슴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말을 한후 모두 두 눈에 이슬로 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된서리에 맞은 풀마냥 고개를 떨구고 담배만 피웠습니다."

"1일 밤 술병을 들고 마셨습니다. 술이 들어가니 가슴에 쌓여있던 원한이 눈물이 되고 눈물이 악으로 났습니다. 우리는 벼랑에 도달한 사람이다. 선장이 우리를 괴롭히고 행복을 망치게 하고, 심지어 우리 가족까지 길가에 내얹게 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게 하는 가혹한 행위와 인간의 도덕과 동정이 하나도 없는 짐승같은 흉악한 짓으로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원통했으며, 한 동포 간에 너무 유감스러웠습니다. 우리는 미국 구류소에 갇힐 생각을 하면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죽으려 했습니다. 죽는 김에 우리를 죽게한 선장을 죽이고 자살하자 했습니다. 너죽고 나죽고 마지막 일기도 썼습니다."

"술에 취한 이들은 일어섰습니다. 겁났습니다. 이들의 눈에선 독이 울랐으며 긴장한 분위기였습니다."

술 취한 이들의 눈엔 독이 오르고 2일 새벽 선장과 갑판장이 차례로 이들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모두 제 정신이 아닌 듯 싶습니다. 사는 날까지 살려면 사람을 살해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계속 살인이 시작되었습니다."

기관사 등 한국선원 5명이 잇달아 살해되었고, 마지막으로 인니인 3명과 중국인 1명을 살해하는 것으로 11명에 대한 살인극은 막을 내렸다. <끝>

페스카마호 살인범 사형선고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페스카마호 살인범에게 내려진 사형선고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화(715-9185), 팩스(715-9186), 컴퓨터통신(천리안/하이텔-rights, 나우누리-인권사랑)으로 의견을 보내주시시오. 6명의 생명이 달린 중대한 사안인만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15-9185 · 팩스) 02-715-9186 · 통신 ID:rights(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interpia.net/~rights

1997년 3월 25일(화)

제 84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기무사, 민간인 수사하며 전향 강요

대전교도소측, 정확히 써 고발장 전달 거부

민간인을 수사할 권한이 없는 기무사가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정화려(국군전위 사건) 씨를 수사해 발령을 받고 있다. 지난 7일 기무사 소속 최병현(2급 이사관) 소령은 정 씨에 대한 수사절차를 통해 "재일동포 백병민 씨를 잡겠다"며 백 씨의 인상착의 등을 조사해 간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 소령은 수사과정에서 정 씨에게 전향을 강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지난 22일 전 씨를 면회한 부인 김혜애 씨를 통해 확인됐으며, 대전교도소 안 유 보안과장도 기무사의 수사절차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정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 최 소령과 권창낙 대전교도소장을 불법수사와 불법수사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려 했으나, 안 보안과장은 고소장 전달을 거부했다.

안 보안과장은 이에 대해 "고소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장을 검찰에 전달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씨는 교도소측이 고소장 전달을 거부하자 이에 항의해 24일부터 단식에 들어갔으며, 교도소내 미전향 장기수 등 양심수들도 이에 동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씨에 대한 전향강요 행위가 사실일 경우, 기무사의 행위는 양심·사상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정부는 96년 7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2차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은 개인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북한의 주체사상 등 어떠한 사상을 가지든지 간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폭력혁명을 선동...하는 것은 처벌된다"며

"사상 등의 전향은 전적으로 자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긴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인니 정부, 동티모르 시위대에 발포

2명 사망, 38명 부상, 48명 체포

지난 23일 동티모르 수도 달리에서 인도네시아 군경의 발포로 시위대 2명이 사망하고, 38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아침 동티모르 주민 2백여 명이 달리 중심가의 마코타 호텔에 묶고 있는 마커 유엔특사와의 면담을 요청하며 시위를 벌였고, 인도네시아 보안군은 이들을 해산시키기 위

해 발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티모르 경찰 책임자인 아복 리스만 토 대령은 경찰의 발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위대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사실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경찰 책임자인 유수프 무차람 대령은 48명의 시위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시위가 있은 후, 헬기편으로 이동한 마커 특사는 "6시쯤부터 시위대의 구조 소리를 들었으나 정확한 경과는 모른다"고 말했다.

올해 초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한 잠스히드 마커 동티모르 특사는 지난 22일 달리에 도착하여, 동티모르 총독인 소아레즈를 비롯한 인도네시아 당국자들과 노벨평화상 공동수상자인 벨로 주교를 만날 예정이었다.

동티모르는 75년 인도네시아의 침략에 의해 식민지가 된 뒤, 20여 년간 독립운동을 벌여왔다. 지난해엔 독립운동가 벨로 주교와 호세 라모스 오르타가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다.

한편, 동티모르 연대모임(대표 김진용)은 "조속하게 사건의 진상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주요 공판 안내

- ▶ 3월25일(화) 박충렬(국보법) 오후2시, 합의4부, 418호, 속행 정수일(간수교수, 국보법등) 오전11시, 합의5부, 404호, 속행
- ▶ 3월26일(수) 민영우(국보법) 오전10시 11단독 526호 속행 유민희(국보법등) 오후2시 12단독 523호 신건 서형준(국보법등, 나라사랑청년회) 오전11시 4단독 524호 속행 윤석진(국보법, 북한 잠수함 관련 PC통신계제 협의) 오전11시 4단독 524호 속행 장정일(음란문서제조등) 오후2시 12단독, 522호 신건 이승환(국보법,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부회장) 오후2시, 합의2부, 302호, 속행
- ▶ 3월27일(목) 김선미(국보법) 오전10시, 2단독, 524호, 선고 서미연(국보법등) 오후2시 3단독 317호 속행 유덕상(전 한국통신 노조위원장, 업무방해등) 오후2시, 3단독 317호 속행 강순정(국보법등, 민자통 서울연합 공동의장) 오전10시, 합의3부, 303호, 선고
- ▶ 3월28일(금) 현석호(국보법등) 오전10시, 합의5부 425호 신건 구광희(국보법 찬양·교무등)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신건

-서울지법 형사국

"1백미터 달리기 원없이 해보고 싶어요" 달린 교문을 여는 경기여상 학생들

24일 경기여상의 교실문은 자물쇠로 굳게 채워져 있었다. 학생들의 수업거부 사태가 발생한지 14일만에 학교측은 임시 휴업을 공고했으며, 교장(김정남)은 교향에 내려간다고 학교에도 나오지 않았다. 학생회실의 조그만 난로가에 삼삼오오 모여 앉은 학생들은 연신 추위에 떠는 모습이었다. 바깥은 완연한 봄날이지만, 경기여상 2천4백 학생들의 가슴은 여전히 추운 겨울이었다.

경기여상의 교육환경은 '열악하다'는 말만으로는 모두 설명되지 않는다. 교문을 들어서면 농구장만한 운동장이 눈에 들어온다. 학생들이 '야마당'이라고 부르는 이 운동장이 2천4백명의 '종합운동장'인 것이다. 전교생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고, 학년별로도 운동장에 함께 모여 본 일이 없다고 한다. 체육대회를 하려면 인근 손기정 공원을 이용해야 한다는 말이 실소가 나오기까지 한다.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1백미터 달리기 원없이 해보는 게 소원이예요"

추위에 못 이겨 집단 하교

이 학교의 난방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각 교실마다 라디에이터(난방기)가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한 번도 가동된 적이 없다. 장작난로를 수년 간 사용해 오다 지난해엔 난로마저 철거해 버려 학생들이 추위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일 뻔했다. 그나마 학생들 스스로 청계천의 난로 대여점 연락처를 알아와 서무과장 앞에 제시하자, 학교측은 그제야 난로를 임대해 들여놓았다고 한다.

지난 7일 학생들은 참아왔던 분노를 일시에 터뜨리게 되었다. 깨진 창문을 보수해 달라고 4일간을 요청했지만, 학교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추위에 견디다 못한 학생들은 집단적으로 하교해 버린 것이었다. 한 학부모는 "우리 애는 학교만 갔다 오면 감기에 걸린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교육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흔들리는 건물, 어두운 교실조명, 그러나, 이젠 학교를 보수하는 것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게 학생들의 주장이다. 윤미옥 학생회장은 "교치는 것보다 이사하는 게 더 싸게 먹힐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지원금 1억원 횡령 의혹

경기여상은 지난해 환경특수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교육청으로부터 6억5천만원의 지원받았다. 양철원 씨 등 39명의 교사들은 "학교측이 6억5천만원 가운데 1억여 원을 유용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 3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사업체를 선정하면서 무면허 업체에게 도급을 주고 그 차액을 유용했다는 것이다. 교사들에 따르면, 경기여상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한다. 교사들은 "95년엔 학교운영비의 일부가 비자금으로 빠져나간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 학교의 설립자이자 실세인 김일운 씨는 국회의원 가운데 부동산 재산순위 5위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어두운 교실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어린 학생들의 모습위로,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김 씨의 얼굴이 교차된다.

-관련기사 <인권하루소식> 3월 22일자

주/간/인/권/호/름

(97년3월17일부터 23일까지)

◆ 17일 (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무고용대상인 산업보건의 등 10종 오는 5월부터 자율고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43만여명 고용불안 직면/개정된 영화진흥법이 헌법재판소의 영화사전심의 위헌 결정정신에 어긋난다는 논란일어/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 18일 (화) 한국노동연구원 발표, 96년 9월 이후 4달간 실업자 17만명 증가(하루 평균 1천4백여명)/방화선 수원지법 판사 법원연임 심사서 탈락/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7명, 진관소님 석방 탄원서 서울지검에 제출/사회민주당의청년연맹 회원 14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80년 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국회 제출/인천시교육청, 학교장에게 전교조 가입교사 탈퇴시키라고 지시

◆ 19일 (수) 김형찬 대책위 대표 4명 수원지검 공안부 방문해 검찰 수사 촉구하는 시인 3명 서명록 전달/인천지검, 김구 선생 암살범 안두희씨를 살해한 박기씨에게 징역 8년 구형/미 대법원 미성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 '통신망위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리 착수

◆ 20일 (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발표, 우리나라 사람들 교통사고·고혈압성 질환·간암·결핵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 차지/검찰, 영장실질심사제 등 개정해 달라고 대법원에 공식요청/조선대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조선대생 류재을(20·행정2) 씨 사망/참여연대, 정보통신부에 114 유료화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 21일 (금) 노원경찰서 경찰 4백여명, 광운대 교내로 들어가 학생 10여명 체포, 유리창과 계시판등 기물 부수/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등,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주한미군의 열화우라늄탄 보유 규탄집회/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 내무부에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 의견서 제출/경기여상 전교생 재단비리 척결요구하며 12일째 수업·등교 거부/노점상 민병일씨 유기족, 민씨 사망관련 경찰에 책임 물어 민·형사소송 제기

◆ 22일 (토) 세계 물의 날 맞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1회 세계 물 회의에서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마라케시 선언' 발표

◆ 23일 (일) 민변, 1월 한총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정정욱씨등 항소심에서 보호관찰기간 동안 학생회 활동금지, 정치집회참여 금지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덧붙여 내린 서울지법 판결이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반박의견서 제출/천주교인 권위, 경기 성남시에서 92년 발생한 '파키스탄인 노동자 2명 피살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진상조사결과를 토대로 사건 재수사 검찰에 공식요청

인권
시평

언론과 인권

김 동 환 (법과 인권연구소장, 광주여대 교수)

이 사회가 썩지 않으려면 언론, 종교 학계가 제몫을 다해야 한다. 왜 하필이면 이 세 집단만을 특별히 지명하여 책임을 묻는 것인가는 명약관화하다. 이 세 집단에 속한 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이 세상 각계 각층이 다 썩어 심한 악취를 내뿜는다 해도 이 세 집단은 최후의 보루로써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당위성이 흐려진지 이미 오래다.

그 중에서도 대중성이 가장 강한 언론을 보자. 언론의 생명은 비판과 고발에 있다. 그러나 우리 언론은 비판과 고발을 게을리 하고 오히려 촌지수수, 누구누구 장학생, 재벌과의 동침으로 스스로 비판과 고발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또한 감자에겐 한없이 약하고 약자와 죽은 자에겐 역겨울 정도로 잔인한 모습을 아주 용감하게 보여준다. 철면피 중에서도 첩피언감이다.

비판과 고발의 대상이 된 언론

요즘 반론청구권이 법률상 인정되어 있으니까 좀 덜하지만 아직도 무조건 쓰고 보자는 못된 생각은 여전하다. 언론의 자유를 악용하여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선정적 보도를 일삼는다. 언론 스스로가 황색저널리즘에 빠져있다. 그리고 더욱 가관인 것은 마치 언론 종사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정권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망상적 착태이다. 하기가 망상에 사로잡힐만도 하다.

그 동안 집권세력의 허수아인 노릇을 성공적으로 해낸 자들의 대부분이 언론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정말로 나라가 망하는 조짐이 보인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일반시민이나 노동자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해본 적이 없는 우리 언

론은 가진자들의 사교를 위한 소식지에 불과했다. 올바른 인권의식이 없으니 가지지 못한 자들에 대한 시선이 뒤를러 있다. 인권침해는 진부하다는 생각이다.

발로 뛰던 기자정신도 승용차를 타면 서부터 변질되었다. 이제 언론귀족이 되어 버렸다. 배가 부르니 보이는 것이 없다. 인권의 청맹파니가 되어버린 것이다. 날치기 노동관계법, 인기부법에 대해 내용은 괜찮은데 질치가 잘못되었다고 교묘하게 사안의 본질을 흐려놓는 언론이 이 사회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

언론 귀족에서 언론노동자로 새롭게 태어나라

다. 그러다 보니 노동관계법은 공포되고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은 채 다시 개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 무슨 국력의 낭비이나. 여기엔 언론의 책임이 제일 크다. 언론이 제대로 문제의 사안을 지적하였다면 법제정권자인 국회의원들이 그러한 어처구니없는 짓들을 감히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는가. 국회의원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언론인데.

배가 부르니 보이는 것이 없다

요즘 신문을 보면 지면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읽을 것, 볼 것이 없다. 상업주의에 지나치게 치우쳐 경쟁에서 이기려다보니 신문정신은 실종된 것이다. 스포츠, TV프로그램, 연예계 소식, 광고 등의 지면만 늘었지 정작 '어제의 인권침해'와 같은 언론본연의 사명은 잊은

지 너무도 오래다. 먹고 노는 것을 부추겨 놓고 먹고 놀다보니 경제가 이 모양이라고 일반 시민만 질타한다.

그러나 아니다. 지금의 우리 나라 대부분의 언론은 정말 이대로는 안된다. 국민적 저항에 혼쭐 나야한다. 언론귀족은 쓸모가 없다. 언론 노동자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보도에 제약을 당하고, 알아서 알릴 것은 알리고 피할 것은 피하는 카멜레온식 습성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최종목적은 인권보호

언론은, 곳곳에서 인권이 침해되고 사람인가 의심되는 동물농장 분위기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쓸데없이 정치판의 가당치 않은 작태를 기사화하는 것으로 지면을 채우고 있을 것인가 자문해야 한다.

중요일간 종합지나 방송에서 밝혀지지 않는 내용을 다

른 대응매체를 통해서 어렵게 알아야 하는 국민들은 매일 매일 바보가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런 모습은 인권을 고도의 수법으로 짓밟는 셈이다. 「바른 언론」 「미디어 오늘」 「인권하루소식」 등 재야성 언론대응매체가 더 이상 필요없는 세상이 하루 빨리 와야 한다. 기성언론은 '하이엔나' '카멜레온' 거짓말쟁이 양치는 소년'에서 벗어나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아니 원래의 언론 재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언론의 사명은 인권보호이다. 다른 그 어떤 그럴듯한 미사여귀도 다 허황된 것이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대명제 앞에 언론, 종교, 학계를 비롯한 모든 분야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분명하다. 궁극적으로 최종목적은 인권보호이다. 언론은 평상심으로 돌아가 인권보호라는 본래의 사명에 충실하여야 한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15-9185 · 팩스) 02-715-9186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interpia.net/~rights

1997년 3월 26일(수)

제 85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경기여상측, 학생·교사 고발

설립자·교육청 발뺌 "재단 소관일 뿐"

재단비리와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빚어진 경기여상 학생들의 수업거부 사태에 대해 학교측이 이를 교사들의 선동에 따른 사건으로 몰아가고 있다.

24일 휴업령 공고에 이어 25일 김정남 교장과 신철균 교감은 양철원 씨 등 교사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이 학교 박찬선(상업), 이양희(과학) 교사는 윤미옥(총학생회장) 양 등 학생 4명을 폭행 혐의로 남대문서에 고발하는 등 추태가 극에 달하고 있다.

윤 양 등 학생 4명은 이날 경찰의 소환에 따라 남대문서에서 4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양 교사 등도 경찰의 출두요청을 받았다. 오후 5시까지 강력한 등에서 조사를 받은 학생들은 경찰로부터 "어느 선생이 배후인물인지 대라"는 등의 추궁을 받았다고 밝혔다.

"배후 선생 누구냐" 추궁

이번 사태에 대한 일선 교육행정가의 인식도 학교측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을 선동해서 수업을 거부하게 했다"며 "이번 사태는 이념이 개입된 교사간의 다툼"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사들간의 싸움에 교육청이 나설 수는 없는 게 아니냐"며 "재단이 알아서 할 일이지 교육청이 개입할 사안이 못된다"고 잘라 말했다.

학부모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는데, 이날 오전 학부모들은 학교에 모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재단을 상대로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학부모들은 "이번 사태를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김일윤 설립자는 자신이 학교 운영에 관계하고 있는지 여부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일윤(신한국당 의원) 설립자측은 "오랫동안 학교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경기여상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의 보좌관은 "학교가 전혀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설립자가 나서는 것은 시기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의 관계자는 학생과 교사들의 사퇴압력을 받은 신철균 교감에 대해 '결격사유'가 있어 임명을 취소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학교측에 휴업령을 취하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사인 규명·경찰청장 해임"

고 류재을군 대책위 기자회견

시위중 숨진 조선대생 류재을 씨 사망과 관련해 구성된 「민생과판, 비리정권, 강경탄압 규탄과 애국학생 고 류재을군 대책위원회」(공동대표 나간채 등, 대책위)는 25일 오전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류 씨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과 경찰청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류 씨의 사망과 관련해 "최루탄이 난무하고 산발적인 투석전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경찰은 시위와 무관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원진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

일시: 3월 26일(수) 오전 10시/ 장소: 명동성당

주최: 원진노동자직업위원회 · 원진지위대책위(011-752-1739)

류 씨 사망의 원인은 경찰의 과잉폭력 진압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류재을 학생의 사인에 관한 왜곡 중단 △과잉 진압의 책임자인 전남지방 경찰청장, 광주동부경찰서장의 처벌 △내무부장관의 사과 △평화시위 및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탄압 중단 등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단기학생동맹조직 사건

전주대생 4명 구속

전주대에서 96년 단기학생동맹조직 사건으로 박종근(89학번) 씨등 9명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지난 20일 같은 사건으로 4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95년 구속자 전원이 이미 집행유예나 보석으로 출감한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과거 사건의 재탐이 아닌가는 의혹을 사고 있다.

20일 새벽 송신원(92학번, 95년 전북 지역 학생연대 의장) 두용현(91), 한홍운(93) 오광모(93) 씨가 구속되었는데, 이중 송 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 현재 전북도경 대공분실에서 조사중이며, 두용현 씨등 3명은 모두 군복무 중으로 기무사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더욱이 한홍운 씨는 제대를 불과 5일 앞둔 상황이다.

「공안정국, 인권유린을 반대하는 전주대 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건은 행정부의 공안정국 조성과 공안탄압의 결과로, 과거 학생운동 전력을 이유삼아 조작된 것"이라며 민주세력과 연대투쟁할 것을 밝혔다.

기고

페스카마호 선원들의 사형을 반대하며

오원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사형은 차별 중에서도 가장 전체주의적인 것이다. 사형집행은 국가의 관철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며 국가는 단지 하나의 범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하나의 생명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파괴할 권력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선언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다른 인간의 폭력을 그저 더 많은 폭력으로 상대하기 보다 두려움과 공포, 자신의 분노와 편견을 뛰어넘어 문제해결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 가능한가? 그러나 한 사람이 사형집행 운동에 참여할 때마다, 한 나라가 사형을 제한하거나 폐지시킬 때마다 인류는 이 질문에 대해 '가능하다'라는 답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 다른 모든 폭력과 사회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분명히 세계와 인류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이다. 76년 이래로 매년 평균 2개 국가에서 사형제도는 폐지되었으며 89년 이후 21개 국가에서 사형제도는 사라졌다. 현재 세계의 절반 이상인 1백개 국가가 법적 또는 실제에 있어 사형제도를 폐지하였으며 94개 국가에서 사형이 존치되고 있다.

사형제도 속에 존재하는 불명등성

형벌의 불명등성이 특히 사형제도에 있어 돋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똑같이 살인행위로 검거되었지만 살 수 있는 사람들과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들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그 근거는 분명하다. 그것은 범죄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범죄자의 경제적 지위, 피부색, 또는 자신들이 죽인 사람의 피부색 또는 경제적 지위 때문이다.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가난하거나 정신질환자 또는 지진아이거나 소수민족일 경우이고, 사형집행을 당한 사람들은 종종 위에서 열거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이다. 사형은 한국에서도 명백히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어 왔다. 사형은 세계에서 군사쿠테타 이후 이전 정부에 관련된 사람들이나,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에게 자주 적용되고 있는데, 이 경우 기소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불합리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사형을 선고 받고 있다.

국가는 죄인을 사형시킬 권리가 있는가?

사형제도는 극단적으로 가혹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이다. 사형은 명백하게 가혹한 처사일 뿐 아니라 사형을 기다리는 과정 자체도 잔혹한 고통이다. 종신형은 재실의 가능성이 보장되며 조건이 충족된다면 가석방을 고려하는 나라들도 많다. 또한 범죄자의 교화와 갱생은 오랫동안 형사정책의 기본 목표인데 다른 형벌과는 달리 사형은 갱생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형벌이다. 국가는 죄인을 사형시킬 권리를 결코 가질 수 없다.

페스카마호 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선고를 당한 6명의 중국 선원과 52명의 사형대기자들의 생명을 뺏었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 것이며, 역사는 현재 우리가 행하고 있는 보복적 행위를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인간의 미개성을 표출하고 있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바로 사형이다.

인권영화 ②

시간은 오래 지속된다

감독:김응수/ 주연:김중기, 김선재

외길에 대한 맹목처럼/아름다운 것이 있으라 이미 간 길 다간 이의/뒷모습 흔들리는 생 속에서도 나는/찬탄으로 우러렀거니/그러나 확신으로 걸어온 길 꼬리 감추고/나를 버리는 이정표 없는 낯선 마을의 저녁/바람 앞의 잔가지로 나는 불안하다.

영화가 끝나자 특별한 연관이랄 것도 없이 떠오른 이재무의 시 '누욱(陋屋)'의 일부이다. 아무리 많은 수사를 니열한다 해도 이 영화에 대한 느낌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적과 동지를 구별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시기, 싸워야 할 적이 없으면 쫓다고도 옳다고도 할 수 없었던 시대, 그래서 적대적이고 불안정했지만 절대에의 신념에 단호하게 복종할 수 있는 에너지가 치솟던 시절, 바로 그 20대의 나이로 80년대를 살아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간은 오래 지속된다'라는 이름으로 스크린 속에 투영되었다. 역사의 혼돈과 격랑 속에서도 간단없이 그리고 가치없이 지속되는 시간은 '그들을 어디에 데려다 놓았는가'.

한때 일직선의 대오를 형성하여 공동의 적과 싸웠던 학우동지들이 그들 이념의 메카였던 모스크바에 모였다. 그들은 동일하게 서른의 문턱에 들어서긴 했지만, 이제 각기 다른 줄에서 있다. 친구 진호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중기, 결코 다가갈 수 없는 중기의 결을 안타깝게 땀도는 선재, 외교관으로 제도권에 진입한 성준, 짜증스런 일상과 장관부인의 꿈 사이를 오가는 성준의 아내 경주, 러시아를 향하여 떠나며 트로츠키를 읽는 기웅, 퇴폐적이고 냉소주의자로 변해버린 은정 이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시간이 갈수록 길게 늘어뜨려져 발목 잡는 과거와 낯선 얼굴을 한 현실에 대한 부적응과 정체성의 혼란과 불안한 미래이다. 한 자리에 모이긴 했지만 대화는 걸들거나 날카롭게 서로를 찌른다. 결국 밖으로 겨누어졌던 칼날이 자신에게 돌아와 상처를 내고서야 각자 빨빨이 돌아선다. 권총자살로 자기 생애 종지부를 찍은 기웅 외에는 다시 지속되는 시간의 흐름을 타야만 하는 것이다.

모스크바 현지에서 거의 감독의 혼자 힘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주제의 진지함에 비해 기술적인 미숙함이 곳곳에 드러난다. 연기 경험이 없는 유학생들이 연출하는 동작과 표정과 대사는 제각각 흩어지고, 보여주고 싶은 것이 많은 시나리오와 연출은 개연성이 없어 흐름이 매끄럽지 못하다. 세련된 카메라 미장센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그저 또 하나의 후일담이라는 이름의 어설픈 습작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영화적 형식미가 부족하고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해도 이 영화로 인하여 아직도 여전히 젊은 그들을 기억해 내고, 그들의 자리와 더불어 그 당시를 살았던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첫발을 내디딘 이들과의 대면을 주선할 이유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다.

【김경실 ·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영화반 회원】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15-9185 · 팩스) 02-715-9186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interpia.net/~rights

1997년 3월 27일(목)

제 85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원진 전문병원 설립” 촉구

27개 사회단체 공동대책위 구성

원진레이온 직업병 환자들의 명동성당 능성이 13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민주노총, 민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원진직업병 전문병원 설립과 직업병 환자 보상금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27개 사회단체들은 26일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진 직업병 전문병원의 설립”을 촉구했다. 원진 공대위는 “93년 노동부가 약속했

던 전문병원 설립이 아직 이행되지 않았고, 직업병 환자들에게 지급할 재해 보상금조차 고갈된 상황”이라며, “산업은행이 원진 공장부지를 매각하고 남긴 잉여금 1천6백여 원을 전문병원의 설립과 보상금 지급에 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측은 1백개 병상을 수용할 수 있는 병원 건립비 1백80여 원과 새로 발견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

7백30명 분의 보상금 2백30억원 등 총 4백10억 원 정도의 기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가졌으며, 28일엔 청와대 부근 적선동에서, 29일엔 종묘공원에서 집회를 가진 뒤, 시가행진을 벌이기로 했다(관련기사 2면).

정화려 씨 고소장 접수 기무사 전향강요

기무사의 전향강요로 말썽을 빚은 대전 교도소측은 25일 정화려(구국전위 사건) 씨를 면회한 김현수 변호사에게 정 씨의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화려 씨는 24일부터 벌여온 항의 단식농성을 풀었다.

정 씨는 지난 7일 기무사 최병헌 소령의 수사접견을 통해 전향을 강요받았으며, 최 소령과 권창남 대전교도소장을 불법수사와 불법수사 방조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교도소측에 의해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다(인권하루소식 3월 25일자 참조).

시민의 작은 권리찾기 참여연대 운동본부 출범

참여연대는 26일 오전 11시 용산 한강로 빌딩 3층에서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울타리가 될 ‘작은 권리찾기 운동본부’ 출범식을 갖고 사업에 들어갔다.

작은 권리찾기 운동은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과 부당한 관행을 고쳐가는 생활제도개선, 생활인권운동으로 △공공서비스 개선 △공공편의시설 확충 △식품의 안전성 확보 △행정절차 개선 △중소상인의 입차권 보호 등의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문의: 797-7413

제네바소식 ②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둘째주(3. 17-21)

유엔에서 거절당한 노벨 평화상 수상자

유엔 인권위원회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조세 라모스 호르타 씨의 연설에 특정조건을 달면서 그의 연설을 마지못해 허용하였다. 그 조건이란 발언시간은 단 5분이며, 민간단체의 명의로, 현재 토론되고 있는 의제항목에 대해서만 발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호르타 씨는 자신의 조국인 동티모르는 의제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큰 문제를 갖고 있지 않다고 연설을 거부하였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민간단체들은 과거의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이 인권위에서 연설을 해왔던 점을 상기하며 격분하였다.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태평양 그룹과 이슬람 회의 기구(OIC)와 같은 연대세력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반대를 했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이런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한편 호르타 씨를 위해 열린 환영식에서, 호르타 씨는 자신에게 연설기회가 주어졌더라면 인권위원회에서 발언했을 연설문을 낭독했다. 그는 연설문에서 새로운 독립 정부에 대한 계획을 강조했고 자신과 동료들은 식민세력에 대한 승리를 확신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저항투쟁은 보다 민주적인 정부의 탄생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한에 대해서도 몇 차례 언급하였다.

A 규약 선택의정서 제출

이번주 토론 주제는 의제 5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실현의 문제'와 의제 6 '발견권의 실현'에 관한 것이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조약」에 대한 선택의정서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에 의해 제출되었다.

토의된 또다른 주제는 의제 13 '인종주의와 인종차별과의 투쟁'이었다. 이밖에 '인권활동가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선언문 초안'에 관한 작업집단이 토론을 벌였다. 이 선언문 초안 작업을 위해 12년간 모임을 가져왔는데, 민간단체들은 작업 결의안의 작성과정에 신속을 기할 것을 작업집단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준비할 예정이다. [제네바=지은경]

원진 환자, 치료받을 곳이 없다 일반병원, 환자기피...매년 70명 환자 발생 예상

원진 직업병 환자들이 전문병원의 설립을 요구하는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다.

우선, 환자들이 찾아가야 할 병원이 없다. 고려대병원, 경희의료원, 기독교병원, 사당의원 등 원진 환자들이 찾는 병원은 10여 군데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한군데도 이들을 전문적으로, 안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곳은 없는 실정이다.

현재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32명 가운데 입원치료중인 사람은 6명뿐인데, 이는 병원측이 "병실이 없거나 진료수입과 병실회전율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원진 환자들의 입원을 기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치성(40) 씨는 "병원에 가면 검진만 하고 나서 퇴원을 종용한다. 발병 이후 병원을 네 군데나 들락거렸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들이 분산되어 치료를 받는 까닭에 원진 직업병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검진,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성수위원의 양길승 원장은 "일반 병원치료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으며, 재활대책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원진 직업병 전문병원이 아니면 이는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환자의 숫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점은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다. 현재까지 사망자 23명을 포함해 직업병 판정을 받은 사람은 6백66명에 달하지만, 10년 후엔 그 숫자가 2배 이상이 될 전망이다. 양길승 원장은 "매년 새롭게 검진 받는 사람 숫자와 직업병 판정율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간 7백50명 정도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도 가까운 장소에 전문병원이 설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자들의 90%는 구리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들은 "먼 거리의 병원까지 통원치료를 받으러 다니기 때문에 교통이 가장 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원진피해자 치료 사례>

· 87년 직업병 판정을 받은 김용운(51) 씨는 발병 당시만 해도 목발에 의지한 채로나마 활동이 가능했고 자기주장을 활발히 개진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2-3년 전부터 김 씨에겐 전신마비 증상과 언어장애가 나타났고 현재 김 씨는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다. 김 씨는 처음 고대부속병원 입원후, 기독교병원(89년), 사당의원(91년), 기독교병원(92년)을 전전하고 현재는 집에서 요양중이다.

· 박수일(56) 씨는 91년 직업병 판정을 받고 요양을 하던 중, 2년뒤 전신마비와 언어장애를 일으켜 고대부속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 됐다. 그러나, 병실 관계로 3회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했으며, 최근 병세가 너무 악화되어 고대 구로병원에 입원했으나 위독한 상황이다.

· 90년 직업병 판정을 받은 이정남(52) 씨는 병세가 호전되지 않고 병실에 장기입원했던 관계로 퇴원했다. 빈신 불구인 몸으로 한 달에 한 번 병원을 방문하지만, 약을 타오는 이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하다.

동티모르 시위대 7명 사망설

유엔특사, 동티모르 일정 마쳐

23일 동티모르 달리에서의 시위로 45명이 구금되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동티모르에서는 23일 인도네시아 군경의 발포로 7명이 사망했다는 미확인 보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하람 경찰서장은 "한 발의 경고사격과 최루탄이 발사되었을 뿐이며, 경고사격은 고무총탄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편, 잡히드 마커 유엔 특사는 3일간의 동티모르 일정을 마치고 24일 자카르타로 돌아갔으며, 30일까지 인도네시아에 머무를 예정이다. 3일동안 소아레즈 총독, 심볼론 동티모르 군사령관, 벨로 주교 등을 만난 마커 특사는 동티모르의 인권상황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와 동정

- 『맑스 엥겔스 저작 선집』 출판기념회
 - 때: 3월 28일(금) 오후 5시
 - 곳: 서울대 동창회관 관악홀 5층(참가비 1만5천원)
 - 주최: 박종철 출판사
- 시 한국지부 제25주년 기념식 및 언론인위원회 결성식
 - 때: 3월 28일(금) 오후 7시-9시30분
 - 곳: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 주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053-426-2533)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창립대회
 - 때: 3월 28일(금) 오후 2시-5시
 - 곳: 기독교연합회관 4층 중강당(708-4112)
 - 주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264-8649)
- 자동차연맹 위원장 이취임식 및 2기 출범식
 - 때: 3월 28일(금) 오후 4시
 - 곳: 농업기술진흥관(794-7270)
- 국보법 철폐와 사민청 구속자 전원석방을 위한 하루주점
 - 때: 3월 30일(일) · 곳: 메카호프(성대앞)
 - 주최: 사민청 비상대책위(928-2051)
- 제1회 인권학교 개설
 -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 · 「정의평화정보센터」는 3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숲장이 성지 어린이집에서 6회에 걸쳐 인권강좌를 마련했다. △28일-정치 기본권 실현의 현황과 과제(김형태 변호사) △4월 4일-지방 사회복지 정책과 시민의 권리(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 교수) △4월 11일-가정에서 여성이 누려야 할 권리(안혜성 여성민우회 가정과 성 상담소장) △4월 18일-노동인권의 현황과 과제(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장) △4월 25일-언론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시민의 권리(정동익 아침출판사 대표) 참가비 3만원. 문의: 0652-76-1253
- 여성민우회 여성학 강좌 <97 여성의 희망찾기>
 - 여성민우회는 오는 4월 7일부터 24일까지 종로성당 3층 강당에서 총 6회에 걸쳐 여성학 강좌를 갖는다. 매주 2회(월, 목) 오후 7시30분부터 2시간 동안이며, 참가비는 4만원. 강의내용은 △4월 7일-페미니즘 펼쳐보기(조혜정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10일-이야기 마당 "결혼아닌 삶" △14일-인간관계, 이렇게 풀자(우애영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강사) △17일-즐거운 성, 담당할 성(이명성 이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연구원) △21일-남성, 남성심리, 남성학(정유성 서강대 교수) △24일-미래 여성의 삶의 전략(최영희 내일신문사 대표) 문의: 277-7883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15-9185 · 팩스) 02-715-9186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interpia.net/~rights

1997년 3월 28일(금)

제 85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국민 53.3%, 노조 정치활동 찬성

<노동과 세계> ·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국민의 53.3%는 노조의 정치활동을 찬성하고(반대 35.4%) 있으며, 63.9%는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새로운 정당'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주간 <노동과 세계>(민주노동당 발행)가 한길리서치와 공동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 16일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7백9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자의 지지정당별 분포를 살펴보면, 신한국당 10.7%, 국민회의 19.7%, 자민련 8.7%, 민주당 6.5%, 지지정당 없음이 54.4% 등이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65.7%는 노동법 개정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으며, '해고의 불안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느끼는 사람도 84.3%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73.2%는 노동법 개정에 노동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했다.

민주노동당의 총파업 전술과 관련해, 조사대상 28.5%는 '파업을 지속했어야 했다'고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60.9%는 '민주노동당이 적절한 시점에서 총파업을 마무리했다'고 평했다.

최근 경제위기에 대해서 재벌중심 경제구조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극복방

안으로는 '경쟁유착구조 청산'(22.4%)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14.5%), '고용안정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29.9%) 등의 응답이 나온 반면, '임금인상 자제 등 고용분담'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1%에 그쳤다.

한편 우리사회의 개혁주체에 대해 국민들은 노동·시민사회단체(49.7%)를 첫손에, 학자 등 지식인(18.5%)을 그 다음으로 꼽았다. 반면 기존정당과 행정부를 개혁주체로 꼽은 사람은 각각 6.9%, 6.8%에 그쳐, 국민 다수가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가를 대선과 관련한 노조의 활동방향에 대해, 37.1%는 '여야를 떠나 개혁적 정당과 정책연합'을 지지했으며, '선거불개입'(26.9%), '야당과 연합해 정권교체'(15.8%), '재야 시민단체와 연합해 독자후보 출마'(7.5%) 순으로 나타났다.

시한국지부, 언론인위원회 결성

"표현의 자유·인권신장" 결의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가 25주년을 맞아 오늘 저녁 기념식과 함께 언론인위원회를 결성한다. 한국지부는 또 중국의 인권운동가 해리 우 씨를 초청, 오전 10시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오늘 결성되는 언론인위원회에는 남영진 한국기자협회장 등 37명의 언론인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발기문을 통해 "세계의 언론인들과 연대하여 표현의 자유와 인권신장을 위한 국제적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불교인권위 서래 스님 연행

국보법 위반인 듯

불교인권위 간사였던 서래 스님이 26일 오전 7시경 강화도 마니산 인근 찻집에서 수사관 10여 명에게 연행되었으나 27일 오후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서래 스님의 연행 사유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찻집 주인은 "수사관들이 지난 16, 24일 두 차례에 걸쳐 탐문을 해갔으며, 찻집과 스님이 머물던 숙소를 수색하였다고 말했다.

노수석 씨 1주기 추모행사

96년 3월 29일 대선자금 공개와 교육재정 확보 시위도중 사망한 노수석 씨 1주기 추모제가 28일 낮 12시 연세대 민주광장에서 열린다. · 일정: 28일 종로 노제 및 추모의 밤(자복 8시, 연대 노란극장) 29일 오후 2시 종로집회, 망월동 참배

세계의 인권 <12> 경찰폭력

무자비한 경찰에 울부짖는 어머니

"내 아들은 등에 경찰이 쓴 총을 맞아 죽었어요. 경찰은 처음에 내 아들이 가슴을 맞았다고 했지요. 내 아들의 사진을 포함해서 이런 일로 지방검사가 관계자를 기소한 일은 없어요. 나는 내에 대한 관심을 바라는 게 아니라 경찰들 그들이 저지른 살인죄에 대해 기소되는 걸 원해요. 뉴욕에서는 지난 3년간 내 아들처럼 남미 출신 젊은이들이 경찰에게 당한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그래서, 경찰폭력에 대항하는 부모회가 만들어졌어요. 부모 모임에 나갈 때마다 고통이 되살아나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하지만 나는 내 아들을 위해 싸우고 있고, 내가 느끼는 걸 다른 부모들도 느끼고 있지요" (1995년 뉴욕, Milta Calderon)

"나는 18살입니다. 내 학교 친구 하나가 집으로 가다가 경찰에게 잡혔어요. 경찰은 그애가 어떤 학생조직의 대표였다고 했어요. 내 친구는 심하게 맞았고 그래서 경찰이 주장한대로 인정하고 말았지요. 그 다음엔 학교로 경찰들이 와서 학생조직의 조직원들을 찾았다고 했어요. 나와 아주 가까운 친구 한 명이 두려워서 몸을 떨었다는 이유로 끌려나갔고 경찰은 그 애를 때렸어요. 너무 심하게 맞아서 그 애는 더이상 축구를 할 수가 없어요 (1989년 남아프리카, William Tshabalala)."

"나는 경찰이 기소되는 걸 원해요"

"국제 엠네스티는 96년 8월에 있는 시위에서 학생들에게 치근거리고 학생들을 구타했다며 대한민국 경찰을 비난했다. 경찰은 여학생들의 가슴과 신체에 다른 부분을 쥐어 잡았고, 성적 모욕이 되는 고향을 질러댔다. 대한민국 경찰의 대변인은 '자체조사를 실시했으나 성희롱의 증거가 필만한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며, 친박성향을 가진 한총련의 말을 왜 언론이 믿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다.' (서울, UPI통신)

시민이 경찰을 불러 세워야 한다... 경찰폭력은 되풀이해서는 안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위와같이 세계 곳곳에서 경찰의 폭력을 고발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유색인종, 술취한 사람, 매춘부, 도둑, 행상인, 거리 아동, 또는 시위참가자 등이 곤봉과 최루액, 때론 총으로 무장한 경찰관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 경찰은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구실을 만들어 합리화시키고 있고,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라는 이름으로 시위전술을 해석하려든다.

당신도 경찰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

police(경찰)라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그리스어의 polis(도시)와 politeria(거주자의 안전과 복지에 관한 포괄적인 용어)에서 생긴 것이다. 이런 용어에서 출발하여 발전된 경찰력(police power)의 개념은 그 사회 성원의 건강과 안전, 도덕 및 일반적인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힘으로서 정의되었다. 인류사회 초기에는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경찰이 존재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신체를 가진 남성 모두가 비상사태나 범죄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공동의 책임을 졌다. 이러한 공동체 중심의 경찰력은 지배당국으로 옮겨갔고 경찰은 국가의 권위를 대표하게 되었다.

오늘날 경찰제복을 입은 사람의 모습은 분명 가장 눈에 띄고 도처에 퍼져있는 국가의 상징일 것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국가의 대리인이 바로 경찰이다. 그들은 우

리에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거나 못하게 금지한다. 때론 길을 가로막고 검문을 한다. 경찰은 오늘날 현대 국가의 권위를 상징일 뿐만 아니라 "법" 그 자체의 구체화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막강'한 경찰은 조금만 계도를 벗어나도 시민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최고의 가해자일 수 있다. 그래서 경찰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인권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경찰, 그들에게 인권을 가르치자

여기에 우리가 기준 삼아야 할 것이 있다. 1979년 유엔총회결의로 채택된 '법집행공무원 행위규약'은 그 양머리에 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경찰은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언제나 법을 따르고 사회에 봉사하며 모든 사람을 보호하여야 하고, 이러한 임무가 요구하는 높은 책임성으로 일관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집행공무원에는 법에 따라 임명되거나 선출된 공무원으로 경찰력의 행사자, 특히 체포와 구금을 행하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경찰력이 군 당국이나 국가정보기구에 의해 행사되는 국가에서는 그들도 역시 법집행공무원에 포함된다. 임무수행에 있어서 법집행공무원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며 모든 사람의 인권을 유지하고 지지해야만 한다." "무력의 사용은 엄격한 필요에 의해서만 되어야 한다. 무력사용은 예외적인 것이어야만 한다(3조)." "어떠한 교분행위나 여타의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처우 또는 처벌을 행하거나 선동하거나 복인해서는 안된다. 전쟁의 위협, 국가 안보의 위협, 국내의 정치적 불안정, 여타의 비상사태 상황에서도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다(5조)."

이제 시민이 경찰을 불러 세워야 한다. 경찰폭력은 끝내야만 하고 되풀이해서는 안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15-9185 ·팩스) 02-715-9186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interpia.net/~rights

1997년 3월 29일(토)

제 85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교육청, 짜맞추기 감사 의혹 경기여상 사태 4주째 지속

경기여상 사태에 대한 교육청의 특별 감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학교 교사들은 "교육청이 학교측에서 제공한 정보만을 가지고 사건을 짜 맞추려 한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도영 교사는 "장학사들이 '학생들을 선동하지 않았느냐' '왜 교장에 불복하고 항의했느냐'며 학교측이 제공한 정보를 확인하는데만 열을 올렸다"고 밝혔다. 반면, "재단과 학교 비리 등에 대해선 아무 것도 묻지 않았다"고 밝혔다. 학생들도 "학생회의 꼬투리를 잡기 위한 조사인 것 같았다"며 "감사 결과는 편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경기여상 사태에 대한 교육청의 특별 감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학교 교사들은 "교육청이 학교측에서 제공한 정보만을 가지고 사건을 짜 맞추려 한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도영 교사는 "장학사들이 '학생들을 선동하지 않았느냐' '왜 교장에 불복하고 항의했느냐'며 학교측이 제공한 정보를 확인하는데만 열을 올렸다"고 밝혔다. 반면, "재단과 학교 비리 등에 대해선 아무 것도 묻지 않았다"고 밝혔다. 학생들도 "학생회의 꼬투리를 잡기 위한 조사인 것 같았다"며 "감사 결과는 편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경기여상 학생회 간부 14명은 학교와 재단측의 무대책에 항의해 28일

오전 8시 30분부터 교내 운동장에 드러누워 시위를 벌이다 3시간만에 전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탈진 증상 등을 일으킨 학생들은 인근 명지병원, 적십자병원 응급실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일부 학생은 곧 퇴원했다.

'남한 인권' 외면한 인권운동가 해리 우

"노 코멘트" "노 코멘트" 해리 우 씨는 언거푸 고개를 내저었다. 28일 오전 취재기자들로 상황을 이룬 세실레스토랑에서는 세계적 인권운동가로 알려진 해리 우(중국인, 85년 미국 시민권 획득) 씨에게 질문이 쏟아졌다. "이스라엘의 인권침해에 대해선 침묵하고, 중국인권 문제에만 목청을 높이는 미국의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내 강연을 중단하라고 한국정부로부터 압력을 받았는데 사실입니까" "남한 내에도 정치범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남한 인권현실에 대한 의견을 말해주세요"

날카로운 지적과 교견을 기대했지만, 일류 인권운동가는 답변을 회피했다. 중국과 관련된 질문을 제외하고 해리 우 씨의 친절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북한 인권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북한은 최악의 인권유린이 벌어지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세계에 폭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유엔인권센터

http://www.unhchr.ch

인권을 보호하고 옹호하기 위한 유엔 활동에 관한 정보가 실려 있는 유엔인권센터의 웹사이트를 소개한다. 이 웹사이트는 지난 96년 세계인권선언 48주년을 맞아 개설되었다.

·Treaty Body Database Homepage : 조약 비준국과 당사국의 정부보고서에 관한 정보가 있다. 앞으로 조약에 근거한 기구에 관련된 광범위한 문서, 조약 비준국에 대한 결론적 의견, 일반논평, 권고 등이 실릴 예정이다.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 국제인권조약, 선언, 원칙에 관한 전문이 모두 있다. Other Human Rights Documents 에는 95, 96년 공식적으로 유엔에서 발표한 인권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와 결의안의 목록을 찾아볼 수 있으며, 곧 94년도 자료도 이용할 수 있다.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ferences and Meeting : 96년 세계주거회의등 유엔에서 개최한 인권에 관련된 주요회의에 관한 자료들이 있다.

·General Information : 유엔에 관한 가장 최근 소식을 볼 수 있다. 유엔의 보도자료, 최근 출판물, 총회에서 채택된 특별한 주제, 국제해(International Year)에 관한 정보, 인권센터와 고등판무관실의 인터넷 프로그램, 특별보고관의 임무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What's news? : HCHR NEWS와 인권센터, 고등판무관실의 가장 최근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출처 : HCHR NEWS Vol.1 No.9 [인권정보자료실 제공]

민생파탄 부정부패 폭력진압
천정권 규탄 범국민대회
29일 낮12시 종묘공원
1부 노수석 열사 추모제
2부 범국민대회
주최: 전국연합·민주노총

<인권하루소식> 97년 3월분 총목차(834-853호)

호	월일	면	기사 제목
834	3/4	1	'잡수함 사건' 의혹제기 또 구속, 범민련 서상권 씨 국보법 7조 위반 혐의/시민·사회단체 특별검사 제 촉구집회/ 주요공판안내
		2	'빛나는 전망' 3명 연행, 국보법 위반/전국연합, 안기부 기밀유출 규탄·안기부법 제논의 촉구/범대 위 자료집 판매/주간인권호름(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3	<인권시평> "아직도 인권타령이나?" 김동한(법과 인권연구소장, 광주여대 교수)
835	3/5	1	교사탄압 본격수순 돌입...교육청, 학교마다 자술서 요구, 전교조 가입경위 조사/경찰폭력 반대의 날, 15개국 40여 단체 참가/미세스코리아 선발대회, 주부 1천명 강력항의
		2	2월 총목차(816-833호)
836	3/6	1	경찰 학원 난입, 방지할 것인가?...학생은 무대응, 학교는 수사방관/ 장기수 김인서 씨 북한팔 서신, 민족화해 차원의 송환 당부
		2	<세계의 인권 11> 기아 "굶주린 어머니와 배고픈 아이"
		3	<자료요약> 안기부법 개악철폐와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미국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그레고리 노짐 변호사)/ FBI의 부당한 정치사찰 및 CIA의 부당한 해외개입증거를 위한 투쟁(키드 게이저)
837	3/7	1	한국타이어, 노동기본권 실종, '노조위원장 직선제 요구' 단식농성/ <서독 정보기> 너무도 흡사한 폐해 이야기
		2	<자료요약> 안기부법 개악철폐와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헌법보호청" 독일 국내정보기 관의 폐해와 통제의 문제점(돌프 괴스너 변호사)
838	3/8	1	사회각계, 헌법재판소 위헌평결 촉구 "날치기 위험, 애들도 알아요"/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첫 학술회의
		2	YS 임기말기...노 정권과 흡사, 민가협 정기총회서 날치기법 철폐결의/ <표> 김영삼 정권 출범이후 구속된 양심수 현황/AI 한국지부, 세계여성들의 날 성명/ 노점상 종묘집회, "민병일 씨 사건 수사 지지 부진"
839	3/11	1	새 노동법, 노조 발육기 성공...교원·공무원 단결권 유보, 파업권 현저히 제한/ <표> 날치기 개정 이전과 여야 단일안 및 국제기준 비교/ 고려대 직원, 프락치 의혹 ... 수위실에 학생회 관련자료 보관
		2	경찰폭행으로 사망한 이종호 씨 유족, 손해배상 소송 제기/ 정보통신 검찰철폐 시민연대, 통신법 개정운동 벌여/ 주요공판안내/ 주간인권호름(3월 3일부터 9일까지)
		3	<인권시평> 이렇게 멋있는 안기부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840	3/12	1	현재 공개변론서, 신한국당 의원들 강변 "날치기 정당했다"/ 법학교수, 현재 판단 촉구 "현재 판단 유보, 제2의 날치기 방조행위"/ 민주노총 제1회 정의평화상 수상
		2	<자료요약> 안기부법 개악철폐와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국가 속의 국가" 구 동독의 슈타지 체제: 해체와 규명(돌프 괴스너 변호사)
841	3/13	1	광기와 이성의 대결 '안기부법 국회 공청회' "간첩잡는데 무슨 인권?" 북아일랜드 '여성과 전쟁' 세미나, 위안부등 전쟁시 성폭력문제 다뤄
		2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⑥- 세진인쇄소 사장 강은식 씨 "믿음으로 찍어낸 역사"
842	3/14	1	안기부법 토론회 및 안기부 피해자 기자회견 "안기부 수사권 박탈하자"/ 문민시대 안기부 인권유린의 대표적 사례들 "이웃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2	인권영화 ① 돌로레스 클레이번 "여성이 갖는 두 가지 빛깔의 분노" (김경실,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영화부)/ 전국연합 순회인권교육, 개정형사소송법등 인권강의
		3	<기고> 주한미군에 의한 평택 에버다 농아원생 성폭행 사건 (정유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인권하루소식> 97년 3월분 총목차(834-853호)

호	월일	면	기사 제목
843	3/15	1	직업병 피해자 4백여 명 대규모 농성 "끝나지 않은 교통, 원진레이온/ 전국연합 이 대표에 공개 서한 "날치기법 소신 밝혀라"/427개 통신동호회 "안기부법 반대"/<한권의 책> 『국제인권법』 (창간호)
		2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박연철 변호사)
		3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안기부 권력남용의 현황과 그에 대한 민주적 투쟁의 경과와 전망 (곽노현 교수)
844	3/18	1	53차 유엔인권위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국제 심판대에 오르는 날치기법/ 유엔인권위 주요의제/ 원진피해자 93명 연행 "원진 전문병원 설립" 촉구 시위/ 주요공판안내
		2	제네바 소식 ① 3.10-14 /주간인권호름(3월 10일부터 16일까지)
		3	<인권시평> 김구 선생의 열원과 한국사회의 오늘 (곽노현, 방송대 법학 교수)
845	3/19	1	AI, 사형집행 중단 및 사형제도 공개 논의 촉구 "페스카마호 사형수에게 선처를"/ 시민청 회원 9명 연행, 94년에도 '이적단체' 혐의 처벌/ 장기수 권양섭 씨 운명, 20일 발인
		2	<3회 연재> 페스카마호 살인범 전재천 씨가 밝히는 선상폭력의 실상 ① "사형은 너무 가혹합니다"
846	3/20	1	민병일 씨 가족, 민·형사 소송 제기...부검소견 "강한 외력에 의한 손상일 듯"/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안기부 바로세우기 힘쓸 것"/방희선 판사 탈락 부당, 참여연대 성명/ 시민청 14명 연행·구속, 3년만에 같은 혐의로 재구속
		2	페스카마호 살인범 전재천 씨가 밝히는 선상폭력의 실상 ② "도끼와 칼이 난무하는 선상"
847	3/21	1	이동약자 편의증진법 98년 4월 시행, 장애인 등의 '완전참여와 통합' 위한 출발/ '114 유료화 뭐가 좋아졌나' 참여연대 행정심판 청구/ 조선대생 시위도중 사망!!- 병원측, "아직 드러난 외상 없어"
		2	<국제인권뉴스> 과테말라 거리 아동의 외침! 거리아동 고문살해혐의 소송 3백건 이상
848	3/22	1	경기여성 12일째 수업거부...학생·교사, 재단비리 척결 요구/시민대책위,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의견서 내무부에 발송/ 광주 류재을 씨 대책위 결성 "류 씨, 시커먼 물체에 맞았다"
		2	페스카마호 살인범 전재천 씨가 밝히는 선상폭력의 실상 ③ - 선장의 하선 결정과 살인극
849	3/25	1	기무사, 민간인 수사하며 전향 감요...대전교도소측, 정화려 씨 고발장 전달 거부/ 인도네시아 정부, 동티모르 시위대에 발표, 2명 사망 38명 부상 48명 체포/주요공판안내
		2	단한 교문을 여는 경기여성 학생들 "1백미터 달리기 원없이 해보고 싶어요"/주간인권호름(3월 17일부터 23일까지)
		3	<인권시평> 언론과 인권 (김동한 법과 인권연구소장, 광주여대 교수)
850	3/26	1	경기여성측, 학생·교사 고발/류 재을군 대책위 기자회견 "사인 규명·경찰청장 해임" 촉구/ 단기 학생동맹조직 사건, 전주대생 4명 구속
		2	<기고> 페스카마호 선원들의 사형을 반대하며(오완호, AI 한국지부 사무국장)/ 인권영화② "시간은 오래 지속된다"
851	3/27	1	27개 사회단체 공동대책위 구성 "원진 전문병원 설립" 촉구/ 정화려 씨 고소장 접수/ 참여연대, 시민의 작은 권리찾기 운동본부 출범/ 제네바 소식 ② 3.17-21 "유엔에서 거절당한 노벨평화상 수상자"
		2	원진환자, 치료받을 곳이 없다...원진피해자 치료 사례/ 동티모르 시위대 7명 사망설
852	3/28	1	<노동과 세계>·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국민 53.3% 노조정치활동 찬성/AI 한국지부, 언론인위원회 결성/ 불교인권위 서래스님 연행
		2	<세계의 인권 12> 경찰폭력 "무자비한 경찰에 울부짖는 어머니"
853	3/29	1	경기여성 사태 4주째, 교육청 짜맞추기 감사 의혹/ '남한 인권' 외면한 인권운동가 해리우/ 유엔인권위 웹사이트
		2,3	3월호 총목차(834-853호)

인권하루소식

97년 4월

(제875호 - 제894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15-9185 ·팩스) 02-715-9186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interpia.net/~rights

1997년 4월 1일(화)

제 85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정신보건법 환자인권 대폭 고려

강제입원시 전문의 진단 필요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과 관련된 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3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타인과 자신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를 강제입원시킬 경우,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통하도록 했다.

정신보건법에 따라 환자가 입원하게 되는 경우는 △본인이 입원을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 △시·도지사의 의뢰에 의한 경우 △급박한 상황에서 의 응급입원 등이다.

특히 시·도지사의 의뢰에 의해 입원이 이뤄지기 위해선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하며, 보호자 동의에 의한 입원도 전문의의 동의를 거쳐야만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급박하게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발견했을 때도 경찰관 뿐 아니라 전문의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이 법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시행되는 정신보건법은 환자의 강제입원을 제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초 정부측이 내놓은 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강제입원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 정신의학계 등의 반발로

환자의 인권보호적 요소가 대폭 가미된 것으로 전한다. 김병후 연희신경정신과 원장은 "행정력만으로 가능했던 강제입원이 이제는 전문의의 진단을 거치도록 되었다"며 이는 "서구의 관련법과 큰 차이가 없으며, 환자의 인권을 많이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배기영 동교신경정신과 원장은 "정신질환자의 입원 기간을 최장 6개월로 제한한 것도 환자의 인권을 고려한 조항이며, 응급입원 시간을 72시간으로 제한한 것도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에 관한 입법화는 5공 시절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환자의 인권침해 시비로 제정이 미뤄져 왔다. 특히 행정력의 직권으로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게 한 정부 법안은 '반체제인사를 정신병자로 몰아붙일 소지

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정신의학계의 강한 반발을 받아왔다. 5공 시절 추진된 법안은 구 소련의 법률을 모방한 것이었으며, 소련은 관련 법으로 인해 국제 정신의학계에서 제명까지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여성 합본호 발간 87-97년 한국여성운동사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지은희·한명희)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의 하나로 87년부터 95년까지 발행되었던 기관지 <민주여성>을 합본호로 발간했다.

합본호 『민주여성』에는 여연의 운동방향, 활동뿐 아니라 시기마다 주요했던 여성권 관련 입법화 활동과 정책대안들이 실려있다. 가격 3만원

문의: 273-9535

기사제보 · 구독신청 715-9186

주요 공판 안내

- ▶ 4월1일(화) 이훈(특수공무집행방해등) 오전10시 11단독 526호 선고 이홍재의 8(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 오전10시 11단독 526호 선고 조성우(국보법,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정책위원장) 오전10시 3부 303호 속행
- ▶ 4월2일(수) 임미정(국보법) 오전10시 1단독 519호 속행
- ▶ 4월3일(목) 이수영(국보법 간첩등)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박종대(국보법 간첩등)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강성모의 2(국보법 찬양·교무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7호 선고 최창규(국보법 찬양·교무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선고 이재권(일반교통방해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선고 신승우(국보법등) 오전10시 5단독, 519호 선고 이남영(국보법) 오전10시 7단독 523호 선고
- ▶ 4월4일(금) 박응모(진관스님, 국보법 간첩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속행 서형준(국보법등) 오후4시 4단독 524호 속행 이교관의 1(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시사저널 기자) 오전10시 10단독, 525호 속행 -서울지법 형사국

민주열사 고 민병일 민중장

오전 8시 입관(아주대병원 영안실) → 오전 10시~12시 영결식(수원역-남문 거리행진) → 오후 1시30분~2시 노제(신갈오거리) → 하관(마석 묘단 공원 열사묘역)
◎ 오후2시 서울 종묘집회(장래추경)

주/간/인/권/호/름

(97년 3월24일부터 30일까지)

◆ 24일(월)

'(피의자) 심문시간 시차제' 도입해 수시로 구속전 영장실질 심사 실시키로/전남경찰청 발표, 22일 오후 전남대 후문 앞 길에서 대학생 시위를 진압하던 전남경찰청 기동대 의경들이 2개의 진압봉을 군화끈으로 연결해 휘둘러 발췌/교육개혁위원회 '유아교육 공교육 체제 확립을 위한 개혁방안' 발표/독일 연립정부의 기민·기사연합 외국인노동자의 취업제한을 추진 하고 있다고 독일언론 밝혀

◆ 25일(화)

국무회의서 의결한 노동법 시행령이 초안보다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돼있어 노동계 반발/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장정삼 부장판사) 조영민 씨등 80년 삼청교육대 피해자 및 가족등 8백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청구소송에서 대법원 확정판 결 인용해 시효소멸되었다며 원고패소 판결/서울지법 특수2부(안대희 부장검사) 인터넷에 음란물 게시관을 만들거나 자 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음란물을 올린 혐의로 정석재 씨등 6명 구속, 한아무개 씨등 4명 불구속/노동법·안기부법 개악 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회원 20여 명 헌법재 판소 앞에서 위헌 판결 촉구집회/정부, 중국출신의 세계적 인권운동가 해리 우 씨 방한과 관련해 "중국비난 편 강제출국 시키겠다"고 통보/동티모르 청년 31명 동티모르 문제로 파견 된 유엔특사와의 면담 요구하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오스 트리아 대사관 경내 침입/유엔개발계획, 세계환경문제를 중 합적으로 조정·관리할세계환경기구의 설립 필요 제기

◆ 26일(수)

<아사히신문>, 김현철 씨가 남북정상회담과 쌀지원을 추진 하는 밀사로 활동한 사실 밝혀/5개 도시 시내버스 노사 임금 협상 둘러싸고 12시간 파업/삼미종합특수강 인수과정에서 대 규모 해고 사태 우려/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 발대 식/해직언론인협의회 80년 언론인 강제해직 및 언론사 통폐 합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피소된 권정달 당시 보안사 정보처 장등 6명 서울고검에 항고/교육개혁위, '과의 검소 및 사교육 비 경감 방안 공청회' 열고 과외대책 연구안 제출/OECD 고 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 정례회의서 한국 재개정 노동법 논의

◆ 27일(목)

종교계·시민단체 대표들, 북한동포에게 옥수수 1만톤 보내 기 범국민운동 추진/민주노총 제5차 임시대의원대회 열고 경 제체제 개혁, 산별노조건설, 노조의 정치세력화, 노동법 독 소소조항 불복종 등 투쟁을 골자로 하는 97년도 사업계획안 확 정/대전·충남지역 12개 대학 총학생회가 한총련 탈퇴 및 가 입거부를 선언한 기자회견에 안기부가 관여했다는 의혹제기

◆ 28일(금)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창립대회

◆ 30일(일)

통계청 발표, 2월 실업률 3.2%로 3년만에 최고치. 실업자 수 66만2천명/정부, 공업계 교교의 산업체 현장 교육인 '2+1 체제'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산재보험 혜택 주기로/전교조 7 대 위원장에 김귀식 교사 당선

유엔 특사에 6개항 요구서 전달

동티모르 독립요구 33명 전원 연행

지난 3월 25일 동티모르 학생 33명이 마커 유엔 동티모르 특사 면담을 요구하며 인도네시아 오스트리아 대사관에 들어 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들은 다음날 학생대표 3명을 파견해 자카르타 유엔 사무 소에서 마커 씨를 만나 면담을 가졌다. 90분간 계속된 면담 에서 학생들은 인도네시아가 23일 시위에서 총을 난사하는 등 잔혹한 진압 계속되는 집단 학살과 공포정치를 규탄했다. 또 이들은 △동티모르 저항단체들의 유엔 동티모르 평화회담 참여 보장 △수감 중인 동티모르 독립운동 지도자 자나나 쿠 스마오를 비롯한 모든 정치범 석방 △그간 채택된 동티모르 관련 유엔 결의를 모두 시행할 것 등 6개항이 담긴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이 대사관에 들어간 사실이 알려지자 26일 동티모르인 이라고 주장한 40여 명이 대사관 앞에서 "학생들을 추방하라" 며 시위를 벌이고 대사관 진입을 시도했다. "통합이 좋아요" 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운 이 시위는 헤라클레스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친인도네시아계열 동티모르인이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일부에서는 이번 대사관앞 시위가 인도네시아 정 부의 사주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이 강하게 제기 되고 있다.

에초 명령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이들은 지난 27일 오전 신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대사 관을 나왔으며 예상대로 경찰에 연행되었다. 며칠동안 이들은 지켜본 오스트리아 대사 한스 데넬 씨는 "학생들의 시위는 매우 평화적이고 인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동티모르 학생들이 독립을 요구하며 대사관을 찾아 온 것은 28번째로 일상적인 사건이다"라 전했다. <외신종합>

전국연합 논평 "대북식량지원 허용 환영"

전국연합(상임대표 이창복)은 3월 31일일 정부가 민간의 대 북식량지원을 허용한 데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전국연 합은 "정부의 허용방침이 황장엽 망명문제나 4자회담문제와 같은 정치외교논리에 의해 우왕좌왕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차원의 조건없는 대북 쌀지원도 조속히 실현되길 희망했다.

국제엠네스티 인턴 모집

엠네스티 국제사무국은 제네바 및 뉴욕 사무소에서 법·국 제조직 프로그램과 관련해 자원봉사할 인턴을 모집한다. 뉴욕 사무소는 7월 중순부터, 제네바 사무소는 9월부터 최 소 6개월간이며, 제네바 사무소에서 일할 지원자는 프랑스어 에 능통해야 한다. AI 인턴과정은 종일업무 형태이며, 무보수. 뉴욕 활동지원서는 4월 11일까지, 제네바 및 런던본부 활동 지원서는 5월 30일까지 접수마감. 문의 (44) (171) 413 5737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은 누구인가?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인권
사평

우리 사회에서 '현대판 노예선' 문제 즉 선상폭력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던 것은 91년 국회 국정감사 때였다. 나는 그 당시 선상폭력문제와 관련하여 세상에 나온만한 보고와 논의는 거의 다 나 은 것으로 기억한다.

90년부터 불과 1년 반 사이에 해상 사 고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5백명을 넘 었으며, 그 대부분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는 보고가 있었고, 선상폭력을 고 소해도 선장이 구속되거나 처벌을 받는 일은 극히 드물다는 보고도 있었다. 어 업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없으며, 일단 원양 어선을 타면 하선할 자유도 없다고 했다. '보합제'라는, 선 주와 선장 사이의 성과 분배방식 의 존재가 선장으로 하여금 생산 고를 높이기 위한 폭력적인 노동 착취의 길을 치닫게 하는 근본적 인 원인이라는 사실도 국회에서 지적되었다.

22일자). 그것을 읽어 내려가는 나의 마음을 '착잡' 그 자체였다.

하루에 작업 21시간, 흐리멍텅해진 정 신에 매일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몽둥 이, 쇠파이프가 쏟아졌다. 조선족은 갖 은 인간적 모멸 속에서 두 달 동안 견 디다 못해, 끝내 조선족 5명은 하선을 결의하지만 선장은 끈게 하선 시켜주지 않는다. 그들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술을 마셨다. "술이 들어가니 가슴에 쌓 였던 원한이 눈물이 되고 눈물이 악이 되었"으며 마지막 버랑가에서 조선족 선 원들은 죽음을 생각했다. 죽는 마당에 너 죽고 나 죽자'로 막가는 것은 정해 진 이치였는지도 모른다.

페스카마호 사건 해결은 인간성 회복 위한 첫걸음

1년6개월 새 사망·실종 5백명 그만큼 사회문제화가 되었으면 웬만큼 정신도 차렸겠거니, 어업근로자들의 처 지가 약간은 개선되었겠거니 하는 것이 비단 나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상식 이었을 것이다. 사실 한동안 선상폭력 소식은 뜸했다.

그런데 이번 페스카마호 사건은 '노예 선' 항해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음을 증 명하고 있다. 변한 것이 있다면 그 살 인적인 노동조건 때문에 한국인이 꺼려 하는 '노예'의 자리에 (한국의 국제경쟁 력을 높이기 위하여) 찢어지게 가난한 인도네시아인이나 조선족이 들어와 있 었다는 사실 정도이다. 선상폭력 소식 이 한국 국내에서 뜸할 수밖에 없는 이 유가 있었던 것이다.

페스카마호 '노예선' 사건 최근 <인권하루소식>은 3회에 걸쳐 페 스카마호 사건 피고인의 한사람인 전재 천 씨의 탄원서를 연재했다(3월 19, 20,

부산지방법원은 작년 말 페스카마호사건 피고인 6명 전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스 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였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 당시에 큰 충격을 받은 우 리 한국사회는 '6명 전원 사형'이라는 판 결에는 전혀 충격을 받지 않았다. "조선 족에게 '은정' 을 베푼다는 시민운동도 이런 결과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지금 한창 진행중인 항소 심 공판에 관심을 두는 사람도 없다.

죽은 선장을 비롯한 피해자들과 그 가 족들에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도 나는 참으로 우리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91년 국정 감사의 결과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단지 고통의 전가(轉嫁)에 지나지 않았 던 것이다. 목숨을 잃을 때까지 정신을 못차리는 것은 분명 미련한 것이다. 그 러나 11개라는 목숨을 잃고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 실은 차라리 처참하기까지 하다.

상품의 '보편적'인 유통을, 따라서 가 치의 '보편'화를 지향한다는 자본주의경 제체제는 동시에 최대이윤을 실현하기 위한 임금의 증충적 차별구조를, 따라 서 항상 차별과 멸시를 받고 저임금으 로 일하는 소수그룹을 필요로 하는 정 신본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 고 '맨 밑바닥'에 대한, '밑바닥'을 겨우 면한 자들의 추잡하게 비열해진 우울감 은 언제나 이 구조의 '모세혈관 부위'에 서 이 구조를 떠받치고 있다. 원양 어선 사관들의, "거러지 같은" 외국놈에 대한 비열해진 우울감은 자본의 최대이윤 생 산에 분명히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최대이윤이 가져온 차별구조 부산지방법원은 그 판결문에서 경쟁을 배제하는 중국의 사회주의체제에 익숙해진 피고인들이 조업을 독려하는 한국인 선원들의 폭력을 인간적 모멸로 받아들 였다고 했다.

나는 묻고 싶다. 그럼 인간적 모멸이 아니었다는 말인가? 생산을 올리기 위한 '독려'로써 쓰여질 때 폭력은 인간 모멸 이 아니게 된다 말인가?

조선족 선원들은 한번도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 중의 어느 한사 람도 "인간이기를 포기"했다는 따위 저 열한 표현으로 남을 평가할 권리를 가 지고 있지 않다. 페스카마호 선장과 사 관들, 그리고 함부러 사형을 입에 올림 으으로써 부산지방법원 판사가 조선족 선 원들에게 "인간이기를 포기"하도록 강요 한 일은 있어도 조선족 선원들이 스 스로 포기한 일은 없었다는 말이다. 정작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은 이 비열해진 무한경쟁의 체제에 길들여져 인간모멸 을 인간모멸로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 리자신에 다름이 아니다.

페스카마호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사 형을 지지하는 일이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첫걸음이 될 수 가 있을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15-9185 · 팩스) 02-715-9186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interpia.net/~rights

1997년 4월 2일(수)

제 85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경찰, 민병일 씨 장례 행렬 저지

사건 발생 두달째 검찰 수사 진척없어

경찰의 폭행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 민병일 씨의 장례식이 1일 치뤄졌다. 그러나, 경찰은 "노제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10시간 동안 운구행렬을 가로막음으로써 유족들의 가슴에 또 한 번 못질을 했다. 유족들은 운구행렬이 가로막히자 그 자리에서 오열했으며 일부는 실신하기도 했다.

민병일 비상대책위원회와 유족들은 민 씨 사망 46일만인 1일 「민주열사 고 민병일 민중장」으로 민 씨의 장례를 치루기로 하고, 이날 오전 9시 수원 아주대병원 영안실에서 발인을 마쳤다. 이어 민 씨의 운구는 오전 10시 수원역 광장 영결식을 거쳐, 오후 1시 30분 신갈오거리에서 노제를 지낸뒤, 장자인 마석모란공원으로 떠날 예정이었다.

당초 경찰은 노제를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1일 아침 갑자기 노제를 봉쇄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주대학교 앞 도로에서 전경차 10여 대와 무장한 수백 명의 전투경찰을 동원해 민 씨의 운구행렬을 가로막았으며, 수원역 광장에도 전투경찰을 배치해 영결식 준비를 봉쇄했다.

운구행렬이 가로막히자 민병일 비상대책위 소속 회원들과 대학생 2백여 명은 아주대학교로 모여 항의집회를 가졌으며, 경찰이 봉쇄를 푼 저녁 7시경 신갈오거리로 이동해 노제를 가진 뒤, 마석모란공원에 민 씨를 안장했다.

이날 장례를 치룬 민병일 씨는 지난 2월 2일 파출소에 노점 집기를 찾으러 갔다가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진 후, 13일 만에 숨졌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은 "민 씨가 뒤로 넘어져 두개골이 깨졌다"고 주장한

반면, 유족측은 "경찰의 폭행에 의한 두개골 골절"이라며 관련 경찰의 처벌을 촉구해 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두개골 골절이 외부 가격에 의해 일어났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부검결과 민 씨의 뒷머리에서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앞머리에 18.5cm나 되는 골절 및 이마와 정수리 부근에 4, 5개 정도의 멍(피하출혈)이 발견되어 유족측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현재 사건발생 두달이 지났으나 검찰 수사에 별다른 진전은 없으며, 가해 용의자인 채규근 상경과 백용운 경장은 용인경찰서에서 대기발령중이다.

서래스님 안기부 구금

회합·통신, 기밀누설 혐의 등

26일 연행된 서래(본명 김태운, 불교 인권위 간사) 스님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등으로 현재 내곡동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민병일 씨 사건 일지>

- 2월 2일- 경기도 용인시 신갈파출소에 찾아가다가 쓰러져 뇌사에 빠진 경찰 "뒤로 넘어져 머리가 깨졌다"고 주장
- 2월 5일- 유족, 수원지방법원에 증거보전신청서 제출
- 2월 15일- 사망
- 2월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실시
- 2월 19일- 「민병일 씨 사인 진상조사위원회」 기자회견, "앞머리 부분에 강한 충격 확인"
- 3월 11일- 국과수 부검 결과 발표, "사인은 두부의상으로 밝혀졌으나, 외부 가격에 의한 손상여부에 대해선 판단 유보"
- 3월 22일- 유족, 국가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및 가해자를 검찰에 고소
- 4월 1일- 장례

31일 서래스님을 접견한 도재형 변호사(덕수합동)에 의하면, 서래스님은 작년 독일 북한대사관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국보법상 제4조 1항(기밀 누설) 4항(회합·통신) 등 위반 혐의와 한총련 연세대 사건관련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 북한돕기 직접 나서야

민변, 창구단일화 폐지 요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1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민간 북 쌀지원 허용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단순히 민간차원의 지원을 허용하는데 그치지 말고 정부 스스로 북한돕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북한주민이 1년동안 필요로하는 식량 부족분은 4천억원어치인데, 시간을 끌면 북한주민들 중 상당수가 굶어죽을 수 있다"며 "정부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만이 북한 주민을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단체의 북한돕기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대한적십자사의 창구단일화를 포기하고 민간단체의 자유로운 북한 지원을 허용해야 함을 지적했다.

성폭력 고소권, 국민기본권으로

31일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 토론회

지난 3월 29일 서울지검 형사4부(이종왕 부장검사)는 한총련 여학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학생 7명과 여성·인권단체가 낸 고소·고발장을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성추행을 할 상황이 아니었고, 고소인측이 경찰관을 특정하지 못하는 등 혐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한 여성·인권단체들은 검찰의 무혐의처리에 불복해 항소 및 항고를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3일(목) 낮 12시 검찰청 앞에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대책위」와 여성·인권단체가 항의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한총련 여학생 성추행 사건 공방은 험사리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한 장의 사진이 진실을 밝힌다

지난해 8월 연세대 사태때 진압검찰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학생들의 증언이 었따랐고, 관련된 7명의 학생들이 박일용 경찰청장 등을 고소했지만, 최근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경찰의 폭행 장면이나 성추행 장면을 촬영한 분의 제보바랍니다. 제보: 715-9185

성추행 피해자 검찰청 항의집회

이같은 상황에서 31일 서울대 박물관 대강당에서는 연세대 여성자치연합, 서울산업대 총여학생회, 한양대 여성위원회 등 9개 대학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대책위'(대책위) 주최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한총련 여학생 성추행사건은 결코 '한 물간 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으며, 박대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씨는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근절 방안으로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집요한 노력 △경찰에 대한 인권교육 △사법당국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유린을 처벌할 수 있도록 감시·항의

하는 운동 등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적 감시·항의운동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무혐의 처리된 한총련 여대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이종걸 변호사의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의 법적 대책마련"부분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 변호사는 우선 "고발장에서는 직접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연행책임자의 구체적인 성명을 알지 못해 최고책임자인 박일용 경찰청장을 고발했으나, 공소장에는 공소유지를 위해 인명의 일시 장소가 특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기관은 직접행위자에 대해 그 일시에 연행업무를 담당했던 경찰 전체를 소환하는 등 조사를 벌여 행위자를 특정해야 하며, 이때 경찰이 모두 부인하면 피해여학생 등과의 대질신문을 벌이도록 하고, 이 부분에서 여학생들이 피해 행위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주장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둘째, '지휘명령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이 변호사는 지적했다. 지휘명령은 원 상급자로부터 서류에 의해 사전에 이뤄지는 경우와 현장에서 실시책임자로부터 구두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는데 두 부분 모두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피해 여학생들이 자신의 진술을 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주변 참고인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통

해 그 장소에 있었던 모든 여학생들이 똑같은 양태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납득이 가도록 입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개별 가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곳에 있었던 모든 경찰관의 공범관계가 입증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달아 끌려 내려가던 모든 학생들이 각 장소에서 경찰들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친고죄 규정 문제있다

이밖에도 이 변호사는 성폭력특별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폭력특별법은 제11조 제2항에서만 공공기관에 의한 성폭력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마땅히 국가는 피해 여성이 편안하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호소할 수 있도록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형사상 고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이 변호사는 주장했다. 국가가 피해자 의사와 관계 없이 범죄행위를 처벌하여 가해자들에게 일반예방의 기능을 가지게 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그 조사에 피해자가 편안하게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법령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집단적이고 다수에 의한 다수의 성폭력에 대해서 성폭력특별법 제11조가 이를 친고죄로 규정하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이 변호사는 지적했다. 그는 "친고죄라는 제한형식으로 국가가 처벌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성폭력 범죄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비난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형사절차에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대리인제도가 절실히 요구되며, △피해자가 법정 출석을 꺼리는 경우 수사단계에서 진술한 조서만으로 증거로 인정해야 하고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최소한 피해자 조사절차는 여성경찰로 전담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이텔 포커스 (FOCUS) <핫 & 쿨>, 인권하루소식 게재

· 하이텔 '큰마을'에서 화제를 일으킨 글만을 올려온 <핫 & 쿨>이 인권하루소식이 매일 게재하고 있다.

찾아가는 길 → 하이텔에서 어느 곳에서나 go focus를 입력하고 2. 핫 & 쿨을 선택한 후, 7번 우리시대 인권상황판 <인권하루소식> 을 고르면 된다.

· 인권에 대해 온라인 토론을 원한다면 <사람사는 세상을 위하여>란 공간에서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

찾아가는 길 → 하이텔에서 어느 곳에서나 go focus를 입력하고 2. 핫 & 쿨을 선택한 후, 11. 사람사는 세상을 위하여를 골라 의견을 올리면 됩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15-9185 ·팩스) 02-715-9186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interpia.net/~rights

1997년 4월 3일(목)

제 86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경기여상측 “사법처리가 능사”

교사 · 학생 · 학부모 고소고발 당해

20여일 간 파행을 겪고 있는 경기여상 사태와 관련, 학교측이 학생회 간부들을 사법처리하고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김정남 경기여상 교장은 “어른이든 학생이든 학교 파행의 책임을 져야한다”며 “학생들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가 나오면, 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교장은 “교사들도 응당 사법처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민계(21) 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어 2일 경찰의 출두 요청을 받았다. 학생들의 명예훼손 혐의는 지난달 20일 여의도 신한국당사 앞에서 재단 설립자 김일윤 의원(신한국당)을 비난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주동자 색출에만 혈안

그러나, 조사를 받은 교사와 학생 모두 “경찰이 ‘주동자와 배후인물 색출’에만 수사의 초점을 맞추는 것 같다”고 밝힌 경찰과 재단 간의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김정남 교장과 재단측은 사태 발생 이후 줄곧 “교사가 학생들의 수업거부를 선동했다”며 주동자의 색출을 주장해 왔다.

특히 학생 및 학부모·교사 등을 무더기 고소·고발한 사람은 설립자 김 씨와 김 교장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김일윤 씨는 최근 사태와 관련해 “본인은 학교운영과 무관하다”며

사태에 개입하지 않을 뜻을 밝혀왔다. 한 교사는 현 사태에 대해 “교육자가 학생을 교발하는 작태가 부끄럽기만 하다”며 개탄했다.

한편, 사법처리로 일관하려는 재단과 학교측의 태도와 별도로, 대다수 학생들이 2일까지도 등교를 하지 않는 등 경기여상 사태는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 지난 1일부터 정상수업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지만 2일 수업에 참가한 학생은 전교생 2천4백여 명 가운데, 4백여 명 선에 그쳤다.

장기수 진태윤씨 운명 26년 복역 88년 출소

장기수 진태윤(78) 씨가 2일 새벽 1시 40분 전주 영동병원에서 폐혈증으로 운명했다.

진 씨는 20년 함남에서 태어났으며, 62년 3월 5명과 함께 남파되어 63년 4월 9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 판결을 받고 26년간 복역했다. 88년 12월 말 전주교도소에서 출소 후 줄곧 전주 완주군 구이면에서 생활해 왔다. 슬하에 자녀로는 북한에 자녀 진양만 씨가 살아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발인은 4일(금) 오전 10시, 장지는 완주군 소양면 원암수암관.
전주 영동병원 영안실 0652-87-1009

한 장의 사진이 진실을 밝힌다

지난해 8월 연세대 사태 때 진양경찰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학생들의 증언이 잇따랐고, 관련된 7명의 학생들이 박일용 검찰청장 등을 고소했지만, 최근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경찰의 폭행 장면이나 성추행 장면을 촬영한 분의 제보 바랍니다.
(제보: 715-9185 박래군 사무국장)

<경기여상 사건 일지>

- 2월 18일 신철군 교감 임명, 교사들 공개 반발
- 3월 3일 교사 10명, 재단이사장·서무과장을 비리 혐의로 검찰 고발
- 3월 7일 난방시설 미비에 항의해 학생들 집단 하교
- 3월 10일 학생들, 낙후된 환경과 신 교감 임명에 반발하며 수업 거부 돌입
- 3월 11-20일 교육청 특별감사
- 3월 19일 학부모 40여 명 교육청 항의방문
- 3월 20일 학생들, 여의도까지 행진 후 국민회의 당사 방문
- 3월 24일 학교측, 휴업령 공고
- 3월 25일 학교측, 교사 5명을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 3월 28일 학생회 간부 14명 교내 운동장에서 3시간 동안 연의농성
- 3월 31일 학교측, 학부모 3명 명예훼손 및 폭행혐의로 고소
- 4월 1일 재단설립자 김일윤, 학생회장 등 학생 2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4월 2일 정상등교한 학생들 다시 수업거부

제네바소식 ③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구금자의 권리와 고문에 관한 논쟁 계속”

유엔인권위원회는 구금자의 상황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기로 하고, 볼리비아의 발언과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Abid Hussain) 씨의 보고를 청취하였다.

볼리비아 사법행정 관련법 제정 감옥수용인구 30% 감소

○... 볼리비아의 법무장관(Rene Blattmann)은 사법행정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법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그와 관련한 볼리비아내 진전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보고에 따르면, 법 개정으로 감옥 수용인구가 30% 감소되었다. 유감스럽게도 볼리비아는 법 개정 이전에는 남미에서 구금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였고, 구금자 중 91%가 미결수였다. 94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법앞에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 시작되었다. 여기서 초점은 범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빈곤과 싸우는 것이었다. 의회는 부채를 이유로 한 투옥과 체벌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구금자의 11%가 형량을 마쳤음에도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금된 상태로 남아있는 형편이었는데, 법 개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석방되었다.

아울러 연소자와 고령자에 대한 사면을 위한 법이 통과되었으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들은 석방되었다. 구금자 중 많은 사람이 재판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볼리비아 역시 남미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유죄확정을 받기 전에 장기간 구금이 지속되었다. 이밖에도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안에 인권과를 설립하는 것을 포함하여 시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실제적인 많은 조치를 취했으며, 노예상태의 선주민들이 살아가는 농촌지역에 인권사무소를 개소하였다고 밝혔다.

많은 나라에서 국보법 남용 언론인 27명 살해, 185명 투옥

○...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목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거짓되거나 불충분한 이유를 근거로 폭력과 국가보안법을 남용해왔다고 보고하면서, 그 예로 언론인 보호위원회의 연례보고서를 들었다.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96년 말 24개국에서 1백85명의 언론인이 투옥되었고, 27명의 언론인이 살해당했다. 특별보고관은 또한 종교적 신념을 구실로 검열을 벌이고 있는 문제와 관습, 전통, 종교로 인해 여성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너무 자주 억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고문방지 위한 입법, 사법, 행정 조치 강화해야

○... 고문피해자를 위한 유엔자원기금의 대표자는 96년 54개국의 92개 인권단체가 제출한 96개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이보다 40%가 늘어난 1백38개 프로젝트가 제출되었다고 밝히면서, 각국이 제공해야 할 기금액이 현재의 두 배로 증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문과 여타 잔인하고 비인간적 이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처우 또는 처벌, 그리고 강제되거나 비자발적인 실종에 관련된 각국의 발언이 있었다. 이집트, 아르헨티나, 에쿠아도르, 중국, 앙골라 정부등이 발언권을 행사하였고, 국제언론인연맹, 세계평화를 위

한 세계교육연맹, 국제펜 등 민간단체의 발언이 잇따랐다.

칠레는 고문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형사적 조치의 대응물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이는 형사적 조치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면서 특별보고관의 업무를 지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고문방지조약의 선택의정서에 관한 실무그룹 구성을 제안했다. 에쿠아도르 정부 또한 국제사회가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국가의 구금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를 만들 것을 희망했다.

중국정부는 고문이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으며, 이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엄청난 침해라고 하였다. 고문방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든 나라는 효과적인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소수의 실무그룹과 특별보고관들이 그들의 수임사항에서 벗어나 그들의 보고서를 증상과 모략, 왜곡된 주장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사법적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격이라는 것이다. 또한 고문방지조약에 대한 선택의정서는 유엔헌장에 명시된 목적과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하며, 특히 당사국의 주권에 대한 존중과 국내문제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다 중국정부는 어느 나라에 대한 방문이든 지 방문이 있기 전에 관련 국가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3월 27일자 유엔인권센터 보도자료 중, 번역=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행사와 동정

- 공권력에 의한 여학생성추행 무혐의 처리 규탄대회
 - 때: 4월 3일(목) 오후 12시 30분/· 곳: 서울지검 정문 1백미터 앞 삼성CC플라자
- 전국 구속 수배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지원대책위원회
 - 때: 4월 7일(월) 오후 7시/· 곳: 향린교회 2층 흥근수대표 사무실(776-9141)
- ‘인혁당 사건’ 이수병 선생 22주기 추모제
 - 때: 4월 8일(화) 오후 2시/· 곳: 경희대학교 수원교정 공대 앞 통일광장
- ‘원진의원’ 개원식
 - 때: 4월 8일(화) 오후 2시/· 곳: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377-15 한성빌딩 4층
 - 주최: 원진노동자 직업위원회(034-556-6145)
- 전국유동노조협의회 및 전국출판노조협의회 사무실 이전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151-2번지 현리빌딩 2층
 - 전화: 유노협-733-6054, 출판노협 730-2648/· 팩스: 유노협/ 출판노협-730-2649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15-9185 ·팩스) 715-9186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4월 4일(금)

제 86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에바다 농아원생 농성 129일째

이사진 교체 통한 학교 정상화 요구

에바다복지회 비리재단 퇴진과 정상화를 촉구하는 청각장애인들의 농성이 3일로 1백28일을 넘어섰다. 지난해 11월 27일 농아원생 60여 명이 원장퇴진과 처우 개선을 주장하며 시작한 농성은 에바다농아원 최실자 원장의 구속과 에바다복지관 최성창 이사장(에바다학교 교장 겸임)의 해임을 가져왔지만, 개화한지 한 달이 넘은 지금도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철 철야 농성 석달째

지하철 교대역 부근 센추리오피스텔 지하에 위치한 한국농아복지회 강당에서 농성중인 학생들이 4월이 되도록 학교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는 있다.

지난 3월말 최성창 이사장이 교장직과 이사장직에서 해임되었지만 친인척으로 구성된 이사진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그가 다시 복귀할 우려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성단은 "7명으로 구성된 이사진을 전격 교체하고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이사진을 새로이 구성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적 이사진이 구성된 후에야 에바다의 정상화는 비로소 첫발을 내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무인가 신화원생과 졸업생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일명 '구사대'가 학교에 상주하고 있어 마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평택시와 결탁한 토착비리 에바다복지관의 관리감독 기관인 평택

4월5일자는 휴일관계로 쉽니다

시가 당초부터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데 혈안이 되어 근본적인 해결을 외면하고 나선 것도 사태해결이 늦어지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농성에 합류한 교사와 학부모들은 "평택시 정승우 부시장과 이형복 사회과장이 에바다측과 결탁되어 있다"고 주장했으며, 권오일(37·체육교사) 씨는 "이번 사건은 토착비리"라며, "최성창 리스트가 밝혀지면 비리사실이 쏟아져 나올 것이 자명한데, 아마도 평택시청측이 최 이사장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학부모·학생·교사 한마음

성추행 무혐의 처리 규탄

여성·인권단체, 검찰청 앞 시위

3일 낮 12시 30분 서초동 검찰청 앞 도로에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연합인권위 등 여성·인권단체가 주최한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시위는 연세대 사태 당시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 고소·고발건을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리하자 이를 규탄하기 위한 것이었다.

"경찰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2천2백만 여성의 사기를 무시해도 된단 말인가"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에 이어 경찰폭력방지법도 제정해야 한다" 참석자들의 목소리는 강하게 이어졌다.

고소·고발건의 무혐의 처리에 대해 검찰(이종왕 부장검사)은 당시 정황이 "공개된 장소에서 경찰이 성추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한총련 여학생 성추행 사건을 올바르게 밝혀 책임자들을 처벌함으로써,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성폭력이 반드시 처벌된다는 전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근절 대책의 수립 △경찰 성교육의 실시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보상 실시 △임무수행중인 경찰의 실명제 도입을 촉구했다.

1백30일 가까이 농성이 장기화됨에도 불구하고 농성자들의 대열은 흐트러짐이 없다. 교사들 20명중 11명이 동참했고, 에바다학교 학생 60명중 43명이 농성중이며, 학부모측은 단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농성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현재 에바다와 관련된 재판은 두 가지로 진행 중이다. 사기 및 업무상횡령혐의로 기소된 최실자 원장에 대한 5차 공판이 11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리며, 미 제7공군 소속 윌리엄스 야크 에스(33) 일병의 농아원생 성폭행 사건 재판이 9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윌리엄스 일병은 지난해 6월부터 에바다 농아원생 3명을 부대로 데려가 삼상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물의를 빚어 불구속 기소되었다.

한편 농성자들은 4월 5일 오후 2시 수원역 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인권하루소식 3월14일자 참조>

'유럽노조' 건설을 위한 첫발

영국GMB, 독일 IG Chemie 조합원자격 공동인정

자본진영의 국제적단결에 대응하는 노동진영의 국제적 단결은 가능할 것인가? 그 해답의 단초를 보여주는 사건이 지난 달 유럽에서 일어났다.

지난달 3일 영국의 최대 노동조합인 GMB총노조와 독일측의 IG Chemie(화학노련)가 조합원자격 공동인정 협정(joint membership agreement)에 서명함으로써 유럽의 초대형 노동조합의 창설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영국의 인터넷 잡지 <The Daily Telegraph>는 보도했다.

이에 따라, 양국의 1천8백만 이상의 노동자들이 국외에서 노동할 때 상호 조합원자격을 보장받게 되었으며, 현재 수혜 대상은 12만명에 달한다고 이 잡지는 밝혔다. 협정과 관련해 IG Chemie의 슈물트 위원은 "우리의 목표는 모든 노동자가 교섭 협약시 최소의 기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럽 수준에서 공동 조합원자격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정을 통해, 독일에서 일하는 GMB 조합원은 IG Chemie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될 것이며, 대의원들로부터 법적 자문과 지원 및 훈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영국에서 일하는 독일 노동자들도 법적인 자문, 보건 및 안전 정보와 국민보험 급여상의 재정보조를 얻게 된다고 이 잡지는 밝혔다.

GMB는 1백여 개의 군소 노동조합과 약 80만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벨기에 브뤼셀에 최초로 사무소를 개설한 영국 노조이다. GMB는 수년동안 IG Chemie와 비공식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이밖에도 다른 노조들과의 추가적 협정에 관해서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민학살 관련 자료 공개하라"

과거청산국민위, 4·3 제주항쟁 진상규명 촉구

4·3 제주항쟁 49주년을 맞아 「5·18완전해결과 정의실현, 희망을 위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삼일공동대표 강신석 등)는 성명을 내고, "각종 양민학살과 관련된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우측 게재>

과거청산국민위는 "4·3항쟁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에는 시효가 없어야 한다"며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하루소식 합본 7호 발간

96년 하반기(7-12월) 인권하루소식을 묶은 합본7호가 나왔습니다. 350쪽에 달하는 합본7호에는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으로 처벌은 96년 하반기 인권상황 정리글과 함께 연대 사태를 인권유린의 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한 글이 실렸습니다. 가격은 1만원(우송료 별도)

성명서

<4·3항쟁 49주년을 맞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촉구하며>

48년 4월 3일 남한만의 단독선거로 권력을 장악하려 했던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에 의해 자행된 학살에 맞선 항쟁이 이제 49주년이 되었다. 반세기의 세월이 지난건만 아직도 이른바 4·3폭동, 4·3사태, 4·3사건 등으로 불리우며, 그 진상에 대해 입 밖에 내는 것조차 금기로 여겨지는 부분이 많이 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맺힌 가슴을 부여안고 숨죽여 살아온 희생자들의 원통함을 풀어야 할 때가 왔다. 제주도 의회가 희생자에 대한 신고를 받은 이래 신고된 것만해도 1만5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아직까지도 희생자의 전모가 공식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3만명 이상의 민간인이 무고하게 학살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1백여 증산간마을이 불타고 3만여 채의 주택이 파괴되는 등 제주도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이른바 '토벌대'의 무차별 학살로 갓난아이는 물론 부녀자와 노인까지도 처참하게 희생당해 당시 제주도 전체 인구에서 일곱 명 중 한명꼴에 이르는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다.

이 항쟁은 그간 친일파와 손잡고 남한 단독선거를 강행한 이승만과 분단을 강요한 미군정의 역사 왜곡으로 그 진상이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역사의 진실을 영원히 감출 수는 없다. 그 잔인했던 4·3양민학살의 '법적근거'로 내세워졌던 계엄령이 이승만 정권의 불법행위였음이 최근 정부 기록에서 밝혀졌다.

이승만 정권은 미군정의 협조아래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에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계엄을 선포하였다. 이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불법행위이자, 정권 장악을 위해 국민을 학살한 반인륜적 범죄이다. <중략>

정부는 4·3을 비롯한 각종 양민학살에 관한 각종 자료들을 즉각 공개하고, 국회차원의 진상조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차원의 진상조사 작업을 통해 4·3과 관련한 군, 경 및 정부가 소장하고 있는 각종 기록문서와 미국의 비밀문서의 공개를 요구하고, 국정교과서의 올바른 기술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법률적 조치로 '4·3특별법'을 제정하여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공식적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4·3항쟁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시효가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독일이나 프랑스를 비롯한 나라에서 나치 잔당과 그 부역자들의 죄상에 대해 시효를 인정치 않고 있음은 좋은 예가 된다. 시효없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여야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다.

우리는 4·3항쟁을 비롯한 각종 양민학살 사건들이 결코 옛이야기가 아님을 강조한다. 진상이 은폐, 왜곡되어 있고, 그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아직도 폭도, 빨갱이의 불명예스런 누명이 씌어져 있으며, 청산되지 못한 역사가 오늘의 부정부패까지 이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5·18완전해결과 정의실현, 희망을 위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15-9185 · 팩스) 02-715-9186 · 통신 ID: rights(천.하) · E-mail: 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4월 8일(화)

제 85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안기부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자백”

진관스님 4차 공판서 강병연 씨 주장

96년 10월 1일 국가보안법(회합통신 등) 위반 혐의로 안기부에 의해 구속된 진관 스님(속명 박용모)의 1심 4차공판이 지난 4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311호 법정에서 속개되었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강병연(캐나다 동포, 국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받고 복역중) 씨는 “안기부와 검찰이 주장한 진관 스님의 혐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그 동안 허위 자백을 하게 된 것은 안기부에서의 가혹행위에 따른 공포와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증언해 관심을 끌었다.

강 씨는 변호인 신문에서 “지난 91년 진관 스님을 알게 되었고, 이후 교향선후배 사이로 가깝게 지내게 되어 캐나다에 있는 동안 한번 관광이나 시켜 줄려고 초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씨는 95년 북경에서 북한 인사를 만난 사실과 관련해 “당시 북한이 나진 선봉지구를 개방하려 하는 등 남북관계가 호전되어 북한에서 무역업을 해보려는 욕심을 갖게 되었다. 남한에서 인권운동과 불교운동을 하던 진관 스님을 북한 조선 불교도연맹 박태호 선사에게 소개시켜 호의를 사면 사업에 도움이 될까 해서 데리고 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강 씨는 “민약 진관 스님에게 북한 인사를 만나러가자고 하면 이를 거절할까봐 아무말도 하지 않고 북경까지 데리고 갔으며, 북경의 북한 대사관 앞에 도착하자 진관 스님이 속은 것을 알고 당황하면서 화를 냈다”고 증언했다.

20일 동안 화장실 1번 다녀와
한편 강 씨는 변호인이 “왜 안기부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안기부에서 조사받는 20일 동안 단 한번밖에 화장실을 가지 못할 만큼 감압적인 수사를 받았고, 계속적인 진술서 쓰기와 질문에 치져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는 멍한 상태였다”며 “안기부 요원이 써 준 것을 읽지도 않은 채 무인을 찍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로 기소되어 넘어갈 때 안기부 요원이 만약 검찰에 가서 진술을 반복하면 다시 안기부로 돌아와 한 달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해 그 두려움 때문에 검찰에서도 조서를 읽지 않고 무인을 찍었다”고 진술했다. 진관

스님의 다음 공판은 4월 18일 10시 서울형사지법 311호 법정.

경기여상 파행수업 지속 학생측, “정상화 대책없어 등교 거부”

파행 29일제를 맞는 7일 경기여상에서는 여전히 정상수업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출석한 학생은 반별로 10명에서 30명선에 그쳤으며, 등교한 학생들도 대부분 일찍 하교했다.

학생회의 한 간부는 “학교와 재단측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라 아이들이 수업에 참가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지난달 10일부터 ‘비리관련 교사들의 보직 사임’과 ‘관선이사 파견’ 등을 주장하며, 수업을 거부해 왔다.

한편, 지난 2일 교육청은 “재단에서 3억 2백여 만원의 공금을 유용했다”고 발표하면서, 15일까지 유용액의 회수와 관련자의 징계를 재단측에 지시했으며, 이때까지 조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임시이사의 파견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공판 안내

- ▶ 4월8일(화) 이연석(국보법) 오후2시 9단독 317호 신건 하영준(국보법 찬양·교무등) 오전10시 합의6부 424호 신건 최일재의 3(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 오후2시 8단독 522호 속행 민영우(국보법) 오전10시 11단독 526호 선고 김유대(군사기밀보호법위반) 오전11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 ▶ 4월9일(수) 이승환(국보법등,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오후2시 2부 302호 속행 양규현(제3차 개입금지등) 오전11시 4단독 524호 속행 양한웅(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 오후2시 11단독 526호 속행 양정희의 6(국보법 찬양·교무등)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 ▶ 4월11일(금) 유민희(국보법등) 오전10시 12단독 523호 선고 현석호(국보법 찬양·교무등) 오전10시 합의6부 425호 속행 김명덕(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 오전 11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이승구(국보법)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서울지법 형사4

“전·노 사면론 불가”

민변·과거청산 국민위 등 주장

최근 신한국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전두환·노태우 씨 등의 사면설과 관련해, 사회일각에서 즉각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민중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과거청산국민위원회(상임공동대표 강신석 등) 등은 7일 각각 성명을 내고 “사면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대통령은 사면불가 방침을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면론이 5·6공 관련 인사를 중심으로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이는 두 전직 대통령의 충실한 하수인으로서 스스로 5·6공 청산의 대상임을 입증한 것”이며 “자신을 자신 스스로 사면한다는 주장과 다름없는 후안무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희생자들에게 대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지 않는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지는 주장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들 단체는 △5·6공하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와 피해자들에게 대한 명예회복 및 피해배상 △5·6공 핵심인물의 공식사퇴 △대법 판결 후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박탈 및 서훈 취소 등을 요구했다.

현재까지 전두환·노태우 씨의 사면을 제기한 여론 인사는 김윤환·이한동 고문 등 5·6공 핵심인사와 이희창 대표·박찬중·이수성 고문·이인제 경기도지사 등으로 알려졌다.

고 유학성씨 국립묘지 안장 유감

대전충남연합, 사면논의 중단 촉구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은 7일 고 유학성 5·18 내란 종사자의 대전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충남연합은 성명에서 “단지 형 확정전 무죄추정에 의한 법리에 의해 내란종사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우리의 현실 역사가 여전히 가해자가 대접받고 있다는 또 하나의 부끄러운 굴절의 작은 역사를 만들어 놓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반성하지 않는 전두환, 노태우 씨등 관련 피고인들의 형확정전 사면논의의 중단과 추상같은 대법원 판결을 촉구했다.

인권하루소식 합본 7호 발간

96년 하반기(7-12월) 인권하루소식을 묶은 합본7호가 나왔습니다. 350쪽에 달하는 합본7호에는 노동법·양기무법 개악으로 치달은 96년 하반기 인권상황 정리글과 함께 연대 사태를 인권유린의 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한 글이 실렸습니다. 가격은 1만원 (우송료 별도)

주/간/인/권/호/름

(97년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 3월31일(월)

정신보건법 개정안 시행/제주 4·3 항쟁당시 계엄령이 이승만정권에 의해 불법적으로 선포된 것으로 드러나/연근해 수산업계 발표, 24일 부산지역 6개 수산회사의 최종 부도처리로 선원 4백여명 동시 실직/개정고용보험법 시행령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서울대 약대 대학원생 정아무개 씨의 아버지가 선우중호 서울대 총장 앞으로 딸이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 제출/유엔 발표, 북한 1억 1천7백60만달러 긴급지원 계획

◆ 4월1일(화)

제주 4·3 제50주년 기념사업추진 범국민위원회 준비위 발족식/대한적십자사, 3일경 북한 수재민돕기 위해 10억원어치 제14차 구호물자 보낸다/발해/한국통신, 전체 장애인에 전 화요금 50% 감면 혜택 실시/경남대 환경보호학과 민병윤 교수팀 발표, 96년 마산만 오염도 분석한 결과 바지락에서 검출된 다이옥신이 미국, 이탈리아의 일일섭취허용기준량보다 3백10배 높아/제주 4·3 연구소, 국회내 4·3특위 구성과 특별법 제정 및 4·3 관련 문건 공개 요구/환경부, 3월 28일 람사협약 가입서를 파리 유네스코 사무국에 기탁해 98번째 가입국이 되었고, 7월 28일부터 협약발효/민변, 안기부와 공보처, 중앙선관위 등의 정보공개 청구 거부 등에 대해 행정소송 무더기로 제기/부산지검 특수부 이용 검사, 보훈대상자 선정을 미끼로 고엽제 후유증 앓고 있는 베트남 참전 용사들에게 금품 뜯어온 부산보훈병원 기획계장 조태호 씨와 총무과 직원 강효조 씨 구속/경찰의 폭행으로 사망한 노점상 민병일 씨 사망 46일만에 장례

◆ 4월2일(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등 북한돕기 1차 20억원 모금/백범 김구 선생 안살범인 안두희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기서 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5년 선고/4·3치유를 위한 범도민 추진위원회 준비위' 구성/장기수 진태윤 씨 사망

◆ 4월3일(목)

제주 4·3 희생자 제49주년 합동위령제/경찰, 5기 한총련 출범 앞두고 한총련 임시집행부 간부 16명 국보법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거 나서/서울시교육청, 화내분규 빛은 서울 경기여상 재단인 경흥학원에 대한 감사결과 3억2백만원 학교 공금을 재단이 유용한 사실 확인하고 회수지시/유학성 씨 십이지장암으로 사망/여성·인권단체등 연세대 사태 여학생 성추행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처리에 항의시위 벌여/일본정부, 5월14일로 사용기간이 끝나는 오키나와 미군기지 용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주둔군 용지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회제출

◆ 4월5일(토)

김윤환(신한국당) 씨, 두 전직대통령 사면 건의사실 밝혀

◆ 4월6일(일)

교육부, '특수학교 시설설비기준령 개정안' 마련/천주교서울대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주최 제3회 외국인노동자축제 열려

**원전의원 개원식 및
현판식**
 때: 4월 8일(화) 오후 2시
 곳: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377-15
 한성빌딩 4층(0346-556-6145~6)

인권
시평

토지와 인권

박 노 현 교수(방송대 법학)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선언이 아니라 '종권' 선언, 곧 종의 권리선언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하는 신부님을 알고 있다. 이유인즉 세계인권선언에 토지사용권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토지에 밭을 밟고 살아가게 되어있다. 그러나 토지가 없는 사람, 토지로부터 추방된 사람, 토지가 뺏어낸 사람에게 존엄과 자유가 들어설 자리란 애당초 없다. 살아생전 송곳 하나 꽃을 땅을 갖지 못한 채 남의 땅을 부처먹으며 힘겹게 살다가 죽어서는 물밀 땅 한뼘 없이 가마니에 돌돌 말려 내던져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인권선언은 아무 가치가 없는 휴지조각일 뿐이다. 사정이 좁

속화의 수단이 된다.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구별은 근본적으로 토지를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구별인 것이다. 나아가 가서 토지가치는 토지소유자의 노력보다는 사회 전체의 발전에 의해 덩달아 올라가는 것이 특징이다. 그럼에도 개발에 의한 토지가치 증대는 토지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통이다.

'부와 권력의 대물림'인 토지

샌프란시스코의 선지자로 불리던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토지의 이런 특성으로 말미암아 토지사용제도는 비효율적이고 사악한 제도라고 믿었

증대된다. 또한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아이디어가 있지만 하면 누구든지 지대를 지불하고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토지이용의 효율이 대폭 증대된다.

땅주인들이 국회를 지배하는 현상

헨리 조지의 이러한 주장은 볼스토이, 손문, 버나드 쇼 등 수많은 열광적 지지자를 낳았다. 헨리 조지의 생각이 약간이라도 제도화된 덴마크, 뉴질랜드, 홍콩, 대만 등의 나라는 예외없이 경제적 번영을 구가했다. 이제 귀가 솔깃해진 분들은 이런 생각을 우리나라에서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

토지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 인권의 하나로 규정되어야

나온 경우에도 세계인권선언은 사회복지의 이름으로 최소한의 생존만을 가능케 하는 사후약방문격 거짓 위토이기 쉽다. 그렇기에 토지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이 인권의 하나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법의 커다란 한계가 아닐 수 없다.

과연 토지는 사유의 대상인가

토지는 사유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한 많은 여러 특성을 갖는다. 토지는 우선 사람이 만든 인공물이 아니다. 이른바 확대재생산이 되지 않는 유일한 재화인 것이다. 그렇기에 성격은 토지는 하느님의 것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토지는 재화중 유일하게 닳지 않는 특성이 있다. 오히려 사람이 많이 다닐수록 토지의 가치는 올라간다. 토지의 닳아 없어지지 않는 성격 때문에 토지의 가치는 객관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 사용가치에 내구연한을 곱해 결정할 수 있는 일반재화와 달리 토지의 경우 내구연한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토지가격에는 반드시 투기적 요소가 있게 마련이다. 또한 토지의 닳지 않는 성격 때문에 토지는 부와 권력의 대물림과 영

다. 그는 기술발전으로 인한 물질적 풍요 가운데 극심한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근본이유를 토지사유 및 토지독점에 있다고 토지의 소득, 곧 지대(rent)를 모두 세금으로 걷어들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지금처럼 지대의 일부만을 조세로 걷는 것이 아니라 지대의 전부를 조세로 거둬들이면 잡음이나 충격없이 토지를 공유재산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제도 아래서도 토지소유권은 형식상 지금처럼 개인의 수중에 그대로 있게 된다. 아무도 토지소유권을 박탈당하지 않으며 토지소유규모에 대한 제한도 없다. 그러나 국가가 지대 전액을 조세로 걷기 때문에 누가 얼마만큼의 토지가 갖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토지는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이 되며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토지소유의 이익을 공유하게 된다. 이 제도 아래서는 국가의 조세수입이 넉넉해질 것이므로 다른 세금을 폐지하거나 낮출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은 그만큼

민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과정에서 우선 주목할 것은 공적자율법에 따른 재산공개 결과가 말해죽듯이 우리 사회의 경우 국회의원, 기타 고위 공직자들이 예외없이 엄청난 땅부자라는 사실이다. 입법과 정책을 쥐락펴락하는 사회지도급 인사들이 땅부자이기 때문에 입으로 아무리 토지투기와 불로소득을 근절하자고 외쳐대도 토지세율은 낮기만 하다. 그 결과 아직도 토지소유는 교통의 원천이긴커녕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지위의 보증수표로 통한다. 요즘 문제되는 고비용저효율경제의 주범도 사실은 높은 땅값이다. 땅값이 터무니없이 높기 때문에 소수의 땅주인만 이익을 보며 온갖 호사를 누릴 뿐 여타의 사회 구성원들은 높은 집값과 상업, 공장 임대료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 공비론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땅주인들이 국회를 지배하는 브르조이정치 현상을 타파하는 것으로 출발점을 삼아야 한다. 지난 연말의 항의총파업과 지난 3월 10일의 노동법개정의 실천적 의의는 바로 이를 위한 노동정치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데 있다는 생각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15-9185 ·팩스) 715-9186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4월 9일(수)

제 85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페스카마호 살인범 돕기운동 전개

중국동포의 집, 영치품·가족 입국 위해 모금 벌여

지난해 8월 페스카마호 선상반란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조선족 선원들을 위해 국내 민간단체에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8일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과 중국동포의 집(소장 김해성 목사)은 1실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전재천 씨 등 조선족 선원 6명에게 영치품을 보내고 그 가족들의 입국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의 전화:0342-756-2143-4)

현재 사형수들의 가족들은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한국방문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동포의 집은 "페스카마호 살인 사건이 비록 잔인하고 집단적인 살인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인간적 대우, 잦은 폭행, 상상을 초월하는 노역과 특히 중국돈 몇 만원 썩의 거액의 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의 대책없는 하선 명령 등이 빚어낸 총체적 사건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지난달 31일 임원회의를 통해 모금운동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까지의 모금액은 개인당 1만원 씩 50여 만원에 이른다고 중국동포의 집은 전했다.

한편, 중국 내 조선족 동포사회에서도 이들에 대한 구명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명운동을 위해 6일 입국한 조선족 변호사 조봉 씨는 "현재까지 2백만 명 이상의 조선족 동포들이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10만 명 이상이 석방탄원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피고인들의 특별 변호사로 선임되어 9일 재판에서 변론에 나서게 된다.

현재 부산지법에서는 이들에 대한 항

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9일 오후 4시 부산지법 103호에서 속개되는 공판에서는 구형이 내려질 예정이다.

박창희·김하기 씨 석방 촉구

국제앰네스티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3월 한국정부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중인 박창희(63·전 외국어대 교수) 씨와 소설가 김하기(38) 씨의 석방을 요청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앰네스티는 "이들에 대한 구속이 자의적 구금을 금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적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안기부의 감압에 의한 허위자백 여부를

한국정부가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창희 교수는 95년 국가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안기부에 구속되어 징역 3년 6월을 최종 선고받았으며, 김하기 씨는 96년 중국여행도중 북한을 다녀온 이유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전학련 회원 12명 연행

96년 이후 세번째 무더기 구속

전국학생정치연합(전학련) 회원 12명이 지난 4일 경찰과 기무사에 의해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 따르면, 이정석(한양대 대학원생) 씨 등 11명은 장안동 분실로, 이원재(외국어대 94학번) 씨는 기무사로 연행되었다고 한다.

이로써 전학련은 지난해 5월 13명, 11월에 3명이 구속된 데 이어 세 번째 대량 구속사태를 맞았다.

고문에 망가진 인생과 아무도 믿지 않은 진실

참여연대 사법제자리놓기 시민모임 보고 사례

참여연대 사법제자리놓기 시민모임은 창립 1주년을 맞아 7일 변호사회관에서 사법피해 사례 보고회와 사법피해자 추모제를 가졌다. 이날 발표된 사례 가운데 두 가지를 소개한다.

■ 김환(35) 씨는 15세 때 밥을 훔쳐 먹으려고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붙잡힌 뒤, 경찰의 고문에 의해 '개봉동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7년간 옥살이를 했다. 그는 유서에서 "수건을 얼굴에 덮은 뒤 생 고춧가루 물을 붓는가 하면, 방의 이곳저곳에 럭비볼을 던지듯 나를 동태이치면서 고문을 가했다"고 밝혔다. 출소 후 사회 적응을 못하던 그는 지난 2월 1일 수원에서 비판 자살했다.

■ "죄없이 10년 이상 옥살이를 한 것이 억울하다. 나는 결백하다"며 김덕배(35) 씨는 지난 2월 21일 자살했다. 그는 가정집에 들어가 현금 등을 빼앗은 혐의로 징역 5년에 보호감호 6년을 선고받고 청송보호감호소에서 복역했으며, 출소한 뒤 5개월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무죄를 주장하며 2년 6개월 동안 법정투쟁을 벌였으나 패소했고, 출소 후 청와대, 명동성당, 언론사에 결백을 주장하는 진정서를 보내는 등 애를 썼지만, 아무도 그의 진실을 믿어주지 않았다.

제네바소식 ④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연세대에서의 경찰폭력과 성희롱 비난

■ 고문과 여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처우 또는 처벌(의제항목 8)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Mr. Nigel Rodley)의 보고에선 특히 96년 8월 연세대에서 발생한 경찰폭력과 성희롱을 포함하여 남한의 고문 사용이 비난받았다.

한국정부는 법을 개정하고 고문 책임자를 처벌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고문방지위원회(고문방지조약을 비준한 국가의 진전사항을 모니터하는 기구, 한국정부는 95년에 동조약을 비준하였다)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는 특히 강한 것이었다. 위원회는 자백을 끌어내기 위한 잠안제우거나 여타의 고문방법 그리고 고문피해자가 공식적인 고소를 했을때만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수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위원회는 고문피해에 대한 배상이 단 한건밖에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배상 또는 보상을 위한 기존의 절차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하였다.

위원회는 고문범죄를 법적으로 정의하는 법을 입안하고, 구금센터와 교도소를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정부 기구를 만들것을 남한정부에 권고하였다. 미국대표는 "고문은 검정색의 행위이며 인권위원회의 모든 회원국이 지키기로 서약한 가치를 모욕하는 행위이다"라 말하며 고문의 사용을 비난하였다. 미국이 고문을 상용해온 정권을 지지하고 뒷받침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고문피해자를 위한 유엔 자원 기금(의제항목 8)

대한민국정부는 95년 1만불을 기부하는데 이어 96년에는 '고문피해자를 위한 유엔 자원 기금'으로 2만불을 기부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남한의 민간단체와 고문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이 남한에서 고문은 여전히 광범위한 현상이라

보고하였다는 점이다.

■ 위안부 문제(의제항목 9, 여성에 대한 폭력)

위안부 문제는 남북한 정부와 민간단체가 일치된 목소리를 낸 단일 이슈였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대표는 "일본 당국은 법적 책임과 배상을 계속 회피하려 하고 있다. 일본의 교활함과 뻔뻔스러움이 오늘날까지도 일본의 존재인식으로 남아있다"며 일본정부의 책임회피에 대해 매우 강하게 공격하였다. 남한 정부와 여타 민간단체도 "법적 책임을 받아들이고 보상을 실시하며 서면으로 공식 사과할 것"을 일본정부에 촉구하였다.

인권위, 한국정부에 고문방지법안 및 교도소 감시기구 구성 권고

97년 3월, 국제노동기구(ILO)는 일본 정부에 의해 자행된 군위안부를 포함한 강제노동은 ILO조약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라며 "그러한 용납할 수 없는 인권침해는 적절한 배상으로 귀결되어야 하며 그 배상은 오직 정부에 의한 것이야만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96년,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Ms. Radhika Coomaraswamy)은 보고서를 통해 "일본정부가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조사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 사형

4월 3일, 사형제도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이 결의안은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목적을 가지고 사형집행의 유예를 고려할 것을 회원국에 요청하고 있다. 또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의 제22항의 정서(사형제도 폐지를 다루고 있는 선택의정서로서 대한민국은 이를 비준하

지 않았다)에 대한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이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으나, 많은 나라의 압도적인 지지로 결의안은 성공적으로 통과되었다.

■ 이주노동자(의제항목 11)

이주노동자에 관한 토론에서 한국은 침묵을 지켰고, 한국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하지만, 인종차별에 관한 특별보고관(Maurice Glele Ahanhanzo)은 그의 보고서에서 이주자와 수용국간에 긴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그중에서도 한국은 이주자, 특히 여성이주자에 대한 처우 방식 때문에 보고서에 인용되었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한국이 1999년 안에 모든 '불법이주자'를 추방하겠다고 선언했다"는데 관심을 갖고 주목하였다. 특별보고관은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문제가 경종을 울리고 있으며 "날로 늘어가는 제한과 차별적 규제가 이동의 자유와 함께 거주하고 살아가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보고서를 결론지었다.

노동자의 대량 이주현상을 시장 자유화와 지구화의 결과로 본 많은 국가와 민간단체들은 이주자가 세계 인구 중에서 아주 취약한 부분을 차지하며 정부 경제 정책의 실패를 이주자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정치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희생양이라고 언급하였다. 【제네바=지은경】

인권하루소식 합본 7호 발간

96년 하반기(7-12월) 인권하루소식을 묶은 합본7호가 나왔습니다. 합본7호에는 노동법·안기부법 계약으로 치달은 96년 하반기 인권상황과 함께 연대 사태를 인권유린의 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한 글이 실렸습니다. 가격은 1만원(우송료 별도)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15-9185 ·팩스) 715-9186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4월 10일(목)

제 86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고려대 총학생회, "조선일보의 음해"

전총협 추진·한총련 회비 거부 등 사실과 달라

지난 7일자 조선일보를 통해 보도된 비운동권, 한총련 노선 반대... 기사(박용근 기자)와 관련해 고려대 총학생회는 "사실관계를 심각히 왜곡하고 학생운동을 음해하는 기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7일자 23면에 보도된 이 기사는 "한총련의 정치투쟁 일변도 노선에 반발하는 학생운동조직이 나타날 조짐이 있다"며 "그것은 가칭 전총협(전국대학총학생회협의회)으로 한총련 탈퇴를 선언하거나 회비납부를 거부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33개 대학 비운동권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추진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대해 고려대 총학생회는 "97년 들어 전총협에서 제출된 입장과 사업은 전무하며, 한총련 대의원대회에서 어떠한 움직임도 존재하지 않았다. 고려대 총학생회가 비운동권이라는 이야기는 지나가는 X도 웃을 일"이라며 기사내용을 전면 부정했다. 또한 학생회측은 "한총련에 대한 상반기 정기회비를 모두 납부했다"며 기사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문제의 기사는 경찰관계자의 분석을 빌려 기사화되었는데, 기사를 작성한 박용근 기자는 "학생회에 대한 확인취제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의 말을 인용하는 형태로 보도했다"고 밝혔다. 박 기자는 "고려대 총학생회측에서 정정보도 요청이 들어온다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려대 총학생회는 "조선일보가 광학적으로 음해보도를 일삼아왔다"며 "이번 기사는 학생운동탄압과 궤를 같이하는 이데올로기적 조작에 다름아니다"고 비난했다.

총학생회는 "기사의 굵은 제목들은 한총련에 대한 반대와 반한총련의 조직적 흐름만을 느끼게 한다"며 "조선일보의 기사는 한총련 내 여러 운동진영의 다양한 의견과 움직임을 한총련으로부터의 조직적 탈퇴로 비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몇몇 총학생회의 한총련 탈퇴의 이면에는 학내 자치기구에 대한 탄압 등 비정상적인 작태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8일 서울대 총학생회도 "이른바

'전총협'과 관련해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았으며, 한총련 회비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며 조선일보사에 정정보도 요청서를 발송했다.

전학련 "이적단체 가입죄" 회원 11명 장안동 분실 조사

지난 4일 경찰에 연행된 전국학생정치연합(전학련) 소속 회원은 모두 11명이며,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죄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행자 가운데 4명은 직장인, 2명은 군인 신분이며, 서울시내 각 경찰서에 분산유치된 상태에서 장안동 대공분실로 이동해 조사를 받고 있다.

4일 연행자를 접견했던 임영화 변호사는 "이적단체 가입과 이적표현물을 소지·탐독 등이 주요 혐의지만, 이들이 조직 결성 후 어떠한 이적행위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행사와 동정

- 시국에 대한 사회단체 기자회견
 - 때: 4월 10일(목) 오전 10시
 - 곳: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 참석예정자: 구중서(민예총 이사장), 권영길(민주노동당 위원장), 김상곤(민교협 의장), 김중배(참여연대 대표), 이창복(전국연합 상임의장), 지은희(여연 대표), 최영도(민변 회장)
- 겨레사랑-북녘동포돕기 범국민 선포식
 - 때: 4월 10일(목) 오전 11시 30분
 - 곳: 서울역 광장
 - 참가단체: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민주노총, 실천불교승가회, 전교조 등
- 여성노동자회 창립 10주년 기념 - 들꽃이여! 들꽃이여! 그대 이름은 여성
 - 때: 4월 12일(토) 오후 3시-5시
 - 곳: 한국교회 백주년 기념관 대강당
 - 주최: 서울여성노동자회(867-0516)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869-1347)

"진실을 전달하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인터넷 <KOREA HUMAN RIGHTS NEWS>

접속주소 <http://www.interpia.net/~rights/>

인권운동사랑방이 7일부터 인터넷 <KOREA HUMAN RIGHTS NEWS>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KOREA HUMAN RIGHTS NEWS>는 지난해 6월부터 한글판으로 제공하고 있는 <인권하루소식>의 주요 기사 영역본입니다.

인터넷 <KOREA HUMAN RIGHTS NEWS>는 국내민간단체로는 최초로 한국의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합니다. 이로써 지구촌 시대의 본격적인 인권운동의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해외인권단체들은 물론 해외동포까지 빠르고 정확한 한국의 인권상황을 알리게 됩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감시활동으로 인권증진을 위해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⑦ - 아브라함의 집(한국출소인 상담연구소) 이동숙(42) 씨

범죄자의 평범한 삶 마련에 보람을

“전 어릴 때부터 리더쉽이 아주 강했어요. 학창시절 때는 물론이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지요.” 양복바지에 맑은 남색 와이셔츠 그리고 짧은 머리. 곱결한 목소리는 그가 탈탈한 성격임을 느끼게 했다. 그는 78년 2월 특수감도 혐의로 구속돼 2년6월을 복역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 말기로 교도소에는 긴급조치 5호 위반 정치범이 들끓었죠. 방마다 1명씩 있을 정도였으니까. 제가 있던 방에도 여대생 한 명이 있었죠” 잠시 어리둥절해졌다. 사실상 ‘그녀’는 교도소를 들어가 처음으로 여자세계를 접했다고 한다.

남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시절

영등포 토박이인 그는 7남매중 6번째로 집안에서 유일한 여자아이로 태어났다. 남자형제 속에서 자란 탓인지 어릴 때부터 행동도, 성격도 남성적이었다. 공부에는 취미가 없었으나 웅변과 구기종목을 즐겼다. 누구나 자신을 남자로 봤는데, 가출 전에도 그는 집에다 성전환수술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곤 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느껴 고등학교를 가지 않았다. 대신 동네 아이들의 과외선생으로 2년 여를 보냈다. 이듬해 중학교 동창이 서울대 의예과에 수석 입학한 사실을 방송을 통해 보면서 충격을 받고 위축감으로 가출을 하게 되었다.

가출해서 돈도 떨어져 집에 들어가려다가 우연히 특수감도 범행에 가담하게 된다. 지명수배를 받아 쫓겨 다닌 끝에 지수를 결심하고, 동료들을 설득했으나 실패해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삼청교육대 피해 다시 감옥으로

80년 8월 출감했는데, 3일만에 시경에서 찾아와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으라”고 통보를 했다. 당시 “이미 죄과를 다 치르고 나왔는데 말도 안된다. 이중처벌이다”며 항의하고 그날로 집에서 도망

쳤다. 당시 상황에 대해 “긴 터널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 이곳저곳을 전전하던 그는 삼청교육대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 1년 형기를 살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찾지 않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자괴감으로 다시 출발할 힘을 잃고 인생 구상을 위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1년을 복역한다. 전과 3범으로 84년 3월 출감을 앞둔 그는 “내가 인간 쓰레기구나”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범죄자 한 명을 사회에 잘 적응토록 하면 피해자 1백명을 줄일 수도...

전과자들의 아브라함의 집

“다시는 나처럼 사회에서 고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85년 반포 방배중학교 뒤편에 ‘아브라함의 집’의 문을 열게 된다. 그 뒤 ‘아브라함의 집’은 87년 2월 화곡동으로 자리를 옮기고, 96년 5월 반포 한 아파트로 옮기기까지 출소자들의 인식처로 자리를 잡아나갔다. 지금은 임시로 반포에 자그마한 오피스텔을 사용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집’은 이동숙 씨가 89년 제1회 서울시민대상 장려상을 받으며 하루에 2건씩 인터뷰를 할 정도로 매스컴을 탔는데, 신문을 통해 ‘아브라함의 집’은 전국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편지가 쏟아져왔다. 하루에도 4-5명씩 상담을 요청해오는 등 지금껏 아브라함의 집을 들린 전과자들은 수만명이 될 듯 싶다고 한다.

출소자들에게 그가 하는 상담은 마치 형이 동생에게 해주는 것 같다. 일지라도 갈 곳도 마땅치 않은 그들에게 잡자리 제공과 취직을 도와 준다. 전과자들 역시 보통 사람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억압당하지 않고 인간의 기본 권리를 누리며 살게 도와주는 일이 그의 몫이다. 그가 펼쳐든 열범에는 이곳에 머물다간 많은 사람들의 사진이 사연과 함께 담겨있다.

출소자 거취 마련위해 책출판 준비

이런 저런 사연을 담은 편지를 장소가 비좁은 이곳으로 옮기면서 트럭 2대에 달하는 양의 편지를 태울 수 밖에 없었다. 지금은 출소자들이 거취할 장소가 없다. 그래서 그는 숙소마련을 위해 책출판을 계획하고 있다. 2년전 자신이 살아온 얘기를 글로 써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94년 여름 폭폭치는 더위에 밤낮으로 써온 글을 이제 책으로 묶게 되었다. 자신이 살아온 삶과 ‘인간군상들의 집합소인 ‘아브라함의 집’의 시작과 지금까지 모습을 담은 「정지된 시간」이란 제목을 달아 발행될 예정이다.

영화와 같은 삶

지금까지 산 것은 영화와 같다. 살아온 길에 대한 후회는 없다. 범죄자 한 명을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하면 이것은 피해자 1백명을 줄일 수도 있다는 것이 그가 느끼는 자부심이다. “최선을 다해, 소신껏 있는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출소자들에게 대해 주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먹는다. (연락처 3476-1519)

인권하루소식 합본 7호 발간

96년 하반기(7-12월) 인권하루소식을 묶은 합본7호가 나왔습니다. 합본7호에는 96년 하반기 인권상황과 함께 연대 사태를 인권유린의 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한 글이 실렸습니다. 가격은 1만원(우송료 별도)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15-9185 · 팩스) 715-9186 ·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4월 11일(금)
제 86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통일을 향해 한민족의 마음을 모으자 북녘동포돕기 범국민운동 선포식 열려

10일 오전 서울역광장에서는 '겨레사랑-북녘동포돕기 범국민운동'(공동대표 김상근·권영길·이창복·구중서 등 7인) 선포식이 열려 이날부터 한달간 20억원 모금운동에 들어갔다. 민주노총·민변·민예총·전국연합 등 30여 개 사회·종교단체들이 참가한 범국민운동본부는 단체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내 모금, 대국민 거리모금, 한 주 한끼 굶기 회원 모집 활동 등을 벌일 계획이다.

선포식에서 김상근 목사는 “북한동포의 문제를 우리 문제로 안고 끝끝내 한민족으로 통일을 향해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허장(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씨는 “민주노총 전조합원 50만명이 4월부터 1인당 한끼이상 내기운동을 벌이고 있다. 통일의 여건 조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또 유기홍(한청협 의장) 씨는 “단돈 1천 원이면 북녘동포 한명이 열흘을 살 수 있고, 1만 원이면 한가족이 한달을 살 수 있다.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끼를 굶으면 1만-1만5천원을 모을 수 있다”며 북녘동포 돕기에 청년들이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지금은 그동안 갈라져 반목해온 우리민족이 진실로 화해할 때다. 남녘에서 올려보내 는 쌀은 배고픔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중요와 적대의 감정을 씻어 내릴 것이 다”며 정부당국과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1천원이면 열흘을 살 수 있다
선포식이 진행되는 동안 광장에 마련된 모금함에는 어린이, 미회원, 군인

등의 손길이 모아졌다. 시민들에게 북한 의 실상을 알리고 북한동포돕기 동참

국제인권조약 가입국으로서 한국정부의 의무 “굶어가는 사람을 돕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도리”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현지조사에 따르면 2천3백만명의 북한주민들중 40%에 해당하는 약 1천만명이 아사직전에 있다고 한다. 현재 북한 주민들은 하루 평균 1백g(공기밥 반그릇)의 식량을 배급받고 있는데 이는 85년 에디오피아의 기근보다 더 절박한 상황이라고 세계식량계획은 발표했다. 이대로 가면 7-8 월에는 식량이 바닥나 최대고비를 맞을 것이라고 한다. 북녘동포 돕기 운동은 무엇보다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오재식 선명회 회장은 “이 문제를 정치적 시각에서 다뤄선 안 된다.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굶어죽어가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북녘 어린이들

특히 충분한 영양섭취가 필요한 임산부, 수유모, 어린이의 건강 문제가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 지난 3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의 식량난과 국제민간지원 실태보고회’에서 스티브 린튼 유진벨 재단 이사장은 “어른은 2-3년간 제대로 못먹어도 그후에 정상적으로 먹으면 곧 회복된다. 그러나 다섯 살 이하의 어린이들의 경우 회복불능의 피해를 입는다는게 문제다. 어릴 때 잘못먹으면 키가 자라지 않으며 더 무서운 것은 뇌가 제대로 발달되지 않아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미발달된 세대를 만든다는 점이다. 남북한은 21세기에 통일을 해야 하는데 그런 세대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고 말했다.(**말**) 97년 4월호 인용). 89년 채택된 유엔 아동권리조약의 뿌리가 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23년)에서는 “배고픈 아동에겐 음식을, 병든 아동에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우리 정부 역시 91년 아동권리조약에 가입하면서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내에서, 이 조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4조)는 의무를 안게된 것이다.

「경제적·문화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조약」 전문과 11조(사회권의 기본규정·일반규정·기아로부터의 자유) 등 여러 국제인권조약들이 북녘동포 특히 아동에 대한 당사국의 노력은 물론이거니와 국제협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 북녘동포 돕기는 국제인권조약 가입국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며, 한민족으로서 통일세대를 향한 ‘당사국’의 의무인 것이다.

을 호소하는 거리캠페인은 명동 상업은행 앞, 서울역 광장 등지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1시30분부터 2시간동안 벌어지게 된다. 또 북한식량난의 심각함을 알리기 위해 이윤구(국제선명회 총재고문) 김진경(연변과학기술대 총장) 씨등이 전국 순회강연을 가지며, 시민들의 북한동포돕기 참여를 위한 대규모 문화공연도 계획되고 있다.

사회단체 대표들, 전·노 사면 반대

“사면권 행사, 정략에 따라선 안돼”

최영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변호사 등 사회단체 대표자 7인은 10일 프레스센터에서 현시국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전두환·노태우 씨 등에 대한 사면론은 반역사적 기도”라며, 사면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최 변호사는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이라며, 사면권의 행사가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되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특정 정파 이익에 합치되는 안되며 △공약에 합치되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으며 △그 대상은 양심범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전·노 사면은 이상에서 언급한 다섯가지 원칙에 모두 위배된다”면서 “사면이 이뤄진다면, 이는 전·노 재판이 정치적 쇼였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도 비웃음을 살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황장엽 비서의 입국과 관련해 참석자들은 “이른바 황장엽 리스트가 발표된다해도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신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안기부가 상당정도 개입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정부가 황장엽 망명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납치기된 안기부법의 무효화 △대북지원장구의 확대·개방 △한보수사에 있어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는 구중서(민예총 이사장) 권영길(민주노총 위원장) 김상곤(민교협 의장) 김중배(참여연대 대표) 이창복(전국연합 상임의장) 지은희(여연 대표) 씨등이다.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싸늘이

지난달 14명 이어 5명 또 연행된 듯

지난달 18일 회원 14명이 무더기 구속됐던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사민청, 의장 조창복)의 남아 있던 회원들이 9, 10일 잇따라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민청의 한 관계자는 “10일 오전 김종상(의장 직무대행) 씨가 집 앞에서 피한 4명에 의해 끌려갔으며, 염오순 씨도 9일 저녁 연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한수정, 정희선, 이경은 씨도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김종상 씨는 피한들이 타고 온 차량(서울49나6158)에 강제로 태워진 채 끌려가 10일 밤 현재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경찰이라면 당연히 제시해야 할 영장을 보여주지 않았고 △납치 이후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가족에게 아무 연락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경찰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납치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사민청 관계자는 “경찰이 이번에 사민청을 완전히 뿌리뽑으려 하는 것 같다”며 “구속자 지원활동과 정치학교 개설 등 사민청의 모든 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인권영화 ③

다민족의 공존문제를 다룬 “론스타”

감독: 존 세일즈/주연:매튜 매커니히, 크리스 쿠퍼/96년작

각 나라마다 그들의 역사적 흐름을 주도하고 고착화시키는 사회사가 있고, 그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근본적인 파생물은 묻어 버린 채 갈등만을 맹목적으로 확대시키기도 한다. 다인종 연방국가인 미국에서의 인종차별 역시 많은 불합리한 제도와 구조를 양성화했고, 그 때문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터질지 모르는 불씨를 늘 안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곳에는 다소의 비난과 사회적 불이익을 감당하면서도 그 문제를 표면화시키고 쟁점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투신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기 마련이다. 레즈비언이나 흑인들의 문제들을 영화를 통해 지적해온 존 세일즈도 그런 사람들 중의 하나이다. 이번에 그가 영상에 옮긴 문제는 ‘어떻게 다민족으로 공존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텍사스 주의 최남단인 론스타는 멕시코와 작은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둔 접경 마을이다. 한밤중에 강을 건너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건너오는 불법이민자들이 많은 이곳은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있는 흑백 갈등에 멕시코인들과의 갈등이 더해진다.

마을의 외곽 사막지역에서 우연히 발견된 오래된 해골과 녹슨 보안관 배지는 이런저런 갈등이 뒤섞인 삶을 지속하고 있는 몇몇 마을 유지들의 일상에 파문을 일으킨다. 아버지와 의 갈등으로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있던 돌아온 보안관 샘 디드는 이 사건을 정직하게 파헤치려 하고, 그의 손에 들어오는 단서들은 묘하게도 고인인 된 후에도 영웅적인 보안관으로 전설적인 빛을 발하고 있는 그의 아버지 버드에게로 모아진다. 여기에 또 하나 샘을 괴롭히는 문제는 화창시절 첫사랑이었던 멕시코계 여인 필라와의 관계이다. 그의 아버지와 그녀의 어머니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이루지 못했던 이들의 사랑은 23년이 지난 시간의 격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간직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살인사건의 전모는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고, 그 이면에 배태되어 있던 비극적인 사연이 베일을 벗는다.

론스타의 서사구조는 단선적인 사건 풀이에 머무르고 있지 않다. 현재를 낳은 과거의 역사가 편집에 의존하지 않고 카메라의 평면 진행으로 이어지며, 민족 갈등 사이로, 흑백 갈등과 방황하는 젊은 세대들의 시각이 교차되어 다각적으로 움직인다. 감독은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한쪽에 일방적인 시선을 주지도 않는다. 이루지 못한 사랑과 서로 다른 부자 사이의 갈등을 다루고 있지만 결코 통속적이지도 않다. 그 서술의 맥락이 역사와 사회사에 닿아 있기 때문이다.

미국 영화평론가협회가 인종과 국가 간의 맹목적 갈등, 가족관과 국가관을 다면체로 조명하고 있는 이 영화를 96년 10대 영화의 하나로 선정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을 것이다.

[김경실·민주언론운동협의회 영화반 회원]

인권하루소식 합본 7호 발간

96년 하반기 인권상황(7-12월), 가격 1만원(우송료 별도)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15-9185 ·팩스) 715-9186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4월 12일(토)

제 86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 방법없나”

94년 이전 피해자 시효만료... 입국비용도 없어

“다리가 썩어가고 있지만 치료할 길이 막막합니다”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본국으로 추방된 외국인노동자들이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다.

외국인노동자피난처(소장 김재오, 전도사)에 따르면, 94년 이전에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노동자 가운데 본국으로 추방된 노동자 대부분이 한국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다. 어려운 생활 조건으로 인해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명 입국비용 마련에 손길

이에 외국인노동자피난처(피난처)는 91년부터 93년 사이 국내에서 산업재해를 당했던 중국 조선족 노동자 가운데 산재후유증이 심각한 15명을 재입국시켜 치료할 계획이지만, 이들에 대한 치료비와 출입국비용 등이 없어 입국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난처의 조명숙 간사는 “이미 법무부로부터 입국허가까지 받은 상황인데, 비용이 없어 입국조차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며 각계의 지원을 호소했다. 조 간사는 조선족 15명의 입국비용과 치료비, 국내 체

류기간 중의 숙식비용 등으로 필요한 금액은 최소 3천만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산재 환자들이 가운데 최기준(63) 씨는 시급히 수술받지 못할 경우 오른쪽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김진용(54) 씨는 실명위기에 처해 있고, 박성일(37) 씨는 엉치뼈가 썩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간사는 “이들 대부분이 스스로 생계조차 꾸릴 수 없는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중국의 의료시설이 열악해 국내에서의 수술이 불가피한 환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엉치뼈는 썩어 가는데...

조선족 노동자들의 산재피해를 민간에서 보상하려는 것은 이들이 한국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끊어졌기 때문이다. 국내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은 94년 노동부의 「불법취업 외국인 보호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부터 국내 노동자와 동일하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94년 이전에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노동자들은 이러한 정부 지침을 홍보받지 못했기 때문에 보상기회를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산재보상의 시효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94년 이전 산재피해자들은 영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산재보상 시효 지나 법적 보상 막막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 체류중

인 외국인노동자 가운데에도 산재지침을 몰라 보상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본국으로 돌아간 노동자들은 그 숫자가 더 많을 것”이라며, “시효가 지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해 국내 외국대사관과 해외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이미 정부지침을 홍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난처측은 “필리핀, 방글라데시, 네팔, 중국, 스리랑카 등에서 해외조사활동을 벌인 결과 한국정부의 지침을 홍보받은 외국인노동자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들은 한국정부의 홍보미비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지 못한 희생자”라고 지적했다. (외국인노동자피난처 : 02-859-0430, 담당 조명숙 간사)

“황장엽 망명 내년으로”

재야인사 21명 요청

김상곤 목사, 이돈명 변호사, 지선스님, 함세웅 신부등 재야인사 21명은 남북관계와 국내정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황장엽 씨의 한국망명을 내년으로 연기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11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황장엽 망명사건이 대선정국에서 국내정치에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하며, 황장엽 씨의 한국입국을 내년으로 유보할 것을 황 씨 본인과 관계당사국에 권고했다. 또한 “이번 망명사건과는 별개로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과 경수로 사업, 남북경협등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쌀(米)을 나누어 먹으면(口) 화해(和)가 이루어집니다.

겨레사랑-북한동포 돕기 범국민운동 성금보내는 곳
조흥 308-04-589861 / 상업 425-05-037313/농협 001-01-294184(범국민)

<한 조선족 동포의 편지>

“선장의 폭력행위에 대한 재판 먼저”

<편집자주> 페스카마호 선상비난 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데 이어 지난 9일 항소심 공판에서도 사형을 구형 받은 전재천 씨등 조선족 선원 6명의 선고일이 18일로 다가왔다. 국내에서는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등에서 이들을 돕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족 사회에서 과연 페스카마호 사건이 어떠한 반향을 가져왔는지 한 조선족 동포의 편지를 통해 읽어본다. 현지에서는 <료녕조선문보>에 실린 피고인들의 글이나 관련보도를 접한 많은 조선족 동포들이 이들의 석방을 탄원하고 나섰다. 이들의 탄원편지에는 사건발생의 원인에 대한 규명과 '원한 서린 고국'에 대한 분노가 담겨져 있다.

페스카마호 사건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나는 페스카마호 선상살인사건 범행자 전재천 씨가 한국구치소에서 써낸 진정서를 읽고 며칠 동안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다.

지금으로부터 60여년전 내가 어렸을 때 <노예선>이란 영화를 관람한 바 있다. 어둡침침한 선실 안에는 손과 발에 쇠고리가 채워져있는 많은 노예들이 서로 등을 의지하고 묵묵히 앉아있었다. ... 이육교 철창문이 열리자 노란 머리 흰 얼굴 고깔모자를 덮어쓰고 하얀 손장갑을 낀 손에 기다란 가죽 채찍을 감아진 노예주 몇 명이 문안으로 들어선다. ...

그때로부터 반세기가 훨씬 넘은 오늘, 페스카마호 갑판 위에는 옛날의 <노예선>이 재현되고 있다. ... 다르다면 시대가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흥기가 다를 따름이다. 또 풍속습관이 같고 언어문자가 같고 같은 민족문화를 소유하고 같은 조상의 피를 이어받은, 동방예의지국으로 선망이 높은 백의동포가 동족상잔의 비극을 벌이고 있다. 노예와 선원의 인권은 어디 있을까?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고 압박이 크면 클수록 반항도 커진다. 전재천도 소와 말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도 사람이란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생명의 가치를 모를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그는 어찌서 전자를 버리고 후자를 택했을까? ...

한국 검찰당국에서도 “동정이 갈만한 부분도 있지...”라고 공정을 표하였다. 이 점이 곧 전재천 씨가 살기 위하여 취해진 결과의 전제조건이다. 그런데 “결과가 워낙 엄청나 법정에서 정상 참작여부가 없을 것이다”고 사건의 결과를 예견하는 것은 자체모순이라고 본다. 한국 검찰당국은 “범행의 직접 동기가 1차 가혹한 행위, 하선명령”이라 밝혔다. 그렇다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의 결과는 어디 있는가?

한국 검찰당국이 말하는 ‘가혹한 행위, 하선명령’은 ‘엄청난’ 결과의 직접적 동기는 될 수 있으나 사건 전체의 유일한 동기는 아니다. 왜? 선장의 행위가 일으킨 ‘가혹한 행위, 하선명령’의 발생은 이 행위의 근거로서 선장행위의 필연적 결과로 된다. 선장행위의 결과는 다시 전재천 씨들이 ‘엄청난’ 행위를 발생시킨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가혹한 행위, 하선명령’인 제1차적 결과를 ‘양형’의 과정을 거친 다음 ‘엄청난’ 제2차적 결과를 양형하여 최종 종합적인 양형이 있어야만 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즉 공명정대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

오늘날 한국에서는 12·12 군사반란, 5·18내란죄로 사형이 언도된 전두환 씨를 무기형으로, 22년 6월이 언도된 노태우 씨를 17년형으로 그외에 모두 감형하여 발표하지 않았는가? 나는 끝으로 한국정부당국은 국가·사회·민족·가정 관계 등 제방면을 고려하여 하루속히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 사건이 처리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바이다.

1996. 12. 30 김일홍

□ 새책소개

<5·18연구> (창간호/전남대 5·18연구소 펴냄/97년3월)

80년 5월민중항쟁 이후 17년의 세월이 흘렀다. 17년의 무게를 실감하며 이제는 그 많은 논의와 치열한 논쟁을 집대성할 시기가 된 듯하다.

자료의 축적에 기반하여 본격적인 5·18연구를 시작하겠다는 목표로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소장 송기숙)가 창간호인 <5·18연구>를 내놓았다. 밖으로 나가는 연구소의 첫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식지는 좌담기사(좌담인 리영희, 김진균, 송기숙)인 ‘계획과 전망을 크고 넓게’를 통해 5·18연구소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갈 것인가를 밝히고 있다.

연구소는 5·18에 관련된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시민, 경찰, 군, 검찰의 증언들을 지속적으로 채록하고 정부자료와 군 자료 등 문헌자료, 국내의 보도자료 등을 본격적으로 수집할 계획이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도서관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PC통신, 인터넷에 띄울 예정이다.

현재 5·18관련 자료수집의 현황에 관한 내용은 안중철(광주 5·18전문위원) 씨가 쓴 ‘5·18 관계자료수집의 현황과 과제’란 글을 보면 된다.

미래는 역사는 기억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을 떠올리며 우리의 미래를 가능해 본다.

『남녀평등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여성개발원 펴냄/비매품/154쪽/97년2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법이나 제도보다도 바꾸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정관념’이라는 뿌리일 것이다. 특히, 남성과 여성의 성(Gender)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그 역사가 너무 깊다. 그러나 모든 영역에서 남녀가 양성으로서 공정하고 정확하며 균등한 처우를 지향하고자 노력한다면 ‘고정관념’의 뿌리도 뽑히지 않을까?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한국여성개발원은 『남녀평등 어떻게 생각합니까』를 발간했다.

이 책에서 남녀평등을 가로막는 온갖 종류의 차별적인 관행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크게 여성의 역할과 사회변화, 여성과 남성 평등하게 생각하기, 여성과 남성 평등하게 대하기, 남녀고용평등법이란, 직장내 성희롱에 대하여 등으로 구성되었다. 【인권정보자료실 제공】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15-9185 ·팩스) 02-715-9186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4월 15일(화)

제 86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폐>사건, 조선족 반한감정 최고조

부산지역 종교·사회단체도 구명운동

페스카마호 선상비난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전원 사형이 선고되고 나서, 2백만 중국 조선족 동포사회에서는 분노와 반한 감정이 들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각계 저명 인사들을 포함한 조선족 동포들의 탄원서가 잇따르는 등 피고인 6명에 대한 구명운동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들의 특별변호사로 선임된 조선족 변호사 조봉 씨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들의 구명을 위한 서명운동에 50여만 명이 이상이 참가했으며, 이 서명운동은 앞으로도 계속 확산될 추세라고 한다. 또 지난 6일 김 봉(장춘시 인민대표자대회 상무위원) 리금남(길림신문사 사장겸 주필) 리학수(길림성 민족사무위원회 대표) 씨 등 조선족 동포 사회의 주요 인사와 료녕성조선족부녀협회 등 각 단체 회원들은 이번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촉구하며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료녕신문사의 김광현 기자는 “조선족들의 탄원서가 연일 접수되고 있고 중국정부측에서도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일 조선족 탄원서 접수

지난 3월 18일자 료녕조선문보의 논평(하늘이여 자비를 내려달라)은 이같은 조선족 사회의 분위기와 의견을 상세히

전해투 사무실 기금 마련중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지원대책위원회는 전해투 중앙 사무실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연락처 744-7437

포기한 적이 없으며, 1심판결에 대해 중국의교부가 한국정부에 공식적으로 유감과 불만을 표명했다”고 밝힘으로써, 상황에 따라 중국정부가 피고인들의 중국소환을 요청해 재판을 다시 벌일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정부, “1심 재판 불만족”

한편, 국내에서는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소장 김해성, 목사)이 피고인들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는 데다, 부산지역의 종교·사회단체 인사들도 잇따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지난 2월 27일 윤경철 신부 등 32명이 부산고등법원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정귀순(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 민병렬(전국연합 부산본부) 씨 등 사회단체 대표자 52명과 천주교·불교·원불교 등 7개 교단 대표자들이 잇따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사안의 민감함을 우려한 탓인지 국내에서의 구명운동은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재천 씨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9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전원 사형을 구형받았으며, 오는 18일 선고를 받게 된다.

<인터뷰> 조봉(조선족 변호사, 페스카마호 사건 특별변호인)

“2백만 조선족 등 돌리려면 사형선고하라”

- 페스카마호 사건과 관련한 조선족 동포 사회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 동포들에게 물어보면, ‘한국놈’이라고 하지 ‘한국분’이라 하지 않는다. 각종 기사등 한국인에 의한 인권침해 사실이 널리 알려진 차에 페스카마 사건이 터졌다. 조선족 사이에선 “2백만이 할 일을 대신 해 주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조선족이 한국에 대해 가졌던 뜨거운 열정은 모두 식어 버렸다.
- 선상폭력이 있었다고 해도 피고인들의 범행이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을 정상적 사고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그들의 선택은 자살 아니면 살인이었다.
- 한국 법원의 재판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원인제공은 추궁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 재판하고 있다. 한국인에 의한 중국인들의 피해사태가 무수히 많은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처벌했는가? 2백만 조선족에게 등을 돌리려면 사형을 선고하라.

비상대책위 활동 구속 빌미 사민청 6명 국보법 구속

지난 9, 10일 연행된 것으로 알려진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사민청) 김종상(의장 직무대행) 씨등 회원 6명이 14일 현재 홍제동 대공본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초 연행된 사람중 임영순(3월 18일 연행된 김현일 씨 처) 씨는 11일 불구속으로 풀려났다.

지난달 18일 조창목 의장등 회원 14명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제작·배포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데, 김종상 씨등은 사민청 회원들이 대다수 구속된 뒤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활동을 벌여왔으며, 정치학교를 진행시켜 왔다.

14일 접견을 다녀온 김진국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구속자들 또한 지난번 구속된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추가로 비상대책위 활동과 영치금 마련을 위한 일일주점 등에 대한 부분까지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자 명단:김종상 한수정 정희선 이경은 차승수 염오순

“전, 노 사면권 국민에게 있다” 대전충남연합 항의성명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대전충남연합)은 14일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한 잇따른 사면논의는 정권의 오만과 망용을 드러낸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충남연합은 “청와대의 전, 노에 대한 사면은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임과 동시에 반성하지 않는 범죄자들의 오만한 태도에 견주어 볼 때 권력재창출에만 열안이 되어 있는 권력의 독단이며, 횡포”라고 말했다. 또한 “전, 노에 대한 사면권은 대통령 개인에게 있지 않고 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 주요 공판 안내

- ▶ 4월 15일(화) 임미정(국보법) 오전10시 1단독, 519호 선고 유덕상(업무방해등, 한국통신) 오후2시 3단독 317호 속행 권영길(제3차 개입금지, 민노총) 오후2시 3단독, 317호 속행
- ▶ 4월 16일(수) 구광희(국보법 찬양·교무등)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 ▶ 4월 17일(목) 황윤미(국보법) 오전10시 5단독 519호 선고 서미연(국보법) 오후2시 3단독 317호 속행
- ▶ 4월 18일(금) 진관스님(국보법 간첩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속행 이연석(국보법) 오전10시, 9단독, 317호 선고 정진희(국보법) 오전10시 6단독 522호 선고 함운경(국보법) 오후2시 10단독 525호 속행 이연석(국보법) 오후2시 9단독 317호 신진

-서울지법 형사국

주/간/인/권/호/름 (97년 4월 7일부터 13일까지)

◆ 4월7일(월)
대전충남연합, 고 유학성 5·18 내란종사자의 대전국립묘지 안장에 대해 비난 성명/정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노동부 발표, 3월까지 임금체불액 4백39개 업체, 1천3백30억원에 이르러/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 희망을 위한 과거청산국민위원회 전노 사면논의 중단 촉구 성명/민노총, 1-2월 개정노동법 무효화를 위한 총파업과 관련 고소·고발된 각 지부 노조간부들에게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 받으라고 지시/민노총, 한국노총에 노동절 대회 공동주최 제안/서울대 동성애자 모임 '마음 003' 2일부터 서울대 학생회관에서 제3회 이반영화제 개최중/유엔, 북한에 대해 총 1억2천6백22만 달러 어치의 제3차 대북지원계획 공식발표

◆ 4월8일(화)
6대 종단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등 22개 사회단체, '북한동포돕기 옥수수 보내기 범국민운동' 2차 캠페인/서울시 자동차 전용도로의 간선도로 옆에 있어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주는 7개 학교에 방음시설 설치키로/정부 호소수질관리법안 의결/보사연 발표, 우리 사회보험의 급여지출과 건준 관리운영비 비율이 OECD 회원국의 평균비율 3.1%보다 3배 높아/노동부등 보도, 중앙노동위 위원장 임명 늦어져 노동위원회 기능 한달째 마비/북한을 방문한 토니 홀 미국 하원의원 북한 6백-8백만 명이 아사위기라고 밝혀

◆ 4월9일(수)
유니세프, 북한 어린이들이 7명중 1명꼴로 굶주려 1백34명 영양실조로 숨졌다고 밝혀

◆ 4월10일(목)
송과구 '시각장애인 피시(PC)도서관' 풍납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예정/국제의원연맹(IPU), 국가별 의회 내 여성의원 비율 1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1백30개국중 1백12위/전국 각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여성폭력상담전화' 전국 가동 열 달만에 실종/보건복지부, 만성내부질환자등도 장애인에 포함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 추진/조선대, 한총련의 '조국통일위원회 통일일꾼 전진대회' 행사불허/전국연합등 재야 30여개 단체 '겨레사랑-북녘동포돕기 범국민운동' 선포식

◆ 4월11일(금)
김삼근 목사등 재야인사 21명 황장엽 씨 망명 내년으로 연기할 것 촉구성명/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 북한의 기아위기를 둘러싼 긴장이 제2차 한국전쟁 낡을 우려 있다고 밝혀

◆ 4월12일(토)
사민청 회원 명 6명 구속/여의도 63빌딩서 열린 '북한의 식량위기를 염려하는 옥수수만찬'에 사회지도층 6백여명 참석/〈신화통신〉 보도, 중국이 북한에 식량 7만톤 무상원조키로

◆ 4월13일(일)
인의협, 소아전염병 예방백신 1백만 명분을 유니세프 통해 북한에 보낼 계획/서울시교육청, 교사의 촌지수수과 부교재·교복선정에 따른 금품수수등 교육계 부조리 단속강화하기로/〈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 한국이 자위력 증강위한 충분한 무기구매를 하지 않는다고 미국 관리들 비판

살맛나지 않는 세상

김 동 현 (법과 인권연구소 소장, 광주여대 교수)

인권 시평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맛을 잃었다고 한다. 살맛을 잃었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철저히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인권의 처참한 유린이다. 왜 무엇이 이 지경까지 몰고 왔는가?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민주주의를 사회체제의 덕목으로 누릴 만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셈이다.

도적들이 분탕질한 역사

우리의 짧은 정치사는 몇몇 큰도적들이 한탕씩 해먹은 분탕질의 역사이다.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 노태우의 민자당, 김영삼의 신한국당으로 이어지는 1인1당독재의 분위기를 벗어나 본 적이 없다. 이승만의 자유민주국가, 박정희의 경제부흥, 전두환의 정의사회구현, 노태우의 보통사람, 김영삼의 문민정부등 이른바 각 정권이 내건 상징적 구호들이 국민들을 얼마나 많이 우롱했는가는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그 정권이 몰락했을 때 항상 그 구호와 반대의 사실들이 들춰졌다. 좀 속도가 빨라진 것이 한보사건이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속도가 빨라졌다고 할 수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오히려 더 지능적으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쇼를 하고 있다. 한훈도 받은 적이 없는 김영삼과 한훈도 준 적이 없는 정태수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국민의 뺨을 찌른 가슴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파렴치한들이다.

사필귀정의 참의미

국민들이 피땀흘려 한푼두푼 저축한 돈을 동탕 받아먹고도 시치미를 떼고 오히려 뻔뻔스런 태도를 보여준 정태수의 청문회 증언모습은 우리를 너무도 슬프게 한다. 청문회를 통해 무엇을 밝혀낼 수 있을까? 청문회를 해봤다는 자위적의사에 사로잡힐 국회의원들의 자태도 우리를 분노케 한다.

좀 크게 넓게 보아야 한다. 대통령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지금의 정치체제에서 대통령의 판단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어디에 있으며 대통령이 책임지지 않을 일이 어디에 있는가?

굳이 청문회나 짜맞추기 검찰수사를 통해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아라. 사필귀정이다. 퇴임 후가 걱정되어 지금부터 이른바 수작을 부리고 있으나 이젠 믿지 않고 속지도 않는다.

5. 18특별법, 노동관계법 진통에서 보여주듯 김영삼정부의 기본시각은 군부독재정권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양심수가 한 명도 없다는 정부발표와 국가보안법위반 구속자의 엄청난 증가 사이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흐르고 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검찰수사가 곤두박질치고 대통령의 결단에 국회가 뼈에로

살맛을 잃었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철저히 무너졌다는 것

로 전락하는 나라에 삼권분립이 웬말이고 민주주의가 어울리거나 한 것인가? 오죽하면 현재 대통령의 권한은 조선왕조시대의 왕의 권한보다 더 막강하다는 탄식이 나올까? 더욱 치욕스러운 것은 대통령의 아들이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국정을 좌지우지했다는 것이다. 대명천지 민주세상이라는 나라에서 대통령의 아들도 무슨 벼슬이고 직책인가 국가경영을 가죽경영쯤으로나 생각한 모양이다. 그 주변에서 서성거린 권력해바라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직책인가 국가경영을 가죽경영쯤으로나 생각한 모양이다. 그 주변에서 서성거린 권력해바라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직책인가 국가경영을 가죽경영쯤으로나 생각한 모양이다. 그 주변에서 서성거린 권력해바라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직책인가 국가경영을 가죽경영쯤으로나 생각한 모양이다.

고양이에게 말린 생선을 아쉬워하는 문민정부를 지지한 국민들도 한심스럽다. 3당야합에서 이미 알아야 했다.

이제와서 후회해야 소용없다. 지금은 다음을 준비 할 때이다. 얼마남지 않았다. 또다시 지역감정, 파당의식, 학연, 혈연으로 혼탁해진 대통령선거를 치르면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 지금보다 국민은 더 힘들고 어려워진다. 또다시 매 사안마다 중요공원 탑골공원 명동성당 등에서 집회를 해야 하고 거리행진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일도 이제 신물이 난다.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아는 대통령 이제 안해도 되는 세상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편에서 역사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심부름을 하겠다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임기동안에 예전에 살던 집을 새로 고쳐 짓는 일조차도 삼갈 수 있는 대통령, 하루를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오 할 수 있는 총리나 장관, 나라돈이란 것이 결국 국민의 세금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국고가 누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직업공무원, 뇌물 특혜 등으로 얼룩지지 않는 재벌이 필요하다. 너무 이상적이라고 체념해서는 안된다. 선거혁명을 통해서 이룩할 수 있다.

살맛나는 세상은 누가 가져다주거나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투쟁하여 쟁취하여야 할 인권이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은 우리가 누려야 할 절대적 가치이다. 그저 살려져 가는 목숨연장은 사는 것이 아니다. 평등세상에 계층과 차등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사회에 지도자는 필요할지 몰라도 통치자는 필요없다. 지도자는 심부름을 자처하지만 통치자는 지배와 군림을 앞세운다. 언론은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전제군주정시대에 쓰던 용어를 무책임하게 남용하여 국민을 퇴역적으로 쇠뇌시켜서는 안된다. 이 또한 인권유린의 한 전형이다. 살맛나지 않는 세상이라고 탄식만 할것이 아니라 살맛나는 세상을 이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정치인을 믿을 것이 아니라 정치인이 거짓말을 못하게 해야 한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15-9185 ·팩스) 02-715-9186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대학가 서점 대표 3명 연행

이적표현물 소지·판매 혐의

15일 낮 12시경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앞 사회과학 서점 3곳이 일제히 압수수색을 당했고, 김용문(장백서점 대표) 씨등 서점대표 3명이 남영동 보안분실로 연행되었다.

서울대 앞 서점 '그날이 오면'(대표 유정희)의 경우 이날 낮 12시 30분경 시경 대공분과 소속 10여 명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와 자료집 4상자, 단행본 1백10여권, 판매 장부, 컴퓨터 등을 압

수해 갔다. 서점측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에는 국보법 제7조 5항(이적표현물 소지·판매등) 등의 혐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성균관대 앞 서점 '풀무질'(사장 은종복)도 오전 11시 30분경 압수수색을 당했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서터문을 내린 채 전화선을 끊고 사진 촬영까지 해갔다. 풀무질측은 "팜플렛과 탁스·레닌 이름이 적힌 책은 몽땅 압

1997년 4월 16일(수)

제 86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수당했다"고 밝혔다. 장백서점의 경우 경찰청에서 5명이 들이닥쳐 국제사회주의자들(IS) 신문, 기타 자료집, 30여권의 사회과학 서적들을 압수해 갔다.

이날 압수된 책들은 '탁스의 혁명적 사상'(책갈피 펴냄) '소련공산당사' '노동자의 철학'(거름 펴냄)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돌베개 펴냄) 등 합법출판물들로 종로서적, 교보문고등 시내 유명서점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날 종로서적과 교보문고에 확인한 결과 압수수색은 없었다.

원진 직업병 환자 24번째 사망

원진전문병원 설립 협상 결렬

원진레이온 직업병(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9년간 투병해 오던 조병수(62) 씨가 14일 서울 기독병원에서 사망했다. 조 씨는 원진 직업병 환자 가운데 24번째 사망자로 기록되었다.

원진노동자 직업병 위원회(원노위, 위원장 구기일)는 16일 「원진직업병노동자장」으로 조 씨의 장례를 치르기로 했으며, 오전 11시 한국산업은행 앞에서 '원진전문병원의 설립'을 촉구하며 추모기도회를 갖기로 했다.

한편, 원진전문병원의 설립을 촉구하며 33일째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원노위는 지난 12일 위원장 등 간부 3명의 사발식을 가졌으며, 이후 환자들의 단식농성도 계획하고 있다. 15일 원노위의 관계자는 원진전문병원 설립기금과 추가보상금 4백10억원의 출연을 요구하며 한국산업은행과 협상을 가졌지만 타결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 신체를 담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본국으로 돌아간 조선족 노동자 15명의 재일국 및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 외국인노동자피난처(당당) 조영숙 간사, 02-859-0430

<현장방문> 원진 직업병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서울기독병원 7년 간병 뒤 아내마저 입원... '사리돈 복용'이 유일한 처방

서울기독병원 501호 병실은 이제 새로운 환자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9년 가까이 투병생활을 해왔던 조병수 씨가 지난 14일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조 씨가 지내던 501호 병실과 나란히 위치한 503호, 504호는 역시 원진 직업병 환자인 홍염표(54), 정병섭(54) 씨의 병실이다. 89년부터 이 병원에 입원중인 정병섭 씨는 병실 전장을 바라보며 눈만 깜빡일 뿐, 말을 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처지이다. 코와 목에 구멍을 뚫어 기다란 호스를 꽂고 있는 그의 옆자리에서 가족들은 지치고 힘든 간병생활을 9년째 지속해오고 있다.

홍염표 씨의 부인 신영희(42)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남편의 병실을 대신 차지하고 있다. 7년간의 간병 끝에 병이 난 것이다. 부인이 병으로 드러늘자 홍 씨는 중환자실로 내려갔고 초등학교 6학년, 3학년인 두 딸은 어머니를 돌보며 병실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홍 씨의 가족은 산재보상금으로 나오는 월 1백10만원으로 생계를 꾸려왔다. 그러나, 매달 들어가는 부인 신 씨의 입원비용 때문에 빚만 늘어가는 것도 그 가족의 또다른 고통이다.

501호 병실은 또다시 원진 환자의 차지가 될지 모른다. 조 씨가 사망한 다음날인 15일 또 다른 직업병 환자 박재문(55) 씨가 반신마비와 언어장애 증상을 보이며 중환자실에 입원했기 때문이다. 박 씨의 가족들은 그가 "두통을 호소해온 것 말고는 건강한 편이었는데 갑자기 쓰러졌다"고 전했다. 주치의는 "이황화탄소 중독에 따른 뇌출혈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94년 직업병 판정을 받기 전부터 박 씨는 졸음 두통을 호소해 왔으며, 병원에서 약을 타다 먹어도 증상은 계속됐다고 한다. 고통스러워하는 박 씨에게 주어진 처방은 고자 '사리돈을 복용하라'는 것이었다는 게 가족들의 설명이었다.

<페스카마호 사건 관련, 조선족 저명인사 16인 좌담>

"피고인들에 대한 무차별 극형언도는 불공정"

—길림신문 4월5일자 보도

최근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는 페스카마호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전재천 씨 등 조선족 선원 6명에 대한 전사회적 구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윤수범(길림성 의회 사법위원장) 김병환(장춘 시민위) 리금화(변호사) 씨등 중국 장춘시의 조선족 저명인사 16명도 좌담회를 갖고 사형을 선고한 한국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시하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지난 4월 5일자 길림신문 1면을 통해 보도된 좌담회의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 사건의 성격규명과 형벌 적용문제
작년 12월 24일 한국 부산지방법원에서는 해상강도살인죄와 사체유기죄로 6명 피고인을 전부 극형에 언도했다. 1심판결에서의 범죄성격규정은 착오적이며 6명 피고인에 대한 무차별 극형언도는 극히 불공정하다.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고 보면 이른바 해상강도살인죄란 성립되지 않는다. 강도죄란 타인의 재산에 대한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범죄행위로서 범죄형식은 타인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다. 강도죄는 객관상 재물의 보관자나 소유자에게 폭력, 협박 등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재물을 내놓게 압박하거나 직접 재물을 빼앗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표현된다. 일반살인죄와 해상강도살인죄는 모두 객관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는 하나 두가지 죄의 범죄동기와 범죄목적이 판이하다. 일반살인죄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해상강도살인죄라면 타인의 재산에 대한 점유를 목적으로 실행된다. 때문에 범죄 성격은 판이한 것이다. 범죄동기와 범죄목적으로부터 볼 때 6명 피고인은 <페>호를 강탈하거나 점유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선상 관리자들로부터 장기간 참가 어려운 구타, 수모와 화대를 받아오다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일으킨 반항행

위이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해상강도 살인죄>의 최저형벌을 무기형이고 일반 살인죄의 최저형벌은 유기형 5년이다. 사건성격이 다름에 따라 형벌도 크나큰 차이가 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건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살인이라는 결과를 빚어냈지만, 재판기관은 법률규정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증거가 부족한 정황에서도 법률조례를 임의로 인용하여 죄를 정하고 판결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한국의 법률기관에서 실제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희망한다.

상기의 의견은 6명 피고인의 죄를 외면하려는 데 있지 않다. 6명 피고인들은 극도의 절망속에서 의지를 완전히 상실한 채 무고한 노무자들을 망라, 11명 선상일꾼들을 살해하는 엄중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죄행을 6명 피고인은 전적으로 시인하고 있으며, 피고자가 죽들도 피해자 가족에 침통한 사죄를 표시, 피해보상금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일부 피해자와 일부 가해자가 모두 구탄을 받아야 하는 한편 동정도 받아야 하는 특수하고도 복잡한 사건이다.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처리도 상응한 복잡성과 특수성을 띠고 있다.

■ 사건의 사회배경과 직접적 도화선
이번 사건의 발생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여기엔 심각한 사회배경이 있다. 일찍 여론을 통해 한국 사회와 중국 조선족 사회를 놀래웠던 일부 한국인들의 초청사기, 유학사기, 결혼사기 사건은 중국의 수십만 조선족들에게 극통을 안겨주었으며, 극히 위험한 반한정서를 야기시켰다. 하여 한국인이란 무분별 미워하는 심리가 생겨났다. 중국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모순을 격화시켰다. 중국인(그 중 다수는 조선족)을 고용해 쓴 후의 임금체불, 고용일꾼 대한 구타, 수모에 대해 그 피

해를 입은 사람들은 이를 부득부득 가는 실정이다. 고용자에게 맞아 죽은 사람, 종신불구가 된 사람도 한두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그 가해자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법적제재도 받지 않고 법밖에서 제멋대로 활개치고 있다. 한국정부의 이런 태도는 외국인에 대한 기탄 없는 인권침해를 조장하고 있으며, 중국 조선족 사회의 강렬한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다.

선상폭행은 선상살인사건의 직접적 도화선이다. 노무사업환경이 열악하고 노무자의 건강 심지어 생명안전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상태를 개변해야 한다.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고용주로부터 수모 받고 폭행을 견뎌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래 노무자는 맞아서 종신 불구자가 되거나 죽을 때까지 짝소리 못하고 고스란히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권문제상 선진국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노무자들의 현실을 볼 때 너무나도 한심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 사건처리와 향후에 미칠 영향
<페>사건의 발생은 다년래 한국 산업계의 일부 사람들이 외국노무일꾼들에 대해 비인간적 학대와 인권침해를 감행한 필연적 결과로서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물론 중한수교후 주류로 되고 있는 양국간 친선관계의 발전전망에 대해 비관할 필요는 전혀 없다. <페>사건은 지류에 불과하며 국부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 영향에 대해서는 절대로 홀시할 수 없다. 이 사건에 대한 처리여하는 향후 양국간, 양국민간, 한국인과 중국의 조선족간의 정상적인 교류에 필시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페>사건은 실질적 면에서 일반형사사건의 의미를 훨씬 벗어난 중대한 합의를 내포하고 있다. 이 사건의 처리를 시점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비극을 영원히 종말지어야 한다. 비극의 재연을 방지하는 근본 고리는 <페>사건에 대한 정확한 성격규명과 공정한 판결이라고 우리는 인정한다. 법률 집행의 공정성이 확보될 경우 비극의 암운은 가셔지고 중한양국과 양국민간의 정상적 교류와 건설적 관계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밝은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15-9185 ·팩스) 02-715-9186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4월 17일(목)

제 86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원진직업병 환자 농성 장기화

16일 조병수 씨 장례 치뤄

원진 직업병으로 9년간 투병해 오다 지난 14일 사망한 조병수(62) 씨의 장례가 16일 치러졌다. 유족과 원진노동자 직업병대책위(위원장 구기일, 원노위) 회원들 1백50여 명은 이날 오전 명동 향린교회에서의 영결식을 마친 뒤, 한국산업은행 앞에서 추모기도회를 갖고 고인의 선산인 충남 연기군으로 향

했다. 추모식에서 박인도 원노위 부위원장은 "비통함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제2 제3의 사망자를 막기 위해서는 원진 전문병원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명동성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진 직업병 환자들의 농성이 34일째로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은 식비를 부담스

러워 할 정도로 열악한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명동성당에는 매일 4-50명 이상의 환자들이 농성에 참가하고 있으며, 그 중 10여 명은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다.

원노위는 농성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원진전문병원의 설립과 보상기금 확보를 위한 서명운동」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원노위 구좌 : 상업은행 182-08-387097 (예금주 이종훈)

고 유학성씨 국립묘지 안장 규탄시위

대전충남연합(의장 이장호)은 17일 오전 11시 대전국립묘지 내 유학성 묘지 앞에서 내란과 반란종사자 고 유학성 씨의 국립묘지 안장에 따른 규탄 및 전·노 시면론 중단 촉구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전국연합도 16일 대법원의 전노 두 전직대통령의 선고공판을 하루 앞두고 전·노 씨에 대한 시면반대 논의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안기부 북한돕기모금 방해 전국연합, 직권남용 비판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16일 최근 안기부의 북한돕기운동 방해사건에 대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비판했다.

전국연합은 광주 송원백화점 북한동포돕기 바자회 및 방송사의 행사보도등에 안기부가 취소압력을 넣은 사실과 관련, "안기부는 민간의 북한동포돕기운동에 대한 간섭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5, 6공 전채청산과 시면반대 청산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18일(금) 오전10시 기독교회관 과거청산국민위동(762-4194)

<페스카마호사건 피고인 가족들의 애통한 심정>

"사고소식에 빛 독촉 빗발... 면회는 꿈도 못 꾀"

페스카마호 선상살인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2심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월 중순 조봉 변호사와 <요녕조선문보> 김광현 기자가 피고인들의 가정을 방문했다. 전재천 씨를 비롯한 피고인 6명의 가정생활은 모두 하나같이 가난했고 집사람들은 순박하기 그지없었다고 한다. 연로한 부모, 나이 어린 자식들이 딸려있는 한집안의 기동인 이들은 "고생을 하더라도 돈벌어 좀 잘살아 보겠다"는 생각으로 배를 탔다고 한다(편집자주).

◆ 전재천(39) 씨는 77년 제대한 뒤 중학교 음악대교원이 되었지만, 생계유지가 어려워 그만두고 93년부터 택시운전을 했다. 94년 처음으로 선원일을 시작했으며 14개월간의 선상생활로 5만원을 벌어들여 빚을 갚고 세 자식 학비를 대고 모친 병구완을 했다. 작년 6월 14일 아이들의 학비마련을 위해 2등 항해사로 페스카마호에 오르게 된다.

◆ 최일규(26) 씨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독립군인 독립투사의 후예이다. 최 씨는 아내의 임신사실도 모른 채 뱃길에 올랐고, 아내는 정월달 해산일이었다.

◆ 리춘성(29) 씨의 부친은 지난해 폐암에 걸려 현재 입원치료중이다. 설상가상으로 아들이 작년 11월 골절암 진단을 받아 병석에 누워있다. 돈을 벌어야 아버지 병을 꼭 고쳐드리겠다는 마음으로 그는 항해 길에 나섰다.

◆ 백충범(28) 씨는 7남매중 막내지만 92년 결혼한 뒤 70세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으며, 영양실조와 구루병에 걸린 아들이 있다. 가난의 때를 벗어보고자 3푼 이자로 빚 3만여 원을 내어 처음으로 배에 올랐다. 백 씨가 사고를 쳤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빚쟁이들이 사흘이 멀다하고 집으로 찾아와서 빚채취를 하고 있다. 하는 수 없이 다시 빚을 내고 도급지까지 팔았지만 아직도 남은 빚이 8천여 원이고, 면회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엄두도 못내는 형편이다.

◆ 최금호(28) 씨는 미혼으로 5살 때 부친을 여의고 숙부, 숙모 손에서 자라났다. 최씨의 가정은 몹시 가난해 숙모는 "소금간 사기도 어려운 신세"라고 말했다. 박군남 씨 가정 역시 설비 돈마져 없는 형편이다.

세네바소식 ⑤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4월 2째주)

분쟁지역 아동·아동매매촌 등에 관한 선택의정서 고려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토론

토론에 참가한 각국의 대표자들은 무력분쟁과 성적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행동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조약)의 선택의정서를 정교화할 것을 인권위원회에 요구하였다.

국제아동기금(유니세프)의 추정으로는 국제법적 안전망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5-14세 아동 중 1/4이 아동으로서 두려울 편의를 박탈당하고 있다. 유니세프는 유해하고 착취적인 아동노동의 철폐, 모든 아동을 위한 무상의무교육, 강력한 아동노동법을 핵심으로 제시하였다.

한국정부 "선택의정서 채택해야"

대한민국 정부대표는 "조약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여전히 수백만 명의 아동이 불필요하게 죽어가고 있는 우울한 현실을 직면하고 있다"며, "무력분쟁 지역의 아동을 위한 의미있고도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독일대표 또한 무력분쟁,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채택을 지지하였다. 특히 무력분쟁에 간접가담이 가능한 연령 규정을 18세로 올리는 것을 주 관심사로 삼았다(현재 조약상 아동이 무력분쟁에 가담할 수 있는 연령은 15세다-편집자주). 덧붙여 아동화대자에 대해서는 투옥후의 치료프로그램이 강제화되어야 한다는 것과 컴퓨터를 통한 아동포르노매매는 국내법의 검토수준으로 충분치 않다면서 모든 국가의 합치된 노력을 통한 해결책을 촉구하였다.

"삶의 질 개선이

개도국 아동권리보호 핵심"

브라질대표는 개발도상국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은 삶의 기준을 높이는 것이고, 가족이 아동의 기본적 욕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충족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빈곤,

저발전, 사회적 소외와 실업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지적했다. 개발도상국에서 아동노동은 많은 아동에게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아동노동을 금지시키려 하는 것은 거의 소용없는 것임이 이미 증명되었다고 말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대표는 현재 1백90개국이 조약을 비준했으며 특히 소수인 비서명국 또한 조속히 조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는 조약의 보편적인 비준이 모든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의 원칙에 대한 초국가적 약속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 카시미르 인권문제

(카시미르는 인도, 파키스탄 북부에 걸쳐있으며, 인구의 대부분은 이슬람교도이다. 그러나, 영국 식민지시대에 토호국 국왕이었던 살마이는 힌두교도였기 때문에 인도, 파키스탄 독립시 귀속이 결정되지 않았다. 47년 10월 인도-파키스탄 전쟁시 유엔 안보리정전위 조정으로 정전되면서 정전라인이 카시미르에 대한 양국의 지배선이 되었다. 인도는 그 지배지역을 인도연방에 한 주로 편입시켰고, 국민투표를 통하여 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유엔결의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한 파키스탄은 카시미르에 독자적인 정치체제를 갖게 하고 편입시키지 않았다.

90년대 이후 인도측 카시미르의 이슬람교도 과격파의 분리독립 혹은 파키스탄 편입요구가 활발해졌고, 이 때문에 치안당국과 자주 충돌이 일어났다. 최근에도 힌두복고주의와 이슬람근본주의자 활동이 각각에서 벌어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편집자 주)

인도 카시미르주둔군 철수시켜야

유엔 인권위에서 파키스탄의 연방장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발언하였다; 인도는 과거 카시미르가 국민투표를 통하여 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

을 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카시미르에는 철의 장막이 드리워져 있으며 지난 7년간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회조차도 진상조사단을 파견할 수 없었다.

인도는 카시미르에 주둔하고 있는 70만 명의 군대를 철수해야만 하고 구금자를 석방하고 즉결처형과 자의적 구금을 중지해야 한다. 카시미르 지도자에 대한 공격을 중지하고 국제언론과 인권단체의 방문을 허락해야 한다. 국제적십자와 파키스탄측의 카시미르인이 제공하는 인도주의적 원조가 카시미르 내의 미망인과 고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보호 하에 중립지역에서 카시미르에 관한 인도, 파키스탄 양측과 모든 드러나지 않은 의견들을 나눌 수 있는 회의를 이루려고 노력해왔으나, 그런 노력은 인도에 의해 무산되었다.

■ 민간단체, 각국의 인권침해 고발

4월 9일 오후 위원회는 세계 각국의 인권침해에 관한 민간단체의 비난을 청취하였다. 국경없는 기자들, 아티클 19, 국제자유노동조합 등 1백여 개가 넘는 민간단체가 매년 가장 열띤 논쟁항목인 '전세계에서의 인권침해문제에 관한 교찰'에서의 발언을 위한 서명을 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문제는 장기간의 갈등 또는 교착상태에 의해 야기된 인권문제로 아프리카의 대호수지역, 잠무와 카시미르, 수단, 사이프러스, 동티모르가 그 예이다. 또한 여러 차례 언급된 나라는 터키, 중국, 이란, 이라크, 콜롬비아, 미얀마, 미국과 나이지리아이다. 발언자들은 인권위원회가 나이지리아 상황을 조사할 특별보고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거듭 말하였다.

【유엔인권센터 보도자료 중, 번역=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15-9185 ·팩스) 02-715-9186 ·통신 ID: rights(천.하) ·E-mail: 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도심 속에 갇힌 장애인 접근권

장애인들 몸소 편의시설 실태조사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은 생명”이라는 말처럼 현재 시내 곳곳에 설치된 편의시설은 장애인들의 이동을 얼마나 자유롭게 보장하는가.

이와 관련해 장애인들이 직접 편의시설 실태와 대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작년 12월 발족한 ‘장애인 편의시설추진시민모임’(대표 이계준, 편의시설추진모임)이 4월 장애인 주간 행사로 14-19일까지 1주동안 공공기관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더 넓고 더 가까운 세상 만들기”라는 제목 아래 지난 월요일부터 진행된 실태조사작업에는 매일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20여 명씩 참석했다. 이들은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 대표적 공연장인 세종문화회관대강당, 대학로 패스트푸드점, 경복궁 등을 방문했고, 18일은 명동에 있는 은행에 들러 은행업무를 본다. 또 마지막날에는 시청방문 일정이 잡혀있는데, 시청민원실을 방문해 1주일간 벌여온 편의시설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전달하고 편의시설의 설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물론 그들이 방문했던 공공시설 측에도 건의서를 보낸다.

철의 장막 ‘교보문고’

이번 행사를 이끌어온 전정욱(36·사무국장) 씨는 “영풍문고나 교보문고 안에서는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전혀 장애를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밖에서 서

점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장애인들은 철의 장막에 둘러싸여 있는 것과 같다. 책 한 권을 사려면 장애인들은 몸살을 앓는다”고 말했다. 아시아에서 제일 큰 공연장이라는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의 음악회 관람도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세종문화회관에 설치된 경사로를 내려가다간 급경사 때문에 굴러 떨어져 죽을 것”이라며 “화장실에 가지면 무려 계단을 7개나 거쳐야 했다”고 전 사무국장 은 덧붙였다.

한 번 더 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편의시설추진모임은 이후에도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며, 이밖에 청각장애인들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한국어화 자막삽입 캠페인, 세계 편의시설 비교사진전을 비롯해 장기적으로 서울시 편의시설지도·장애인 해외여행 안내서 발행 등을 계획하고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 지난 3월 17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사회적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마련에 들어간 상태인데, 이 법안이 타당공론에 머물지 않으려면 장애인등 이동약자

1997년 4월 18일(금)

제 86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장애인들의 당연한 요구이다.

“사면논의 절대반대”

전국연합 등 잇따라 성명

17일 대법원이 전두환·노태우 씨 등 5·18 내란 혐의자들에게 대한 원심을 확정 한 가운데,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결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원이 빛을 본 쾌거라며 환영의 뜻을 표하는 한편 ‘형외대’에서 전·노 씨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죄인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내용적으로는 벌을 면하는 국민우롱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연합은 “김영삼 대통령이 두 중죄인을 사면한다면, 전두환·노태우 정권 타도투쟁에 버금가는 국민투쟁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과거 군사독재자들을 옹호하는 자들에게 국정을 맡길 수는 없다”면서 “사면을 거론하고 있는 이한중, 이회창, 이흥구 씨 등은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공동대표 함세웅 등)도 성명을 통해 “광주 시민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담보상태이며, 반란 당사자들이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면논의는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변, 「새노동법 해설」 발간

민중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새로 개정된 노동법의 해설을 담은 「새노동법 해설」을 펴냈다. 이 책에는 근로기준법,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대한 신·구법 비교, 신법에 대한 해설 등이 실렸다. 가격 3천원. 문의: 522-7284

5·18 학살자 사면복권 주장 규탄 신한국당 항의방문

때: 4월18일 오전 11시 / 곳: 여의도 장기신용은행앞

주최: 전국연합(921-4090)

경찰, 시위학생 총상 은폐 물의

관통상 입은 대학생 일주일간 면회 안 시켜

경찰이 쓴 총에 맞아 부상을 입고 연행된 대학생이 가족과 친구들의 면회도 받지 못하며 일주일간 경찰서에 구금되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7일 충남지구대학총학생회연합(충남총련)은 “지난달 24일 지정 20여 명의 대학생들이 천안시 신안파출소에 화염병과 페인트병을 투척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총성 3발이 울렸고 이어 박상태(단국대 천안캠퍼스 경제무역학부 2년) 씨가 쓰러져 연행되었다”고 밝혔다. 충남총련은 “경찰이 면회를 금지했기 때문에 부상사실을 몰랐고, 천안구치소로 이감된 박 씨에게서 편지를 받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며 “경찰이 사실을 은폐하려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씨는 “엉덩이 부위에 총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상태가 양호하다”고 지난 11일 학교에 보낸 편지를 통해 알려졌다. 박 씨의 가족도 사건 발생 7일만인 30일에야 박 씨를 면회했으며, 이 때 박 씨는 부모에게 부상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 충남총련은 “경찰이 단순공포탄이 아니라 실탄을 조준사격한 점과 부상사실을 은폐한 사실에 분노한다”며 해당 경찰서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서점 대표 구속, IS 문건 판매 이유

합법출판물에도 이적표현물 혐의

15일 연행된 김용문(고대앞 장백서점) 씨등 대화가 서점대표 3명에게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한결같이 국제사회주의자들(IS) 문건을 판매한 혐의와 이적표현물로 인정되는 합법출판물을 소지·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용문 씨의 경우 92년 IS 조직원으로 검거된 경력이 있는 데다, IS 조직원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문건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종복(풀무집) 씨는 IS 조직원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문건을 판매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이다. 유정희(그날이 오면 대표) 씨도 IS 문건을 판매했으며,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이다. 이밖에도 ‘그날이 오면’ 사장 김동운(유정희 씨 남편) 씨는 참고인 소환조사를 요구받고 있다.

이들을 접견한 조상희 변호사에 따르면, 남영동 보안분실측에서는 IS 문건이 조직적으로 판매되는 등 너무 많이 나돌고 있어, 10곳 서점중 정도가 심한 3곳을 찼다고 전했다.

하지만, 「맑스의 혁명적 사상」(책갈피) 『세계민중사』(거름) 『경제사총론』(일월서각) 등 버젓이 대형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합법출판물들조차도, 90년 법원의 판결을 기준삼아 이적표현물로 간주한다면 법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설득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장스케치) 문화유산의 해...

장애인들의 경복궁 나들이

오전 11시 경복궁 예매소 부근.

봄꽃이 만연한 날씨인데도 제법 쌀쌀했다. 오늘따라 이현주(28·휠체어 장애인) 씨가 꽤 늦는다. 1시간 가량을 기다리다 결국 자원봉사자 1명을 남기고 출발! 휠체어 장애인들과 뇌성마비 장애인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15명 남짓 되었다.

올해가 문화유산의 해라고, 이곳이 민족적 자긍심을 일깨울 수 있는 사회교육 현장이라고 하지만, 장애인들에겐 안내지도 한장 없는 막막한 곳이다. 예매소 창구에 ‘장애인 무료입장’이라는 문구는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박물관 장애인·보호자 무료관람

가파른 경사로, 장애인화장실 미비

이번 행사를 주최한 장애인편의시설추진모임은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경복궁 안내도를 구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가까스로 경복궁 사무소측에서 배치도를 한장 받았을 뿐이다. 이 배치도에 우선 화장실을 표시하고 휠체어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길을 표시하고... 다시 지도를 그렸다.

뿔뿔이 화들짝 핀 길을 지나 드디어 국립민속박물관 관물이 나타났다. 현관 옆에 경사로로 남편 정치우(30) 씨가 탄 휠체어를 부인 김미선(26·뇌성마비) 씨가 힘겹게 밀고가는 것이 보였다. 경사로가 너무 가파르고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이었다. 자주 외출을 한다는 이들 부부는 “일단 계단이 너무 많고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오늘 경복궁 행사에 참가하게 된 이유는 “편의시설이 어떤가 직접 다녀보고 얼마나 불편한가를 살펴보자”는 생각에서라고 한다.

지하철리프트 이용 평균 40분 소요

박물관 안내도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역시 화장실 표시는 없었다. 안내원에 물어 찾아가던 화장실에는 장애인용이 없다. 좌변기가 있었지만 휠체어는 들어갈 수 없었다.

어느새 12시 30분. 뒤늦게 이현주 씨가 자원봉사자 나재선(23·이화여대 특수교육과) 씨와 함께 도착했다. 반가워하며 왜 늦었냐고 묻는 동료들에게 그는 “리프트가 늦게 와서”라고 말했다.

수유역 부근 집에서 나선 시각은 10시 30분. 고궁까지 오는 데 무려 2시간이 넘게 걸린 셈이다. 동대문운동장에서 휠체어리프트가 안올라와 25분 가까이 기다렸다고 한다. 그 리프트를 타고 지하철이 다니는 아래까지 내려가는 시간이 20분 가량 걸렸다. 나재선 씨는 “리프트에 장애인이 탔을 때는 작동속도가 무척 느리다. 적어도 한사람이 지하철 역까지 내려가는데 40분은 걸리는 셈이니 만약 많은 휠체어 장애인이 한꺼번에 리프트 시설을 이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작동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많은데 이런 점들은 여론조사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하루 경복궁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고 장애인지도를 만들어 경복궁측에 보낼 계획이라고 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15-9185 · 팩스) 02-715-9186 · 통신 ID: rights(천.하) · E-mail: 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제주, '전자주민카드 전쟁' 본격화

내년 시범 실시 앞두고 시민단체와 당국 공방

내년 4월부터 통합전자주민카드가 시범 실시되는 제주도에서는 이를 저지하려는 시민·사회단체와 내무부 및 제주도 당국간의 공방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의 전자주민카드 반대 운동은 앞으로 전자주민카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최근 제주도 당국은 전자주민카드 실시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진화하고 예정대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홍보작업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제주도는 이미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홍보자료 5천부를 제작, 각 시군에 배포했으며, 이를 각 읍면동 사무실까지 내려

보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한 19일엔 도민설명회를 열어 필요성과 실효성을 집중 선전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의 움직임에 대응해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전자주민카드 총력저지운동을 선언하고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10개 시민단체(제주연합, 제주YMCA 등)는 지난 8일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최병모 등, 제주공대위)를 구성했으며 △도민용 홍보자료집 발간 △지역내 여론주도층 1천인의 반대선언 △서명운동 및 주민카드 등록거부운동 등 다양한 '주민카드 반대'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오는 26일 '통합전자주

1997년 4월 19일(토)
제 86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민카드 시행과 프라이버시권 보호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해 반대 여론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제주공대위의 이지훈 집행위원장은 "이미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위한 실무작업이 완료됐으며, 당국이 진행하는 설명회 등은 통과 의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를 위한 전국 공동대책위(공동대표 김진균·김창국)는 17일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과 외국의 사례 등을 담은 홍보자료집을 발간하고 소속 단체와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한 배포작업에 들어갔다. (문의 879-0871 담당: 홍석만)

전자주민카드는 주민등록증, 연금증서, 의료보험증 등 7개분야 41개 정보를 집약해 수록하는 것으로 21세기형 첨단 주민통제장치라 일컬어진다. 따라서 주민카드가 시행될 경우, △정보누출시 막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유출에 따른 정부통제의 강화 등 권리 침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김대통령은 사면불가 방침을 천명하라"

과거청산작업 위한 위원회 설치 요구

전국연합·민병등 '5·18완전해결과 정의실현, 희망을 위한 과거청산국민위원회' 소속 17개 단체와 민주노총·여연은 18일 오전 10시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노 사면반대와 과거청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2면)

이들 단체는 80년 신군부세력의 쿠데타가 군사반란이자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 등 범죄행위를 사법부가 최종 확인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내란종료시점을 비상계엄 해제일인 81년 1월24일로 기간을 축소하는 것은 유감이며, 내란종료시점은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헌법이 종료된 시점인 88년 2월 25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야 정치권 일각과 김영삼 대통령 측근에서 일고 있는 사면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김대통령은 조속히 사면불가 방침을 천명

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신군부와 5, 6공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과거청산 작업을 벌여야 하며,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진실규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과거청산국민위원회등은 이후 사면저지를 위해 각계인사가 참여하는 1980인 선언, 12·12, 5·18 사건에 대한 1-3심까지의 판결문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그 의미와 한계를 종합해보는 판결평석 작업, 5, 6공 인권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정당한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 등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국연합등 과거청산국민위 소속 회원 2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신한국당사 앞에서 5·18 희생자 사면복권 주장에 대한 항의집회를 가졌다.

<폐> 사건 조선족 5명 무기 감형 항소심 재판부 "선상폭력 감인"

1심에서 전원 사형을 선고받았던 폐스카마호 조선족 선원들에게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다만 이 사건 주모자로 지목된 전재천(38) 피고인은 원심대로 사형이 선고됐다.

18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김진기 판사)는 피고인 6명 중 백충범(28) 씨 등 5명에 대해 '법정의 원인이 가혹한 선상폭력에 있었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데다, 초범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극형은 면해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전재천 씨에 대해선 "교육수준도 높은 연장자이면서 범행을 말리지 않고 범죄를 계획·실행한 점은 용서받을 수 없다"며 함소를 기각했다. 문재인 변호사는 해상감도죄가 적용된 점을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성명서〉 12·12,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완전한 청산에 나서자!

대법원은 1997년 4월17일 12·12 및 5·18 사건은 명백한 군사반란,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행위였다는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 선고했다. (중략)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신군부세력의 쿠데타 후 17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검찰의 두차례에 걸친 불기소 처분, 국민들의 줄기찬 투쟁 그리고 그에 이은 5·18특별법 제정, 그리고 재수사와 기소라는 우여곡절 끝에 얻어진 결론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미흡하기는 하지만, 전두환·노태우 등이 학살과 내란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의미에서 일단 이를 환영한다. 그러나 내란종료시점을 2심의 1987년 6월 29일이 아니라 1심과 같이 비상계엄해제일인 1981년 1월 24일로 본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지 아니할 수 없다.

대법원은 쿠데타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반헌법적 행위가 모두 무효이고 또한 쿠데타 권력에 저항한 열사 등 국민의 모든 행위가 정당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했어야 한다.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 등에 대한 내란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국회는 5, 6공 치하에서 벌어진 인권유린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중략)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5·18학살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어졌고, 이에 따라 광주 현장에서 몇 명이 죽었으며, 어떻게 죽었는지 실제적 진실은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 (중략)

우리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사면권은 절대적이거나 무제한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자 한다. 사면권은 양심적인 행위에 대해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심수에 대한 사면은 외면한 채 학살과 내란의 주범들만 사면한다면, 이는 사법정의를 행정부의 수반이 훼손하는 권한남용이며, 국민들의 법감정을 외면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한 짓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중략)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5, 6공 정권의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그 기간에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단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사법적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에 따라 5, 6공의 완전한 청산을 위한 역사적인 사업에 민간, 정부, 국회, 사법부가 다 같이 나서야 한다. 이는 반드시 과거청산만을 위한 작업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희망을 창조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다. 80년에 일어난 삼청교육대사건, 언론인 해직사태 등 불법적인 집권과정에서 저지른 불법행위와 5, 6공 시절 발생한 의문사, 조작간첩 사건, 강제징집 등의 인권유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인 재심을 보장하며, 피해 보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내란세력의 집권도구가 불법기구에 의해 만들어진 각종 악법과 제도도 폐기해야 한다. (중략) 우리는 완전한 과거청산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희망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1997년 4월 18일

과거청산국민위원회 소속 17개 단체, 민주노총·여연

시위학생 총상, 경찰 조준사격 탓

천안경찰서 "근무수칙 지켰을 뿐"

지난달 24일 천안시 신안과출소 앞에서 시위대학생(단국대 박상태)이 입은 총상은 경찰의 조준사격에 의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17일 정해구 교수(단국대 경성대 학장) 등 단국대 경위조사단 6명이 천안경찰서를 방문해 경찰서장 등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확인되었다.

조사단의 일원이었던 이태원(단국대 경성대 학생회장) 씨에 따르면, 경찰측은 "3년 이상의 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의자가 도주할 경우엔 총을 사용할 수 있다"며, "도주하는 학생들의 허반신을 겨냥해 사격했다"고 밝혔다. 특히 "허리나 머리 등에 총탄을 맞으면 어떻게 하려했느냐"는 조사단의 질문에 대해 경찰측은 "발포 순경은 평소 사격실력이 95점이나 되는 명사수여서 그런 걱정은 안했다"고 말했으며, 면회를 불허함으로써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박 씨의 부타때문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에서 학생측은 △진상규명과 경찰서장의 공개사과 및 퇴진 △발포 경찰관 경질 △과잉진압 살인 폭력장비 회수 등을 경찰측에 요구했지만, 경찰서장은 "총기발포는 근무수칙에 따른 합법적 행위였기 때문에 사과는 물론, 발포경찰관을 문책할 의사도 전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주의민족통일 대진총남연합(의장 이상호)과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공동대표 함세웅 등)는 18일 성명을 통해 "공권력 남용과 사건 은폐에 대한 진위를 해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행사와동정

- 4·19 영령 합동참배 및 문화공연
· 때: 4월 19일(토) 오전 11시 · 곳: 4·19 국립묘지
· 주최: 6월민주항쟁 10주년 사업 범국민추진위원회(7320-610)
- 북한여성과 만나누기 사랑나누기 운동 제1차 집중 거리모임
· 때: 4월 19일(토) 오후 2시-5시 · 곳: 대학로 흥사단 앞
·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273-9535)
- <세미나> 한국사회복지정책의 실태- 이념과 철학을 중심으로
· 때: 4월 22일(화) 오후 3시-9시 · 곳: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 내 팔모정 · 주최: 크리스찬 아카데미 한국사회교육원(담당: 손정미 744-3964)
- 발표: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무엇이 문제인가(정무성) 환자의 입장에서 본 의료제도(김창엽) 생활의 기본권, 삶의 터(서종균)
- <대중강연> 올바른 인권 의식이란 무엇인가
· 때: 4월 23일(수) 오후 7시 30분 · 곳: 광주 YWCA 6층 강당
· 강사: 김동환(광주여대 교수, 법과 인권 연구소장)
· 주최: 인권지기(062-529-7576)
- 사회선교정책협의회
· 때: 4월 24일(목) 오후 2시-6시 · 곳: 기독교회관 2층 강당
· 주제: 새 시대의 새 지도자상(강연: 최장집 고려대 교수)
· 토론: 안상수, 전정배, 정우택(의원), 김순영, 문대골(목사), 박원순(변호사)
- 사월혁명연구소가 시상하는 4월혁명상의 올해 수상자로 민주노총이 결정되어 18일 수상식을 가졌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15-9185 ·팩스) 02-715-9186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민언협, 동아일보 규탄 시위

동아 18일자 사설, '전·노 사면' 주장

전두환, 노태우 씨에 대한 사면을 주장한 동아일보 4월 18일자 사설과 관련해, 민주언론운동협의회(의장 김태진, 민언협), NCC언론위원회, 한국기독교 청년협의회 소속 회원 30여 명은 21일 낮 12시 동아일보 본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5월정신 팔아먹는 동아일보 각성하라" "동아일보는 먼저 자유언론 희생자를 기억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우라도 화해를 원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을 통해 참석자들은 "법의 목적은 화해가 아니라 사회정의의 실현에 있다"며, "전·노 씨와의 화해를 주장하는 동아일보의 사설

은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표단은 동아일보 논설위원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최민희 민언협 사무국장은 "동아일보는 전·노 씨와의 화해에 앞서, 75년 자유언론을 외쳤다는 이유로 해직시킨 1백37명의 기자들과 먼저 화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언협은 오늘 김병관 동아일보 사장 앞으로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김 사장이 지난 1월 3일 전두환 씨를 면화한 사실이 있는지 △동아방송 강제 인수에 대한 증거와 관련해 전 씨와의 밀약이 있었는지 △전 씨와의 면화가 1월 4일 '사면' 사설, 이순자 회고록 시리즈, 4월 18일 사설 등 일련의 화해제

처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예정이다.

'전·노 씨 확정판결과 사면'이라는 제목의 18일자 동아일보 사설은 "법의 정신이 기본적으로 정벌에 있지 않고 화해에 있는 것"이라며 김 대통령의 입기중에 전·노 씨 사면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위 사설은 "전 씨가 외채를 줄이고 물가를 한자리 숫자로 잡아 경제를 안정시킨 일련의 공이 있으며, 노 씨는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를 놓았다"고 지적하면서 "일부 긍정적인 측면을 폐기해 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민족화해의 장애물이 안되길"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성명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21일 "황장엽 비서의 입국이 민주화와 민족의 화해에 걸림돌이 되지 말기를 바란다"며 황비서의 입국에 대한 사제단 입장을 밝혔다.

사제단은 성명에서 "황비서가 남북화해에 기여하고 싶어 망명했다지만 정치적 이용물이 될 것임을 각오해야 하며, 안기부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그의 망명으로 타치게 될 공안정국을 우려했다.

또한 "굶어죽어가는 동포를 버리고 혼자 살겠다는 황 씨를 신뢰할 수 없다"며, 가정마다 북한동포들에게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황 비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정치발전과 남북화해, 동포에 실천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인권운동사랑방
28일부터 해화동으로
전화: 741-5363 전승: 741-5364
주소: 종로구 명륜2동 8-29 4층

주간/인/권/호/름

(97년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경찰, 차량 안에 시민 불법 감금

19일 부산역 집회서 '집시법 위반' 이유

경찰이 집회행사용 방송차량과 운전중인 시민을 강제 납치·감금한 사건이 지난 19일 부산에서 발생했다. 이날 부산역 광장에서는 전국연합부산본부와 민주노총 주최로 '4·19 정신계승, 민생파탄·비리주범 김영삼 정권 퇴진을 위한 부산시민대회'가 열렸으며, 집회가 끝난 뒤 방송용 트럭을 몰고 광복동으로 이동하던 이강건(43) 씨가 뒤쫓아온 사복경찰 10여 명에 의해 끌려가 부산역 부근 주차장에서 2시간 동안 감금당했다.

이 씨에 따르면, 사복형사들은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그를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린 뒤 열쇠를 뺏았으며, 이 씨가 이유를 묻자 '집시법 위반'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 씨는 "경찰이 2시간여 동안 외부에 전화연락도 못하게 하면서 차량안에 가둬두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광복동에서의 집회가 마무리된 오후 8시 이후에 풀려났다.

당초 경찰은 이날 집회에 대해 "인도로만 행진할 것, 방송차량을 사용하지 말 것" 등의 조건을 달았었다.

한편, 전국연합 부산본부와 이강건 씨는 이날 사건과 관련, 황철웅 부산경찰청장과 현장책임자 등을 불법감금과 집회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정책의 실태' 발표

오늘 한국사회교육원 세미나

크리스찬 아카데미 부설 한국사회교육원(원장 신필균)은 22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실태-이념과 철학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갖는다.

한국사회교육원은 "사회복지정책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시민의 기본권'의 입장에서 통합적으로 사회 각 영역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초발제로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무엇이 문제인가"(정무성, 가톨릭대 사회복지학 교수), 주제발표로 "환자의 입장에서 본 의료제도"(김창엽,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조교수), "생활의 기본권, 삶의 터"(서중균,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가 발표된다. 문의:766-7329

인권하루소식 합본 7호 발간

96년 하반기(7-12월) 인권하루소식을 묶은 합본7호가 나왔습니다. 합본7호에는 96년 하반기 인권상황과 함께 연대 사태를 인권유린의 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한 글이 실렸습니다. 가격 1만원 (인권단체는 반액)

◆ 4월14일(월) 국민회의·자민련, 북한동포돕기운동 참여키로/전남 영광군 어민과 환경단체 회원등 1천2백여명 영광해발전소 5·6호기 건설지지를 위한 결의대회 가져/한총련 소속 10여명 성균관 대 앞에서 정권퇴진과 시위도중 숨진 조선대생 류재을 씨 사망진상규명등 요구하며 단식농성 돌입/영국 <르 피가로> 보도, 15살 이하 어린이의 백혈병등 암발생이 환경오염과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 시사하는 연구결과 발표

◆ 4월15일(화) 서울 양천여교 여교사 15명, 학교측이 출산휴가를 한달로 제한한데 반발해 교육부와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경찰청 보안국, 사회과학서점 3곳 압수수색 실시, 서점주인 3명 국보법 위반혐의로 연행/광주 송원백화점·대한직접자사등, 안기부가 북한동포돕기 행사방해한 것으로 드러나

◆ 4월16일(수)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식량보내주기 운동나서/<수아라 펌바루안> 보도, 인도네시아 정부 인도네시아 위안부출신 여성들을 위해 일본이 지급키로한 3백70만달러 보상금 받아들이기로

◆ 4월17일(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전두환 피고인에게 군사반란 및 내란죄 인정해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천2백50만원, 노태우 피고인에게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천6백28만원 선고/시민·사회단체 전노사면 반대성명/경찰과 총남총련 발표, 단국대 천안교정 박상태 씨가 3월 24일 밤 동료학생 10여 명과 신안파출소에 타격투검중 경찰이 쓴 권총에 오른쪽 허벅지 관통상을 입은 채 불집했는데, 경찰측이 총상입은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면회마저 거부/

◆ 4월18일(금) 정부, 국제기구 통해 1천만달러 가량의 대북식량지원계획 예정/문화체육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정 및 시행령 규칙 확정, 7월 1일부터 시행키로/광주사회조사연구소와 대구리서치포럼, 서울·광주·대구등 3개 지역 시민 6백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여론조사 결과 62.6% 사면반대/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최병화 부장판사),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이 (주)서울신문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페스카마호 선상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전원 사형선고를 받은 중국동포 피고인 중 전재천씨를 제외한 5명 무기징역으로 감형

◆ 4월20일(일) 제17회 장애인의 날, 각 장애인단체 장애인주간(20-26일) 맞아 다채로운 행사 벌여/교육부, 98학년도 대입에서 모두 33개 대학이 특수학교대상자 특별전형을 통해 1천3백71명을 특별전형으로 뽑은 것으로 잠정 집계/서울시교육청, 경기여상의 재단 경흥학원을 관할청 명령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80년 해직언론인 73명 신군부의 내란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들에 대해 국가배상요구하는 국가배상 재심청구 소송

경기여상 파행 7주째 교사·학생 "이젠 지쳤다"

재단비리와 열악한 교육환경에 반발하며 빚어진 경기여상 학생들의 수업불참 사태가 7주째에 접어들었다. 교실마다 책상위로 먼지만 쌓여갈 뿐, 학생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21일 오후 5교시 수업참가자는 3학년 1반 2명, 3반 1명, 5반 2명. 세 학급에선 수업하는 시늉이라도 벌이고 있지만, 2, 4, 6반엔 교사 혼자서 텅빈 교실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교사들도 이젠 사태를 관망할 뿐이다. 한 교사는 "집집마다 전화를 해도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며 "교육청과 재단의 조치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고 체념한다.

그나마 활기가 느껴지는 곳은 학생회실. 학생회 간부들은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학교환경실태조사에 나섰다. 카메라를 들고 학교 곳곳을 돌아다니며 촬영에 여념이 없고, 대자보도 작성하고 있다. 한 학생은 "관선이사 파견만이 해결책인 것 같아요"라며 당분간 수업 정상화는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젠 지쳤어요"라고 고백하는 그 학생의 표정에도 피곤함이 가득하다.

현재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는 경기여상에 대한 조사활동이 한창이다. 지난주부터 교육청 관계자와 교사, 학부모, 학교장 등이 잇따라 시교위에 출석하고 있다. 하지만, 시교위의 결론이 내려지기까지는 앞으로 최소 20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마다 20-30명에 달하는 진화희망자 뿐 아니라, 2천2백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을 길거리에 방치해 두기에 너무 긴 시간이다.

인권
시평

'인권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과 '인권'에 대한 관심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K군.
인권교육을 받기 위하여 인권운동사랑방을 찾은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들어 '인권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몇 개 대학에서는 인권과 관계있는 강좌가 생겼습니다. '변혁운동'이 벽에 부딪혔다는 생각에서인지 대학생들의 담론에 '인권'이라는 항목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불황에 시달린다는 출판사들마저도 인권에 관한 책들을 '무난한 사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듯합니다.

무지막지한 폭력이 날마다 인권을 처참하게 유린했던 7·80년대, 우리 국민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차라리 애뜻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 '문민 이데올로기'의 그늘 아래 '인권'에 대한 안면몰수의 시대가 4-5년 기량 계속되다가 요즘 와서 '인권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에 대한 관심이 아닌, '인권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라는 점이, 따라서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여전히 한층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이 못내 아쉽고 안타깝지만 우리 인권운동가는 당신 같은 똑똑한 학생에게 인권교육을 하도록 만들어준 요즘의 이런 현상을 그런 대로 반가운 일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거짓 자유권과 가짜 평등권

그러나 이제 "사람은 누구나 나면서 자유롭고 평등하다"라는 아름다운 말로 시작되는 인권의 세계로 당신의 손을 잡고 안내해야 할 나에게는 하나의 큰 슬픔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인권이란 거짓이다"라고 말하면 당신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아름다운 말로 가득한 인권 세계의 현실 속에는 가도 가도 권력의 완강한 벽과 도저히 건너 갈 수 없는 '빈부의 강'으로 보호 받는 거짓 자유권과 가짜 평등권이 있을 뿐입니다.

K군.
인권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보편성'이라고 흔히 설명됩니다. 그러나 품속에서의 인권이라면 모르되 현실세계에서 지금까지 인권이 '보편적'으로 존재해본 일은 없었습니다. "자유!" "평등!"을 외치면서 근대 시민혁명의 주도권을 잡은 시민계급은 혁명에 성공하자 그 '자유'와 '평등'을 자기들의 계급이익에 맞게 규범화시켜 그것을 "민인을 위한 시민권"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봐라, 거지도 노동자도 모두 재산을 소유할 권리, 자유롭게 계약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자신의 계급적 이익, 정치적인 저의를 '보편적 인권'이라는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하는 위선의 역사는 이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이 위선의 역사는 절정에 달해 있으며 현대사회는 여전히 "일하는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반박할 길 없는 지당한 주장을 '보편적 인권'이라는 초계급적인 환상으로써 무력한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세상 평평거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무리 점잖게 "누구나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라고 설교해도 그것이 거짓말임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집회·시위·결사·양심·프라이버시·신체·재판·교육·성... 그 어느 것을 보아도 "누구나 똑같은 권리"가 아님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약자는 언제나 강자와 "똑같이" 권리를 보장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것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때로 약자가 "똑같이" 권리를 행사하게 될 뻔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도는 언제나 '피의 탄압'으로서 끝났습니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며, 인간의 역사는 항상 그렇게 전개되어왔던 것입니다. 내무부 장관 시절의 최형우 씨가 무식하게도 "공산주의자에게는 교문을 해도 된다."고 했을 때, 혹은 북한이 "우리는 자기 당성을 숨기지 않듯이 인권문제에서도 계급성을 숨기지 않는다"고 잘라 말할 때 나는 이 뻔뻔스러운

술직함에 차라리 더 호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K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점점 '인권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런 관심은 강단에서 또는 서점에서 인권장수에게 약간의 돈을 가져다 줄 만큼 자라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 시대가 오면 아마도 당신은, "사람은 누구나 나면서 자유롭고 평등하다"라는 아름다운 표현을 애인의 재잘거림처럼, 귀에 익은 노랫말처럼 혹은 '차 한잔의 에세이'처럼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 지도 모릅니다. "아아, 그 기를 때에 찌든 노동자도 나와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구나. 평등이 좋긴 좋다..."

"누구나 나면서 자유롭고 평등하다"

앞으로 며칠 동안 이곳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인간의 권리에 대해 공부하게 될 K군. 당신이 이곳에서 공부하는 동안 나는 당신에게 변화가 생기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의 '인권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인권'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인권'에 대한 치열한 관심을 간직하는 사람은 완강한 현실의 벽에 번번히 부딪쳐 수없이 깨지면서 분노 속에서 '인권'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터득할 것입니다. '인권'을 통해 이 세계의 진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면서 자유롭고 평등하다'라는 말이 가슴이 찢어지게 사랑하면서 슬픔이 없이는 그 말을 입에 올리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권의 역사는 '시민권'에 대한 인간해방적 인권개념의 유구한 반역의 역사임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인권'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15-9185 ·팩스) 02-715-9186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4월 23일(수)

제 86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삶의 질 향상, 불평등 해소부터

사회교육원 세미나 "사회복지는 기본권"

의료·주거 문제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에 대한 학계와 시민단체의 토론장이 22일 크리스찬아카데미 부설 한국사회교육원(원장 신필균) 주최로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펼쳐졌다. 참석자들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사회복지의 보장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정무성(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기초발제가 진행된 데 이어, 김창엽(서울대 의대) 교수와 서종균(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씨가 각각 의료와 주거권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았다.

기초발제에 나선 정 교수는, "복지국가란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 사회"라고 소개하며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불평등 구조의 해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정치적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된 선진국에서는 '사회적 권리'의 신장에 주력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분배보다는 성장에만 역점을 둔 경제개발정책이 계층간, 지역간 불평등을 첨예화시켰고, 인간상실과 소외감의 문제를 야기시켜왔다"며 "사회문제의 심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복지제

도의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제1과제는 사회복지 예산구조 개혁 정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복지수준은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국가에 의한 복지비 지출이 GDP(국내총생산)의 5%를 넘어서면 복지기능이 강화되는데, 문민정부 3년간 사회개발예산규모는 약 1% 수준이었으며, 이는 15%이상을 유지하는 선진국은 물론, 브라질(7.7%) 칠레(8.8%) 그리스(6.3%)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이점과 관련해 정 교수는 정부의 예산구조 개혁을 우선 과제로 꼽으며 "2천년대 초까지 복지비 지출이 GDP대비 5%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간 매년 최소한 40% 이상의 복지비 증액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형 복지모형'과 관련해, 정 교수는 "경제성장의 논리에 밀려 복지정책을 최소화하려는 것은 사회복지 본래의 기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복지서비스에 시장논리를 도

입하려는 것은 정부가 복지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며, 동시에 소외계층의 일단 자살, 지존과 사건처럼 불평등 문제를 오히려 첨예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복지운동의 활성화"를 대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보건으로 문제, 사적소유가 원인 '한국 보건의료의 문제점과 개혁방향'에 대한 발표에서 김창엽 교수는 "한국 보건의료의 문제점은 그 구조가 사적소유를 기본으로 형성된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윤의 논리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의료구조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민간부문에서 최소한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보건 의료는 인간의 기본권이자 사회적 기반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종균 씨는 '주택문제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주택보급율을 비롯해 총량적·평균적인 주택시장은 나아졌지만, 불평등은 심해지고 주거빈곤의 문제는 여전히"고 진단했다. 특히 "최저주거기준을 지표로 하는 새로운 주택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임차권의 보장 등 주거권에 대한 인식전환과 사회적 보장분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세미나 주요내용 다음호 소개 예정).

주요 공판 안내

- ▶4월 23일(수) 나현균(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전해투 위원장) 4단독, 오전 11시, 524호, 속행 서형준(나라사랑청년회 회장) 국보법, 4단독, 오후 5시, 524호, 속행 현석호(국보법 찬양·고무등) 합의 5부, 오전 10시, 425호, 선고
 - ▶4월 24일(목) 하영준(국보법 찬양·고무 등) 합의 6부, 오전 10시, 424호, 선고
 - ▶4월 25일(금) 허인회(국보법 불고지) 합의 7부, 오후 2시, 423호, 속행 윤석진(국보법 찬양·고무, 컴퓨터통신 관련) 4단독, 오전 10시, 524호, 선고 이승환(국보법, 한청협 부의장) 합의 2부, 오전 10시, 302호, 선고
- 서울지법 형사국

인권운동사랑방
28일부터 해화동으로
전화: 741-5363 전송: 741-5364
주소: 종로구 명륜2동 8-29 4층

서울다큐영상제 아닌 'Q채널 영화제' 심의 여전... 영화진흥법 문제점 노출

18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제2회 서울다큐멘터리영상제의 <대평천국의 문> <레드 헌트> (RED-HUNT) 상영취소 결정에 따른 파문은 이미 영화진흥법 개정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서울다큐영상제 주최측인 삼성영상사업단측 및 주관인 Q채널측이 심의문제의 외부압력을 감안해 '일찌감치 알아서 가는' 행동을 취한 것이다.

이러한 주최측 태도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표시하며, 19일에는 서울다큐멘터리 영화제 심사위원 김동원·이충직·전양준씨, 자원봉사자 일동, 프로그램 어드바이저, 코디네이터 등이 일제히 업무사퇴를 선언했다. 또한 김대현(서울국제독립영화제 기획) 서준식(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이용관(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씨등도 이들의 결정에 공감을 표했다.

<레드 헌트> 상영취소, 심사위원등 전원사퇴

이들은 "삼성영상사업단은 중국무역상의 불이익을 염려하여 상영을 취소하게 되었다고 알려왔다"면서 이는 눈앞의 경제적 이해관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문화사업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평천국의 문>은 이미 외국의 많은 영화제에서 상영되어 왔으며, 그때마다 행해졌던 중국측의 압력을 각국 영화제측은 강경하게 맞대응하며 작가의 창작의 자유와 관객의 관람할 자유, 역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다큐멘터리의 정신을 옹호해 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레드 헌트>를 '방송부적합'이라는 이유로 본선진출자체를 취소시킨데 대해 "일정한 절차를 통해 본선에 오른 작품을 주최측 일방의 판단으로 취소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고 반문하면서 "관객과 심사위원이 보고 평가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뺀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레드 헌트>를 제작한 허니영상(대표 조성봉)측은 개막식에 참석해서 상영이 취소된 것을 알게되었다며, "제주 4·3을 다루었다는 작품소재를 문제삼아 상영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검열행위이며, 사전심의 행위"라고 문제제기했다.

자본의 논리에 봉쇄당한 창작의 자유, 관람의 자유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영화진흥법이 사전심의에 대해 위험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결정취지를 역행했다는 비판이 그대로 현실화된 것이다.

개정 영진법은 공론의 심의제도를 한국공연예술진흥협회의에 의한 상영등급 부여제도로 바꾸었으나, 이 공진협의 판단에 따라 6개월간 등급부여를 유보해 상영을 실질적으로 금지할 수 있게 했다. 또 공연법상 극장측이 공연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의필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의'는 영화 상영의 전제조건인 셈이다.

"총파업 투쟁의 교훈과 노동자·민중운동이 나아갈 길"

때: 23일(수) 오후 6시30분 / 곳: 종로성당 3층
주최: 민중연대투쟁위, 한총연, 민운탄대책위

인권영화제 - 제르미날

프랑스 노동자들의 피맺힌 함성

감독: 끌로드 베리 / 주연: 르노, 제라르 드빠르듀 / 94년작
헐리웃의 물결에 위협을 느낀 프랑스가 정부예산 수십 억을 들여 자존심을 걸고 만들었던 영화 <제르미날>이 <취락기 공원>의 위풍에 백을 못추고 당시 국내 상영에서 보름만에 간판을 내렸다. 프랑스의 양심이 1백년을 지켜왔다면 우리에게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80년대가 잊혀졌음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불러서 그리우면 사랑이라 했던만 이제는 아무도 부르지 않는 그 낯선 이름을 서울 하늘 아래서 끌로드 베리가 목이 터져라 외쳐댔다. "우리에게 빵을 달라! 아니면 죽음을!"

거짓말 조금 보태서 영화의 절반은 빵 먹는 장면이다. 1백년 전 제르미날의 인간에게는 빵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40도가 오르내리는 지하 갱도에서 땀과 탄가루로 범벅이 되어 빵 한 조각을 목구멍으로 밀어넣는 탄광노동자들과 호화스러운 저택에서 수입한 계살을 뜯는 자본가의 반목이 영화의 큰 흐름이다.

영화는 에밀 졸라의 탁월한 문체와 치밀한 구성에 결코 뒤지지 않았다. 수백 억을 투자한 덕분에 완벽한 세트르 1백년 전 보회 수갱을 고스란히 살려냈다. 대대손손 광부들의 애환이 서린 삶의 터전임과 동시에 그 피땀을 등에 업은 자본의 보따리 보회 수갱이 4백미터 지하로 몽땅 쏟아져 내린다. 노동자의 한서림도 자본가의 탐욕도 함께 매장되는 순간이다.

영화의 치열함은 1백년의 세월을 단숨에 뛰어넘는다. 자본의 총칼 앞에 들이민 마유(제라르 드빠르듀 분)의 외침.

"짜봐라! 어서 짜봐, 이 개자식들이!" 겹겹이 쌓인 노동자의 울분을 내뿜어요, 일한 만큼 몫을 찾겠다는 정당한 부르짖음이다.

에티엔(르노 분)이 앞서 깨어난 자의 고통과 권력 앞에 절망스러운 무력감을 드러내지만 붕괴된 탄광 속에서 20일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나와 죽음을 삼킨 듯한 하얀 저 눈이 내일을 꿰뚫어 본다. "파업은 실패다. 그러나 빵을 쥐고 주인 행세를 하는 몇 안되는 우리들과 수천만 노동자들이 대면할 그 날은 반드시 온다."

남편을 잃고 자식도 잃고 끝끝내 재업을 반대하던 마유의 아내, 스무살 시적부터 갱도를 안내러가던 노동자의 어머니 마유드(미유 미유 분)가 사십줄에 다시 수갱을 탄다. "남편도 없다. 자식도 없다. 희망도 없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 나는 내려간다." 그것은 모순된 시대에 살아남은 자의 절망적인 몸부림이다.

어느 민족에게나 피로 점철된 역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프랑스의 오늘이 있기까지 피맺힌 노동자들의 절규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이 영화를 프랑스 정부가 수백억의 제작비를 들여 앞장서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부러움이 아닐 수 없다.

[전경일·민주연론운동협의회 영화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15-9185 ·팩스) 02-715-9186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4월 24일(목)

제 87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통신에서 꽃피는 동포사랑운동

'북한동포돕기 999운동'에 동참 호소

북한동포돕기운동이 컴퓨터 통신상에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희망터(천리안)·노래하나 햇볕한줄(나우누리)·바른통신을 위한 모임(하이텔)·참세상 등이 함께 「북한동포돕기 범통신인 모금운동네트워크 999」를 구성, 22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북한동포돕기 999'는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그리고 각 동호회로 흩어져 있는 통신인들이 함께 북한동포돕기에 힘을 모은다면,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통신인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각 통신망에서 알람판을 통해 '북한동포돕기 999' 활동을 알리며, 참세상 GO LOVE를 통해서 자세한 논의사항과 공금증을 풀어주고 있다.

'북한동포돕기 999'라는 이름은 평화의 비둘기 소리로, 완성을 뜻하는 1천을 향한 우리의 염원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 동호회에서 북한동포 999명을 돕자고 제안하는데, 모금액이 2백 90만원이면 북한어린이 9백99명을 한달간 도울 수 있는 액수라고 한다.

'북한동포돕기 999'는 △통신인 공동모금 △공동머릿말로 (북한돕기)나 (남♥북) 사용 △홈페이지 제작 활동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통신공간에 통신인 공동모금활동 홍보와 정치인 포럼이나 청와대 게시판, 신문사 게시판, 플라자 및 토론실에 동포애적인 차원에서 북한동포돕기의 시급함을 호소하는 의견을 부지런히 펼칠 것을 권유했다.

이미 희망터·진보통신단체 연대 등은 통신망에서 5.18 특별법과 특별검사제 도입 제정을 위한 전국민적 운동을 벌인 바 있으며,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반대서명운동에는 7천여 명의 통신인

과 4백여 개의 동호회와 홈페이지에서 블랙리본달기운동 등을 펼쳤다.

♥ 북한동포돕기 범통신인 999 통장
조흥은행 북한통기 549-04-043337
우체국 북한통기 012187-0063675

사회단체 회원 연행 잇따라

노정연 회원 4명 등 20일새 24명

황장업 입국과 관련, 공안정국 조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진보적 사회단체 회원들에 대한 연행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일 전국학생정치연합 회원 12명, 9일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회원 6명, 16일 대화가 서점대표 3명이 잇따라 구속된 데 이어, 23일엔 노동정치연대(노정연) 소속 회원 4명이 총재동대 공본실로 연행되었다. 노정연 관계자가 확인한 연행자는 김해련(전 대표) 이용근(전 집행위원장) 윤문호(전 북부지부장) 김종박(전 안양지부장)씨 등이다.

노정연의 한 관계자는 "1월 총파업시기에 발행한 <노동과 정치>라는 신문의 내용을 문제삼아 노정연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려는 것 같다"며 "이는 황장업이 입국하고 삼반기 임금투쟁이 다가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정연은 노동자와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진보정당 건설이라는 목표하에

지난해 3월 창립되었으며, 노동강좌 개설, 총파업 속도 <노동과 정치> 발행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권 부총리 발언 근거대리"

국민회의, 황장업리스트 관련 논평

23일 새정치국민회의는 권오기 부총리가 22일 열린 통일외무위에서 황장업리스트가 있는 것처럼 발언한데 대해 근거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국민회의는 "황장업 씨 귀국이후 벌어지고 있는 권력핵심부와 통일부총리의 미묘한 '연기피우기'에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있다"며 "현정권이 만에 하나 황장업 사건을 국내정치에 악용하거나 공안정국 조성에 이용하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정부 즉각 북한식량지원을!"

여성계 717명 서명

학계·의료계·여성사회단체·정치계 등 소속 여성 7백17명은 23일 정부의 즉각적인 북한 식량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우정(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대표 등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먼저 굶어죽어가는 동포의 생명살리기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해 죽어가는 북한동포의 생명을 살리는 인도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남북한 정부에게 "판문점을 통한 직접 교류 정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자주민카드 공청회

때:4월 24일(목) 오후 3시-6시 / 곳:한국프레스센터 대회의실(20층) / 주최:내무부
주제발표:주민카드사업개요(박정호 내무부 추진기획단장), 주민카드의 필요성 및 개인정보보호(최종욱 교수), 주민카드의 사생활침해(김기중 변호사)

<자료요약> 한국 보건의료의 문제점과 개혁방향(한국사회교육원 1차 사회복지 세미나 김창엽(서울대 의대 교수)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의료의 공공성 살아남기 어렵다”

1. 한국보건의료의 기본 성격

한국의 보건의료를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구조적 특성은 그것의 사적(私的) 성격이다. 예를 들어 의료시설의 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병원 병상수만 하더라도 전체의 약 75%를 민간이 차지하고 있어 민간 우위의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굳이 사적 성격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병원시설의 소유 주체와 무관하게 어느 의료기관도 영리추구와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소수의 국립병원을 빼고는 정부가 운영 주체가 아닌데다가 별도의 직접적인 재정지원도 없다. 따라서 거의 모든 의료기관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망정 의료기관 운영을 위해 수익을 올리지 않을 수 없고, 이는 한국 의료의 사적인 성격을 불가피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의 응급환자 기피 문제는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라 할 만하다. 아무리 환자가 많은 대학병원에서도 만약을 대비해서 응급환자를 위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여분의 병상과 수술시설을 갖추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일반 국민들의 정서이고 사회적 요구일 것이다. 그러나 평소에는 비어 있을 이런 여분의 병상과 시설에 대한 부담은

중앙정부 예산 중 보건분야 지출비율(단위:%)		
	1980	1993
한국	1.2	1.0
호주	10.0	12.6
프랑스	14.8	16.1
독일	19.0	16.8
미국	10.4	17.1
영국	13.5	14.0
말레이시아	5.1	5.7
브라질	4.0	5.2
터키	3.6	3.0
태국	4.1	8.2
필리핀	4.5	3.0
이집트	2.4	2.1
스리랑카	4.9	5.2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95

누가 해야 할까? 굳이 답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스스로 수익을 올려 운영을 해야 할 병원이 이것을 아무 조건없이 부담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그 부담은 사회 전체가 나누어야 한다. 이것이 의료의 공공성 성격이다.

난맥상을 보이는 의료전달체계도 마찬가지다. 동네 의원은 나날이 줄고 영세해지는 반면 재벌 기업까지 가세한 대형병원의 위세는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를 유례없이 기형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이 역시 일반 국민과 의료인, 그리고 병원의 비윤리적, 이기적 자세를 탓할 일이 아니다. 사적인 성격의 한국 의료의 보일 수 있는 전형적인 운동, 발전 방식이라 해야 할 것이다. 중병이 아닌 가벼운 병은 집 근처 1차 의료기관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공의 논리는 경쟁력과 효율성으로 대변되는 대형병원의 자본주의적 운동방식 속에서는 살아남기 힘들다.

2. 보건의료에 대한 재인식

보건의료를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사회적 정향성은 어느새 일반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 그리고 문화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병에 걸리면 으레 개인이 해결하는 것이 보통이고, 경제적인 부담도 개인이나 가족이 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보건의료의 사적 지향성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의료의 질에 대한 무관심과 무시이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의 질을 사적 영역에 맡겨 두는 체계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설사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나 개입이 없는 경우에도 의료의 질에 대해서는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차원에서 강력한 감독과 개입이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핵심요소인 의료의 질조차 민간의 손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가 갈수록 국가의 책임이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는 것이

다.<표 참조>

보건의료나 복지 정책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정향성은 상당 부분 보건의료의 가지는 사회적 가치를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잘못된 인식의 요체는 보건의료를 생산적인 투자가 아닌 소비적인 것으로, 권리가 아니라 시혜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는 삶의 질과 사회의 균형발전이 아니라 GNP로 상징되는 외형적인 경제성장을 역사 발전의 중심에 놓는 전도된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3. 보건의료의 구조개혁

구조개혁의 일차적인 목표는 공공의료의 강화와 더불어 영리 추구를 매개하고 있는 보건의료 기관과 인력의 경제적 유인 기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구조개혁의 목표를 찾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과제는 남는다. 무엇을 계기로 어떤 힘에 의해 구조개혁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가능성의 단초를 일반 국민, 소비자, 환자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일반 국민과 소비자가 놓은 변화의 주춧돌은 조직화된 노력에 의해서만 현실화될 수 있다. 조직화된 노력의 일차적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좁혀볼 수 있다. 하나는 보건의료 내부와 정부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보건의료의 바람직한 지향성을 새로 생산하고 이를 유통시키는 것이다.

새로운 지향성이란 보건의료의 '상품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논리를 기초로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는 것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보건의료의 문제는 더 이상 개별적인 문제에 머무르지 않는다. 정치와 이념의 영역에 폭넓게 걸쳐 있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보건의료의 바람직한 발전은 이러한 정치·이념적 발전과 무관할 수 없다. 보건의료와 복지에 대한 근본적 인식들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15-9185 · 팩스) 02-715-9186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4월 25일(금)

제 87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통제?”...“편의?”

전자주민카드 공청회, 찬반 공방 치열

95년부터 독자적으로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추진해 오던 정부가 뒤늦게나마 모양잡추기에 나선 인상을 주고 있다. 내무부는 내년에 전자주민카드가 시범 실시될 예정인 제주도에서 지난 19일 설명회를 가진 데 이어,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자주민카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과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의 김기중 변호사 등 9명이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양측 간의 치열한 찬반 공방이 벌어졌다. 내무부측이 설명하는 전자주민카드의 필요성은 “주민편의와 비용절감, 정보화 마인드의 구축을 위해서”로 요약된다. 김돈기 내무부 주민과장은 “현행 주민등록증이 위·변조가 용이해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카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뿐 아니라, 운전면허증·의료보험카드 등을 통합함으로써 휴대가 간편해지고 발급 절차가 간소해지는 등 주민 편의가 증진된다”고 밝혔다. 또한 “신분증 경신에 따르는 경비 절감과 행정업무의 간소화, 정보마인드의 강화도 주민카드가 가져다 줄 효과”라고 설명했다.

반면, 각종 증명과 정보가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되는데 따른 ‘개인 정보 누출의 위험성’과 ‘정부통제의 강화’를 우려하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었다. 김기중 변호사는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은 단순히 여러 신분증을 하나의 IC카드에 수록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화된 개인정보가 상호유통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에 의한 행정부의 통제 강화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권력의 분립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자주민카드의 실시로 우려되는 ‘정보 유출 및 보안 문제’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보안문제는 결국 사람의 문제”라며 “기술적 보안대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경근 숭실대 교수는 “주민카드는 각각의 증명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병렬적으로 배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타 기관에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은 무리한 추측”이라고 반박했다.

인권운동사랑방
28일부터 해화동으로
 전화: 741-5363 전송: 741-5364
 주소: 종로구 명륜2동 8-29 4층

한편, 전자주민카드 도입의 법적 문제와 관련해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주민카드의 소지를 강제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마저 강제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과잉 제한하는 위험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민 기본권에 본질적 영향을 미치는 주민카드의 도입은 내무부령이 아닌 국회의 법제정으로 추진되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자주민카드가 그것이 전국민의 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충분한 여론수렴과 법적 보안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 찬반 공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정대로 사업을 밀고 나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배동인 강원대 교수는 “전자주민카드의 도입은 신중한 검토 속에 반드시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쌀(米)을 나누어 먹으면(口) 화해(和)가 이루어집니다.
 겨례사랑·북한동포 돕기 범국민운동 성금보내는 곳
 조흥 308-04-589861 / 상업 425-05-037313/농협 001-01-294184 (범국민)

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 찬반 공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정대로 사업을 밀고 나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배동인 강원대 교수는 “전자주민카드의 도입은 신중한 검토 속에 반드시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위학생 총격 경찰’ 고발 충남경찰청장 등, 직권남용 혐의로

민주주의민족통일대선충남연합 (의장 이장호)은 23일 김형진 충남경찰청장 등 경찰관계자 4명을 불법적인 총기사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검찰에 고발된 관계자는 김 청장의 예 이기목 천안경찰서장, 한대식 천안경찰서 신안파출소장, 임양수 순경 등이다.

고발인들에 따르면, 임 순경은 지난 3월 24일 천안시 신안파출소에 화염병과 페인트병을 던지고 달아나던 단국대생 박상태(경제무역학부 2년) 씨를 조준사격해 관통상을 입혔으며, 김 청장 등은 지휘책임자로서 불법행위를 알고도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직무를 이용해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이다.

대전충남연합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불법적인 총기사용과 직무수행을 벗어난 과잉진압 등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제12조를 위반했으며, 형법상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를 범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상태 씨와 박 씨의 가족은 사건이 확대될 경우 입게될 불이익을 우려해 고소 등의 조치를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네바소식 ㉔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폐막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은 국제사회의 정당한 관심”

지난 3월 10일 개막된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위원회)가 나이지리아 인권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임명,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작업집단 설립등 78개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26개 사안을 결정한 가운데 4월 18일 6주간의 회의를 마쳤다.

폐회연설에서 의장(Miroslav Somol, 체코)은 “이번 53차 회기의 결과물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지만 모든 영역에서 결의안이 실제적으로 채택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단지 의례적인 사업이 끝났을 뿐이라는 것이 제일 먼저 드는 현실적인 생각”이라며, “인권위원회의 논의가 현 상황 속에서 과연 충분했는가에 다시 한번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덧붙여 “세계도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상을 기대했음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여러 국가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는 중에는 위원회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토론이 집중되었다. 다수의 개발도상국의 대표자들은 “위원회의 일부 구성원이 대화와 협력을 넘어서서 대결하기를 좋아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들은 “국가의 인권상황을 정치화하는 것은 인권의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국가들의 인권상태에 대한 관심은 국제사회의 정당한 관심”이라고 반격하였다.

위원회는 동티모르에서 지속되고 있는 비사법적 살인, 실종, 고문과 자의적 구금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유엔의 각 주제별 보고관과 작업집단이 동티모르를 방문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촉구하였다. 한편 중국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은 비행동(non-action) 동의안이 통과된 후에 부결되었다.

그밖에 주요 결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주민의 권리

위원회는 ‘선주민의 권리선언을 위한 작업집단’에 선주민 단체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한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정을 환

영하였다. 위원회는 선주민 단체들이 이 작업집단에 지원할 것을 장려하는 한편 선주민 출신의 전문가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것을 작업집단에 촉구하였다.

식량에 대한 권리

위원회는 전세계 8억이 넘는 인구가 기본적인 영양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식량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인간성의 상실로 결과라고 보았다. 따라서 “모든 출처를 동원하여 식량에 대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내년 세계인권선언 채택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결의문에서 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이후 이루어진 진전을 재고, 평가하고,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대중의 보다 나은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노력을 채택할 것을 권유하였다.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민기구에 관한 결의안

위원회는 국민인권기구의 설립과 이미 국민인권기구가 존재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그것의 강화를 장려하였다. 위원회는 국민인권기구의 설립과 강화를 위한 각국 정부의 지원요청에 우선권을 줄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하였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결의안

위원회는 아동섹스관광이나 여타 형태의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래피를 포함하여 아동 성착취와 아동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동매매에 초점을 둔 아동권리조약의 선택의정서 초고작성에 관한 작업집단의 보고서를 각국 정부와 여타 관계자에게 보내 의견을 구할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하였다.

[유엔인권센터 보도자료 중, 번역-인권운동사랑방 교육실]

행사와동정

- 김현철 구속수사와 대선자금 공개촉구 국회앞 집회
 - 때: 4월 25일(금) 낮 12시 · 곳: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맞은편 대립빌딩 앞
 - 주최: 민주노총, 전국연합, 참여연대
- <토론회> 97년 정세전망과 민주노총의 과제
 - 때: 4월 25일(금) 오후 7시 · 곳: 지식인연대 사무실(879-0871)
 - 주최: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준)
- 체르노빌 핵발전소 참사 11주기 추모행사 <사진전>
 - 때: 4월 25일(금)-26일(토) · 곳: 영광 종합터미널 앞
 - 주최: 핵발전소 무엇이 문제인가(발표:김종달 교수)
 - 때: 4월 26일(토) 오후 3시 · 곳: 영광 실내 체육관
- 민가협 앙심수후원회 9차 정기총회
 - 때: 4월 26일(토) 오후 4시 · 곳: 대학로 흥사단 3층 강당(743-2511)
- 제1회 사회주부대회
 - 때: 4월 28일(월) 오후 2시-4시 · 곳: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 주최: 한국여성민우회(269-5763)
- 외국인 여성노동자 상담소 개소 1주년 기념 심포지엄
 - 때: 4월 29일(화) 오후 2시 · 곳: 기독교연합회관 4층 중강당
 - 주최: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
- 6월항쟁 10주년사업 범국민추진위원회의 20차 집행위원회
 - 때: 4월 29일(화) 오후 8시 · 곳: 뉴서울호텔 301호 또는 401호(735-6211)
 - 안건: 10주년사업 기획확정의 건 등
- 대통령 선거대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차 워크샵
 - 때: 4월 30일(수) 오후 3시 · 곳: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
 - 주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15-9185 · 팩스) 02-715-9186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4월 26일(토)

제 87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잠수함 사건 의혹제기’ 무죄선고 서울지법 “레닌저작선등 이적성 없다”

지난해 9월 컴퓨터 통신을 통해 강릉 잠수함 사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진(28) 씨에게 24일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서울지법 형사 4단독, 담당판사 박찬)는 “윤 씨는 사건 발생 초기 언론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던 시점에서 이 글을 썼으며, 하나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의 상습적 주장에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국보법 7조 엄격히 적용해야’

재판부는 또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므로 이를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 존립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검찰에서 제시한 『세계철학사』 『레닌 저작선』 『변증법적 유물론』 『역사적 유물론』 등에 대해

이적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윤 씨에게 적용된 이적표현물 소지·탐독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 책들이 피고인의 전공(사학)에 관련된 서적이고, 일반 서점에서 구매할 것이며, 표현물 자체가 국가존립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9월 컴퓨터통신상에 ‘그들이 무장간첩일까?’(본지 96년 11월 2일자 참조)라는 글을 띄웠다가 10월 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며, 올 1월 보석으로 석방된 뒤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대학생연대 13명 연행 국보법 7조 위반 혐의

24일 오전 7시경 서울대 학생연대 회장 오준호(국문 94) 씨를 비롯한 회원 13명이 자택 등에서 연행되었다. 연행자중 군복무 중인 조영현(기계 91) 씨 등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흥제동 대공본실에서 조사중이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7조 1(찬양·고무) 등, 3(이적단체 구성·가입), 5(이적표현물 제작·소지)항의 혐의를 받고 있다. 총학생회측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대동제 때 사회과학서적을 포함해 금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한편 25일 전국학생연대는 서울대에서 이들의 연행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다.

<연행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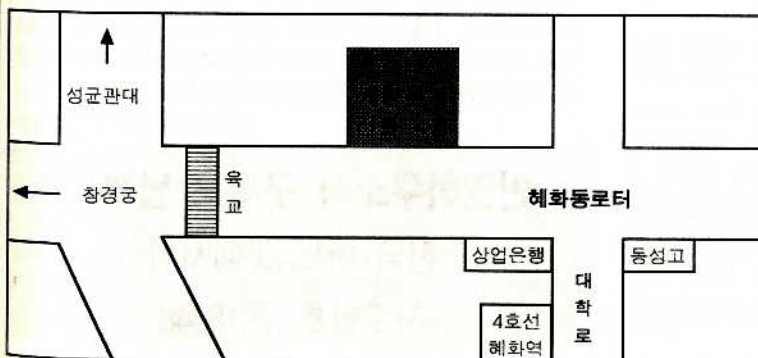
- 김현식(프로메테우스 회장, 기계 94)
- 조정래(독문 93) 정승욱(기계 94) 고영준(토목 95) 이승(수학 94) 김상근(39대 총학생회 환경위원장, 지질 91) 안재완(대학생신문사, 항공 93) 윤성환(제5기 서울대 학생연대 의장, 철학 93) 최성현(의예 94) 기무사 연행- 조영현, 김형민(화학 93) 이기성(사회교육 93)

한청협 이승환 씨 항소심 국보법 위반 1년6월 선고

서울고법 형사 2부(김상기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이승환(한청협 부의장) 씨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사측의 항소를 각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95년 북경회담과 96년 폴란드 바르샤바회담 참석 및 한청협 기관지 <자주의 길> 제작등 국가보안법 4조, 7조 등의 혐의를 인정 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의 1심 형량은 적당하다”고 판결했다.

← 인권운동사랑방 찾아오는 길

전화: 741-5363 전송: 741-5364
주소: 종로구 명동2동 8-29 4층



“시민의 공원, 시민 스스로 지킨다” 농골산 살리기 투쟁 다섯달째

구로구와 양천구 경계에 자리한 농골산 지역주민들이 지역 녹지공간을 지키려고 다섯 달째 투쟁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의 평화스런 쉼터였던 농골산에 전문이 감돌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월 한 개발업자가 포크레인을 밀고 들어오면서 부터였다. 이 업자는 관할 구로구청측으로부터 농골산 입구의 테니스장 건설을 허가받았던 것이다. 산을 깎아내려는 개발업자와 산을 지키려는 주민들간의 포성없는 전쟁은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개발업자가 고용한 용역 직원들에 의해 성추행까지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1만6천여 명 반대서명

여기저기 포크레인의 활판 자국으로 흉물이 된 농골산 입구엔 천막농성장이 자리잡고 있다. 지역 주민들과 인근 고척성당의 신자들, 지역사회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농골산 살리기 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지켜온 것이다. 주민들은 오전과 오후 두차례씩 농성장에 모여 농골산을 살리기 위한 기도회를 갖고 있으며, 밤에도 예고없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포크레인을 막기 위해 24시간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있다. 지난 2월엔 주민 1만6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구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용역직원들, 주민 '성추행' 물의 빚어

주민들과 개발업자측의 충돌은 지난 3월 19일 발생했다. 용

아파트와 도로에 갇힌 주거권 찾기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 활발

참여연대 산하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철준, 변호사)는 아파트와 도로에 갇힌 황정수 씨의 가옥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황 씨는 30여 년 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02번지에서 살아왔는데 집 바로 오른쪽 뒤편에서 윤창건설이 축대를 쌓고 고층아파트를 짓고, 바로 집앞에는 지붕보다 더 높은 도로가 건설되고 있어 세모꼴의 우물 안에 갇힌 상황이 되었다. 이에 황 씨가 윤창건설과 고양시에 대해 이전 보상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보상을 거절했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윤창건설의 아파트 공사와 도로 공사로 인해 황 씨가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하다”며 건물 이전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도록 황 씨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한 집근처에 도로가 개설됨으로 주거생활과 낙동에 피해를 입게 된 하춘조 씨와 조한수 씨 사례에 대한 구제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하 씨와 조 씨의 경우 보상대책없이 도로공사에 착수하면 손해배상과 함께 토지수용법 시행령의 허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797-8200).

역직원들을 동원한 개발업자가 강제로 포크레인을 들이밀자, 주민들이 이를 온몸으로 저지하고 나섰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용역직원들로부터 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한다. 한 주민은 “용역직원들이 여성들의 가슴을 찌르고 더듬었으며, 옷을 다 벗어버리면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어 왔다”고 말했다.

“시민의 공원을 시민의 것으로 만들자”는 주민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청당국은 개발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 이제을 신부(고척동 성당)는 “농골산은 특정인들을 위한 테니스장이 아니라, 전 주민들의 자연휴식공간으로 남아야 한다”며, 주민들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 권의 책

『법은 무죄인가』

박흥규(영남대 법학과 교수) 지음/개마고원 펴냄

한국사회의 법과 사법에 대한 여러 원천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룬 이 책은 우선 현실의 법과 사회를 함께 논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법학개론 서류와 다르다. 또한 우리 법을 학문적 차원에서 체계적·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점에서 최근 유행처럼 쏟아져 나온 생활법률서들과도 구별된다. 이 책의 성격은 현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돕는 기본 입문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 담긴 법에 대한 저자의 철학은 ‘법은 곧 인권의 체계’라는 말에 압축되어 있다. 법의 역사는 곧 시민적 인권(18세기)-정치적 인권(19세기)-사회적 인권(20세기)으로 이어지는 인권의 역사이기도 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국민의 권리’-‘인간의 권리’-‘인류의 권리’로 발전해온 인권의 개념을 이해할 때만이, 공적 법률부조제도와 같은 사회권이 발전되어온 과정이나 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과 평화와의 관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인류공통법이라 할 국제인권법 등에 저자가 많은 관심을 쏟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최근 검찰 중립문제를 시발로 하여 사법권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약자에게 군림하고 강자에게 굴종하는 우리 사법의 현실은, 정작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이들에게까지도 ‘법’이 늘 두려움과 기피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 책은 법조계의 법서비스 정신부재에서 국민참여를 원초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사법제도의 문제까지를 총체적으로 다룬, ‘군림하는 법’이 아닌 ‘봉사하는 법’을 위한 시론이다. 생활인의 구체적 일상 구석구석에까지 그 변화의 의미가 미치는 바람직한 ‘사회개혁의 상’을 저자는 법과 사법 전반에 걸쳐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신국판/432쪽/1만5천원)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납부할!

전국 어느 곳에서나

지로번호: 7618848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4월 29일(화)

제 87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서울구치소 양심수 단식돌입

황풍 우려 속에 국보법 구속자 급증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양심수들이 “국가보안법 철폐와 공안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3일간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노진주(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사민청(사회민주당의청년연맹) 전학련(전국학생정치연합) 노정연(노동정치연대) 회원 등 최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양심수들은 “잇따른 조직사건, 학생시위에서의 총기사용, 서점 침탈 등 전두환·노태우 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일들이 문민정부라는 김영삼 정권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며, 오는 5월 1일까지 시한부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른바 ‘황장업 리스트’도 탄압의 빌미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민가협(민주화 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 따르면, 4월 16일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양심수는 66명인데, 이 가운데 다수가

단식농성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국보법 구속자 99명

한편,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제9차 총회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가보안법 적용에 따른 구속자는 1월 5명, 2월 17명, 3월 28명, 4월 49명 등 총 99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3, 4월 들어 구속자 수가 급증한 것은 사민청, 전학련 등이 이적단체로 지목받으면서 이들 단체 회원들의 무더기 구속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보법 위반 구속자 가운데는 대학생이 6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야단체 회원 30명, 노동자 3명 등으로 나타났다.

(문의:노진주 비상대책위 865-0660)

97년 주요 국가보안법 사건

주요 공판 안내

- ▶4월 28일(월) 정수일(간수 교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4부 403호 선고
 - ▶4월 29일(화) 김동미(국보법)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정지아(국보법)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유성숙(국보법)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 ▶4월 30일(수) 이승구(국보법) 오후4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박전영(국보법 찬양고무 등, 한총련 사건) 오전11시 합의22부 319호 신건
 - ▶5월 2일(금) 이교관의 1(시사저널 기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후2시 10단독, 525호 속행 진관스님(속명 박용모, 국보법 간첩 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속행
- 서울지법 형사국

- △ 2월
- 25일 부산지역 「빛나는 전망」 사 건 (3명 구속)
- 학생연대 회원 5명 구속
- △ 3월
- 18일 사회민주당의청년연맹 회원 1차 구속(14명)
- 24일 전주대 단기동맹 사건(4명 구속)
- △ 4월
- 4일 전국학생정치연합 회원 8명 구속
- 7일 상지대 21세기 프롬테우스 사건(3명 구속)
- 10일 사회민주당의청년연맹 회원 2차 구속(6명)
- 11일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회원 5명 구속
- 15일 대학가 서점대표 3인 구속
- 23일 노동정치연대 회원 4명 구속
- 24일 서울대 학생연대 회원 13명 연행

김세진 열사 11주기 추모예배

김세진·이재호 추모사업회와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등은 3일 낮12시 관교 공영묘지에서 김세진 열사 제11주기 추모예배를 갖는다. 김세진(당시 22세, 서울대 83학번) 열사는 86년 4월 28일 신림 사거리에서 4백여명의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반전반핵 양키고함” “양키의 용병교육 전방입소 결사반대”를 외치며 가두투쟁을 전개하던 중 이재호(당시 22세, 서울대 83학번) 열사와 함께 분신했다.

추모예배 출발은 오전 10시 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 앞.

문의: 742-3746/763-8776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오늘 <인권하루소식> 발송이 이사 뒤 가입팩스 연결 관계로 늦었습니다.

황장엽, 망명에 얽힌 의혹을 풀다 통일시대 국민회의 월례토론회

최근 황 비서의 망명을 둘러싼 의혹과 혼란, 정치적 악용가능성에 대한 생략적 공포가 난무하는 가운데 이 사건이 향후 국내정세와 인권상황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는 29일 오후 7시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 회의실에서 "황장엽 망명배경과 정치전망"이라는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갖는다.

통일문제전문가 김남식 씨의 발제에 이어 벌어질 본 토론회는 황 비서의 망명을 둘러싼 인식상의 혼선을 견어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황 비서가 필리핀에서 저술했다는 논문 '조선분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논문 속에 담긴 북한정권 조기붕괴 유도, 안기부경찰 등 공안기관의 강화와 친북세력 철거책출 등의 대목은 정권안보를 위해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서슴없이 부정해온 수구냉전세력들을 고무시키고 있다.

과연 황 비서가 북한최고의 사상이론가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며 소신대로 남북 어느 한쪽에 치우침없는 화해와 통일의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반세기 동안 확대심화일로를 걸은 분단구조의 견고함 앞에 허물어져갈 것인지,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기대된다.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토론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 여성노동자 상담소는 29일 기독교연합회관 4층 강당에서 상담소 개소 1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여성노동자문제 전반에 대한 논의자리를 마련했다. 이철순(여성노동회) 회장이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현황"에 대해, 손광운(외국인법률구조센터 원장) 변호사가 "외국인노동자의 결혼과 국적법 문제"에 대해 주제발제를 맡았다.

해화동 주소로 바꿔주세요

전화: 741-5363 전승: 741-5364
주소: 종로구 명륜2동 8-29(110-522)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납부를!

전국 어느 곳에서나
지로번호: 7618848

주/간/인/권/호/름

(97년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 4월 21일(월)
민언협등 4개 재야언론단체, 동아일보사 앞에서 최근 동아일보 사설에 전·노 사면주장했다며 항의시위/전국민주택시노련준비위, 민주택시노련 건설과 민주노총 가입 결의

◆ 4월 22일(화)
서울대 한 단과대학의 대학원생인 정아무개(34) 씨등 구 아무개 교수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해 검찰 조사착수/국가보훈처, 7월부터 전립선암과 Berger씨병 등 고엽제후유증에 추가 적용키로/교육부, 북한들기운동과 관련 학교·학급 단위나 전교조등 단체차원의 모금활동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내/정부, 5월 18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정부, 현행 국민연금제도 관련 법규 개정작업 착수/권오기 통일부총리, '황장엽리스트'가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나올 가능성 있다고 밝혀/제2회 서울다큐멘터리영상제 <태평천국의 문> <레드 헌트> 상영취소 파문인 채 폐막/국제노동기구, 사회발전운동촉진 위한 조처 중 기본적 노동권과 원칙에 포괄적인 존중을 보여주는 국가들에게 '세계 사회 라벨' 수여키로/남민구조단체, 투치족 반군이 장악한 수용소에 수용됐던 10만여 명의 난민들 실종

◆ 4월 23일(수)
검찰, 전노 두 전직대통령에게 각각 부과된 추징금 집행을 위해 분할추징방식으로 시효 최대한 늦추기로/전국자동차연맹 노동부에 설립신고서 제출/대전충남연합, 김형진 충남경찰청장등 경찰관계자 4명을 단국대생 박상태 씨 사건과 관련해 불법 총기사용과 직무유기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여성 717명 정부의 즉각적인 북한 식량지원촉구/자민련, 북한어린이에게 분유를 보내기 위한 모금활동 벌여

◆ 4월 24일(목)
원진노동자직업병대책위·한국산업은행과의 협상 끝에 원진레이온 공장터 매각대금에서 전문병원 건립비 1백10억 원과 추가 보상기금 96억 원등 모두 2백6억 원 출연에 합의/서울대 학생연대 회원 13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

◆ 4월 25일(금)
이종렬 통일원 인도지원국장, 민간단체들이 벌이는 북한동포돕기 거리모금에 대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관련부처의 승인받아서 해달라고 거듭 요구/내무부, 공공기관과 민간업체의 개인정보자료 유출을 막기위해 종합대책 마련키로/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찬 판사, 지난해 동해안 무장간첩침투사건에 대해 의문제기한 글을 컴퓨터통신에 올린 혐의로 구속된 윤석진 씨에게 무죄선고

◆ 4월 26일(토)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안기부 해외담당 전·현직 직원들의 모임인 '해우회'가 2백여 명의 대규모 모임 가져

◆ 4월 27일(일)
노동부, 민주노총이 현 지도부와 소속 연합단체를 현행 노동관계법 규정에 맞도록 조정하지 않은 채 노조설립신고를 해올 경우, 이를 되돌려 보내거나 보완하도록 요구키로

인권 시평

물신적 재벌승계를 규제해야 인권이 살아난다

곽 노 현(방송대, 법학 교수)

물신(物神)의 힘을 제어해야 인권이 살아난다는 주장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물신으로 군림하는 재벌을 민주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인권운동으로서도 초기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나는 최근에야 언론보도를 타기 시작한 삼성재벌의 변칙승계사실에 접하게 되면서 한국의 재벌이 이름 값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물신중의 물신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 우리 인권운동이 전노 재판과 노동악법 철폐, 그리고 안기부법 개악반대 투쟁에 몰두하고 있던 지난 1년여의 기간동안 보란 듯이 진행된 삼성그룹의 물신승계과정은 이렇다.

삼성그룹, 총수승계 작업 완료

95년 12월 삼성의 이견희 회장은 의아할 이재용 씨에게 총수자리 승계를 위해 필요한 작업을 개시한다. 이를 위해 우선 그는 이재용 씨에게 60억8천만 원을 증여하고 이중 16억 원을 증여세로 낸다. 남은 44억8천만 원으로 그는 이재용 씨로 하여금 에스원, 엔지니어링 등 비상장계열사의 주식을 각각 23억 원, 19억 원 어치씩 취득하게 한다. 에스원과 엔지니어링은 이후 한두달 사이에 상장된다. 이재용 씨는 상장후 주가가 최고로 오른 시점에서 보유 주식을 처분하여 각각 3백65억 원과 2백30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다. 그 결과 최초 증여액 45억 원은 96년말 경 이미 6백5억 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 정도 재산은 이재용 씨를 개인적으로 부자로 만들 수는 있어도 그룹총수로 만들지는 못한다. 그룹총수가 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중앙개발, 삼성생명, 삼성물산등 핵심계열사의 지배주식을 취득해야 한다. 따라서 이견희 회장은 우선 삼성전자와 중앙개발로 하여금 전

환사채를 발행하게 해서 이재용 씨로 하여금 이를 인수시킨다. 각각 4백50억 원과 97억 원이 들었다. 97년 초의 일이다. 그 결과 이재용 씨는 현재 중앙개발의 주식 62.5%와 삼성전자의 주식 1% 가까이 보유하게 되었다. 중앙개발

은 용인의 에버랜드와 몇 개의 골프장 등을 소유한 국내최대의 부동산 회사로서 순자산가치가 적어도 2조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62.5% 지분을 보유한 이재용 씨는 1조원 이상의 부를 순식간에 챙긴 셈이다. 삼성전자의 1% 지분도 엄청난 것이다. 공개기업이긴 하지만 워낙 덩치가 커서 이견희 회장 외에는 1% 이상을 보유한 개인주주가 없다. 삼성계열사들이 20% 가까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1% 지분도 삼성전자의 실질적 지배주주가 되는 데 족하다. 그밖에도 이재용 씨는 남는 돈을 이용하여 제일기획의 전환사채를 사들여 35.3% 지배주주가 되었다. 제일기획은 급변 중에 상장될 예정이므로 이재용 씨는 다시 수백억 원의 시세차익을

해체는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해온 재벌규제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무색케 한다. 상속세는 재벌총수의 승계에 아무런 걸림돌도 되지 못한다. 이견희 회장만 해도 이병철 회장의 사망시 공식적으로 물려받은 순재산은 1백억 원이 채 못된다. 이 돈으로는 재벌총수의 지위는 커녕 웬만한 빌딩 하나 살 수 없다. 그렇다고 이견희 회장이 선대로부터 많은 돈을 증여받은 사실도 없다. 이병철 회장이 살아 생전에 공식적으로 납부한 증여세는 5억 원이 채 못된다. 그러니 이견희 회장이 증여받은 순재산도 5억 원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견희 회장도 이재용 씨가 동일한 갖가지 편법을 동원하여 그룹총수 자리를 물려받은 셈이다. 이는 삼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총수승계경험이 있거나 총수승계를 앞두고 있는 모든 재벌에 공통적 현상으로 보아 무방하다.

법은 왜 있으며 정부는 무엇하고 있나

울릴 것이고 이 돈으로는 삼성생명의 주식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해서 삼성의 재벌총수 승계작업은 이미 실질적으로 종료된 것과 다름없다.

증여세 불과 16억 원

놀랍게도 이 모든 과정에서 삼성이 들인 돈은 증여세 16억 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증여세를 낸 것도 근거자료와 변명거리를 남기기 위한 것일 뿐 법적으로 필요해서 낸 것은 아니다. 이재용 씨에게 45억 원을 빌려주는 형식을 취했다. 삼성의 예에서 밝혀졌듯이 한국의 재벌들은 약간의 증여세만 내기만 하면 수천억원대, 아니 수조원대의 부를 순식간에 자식에게 만들어줄 수 있다. 때를 골라 몇 개 계열사를 상장시키고 전 환사채를 발행하기만 하면 될 뿐 여기에 기업가적 활동이란 전혀 없다. 오직 재벌총수의 지위에 따른 권력작용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현실은 고율의 증여 상속세율을 감안할 때 재벌의 분산과

국세청, 불공정행위 전면조사해야

삼성의 사례가 드러남에 따라 재벌승계의 비밀은 적어도 반쯤은 풀렸다. 그렇다면 관계당국이 나서야 한다. 국세청은 이 과정을 전면 조사하여 이재라도 증여세를 물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증권감독원 역시 총수지위 승계과정에서 행해진 주식거래와 전환사채발행에 불공정한 점이 없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96년도에 신재벌정책의 이름으로 재벌총수와 재벌기업간의 변칙거래관계에 대한 규제의지를 세웠던 공정거래위원회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도 국회가 제대로 침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30대 재벌의 승계과정에 대한 청문회를 바로 열어 철저한 진상규명을 행한 후 규제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경제정의나 정치발전이니 하는 말을 들먹거리기 수 없다. 법은 왜 있으며 관계당국은 무엇하고 있느냐는 국민의 원성이 들리지 않는가? 인권과 정의, 공동선과 사회적 책임을 유린한 재벌의 변칙승계 과정을 규제하기 위한 이 일에 국민과 관계당국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interpia.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7년 4월 30일(수)

제 87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살상도 불사한 시위진압

직격최루탄 맞고 전남대생 두개골 함몰

경찰의 시위진압 양상이 살상도 불사하는 듯 과격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위대의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 달 20일 시위중이던 조선대생 사망 사건, 24일 경찰의 조준사격에 의한 단국대생 총상사건에 이어, 28일엔 경찰이 직격최루탄을 발사해 시위학생을 중상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28일 오후 4시반경 조선대에서 열린 범청학련 집회중 전남대생 박민서(경영 2년) 씨가 왼쪽 눈 윗부분에 직격최루탄을 맞아 두개골이 함몰되는 중상을 입었다. 박 씨는 부상 직후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실려갔으며, 29일 새벽 전남대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현재 의식은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의 형은 "의식은 돌아왔지만, 상태가 호전될지는 아직 모른다"고 밝혔다.

이날 범청학련 집회에는 1천여 명의 학생들이 모였으며, 경찰은 집회가 시작되자마자 페퍼포그와 최루탄을 난사하며 학내로 진입했다고 전남대총학생회측은 밝혔다.

사과드립니다

이사관계로 팩스송신에 이상이 생겨 29일자 <인권하루소식> 발송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인터뷰> 윤석진 씨 담당변호인 김기중 변호사 "생각을 처벌해서는 안된다"

지난해 9월 강릉 잠수함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진 씨가 지난 25일 무죄선고를 받았다. 윤 씨의 담당변호인이었던 김기중 변호사(덕수합동)를 만나 이번 판결의 의미를 들어보았다.

-윤 씨에 대한 무죄판결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면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던 사건이었다. 기존 법원의 몇가지 관례와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 씨에게는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우선, 고무·찬양(국보법 7조 1항) 혐의에 대해 어떻게 변론을 준비했는가

=잠수함 사건 발생 당시의 언론자료를 모두 모았다. 당시 언론사에서 제기한 의혹은 윤 씨가 지적한 부분과 같았다. 이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 같다.

-이적표현물 소지·탐독(국보법 7조 5항) 혐의도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문제가 된 책들은 일반 서점에서 판매되는 것들이며,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있는 자료였다. 법이 일관성을 가지려면, 이적표현물이라고 규정한 서적에 대해 판매도 금지해야 할 것이다. 시중에 널리 판매하면서 그것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법이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처벌하려면 모든 사람을 처벌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적표현물 관련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이 있지 않았는가

=재판부의 판결문을 받아보아 명확하겠지만, 검찰에서 제시한 서적(레닌저작선 등)에 대해 이적성이 없다고 명시했다면, 이는 최초의 판결로 의미가 있다. 과거엔 이적표현물

임은 인정한 채 '책은 소지·탐독한 것에 이적목적이 있었는가'의 점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했던 것이다. 책 자체에 이적성이 없다는 판결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후 다른 재판에서는 똑같은 책이 이적표현물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게 현실이다.

-윤 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7조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국보법은 '생각'을 처벌하는 법이다. 일반적 민주주의를 한다는 나라에서 무엇을 했냐는 행위를 묻지 않고, 생각을 물어 처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컴퓨터통신 상에 오른 글이 문제가 됐다는 점에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죄형법정주의상 통신행위에 대해 일반법을 적용해서는 안되며, 통신공간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통신은 사적 커뮤니케이션인 동시에 공적 미디어 기능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일반원리에 비추어 볼 때, 통신행위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며, 제재가 필요하다면 최소화, 엄격화해야 한다.

-처음부터 무리가 있는 기소라고 했는데, 검찰이 윤 씨를 처벌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가

=지금까지 통신공간에는 국가권력의 제재가 별로 미치지 못해 왔다. 윤 씨의 경우는 시범케이스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표현행위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할 것이다.

-최근들어 국보법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이 종종 나오고 있다. 사법부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법원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몇몇 원칙있는 관사들의 노력에 불과하다고 본다.

<쟁점>

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편집자주> 내년 제2회 지방선거를 거쳐 99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사업을 추진중인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간의 공방이 치열하다. 내무부와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외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의 주장을 각각 소개한다

"전자감시사회가 눈앞에 다가와 있다"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

1.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다.
프랑스는 81년 컴퓨터로 처리된 신분증명이 개인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철회했다. 미국 역시 카터, 레이건, 클린턴 행정부 모두 전국민을 대상으로 신분 증명제도를 만드는 것에 반대했다. 91년 뉴질랜드 정부가 키 위 카드라는 부분별 주민신분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국민의 반대로 결국 카드시행 계획은 포기되고, 의료혜택 목적의 카드만 만들어졌다.

2. 불편은 여전하다.
전자주민카드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으러 동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매년 약 3백만 건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고 있다. 전자주민카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주민카드 분실로 인한 불편함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 카드를 잃어버리면 집에서 쉬는게 낫다. 전산시스템이 고장 나면 병이 나도 참아야 한다.

3. 엄청난 비용은 누가 감당해야 하나.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돈은 결국 전자주민카드 사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4. 당신의 비밀은 공개되고 있다.
전자주민카드 한장에는 그 사람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고, 엄청난 수의 관계자가 중앙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어,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안체계를 세우더라도 수만대의 컴퓨터가 중앙컴퓨터에 접속되어 있어 개인의 자료들이 어디에서 유출되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고 만다.

행정전산망은 한달에 5백여건 이상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가 있기도 하는 등 결코 안정된 전산망이라 할 수 없다. 행정망 뿐 아니라 국가전산망이 전체적으로 잦은 고장으로 시비를 일으키고 있는데 금융망, 증권전산망 또한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어 결국 손해는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주민카드제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제도인 만큼 충분한 국민적 토론을 거친후에 시행하는 것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다. 또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사전에 먼저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어울리는 신분증

내무부

1. 외국에도 있다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추진중이며 21세기에는 모든 신분증과 은행카드가 전자카드로 전환될 것이다.

2. 무엇이 달라지고 편해지나?
주민카드는 여러가지 증명기능을 하나로 줄여 휴대하므로 간편하고,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어울리는 신분증으로 신용사회 기반구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몸이 아플때나 운전할 때, 은행이나 행정관서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대신 주민카드를 제시하면 된다. 모든 첨부서류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대신 주민카드 조회 확인으로 갈음되어 주민편의와 행정간소화를 기대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3. 주민카드가 실용화되면 연간 수천억 원이 절약되어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고 서류없는 민원행정으로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우리나라가 선진국형 복지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4.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보호는?
주민카드는 현재 국민 개개인의 증명서 내용을 옮긴 것으로 여러 단계의 보완장치와 개인별 비밀번호 사용으로 분 실시에도 타인이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현재의 증명서는 개인정보를 육안으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주민카드는 카드 판독기와 비밀번호가 있어야 열람이 가능하므로 개인정보 보호가 훨씬 강화된다.

카드내 7가지 정보는 각각 분리된 방에 수록되어 제도적, 기술적으로 분야별 운영자만 열람하도록 했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의료보험, 교통경찰은 운전면허등 소관 업무외에는 다른 증명의 정보를 볼 수 없다.

보안카드를 소지한 자만이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며, 모든 정보처리내역 열람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자의 인적사항, 이용 내역, 이용시간등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 기록되므로 정보의 불법유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5. 해커에 의한 정보유출이 우려되는데
주민카드 전산망은 공중 전산망과 물리적으로 격리된 폐쇄망(전용통신망)으로 구축하고 방화벽을 설치하여 외부침입을 차단한다. 은행신용카드나 하이텔, 천리안등과는 다른 전용전산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커의 침입은 어렵다.